

최종 보고서

2020

당진시

중간지원조직 구성 용역(2차)



2020. 12.

제 출 문

당진시장 귀하

본 보고서를
당진시 중간지원조직 구성 용역(2차)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0년 12월

충 남 연 구 원

원 장 윤 황



요 약 문

1. 과업의 개요 및 연구 방향

1) 과업의 배경과 개요

- 문재인 정부는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화된 하향식 정책추진방식에서 탈피하여 지방정부와 민간의 자율과 책임에 입각한 분권과 협력, 참여, 협치농정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꾀하고 있음. 이에 맞춰 농식품부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침 개정을 통해 행정의 총괄·조정 및 전담부서 신설, 통합형 중간지원조직 설치 등을 강조하는 등 민관협치형 정책시스템 구축을 요구하고 있음
- 또한 현 정부는 포용사회, 자치분권, 균형발전 등을 국정전략으로 하여 정책간 연계·협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 부처별 정책사업은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 사회적경제, 통합돌봄, 도시재생 등의 융복합 및 민관협치가 강조되고 있는 상황임
- 충남도는 2015년부터 농촌마을정책의 기본방향으로써 기존의 방식을 전면적으로 개편하여 ‘민관협치형 정책 시스템 구축’을 핵심으로 정하고, 시군 공모방식을 통해 선제적으로 추진해 옴
- 이처럼 중앙정부와 충남의 정책은 마을만들기와 주민자치, 사회적경제, 도시재생 등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정책 분야의 연계·협력이 갈수록 강조되는 추세임. 향후 자치분권과 재정이양 추세 속에서 지자체의 ‘민관협치형 정책 시스템 구축’은 더욱 강력하게 요구받을 것임
- 당진시도 이러한 중앙정부 및 충남도 정책동향을 선제적으로 수용하여 민관협치의 정책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음. 기존에 축적된 주민자치 정책의 경험을 바탕으로 마을만들기와 사회적경제 등의 정책이 강하게 연계·협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 이를 통해 지역사회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임

2) 2차년도 과업의 주요 내용과 추진 방향

- 마을만들기는 ‘주민 주도, 상향식’의 방법론을 중시하고, 마을 주민들의 역량 강화를 기반으로 한 내발적 발전 전략을 큰 원칙으로 하고 있음. 또한 주민들 스스로 함께 모여 토론하고 합의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마을의 공동과제를 발굴하고 중장기 발전 목표를 세우고 공동으로 실천하는 것이 마을 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방향이 되어야 함
- 하지만, 농촌마을의 초고령화와 인구 급감, 생활권 확대 등으로 농촌 현실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음. 이에 농촌 마을리더들이 지치지 않고 오래 갈 수 있도록 마을 밖에서 마을을 지원하는 제도적 시스템(정책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역사적 경험임
- 이런 정책적 취지에서 충남도는 2015년부터 시·군 자치단체마다 ‘농촌 마을정책의 민관협치형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연차별로 공모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옴
- 본 공모사업은 ‘당진시 농촌마을정책의 민관협치형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1) 행정의 지원체계 정비, (2) 민간 네트워크 구축 및 법인 설립, (3)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설치 및 효율적 운영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음. 당진시는 2018년에 처음 선정되어 2019년부터 2개년에 걸쳐 추진하는 과정임
- 당진시는 2019년 1차년도에 착수하여 민관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 공동학습과 토론의 장을 마련하였고, (1) 행정의 전담 ‘과’ 및 ‘팀’ 신설, (2)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제정, (3) 행정직영의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이 이루어짐
- 2차년도 주요 과업 내용은 1차년도 추진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1) 행정 지원체계 강화 방향 제안, (2) 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방향 제안, (3) 마을만들기협의회 설립과 운영을 위한 자문 및 제안, (4) 당진시 마을만들기 관련 정책 영역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재정분권에 따른 당진형 마을만들기 사업 제안 등임

2. 당진시 마을만들기 행정 지원체계 강화 방향

1) 마을만들기 행정의 전담부서 기능 강화 방향

- 당진시는 2020년 1월 조직개편을 통해 농촌 마을만들기 담당부서가 기존의 건설교통과 기반조성팀에서 공동체새마을과 마을공동체팀으로 전환됨. 이를 통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심의 전담 팀으로 재편됨
- 당진시는 앞으로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전담부서 설치와 총괄·조정 권한을 명확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공동체새마을과 내의 주민자치, 마을만들기, 사회적경제, 새마을 업무와 강력한 업무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함. 이외에도 지속가능담당관실 및 농촌정책 영역(농촌관광과 귀농귀촌, 6차산업 등)과도 협조체계가 중요함
- 행정의 지원체계를 정비해 나가는 과정 자체가 민관협치 관점을 반영하여 행정과 민간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중앙정부 정책동향을 적극 반영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함. 농촌 마을의 객관적 상황을 파악하고 마을리더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야 함
- 또한 중앙정부의 새로운 정책 동향에도 적극 대응하는 방향이 되어야 함. 특히 기획재정부의 재정분권, 농식품부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재편과 지방 사무이양, 행안부의 주민자치회 전환 등의 정책 동향이 향후 매우 중요한 정책 흐름이 될 것임

2) 행정지원협의회 구성과 운영 방향

- 행정지원협의회는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제13조에 근거를 두고 설치되는 회의체로서 행정 부서 사이의 업무협조를 제도적으로 규정하는 것임. 참가 부서의 정기적이고 의무적인 참가를 통해 책임있는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실효성이 있음. 이에 따라 조례 제13조 2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2021년 상반기에 규칙을 제정하여 2021년 5월에 신청할 예정인 농촌협약 공모사업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함

- 특히 중앙정부 농촌정책의 동향을 보면 자치분권 추세에 맞추어 신활력플러스나 농촌협약 같은 신규 정책에서는 행정의 업무협조체계를 매우 강조하고 있음.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도 전체 농촌정책을 염두에 두고 행정지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적극 검토해야 함
- 행정지원협의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정비’ 되어야 한다는 것이 핵심적인 방향임. 공무원 순환보직제 상황에서 안정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조례에 규정된 설치 근거를 잘 활용하고, 참여 부서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하며, 각종 인사 시스템과 연계되어야 효과적임. 또한 신활력플러스와 농촌협약 공모사업을 염두에 두고 2021년 상반기에 반드시 1~2회 개최해야 함

3) 마을만들기 담당 공무원 역량강화 방향

- 마을만들기 행정 공무원의 역량강화 방안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 순환보직제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는 것과 자주적인 학습 동아리 활동을 장려하는 것, 두 가지가 핵심적인 방향이라 할 수 있음
- 이러한 제도적 바탕 위에 열정적인 공무원의 의욕이 꽃을 피울 수 있는 문화적 환경이 중요함. 공무원 역량강화 방향은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행정혁신 정책과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검토해야 함

3. 당진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방향

1)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모니터링 결과

- 당진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는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제14조에 근거하여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3명(사무국장 1명, 팀원 2명)을 채용하고 2020년 6월 30일에 개소함
- 농식품부 시군역량강화사업을 중심으로 상근자 3명이 역할분담을 통해 개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많은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어

항상 과다한 업무량 속에 있음

- 행정과 센터간의 업무분장, 센터내 상근자간의 업무분장이 불명확하여 갈등의 소지가 있고, 가짓수가 많은 예산사업을 소수인력 3명이 수행하다 보니 센터의 고유 업무인 마을조사와 분석, 상담 및 컨설팅 등 현장밀착형 활동을 진행하기 어려움

2) 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2020년 주요 사업 추진 현황

- 2020년은 센터 설치 1차년도로 센터의 기반구축과 지역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와 연대·협력 활동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함. 행정직영 센터이고 연도 도중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군역량강화사업은 용역사와의 협력관계를 통해 추진함
- 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당면과제로 (1) 상근자의 체계적인 역할 분담, (2) 상근자의 체계적인 역량강화 프로그램 추진 등이 필요함. 이에 따른 개선방안으로 (1) 내부의 안정된 운영기반 구축과 협력 네트워크 확장, (2) 우수사례 조기발굴을 통한 지원센터의 제도적 위상 강화, (3) 대내외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소인수 센터의 한계 극복 등을 제안함

3)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상근자 역량강화 방안

-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의 상근자에게 때로는 지나치게 높은 수준의 역량을 요구받고 있는 것이 현실임. 상대적으로 충남은 광역의 ‘정책적 유도’를 통해 시군 센터가 안정되게 정착되고 있는 셈임
- 짧은 시간에 상근자의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쉽지 않고, 중간지원조직의 유입경로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충남 광역 단위 협력 네트워크를 통하여 공동으로 극복해나가는 방향을 잡아야 함
- 작은 센터가 적은 인력으로 모든 역량을 갖추는 것은 무리이기 때문에 마을만들기 당사자 협의체 설립과 역량강화를 추진하면서 센터 주변에 다양한 사회적경제조직을 육성하는 등 대내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함. 이런 방향으로 농식품부 시군역량강화사업을 적극 활용해야 함

4. 당진시 마을만들기협의회(가칭) 설립과 운영 방향

1) 마을만들기 당사자 협의체 설립 추진 현황

- 2019년부터 마을만들기 당사자 협의체 설립의 필요성을 계속 설명하였으며 당진시는 2020년 9월 제1회 마을대학 개최를 계기로 마을만들기협의회 설립을 적극 검토하기 시작함
- 6회차에 걸친 강의 및 토론을 통해 마을만들기협의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정기모임(매월 첫째, 셋째주 수요일)을 통해 정관(안)을 확정함
- 앞으로 2021년 1~2월 농한기를 이용하여 제2회 마을대학을 개최하고 마을만들기협의회의 (1) 목적과 필요성, (2) 책임에 따르는 권한 부여, (3) 회원자격기준과 의무사항, (4) 조직형태와 체계, (5) 외부 협력 활성화 등 핵심적인 쟁점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학습하고 토론할 것을 제안함

2) 충남 타 시군의 마을만들기 민간조직 현황

- 시군 단위 마을만들기협의회는 민선5기 3농혁신의 일환으로 희망마을만들기 학습조직 형태로 출발하여 단계적으로 발전해옴. 하지만 다수 시군에서 희망마을포럼 형태로 활동하다가 홍성, 논산 이외에는 오래 지속되지 못함
- 2015년부터 농촌마을정책의 전환을 통해 3농대학, 충남대회, 대화마당 등의 기회를 활용하여 마을만들기의 당사자인 마을리더가 협의체를 설립하여 ‘주민 주도’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함. 이런 과정을 거쳐 2020년 12월 현재 충남의 10개 시군에서 협의회가 설립되어 활동중임
- 또한 시군 협의회가 모이는 광역 협의회 설립 논의도 2017년부터 더디지만 지속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져 2020.10.15. 창립총회를 개최함

3) 당진시 마을만들기 민간 네트워크 구축 방향

- 수탁법인의 설립과정과 경로는 지역마다 상이할 수 있는데, 당진시의 경

우에는 당사자협의체 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마을만들기협의회 설립을 우선하고 이를 통해 관련 영역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나가야 함

- 행정은 이런 과정을 ‘인큐베이팅’ 관점에서 적극 응원하고 장려해야 함. 특정 부서만의 과제가 아니므로 협치형 중간지원조직을 운영하는 여러 행정부서가 행정지원협의회를 구성하여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가능함
- 마을만들기 민간 네트워크의 미래상은, (1) 농촌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 사회적경제 등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정책 영역이 결합하는 네트워크, (2) 농촌마을공동체와 푸드플랜, 6차산업, 귀농귀촌 등 농촌정책 관련 영역으로 결합하는 네트워크, 이 두 가지 경로를 예상할 수 있음. 어느 경로나 장단점이 있으며, 두 가지를 조합하는 형태의 새로운 길도 있을 것임. 당진시는 공동체새마을과 신설을 계기로 전자를 우선하여 검토할 것을 제안함
- 민간 네트워크 구축은 기본원칙에 충실하면서 현실상황을 고려하여 민간 단체 사이의 ‘합의’ 과정을 중시해야 함. 이 과정에서 다양한 쟁점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학습과 토론이 필요함. 2021년 1~2월중에 제2회 마을대학을 통해 마을만들기 당사자협의체 구성을 우선하고, 이후에 주민자치와 사회적경제, 새마을 등 공동체새마을과 소관의 당사자협의체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학습과 토론을 통해 자주적인 법인 설립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등 중간지원조직의 통합범위와 민간위탁 시점을 우선 합의하고 일정을 역순으로 배치하여 민간 법인을 설립하도록 추진하고 행정에서도 ‘적절한 신호’를 보내야 함. 2021년 6월까지 네트워크 법인 설립의 경로와 방식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고 이후에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경로를 제안함

5. 당진시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발전 방향

1) 마을만들기와 관련 영역의 연계·협력 방향

- 1990년대 이후 지방자치의 진전과 풀뿌리 주민자치운동의 발달로 주민들이 개인으로서, 또 조직 형태로 지역사회 발전의 주체로 등장함. 마을만들기는 역사적으로 ‘한 사람의 열 걸음’ 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 을 강조하고 주민 모두가 같은 꿈을 꾸며 ‘더디 가더라도 제대로 가는 길’ 을 모색하는 원칙을 중시함. 하지만 지방자치가 발달하지 못하고 주민자치 역량이 성숙하지 못한 한국 농촌사회에서 마을만들기는 2000년대 들어와 체험휴양마을 사업을 계기로 등장하여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며 현재에 이름
- 농촌 마을만들기(공동체)와 주민자치, 사회적경제, 평생학습, 지역복지, 마을교육공동체 등은 모두 지역사회(공동체) 발전을 위해 유사한 지향점을 가진 ‘한 뿌리에서 나온 다른 운동’ 에 해당함.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연대와 협력이 이루어질 때 서로의 목적 달성도 가능함
- 도농통합시인 당진시는 지역 특성에 맞게 농촌마을과 도심지역을 연계하여 지역발전의 성과가 내부에서 순환되고 축적되며 확장될 수 있도록 도농순환형 정책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여기에는 다양한 정책 영역이 결합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를 매개로 농촌형 마을만들기와 도시형 마을만들기가 강력하게 결합하는 방향으로 정책 융복합을 강화해야 함. 이를 통해 도농순환형 마을공동체 복원에 이바지하고 마을 단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해 내발적인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임
- 당진시는 2020년 1월 조직개편을 통해 ‘공동체’ 전담부서로 공동체새마을과를 신설함. 또 당진시는 ‘지속가능발전’ 을 시정 제1과제로 하여 정책을 추진중이고, 이 또한 마을만들기와의 관련성이 역사적으로 매우 높음. 공동체와 지속가능발전은 모두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정책으로 당진시 읍면동 전체에 걸친 정책으로서 서로 긴밀하게 협력해야 성과 도출이 용이함

2) 통합형 중간지원조직 설치 및 운영 방향

- 당진시 중간지원조직의 통합 영역(범위)으로 공동체새마을과 소관의 마을만들기지원센터와 주민자치지원단(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우선 검토할 것을 제안함. 여기에 지속가능발전담당관실의 공익활동지원센터와 공동체통합지원센터를 추가하여 검토할 수 있음
- 중간지원조직의 통합형·민간위탁형 설치를 위해서는 (1) 행정조직의 개편과 업무 조정, (2) 정책영역별 당사자 협의체의 구성과 역량 강화, (3) 네트워크 법인의 설립과 수탁 역량 강화가 전제되어야 함
- 향후 통합형, 민간위탁형 중간지원조직의 설치와 운영을 위해서는 (1) 공동의 학습과 합의과정을 중시하고, (2) 일상적인 소통과 정보 공유를 통한 신뢰관계를 구축하며, (3) 작은 공동행사를 통한 성과 공유의 경험 축적이 필요함. 이를 위해 당진시 행정은 민간에 대해 (1) 중간지원조직의 통합형 민간위탁을 위한 ‘정책적 신호’ 발신, (2) 당사자 협의체 설립의 강력한 지원, (3) 통합형 네트워크 법인의 설립 지원 등이 당면 과제임

3)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의 민간독립 방향

- 중간지원조직은 4대 설치유형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에 지역주민 관점에서 단계별로 적절한 방식을 찾아 선택해야 할 것임. 당진시 공동체새마을과 소관의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은 행정직영 상태에 있고, 향후 민간위탁과 재단법인, 둘 중에서 대안을 선택하여 향후 경로를 설계해야 함
- 본 연구는 2021년 상반기에 마을대학을 통해 공동학습을 강화하고 그 성과를 반영하여 우선순위를 선택할 것을 제안함. 지역사회 공동학습을 전제로 어느 유형이나 장단점이 있기에 민관의 합의 수준과 지역 역량에 따라 결정해야 함. 민간위탁은 수탁법인의 높은 전문성과 지역사회 대표성 등이 확보되어야 함
- 본 연구는 중간지원조직 설치의 4대 유형과 설치유형별 장단점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3단계에 걸쳐 중간지원조직의 민간독립 방향을 제시함
 - 1단계(행정직영) : 행정직영 센터의 설치, 운영 경험 축적(~2021.12.)
 - 2단계(민간위탁) : 2022년부터 민간위탁으로 전환(2022.1.~2023.12.)

- 3단계(안정화) : 통합형 중간지원조직의 안정화와 재단법인 전환 검토
- 당진시는 당면과제로 2021년 6월까지 민관의 공동학습 결과를 반영하여 수탁법인의 설립 방향을 결정하기를 제안함. 2021년 5월로 예정된 신활력 플러스 및 농촌협약 공모사업 신청을 염두에 두고 2021년 상반기에는 다양한 추진실적이 필요함. 또 2022년 이후의 사업 집행까지 염두에 둔다면 민간위탁형 중간지원조직으로 빨리 전환하는 것이 매우 유리함을 강조함

6. 종합평가와 당진형 마을만들기 독자사업 제안

1) 종합평가와 향후 방향 및 당면과제

- 2020년의 추진 성과로는 (1) 2020년 1월에 조직개편을 통해 공동체새마을과를 신설하여 농촌 마을만들기와 주민자치, 사회적경제, 새마을 등의 업무가 하나의 ‘과’ 아래에서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는 점, (2) 행정직영으로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을 설치·운영하기 시작하였다는 점, (3) 마을대학 개최와 공모사업 공개심사, 독자사업 도입 등을 통해 더디지만 마을과 마을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상호협력과 경쟁 구도도 도입하였으며, 나아가 마을만들기협의회 설립 준비위원회도 결성되어 활동중이라는 점을 들 수 있음
- 향후 당진형 마을만들기의 기본방향으로 (1) 행정리 마을자치와 읍면동 주민자치와의 협력체계 구축, (2) 마을 주민 당사자의 등장과 조직화 지원, (3) 중간지원조직의 통합형 설치와 민간독립 등을 제시함
- 이를 위해 당진시 농촌 마을만들기의 2021년 당면 과제로 (1) 농촌마을정책의 민관협치형 시스템 구축과 강화, (2) 행정직영 중간지원조직 운영 경험 축적과 민간위탁을 위한 지역공감대 확산, (3) 가시적인 성과 도출과 혁신적인 시범사업의 지속적인 시도 등을 제안함

2) 2021년 신규 사업 및 추진방향 제안

- 농식품부의 시군역량강화사업 지침 변경에 따라 중간지원조직의 인건비

재원 확보가 가능해짐. 현재의 마을만들기지원센터는 상근인력 규모와 경험에 비해 업무량이 과다하고, 추진과정에서 협력할 수 있는 민간 활동가 그룹이 다수 필요하다고 판단됨. 변경된 시군역량강화사업 지침을 적극 검토하여 추가 채용하는 방향으로 활용해야 함. 적어도 2022년부터는 민간위탁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함

- 2021년 상반기는 신활력플러스와 농촌협약 공모사업에 도전해야 하는 상황으로 각종 역량강화사업과 체계적으로 연계되어야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음. 코로나19 상황이 상반기에도 지속될 것을 염두에 두고 연중 업무 일정표 작성이 필요함. 이를 통해 상근자의 연중 역할 배분도 가능하고, 주민들에게도 연중 예측 가능한 일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임
- 2021년 충남형 마을만들기 공모 사업과 관련하여, (1) 재정분권에 따라 시군 지자체 자체 사무로 이양되었다는 점과 (2) 농촌협약 공모사업의 전제조건에 해당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도청의 2021년 1차 추경예산 확보 여부와 관계없이 당진시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할 것으로 제안함
- 신활력플러스 사업은 ‘농촌마을정책의 민관협치형 시스템 구축’을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2020년에 제안했던 예비계획서를 재검토하고 농촌정책의 익숙한 용어와 사업내용으로 재정리하여 재도전할 것을 적극 제안함
- 농촌협약은 2020년 12월 현재, 충남도에서 사업 신청을 준비 중인 시군은 당진시를 포함하여 최소 10개 시군이나 되므로 매우 경쟁률이 높음. 당진시는 2022년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것을 목표로 함과 동시에 ‘민관협치의 농촌정책 시스템 강화’와 ‘민간의 조직적 역량 강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함. 이를 통해 중장기 관점에서 당진시의 민관협치 역량이 강화되고, 공모사업에 탈락했을 경우에도 또다시 도전할 수 있는 명분과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음
- 2021년 사업으로 예정된 농식품부 시군역량강화사업의 세부 개선방향, 충남형 마을만들기의 사업취지와 당진형 적용방안, 신활력플러스 사업 예비계획서의 수정방향, 농촌협약의 사전 준비사항 등에 대해서는 본문을 공동학습자료로 활용하기 바람

목 차

요약문	i
-----------	---

제1장. 과업의 개요 및 연구 방향

제1절 과업의 배경과 개요	3
1. 과업의 배경	3
2. 2020년 2차년도 과업의 목적과 개요	10
제2절 과업의 주요 내용과 추진 방향	12
1. 주요 과업 내용	12
2. 과업 추진 방향	13

제2장. 당진시 마을만들기 행정지원체계 강화 방향

제1절 마을만들기 행정의 전담부서 기능 강화 방향	19
1. 행정의 전담부서 현황과 기능 강화 방향	19
2. 2020년 마을만들기 행정 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방향	25
제2절 행정지원협의회 구성과 운영 방향	28
1. 행정지원협의회 운영의 기본 방향	28
2. 당진시 행정지원협의회 운영 현황 및 활성화 방안	30
제3절 마을만들기 담당 공무원 역량강화 방향	40
1. 공무원 순환보직제 단점 극복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40
2. 공무원 학습동아리 활동 장려를 통한 역량 강화	42
3. 마을만들기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과 사업 제안	44

제3장. 당진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방향

제1절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모니터링	49
1. 당진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설치과정 모니터링	49
2. 당진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운영 모니터링	54
제2절 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2020년 주요 사업 추진 현황	57

1. 주요 사업 추진 현황	57
2.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당면과제 및 개선 방안	67
제3절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상근자 역량강화 방안	70
1. 중간지원조직 상근자의 기본적인 자세와 역량	70
2. 중간지원조직 상근자 역량강화 방안	76

제4장. 당진시 마을만들기협의회(가칭) 설립과 운영 방향

제1절 당진시 마을만들기협의회 설립 추진 현황	81
1. 2020년 제1회 마을대학 모니터링	81
2. 당진시 마을만들기협의회 준비위원회 정기회의 모니터링	84
3. 향후 주요 쟁점 제안	87
제2절 충남 타 시군의 마을만들기 민간조직 현황	89
1. 충남 시군 및 광역 마을만들기협의회 설립 현황	89
2. 마을만들기 민간 네트워크 구축 및 법인 설립 현황	90
제3절 당진시 마을만들기 민간 네트워크 구축 방향	94
1. 민간 네트워크 구축의 기본 원칙과 제도적 이해	94
2. 마을만들기 민간 네트워크 구축의 경로와 주요 쟁점	97
3. 당진시 마을만들기 민간 네트워크 구축의 선택 방향 제안	101

제5장. 당진시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발전 방향

제1절 마을만들기와 관련 영역의 연계·협력 방향	105
1. 농촌 마을만들기와 관련 정책 영역	105
2. 농촌 마을만들기와 관련 정책과의 연계·협력	108
제2절 통합형 중간지원조직 설치 및 운영 방향	115
1. 당진시 중간지원조직 논의 현황과 통합형의 기본 방향	115
2. 타 시군의 마을만들기 관련 통합형 중간지원조직 설치 사례	122
3. 선진지 사례의 시사점과 당진시의 향후 방향	131
제3절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의 민간독립 방향	134
1.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의 3단계 발전 전략과 향후 일정 제안	134
2. 2021년 12월 민간위탁 과정의 유의사항 : 민관협치 관점의 중시	139

제6장. 종합평가와 당진형 마을만들기 독자사업 제안

제1절 종합평가와 향후 방향 및 당면과제	149
1. 당진시 ‘마을만들기 지원 시스템 구축’의 성과와 향후 방향	149
2. 당진시 농촌 마을만들기의 2021년 당면 과제	156
제2절 2021년 신규 사업 및 추진 방향 제안	161
1. 타 시군의 특색있는 농촌마을정책 사례	161
2. 당진시 기존 사업의 리모델링과 보완 방향 제안	165
3. 농식품부 농촌협약 공모사업과 당진시의 접근 방향	187
 참고 문헌	 203

부록

부록1 당진시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11
부록2 당진시 마을 만들기 협의회 정관(안)	214
부록3 충남도 시군 마을만들기 지원 시스템 구축 현황	219

표 목 차

[표 1-1] 농특위 결의안건(2019.12.3.)의 4대 주요 의제와 7대 세부과제	3
[표 1-2] 지역사회 중심 정책 연계 5개 부처 업무협약의 각 부처별 주요 사업	4
[표 1-3] 2020년 충남 시군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연구용역 현황(2개 시군)	14
[표 2-1] 당진시 공동체새마을과 마을공동체팀 분장 사무(2020. 12. 기준)	21
[표 2-2] 당진시 2020년 마을만들기 역량단계별 행정사업 추진 현황	25
[표 2-3] 당진시 2020년 시군역량강화사업 추진 현황	26
[표 2-4] 당진시 2020년 충남도 살기좋은 희망마을만들기 사업 추진 현황	26
[표 2-5] 당진시 신활력플러스 사업추진단 구성 및 논의 과정	30
[표 2-6] 천안시 마을만들기 행정지원협의회 ‘한울타리’ 구성(2017년 조직 당시)	34
[표 2-7] 천안시 마을공동체 행정지원협의회 ‘한울타리’ 운영 프로그램 계획안(2017. 1.) ..	35
[표 3-1] 당진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상근자 인적사항	50
[표 3-2] 당진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상근자 채용과정	51
[표 3-3] 당진시 공동체새마을과 마을공동체팀 분장 사무(2020. 12. 기준)	54
[표 3-4] 당진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 2020년 활동 현황	57
[표 3-5] 당진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사업(협력과 연대) : 워크숍, 설명회 등 참가 내역 ..	60
[표 3-6] 마을활동가 양성교육 프로그램	66
[표 4-1] 당진시 2020년 제1회 마을대학 프로그램	82
[표 4-2] 당진시 마을만들기협의회 준비위원회 명단	84
[표 4-3] 충남 시군 마을만들기협의회 설립 현황(2020.12. 기준)	89
[표 4-4] 충남 시군 마을만들기 네트워크 법인 설립 현황(2020.12. 기준)	91
[표 5-1] 읍면 현장밀착형 사회적경제조직 육성의 4대 핵심 분야	114
[표 5-2] 충남 시군 마을만들기(공동체) 중간지원조직 설치 및 운영현황(2020.12월 현재) ..	122
[표 5-3] 협치형 민간위탁의 성과 평가지표 예시(추가사항)	145
[표 6-1] 당진시의 2021년 시군역량강화사업 등 중간지원조직 추진 사업내역	167
[표 6-2] 충남형 마을만들기 사업의 유형별 지원한도액과 주요 사업	175

[표 6-3] 충남형 마을만들기 사업의 특징 : 농식품부 기존 지침과의 비교	176
[표 6-4] 당진시 신활력플러스 예비계획서의 주요 사업별 예산	182
[표 6-5] 농촌공간 전략계획과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의 비교	188
[표 6-6] 충남 시군의 농촌협약 공모 준비 상황(2020.12. 현재)	190
[표 6-7] 당진시 농발계획(2017~2021)의 농촌협약 관련 사업 및 예산투자계획	191

그림 목 차

[그림 1-1]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웹자보 및 행사사진	5
[그림 1-2] 당진시 농촌마을정책의 민관협치형 시스템 구축 추진현황(2020.12. 기준)	9
[그림 2-1] 당진시 마을만들기 관련 주요 담당부서 조직도	20
[그림 2-2] 보령시 마을공동체 행정지원 협의회 조직체계(2015년 조직 당시)	33
[그림 2-3] 천안시 마을만들기 행정지원협의회 ‘한울타리’ 활동 모습	36
[그림 3-1] 당진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역할	52
[그림 3-2] 당진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위치도 및 사진	53
[그림 3-3] 당진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상근자 맞춤형 컨설팅 진행사진(2020년 7월중)	55
[그림 3-4] 당진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비전과 목표, 전략방향, 주요사업 등	58
[그림 3-5] 당진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사업(소통과 홍보) : SNS 홍보	59
[그림 3-6] 당진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사업(소통과 홍보) : 엠블럼 제작	59
[그림 3-7] 마을자원조사 진행사진	62
[그림 3-8] 농촌현장포럼 진행사진	63
[그림 3-9] 민관합동워크숍 진행사진	64
[그림 3-10] 창안대회 진행사진	65
[그림 3-11] 마을공동체프로그램 사업 진행사진	65
[그림 3-12] 마을활동가 양성교육 진행사진	66
[그림 3-13] 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신규 사업 도입과 검토, 추진 절차 제안	75
[그림 4-1] 당진시 제1회 마을대학 진행현황 사진	83
[그림 4-2] 당진시 마을만들기협의회 준비위원회 정기회의 모습	86
[그림 4-3] 마을만들기 민간 네트워크 구축의 일반 경로와 3대 쟁점	96
[그림 5-1] 농촌 마을공동체와 관련 정책 영역과 협력사업	106
[그림 5-2] 당진시 도농순환형 마을만들기와 관련 분야간 상호협력 관계 개념도	107
[그림 5-3] 읍면 단위 정책사업의 융복합을 위한 종합발전계획 수립 전략	109
[그림 5-4] 당진시 도시재생지원센터 활동사진	116

[그림 5-5] 공익활동지원센터 공간 구성 계획	117
[그림 5-6] 기초 지자체 농촌정책 영역 중간지원조직 수요와 인력 규모 예상	123
[그림 5-7] 공주시 공동체종합지원센터 조직도	124
[그림 5-8] 청양군 지역활성화재단 조직도 및 인력 배치	126
[그림 5-9] 부여군 지역공동체 활성화재단 조직도 및 인력배치	127
[그림 5-10] 완주군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조직도	128
[그림 5-11] 화성시 마을자치센터 조직도 및 업무 분장, 인력 배치	129
[그림 5-12]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조직도	130
[그림 5-13] 당진시 중간지원조직의 통합형 설치와 민간독립 추진 일정	137
[그림 6-1] 지자체 민관협치와 읍면 주민자치, 행정리 마을자치의 개념적 구분	151
[그림 6-2] 청양군 ‘함께이음’정책 : 거점 중심기능과 배후마을 지원기능의 연계 체계	161
[그림 6-3] 청양군 ‘함께이음’정책 : 주민교육과 공모사업을 연계한 연차별 정책 체계	162
[그림 6-4] 홍성군 지역 거버넌스 ‘홍성통’ 참여 구성원	164
[그림 6-5] 충남형 마을만들기 사업의 역량단계별 지원체계(신규)	174
[그림 6-6] 민관협치형 정책시스템 구축과 신활력플러스 사업과의 관계(개념도)	181
[그림 6-7] 당진시 신활력플러스 사업의 사업간, 기능간, 공간간 연계도	183
[그림 6-8] 당진시 신활력플러스 사업의 추진체계도	183
[그림 6-9] 농촌 협약의 기본 개념도(예시)	187
[그림 6-10] 당진시 2030년 도시기본계획과 종합발전계획에서 제안하는 권역 구분	192

제 1 장.

과업의 개요 및 연구 방향

제1절 과업의 배경과 개요

1. 과업의 배경

1) 중앙정부 정책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선제적 대응

□ 농정 패러다임의 전환과 ‘민관협치 정책 시스템’ 구축 중시

- 문재인 정부는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화된 하향식 정책추진방식에서 탈피하여 지방정부와 민간의 자율과 책임에 입각한 분권과 협력, 참여, 협치농정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꾀하고 있음
- 특히 2019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침 개정을 통해 행정의 총괄·조정 및 전담부서 신설, 통합형 중간지원조직 설치 등을 강조하고 있음. 또 2020년 신규 정책으로 도입된 농촌협약 제도에서도 동일한 정책 시스템을 요구하고 있음
-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본위원회(2019.12.03.)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농어촌정책의 민관협치형 정책시스템 구축’을 의견안건으로 채택하고([표1-1] 참고) 각 부처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음. 핵심내용은 자치분권 시대에 맞추어 지방자치단체의 민관협치형 정책시스템을 빨리 구축할 수 있도록 제안한 것이고, 이러한 논의 동향을 담아 농식품부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침 개정과 농촌협약 제도 지침 제정에 반영함

[표 1-1] 농특위 결의안건(2019.12.3.)의 4대 주요 의제와 7대 세부과제

주요 의제		세부과제
행정	통합적 추진체계 구축	1. 농어촌정책의 총괄·조정 체계 형성 2. 전문가 채용, 담당 공무원의 농어촌정책 전문성 확보
행정-민간	민관협치 강화	3. 통합형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 4. 광역-기초 중간지원조직의 역할분담·연계·협력 강화
민간	민간의 조직화 촉진과 자치역량 강화	5. 이해당사자 협의체 조직·육성 6. 민간 협력 네트워크를 위한 비영리법인 육성
제도	농어촌정책 추진체계 제도화	7. 행정과 민간의 역할분담 제도화

□ 정책 융복합과 민관협치, 정책 협약 강조

- 문재인 정부는 포용사회, 자치분권, 균형발전 등을 국정전략으로 하여 정책간 연계, 협력을 강조하고 있음. 각 부처별 정책사업도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 사회적경제, 통합돌봄, 도시재생 등 사회적가치를 지향하는 정책의 융복합 및 민관협치가 강조되고 있음
- (행안부) 2017년 8월 새 정부 들어 사회혁신추진단과 사회혁신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민관협력을 바탕으로 한 시민 주도의 혁신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 중임. 더불어 읍면동 주민자치 혁신을 위해 행정 사무소와 주민센터, 주민자치위원회 등의 혁신적인 전환을 추진중임. 지방분권과 주민자치를 강력한 정책 기조로 제시하며, 마을공동체와 지역복지, 사회적경제, 도시재생 등의 영역을 공간 단위로 융복합하려 하고 있음
-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도시재생과 사회적경제, 주민자치 조직을 연계하여 주민과 청년 등 지역 주도의 창업·혁신, 문화·복지가 어우러지는 도시 공간을 조성하려 함. 행정 칸막이를 극복하고자 부단체장 직속으로 전담 추진단 구성을 강조하고 있음
- 이런 경향은 2019년 3개 부처 협약에 이어 2020년 3월에도 중앙정부 5개 부처가 “지역사회 중심 정책 연계”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더욱 강조되고 있음([표 1-2] 참고). 향후 이러한 정책 협약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함

[표 1-2] 지역사회 중심 정책 연계 5개 부처 업무협약의 각 부처별 주요 사업

담당부처	주요 사업	주요 내용
교육부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우수모델 구축을 통해 마을 교육공동체의 질적 제고 추진
행안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주민 관점의 공공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고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지원 및 우수사례 확산
농식품부	사회적농업 활성화	농업활동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게 돌봄, 교육, 일자리 등을 제공하는 사회적 농업의 육성과 확산
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역의 상황과 대상자의 욕구에 맞는 통합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양한 모형 개발
국토부	도시재생뉴딜	노후주거지와 쇠퇴한 구도심을 지역 주도로 활성화하여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만드는 도시혁신 추진

□ 공동체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통합 강화

- 2019년 12월에 발생한 코로나19 감염병의 대유행으로 2020년은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있음. 감염병 방역조치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농촌도 마을회관이 폐쇄되고 집단모임과 대면회의 등에 대한 자제와 제한이 요구되는 등 공동체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됨
- 이러한 위기시대 속에서도 시설제공과 물자후원·나눔 등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주민들의 연대와 시민단체 및 중간지원조직의 자발적인 활동이 확산되면서 지역공동체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확인됨. 또 언택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온라인을 통한 교육과 홍보활동 등 공동체의 새로운 역할과 변화를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도 함
-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13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친 토론회와 서명운동 등을 통해 제정을 촉구해온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이 2020년 9월에 21대 국회에 세 번째 발의되면서 마을공동체 활동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짐([그림 1-1], 다음 페이지 핵심내용 참고)
-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의 전국조직인 한국마을지원센터연합은 토론을 통해 법률안의 개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2021년 상반기에 열린 임시국회에서 검토될 예정임

[그림 1-1]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웹자보 및 행사사진



- 마을만들기의 중간지원조직도 계속 늘어나 전국적으로 121개 광역 및 기초에 설치됨(2020.12 현재, 민간위탁 69, 행정직영 39, 재단 5, 법인 8)
- 조례는 2019년 기준으로 이미 210개 지자체에서 제정함

[참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 주요 구성과 핵심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마을공동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마을공동체의 역량 강화 및 자립기반 조성 등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체 전통을 회복하고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의 행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이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8조에 따른 시·도계획을 기초로 하여 3년을 단위로 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시·도계획의 수립)

제9조(시·군·구계획의 수립)

제10조(마을공동체활동계획의 수립)

제11조(마을공동체 정책위원회) ①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마을공동체 정책위원회를 둔다.

제13조(전담부서의 지정)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업무를 총괄하여 추진할 부서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전담부서의 지정·운영 및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4조(한국마을공동체진흥원) ①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마을공동체진흥원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제15조(마을공동체 지원센터)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센터의 운영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센터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6조(마을공동체 교육·훈련 등)

제17조(국유·공유재산에 대한 특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0조에 따른 마을공동체활동계획을 수립한 마을공동체에 대하여 국유·공유 재산의 사용료·대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18조(마을공동체 기념주간) ① 국가는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주간을 지정할 수 있다.

□ 충남도의 농촌마을정책과 당진시 대응방향

- 충남도는 2015년부터 농촌마을정책의 기본방향으로써 기존의 방식을 전면적으로 개편하여 ‘민관협치형 정책 시스템 구축’을 핵심으로 정하고, 시군 공모방식을 통해 선제적으로 추진해 옴
- 또 2018년의 마을만들기 3단계 5개년 기본계획(안)에서 민관협치 시스템에 기초하여 행정리 단위의 마을자치, 읍면동 단위 주민자치를 강조하고, 관련 정책 영역간의 융복합 강화, 도-시군 협력과 역할분담, 통합형 중간지원조직 설치 등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제시함. 이에 도청 행정조직으로 농림축산국 산하에 농촌정책을 전담할 수 있는 농촌활력과로 재편하고, 행정부지사 직속의 공동체담당관실도 신설하게 됨(2017.12.). 또 충남도는 2020년 1월 조직개편으로 공동체담당관실을 확대 개편하여 사회적경제와 청년정책을 포함하는 공동체지원국으로 전환됨. 2021년 1월에는 행안부 주민자치회 업무도 이관하여 주민참여예산제와 강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더욱 확장될 예정임
- 이처럼 중앙정부와 충남의 정책은 마을만들기와 주민자치, 사회적경제, 도시재생 등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정책 분야의 연계·협력이 갈수록 강조되는 추세임. 향후 자치분권과 재정이양 추세 속에서 지자체의 ‘민관협치형 정책 시스템 구축’은 더욱 강력하게 요구받을 것임
- 당진시도 이러한 중앙정부 및 충남도 정책동향을 선제적으로 수용하여 민관협치의 정책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음. 기존에 축적된 주민자치 정책의 경험을 바탕으로 마을만들기와 사회적경제 등의 정책이 강하게 연계·협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 이를 통해 지역사회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임
- 당진시가 2020년 1월 조직개편으로 공동체새마을과를 신설하고 주민자치와 마을만들기, 사회적경제, 새마을 업무를 하나의 ‘과’로 통합한 것은 이러한 시대적 추세를 반영한 것임. 향후 당진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해온 주민자치회 전환의 성과를 더욱 확산하고, 도농통합시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읍면 주민생활권 단위의 정책 융복합과 민관협치 시스템 구축에 집중해야 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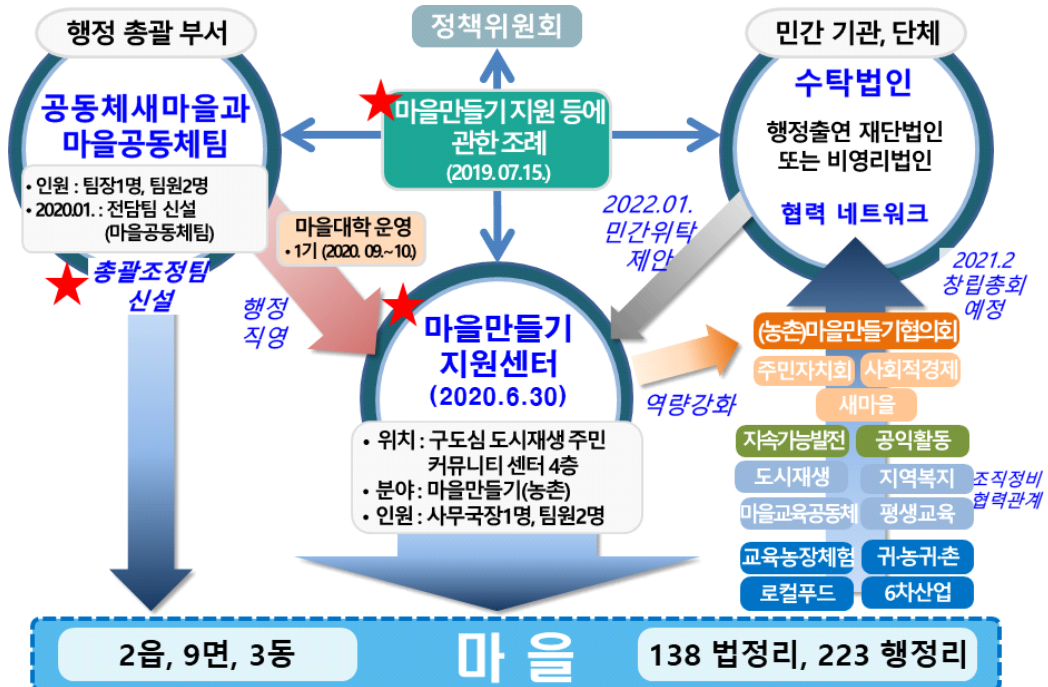
2) 당진시 ‘마을만들기 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한 2차년도 과업 추진

□ 당진시 2차년도 과업의 배경

- 마을만들기는 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전면에 나서서 마을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방향을 찾아 공동으로 실천하는 주민자치운동임. 1990년대 지방자치의 부활과 함께 등장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왔고, 농촌에서는 2천년대 들어와 농촌의 다원적 가치를 활용한 농촌체험마을 형태로 도입되기 시작함. 그 이후에 다양한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전북 진안군이나 완주군과 같은 선진사례가 등장하면서 정책의 체계가 정비되기 시작함
- 농식품부의 농촌마을정책에서도 ‘주민 주도, 상향식’의 방법론을 중시하고, 마을 주민들의 역량 강화를 기반으로 한 내발적 발전 전략을 큰 원칙으로 하고 있음. 또한 주민들 스스로 함께 모여 토론하고 합의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마을의 공동과제를 발굴하고 공동의 발전목표를 세우고 공동으로 실천하는 것이 마을 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방향으로 자리잡음
- 하지만 ‘도시와 농촌의 불균등 발전’이란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농촌마을의 초고령화와 인구 급감, 생활권 확대 등으로 농촌 현실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음. 이에 농촌 마을리더들이 지치지 않고 오래 갈 수 있도록 마을 밖에서 제도적 시스템(정책 환경)을 시급하게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역사적 경험임
- 이런 정책적 취지에서 충남도는 민선6기에 들어와 2015년부터 시·군 자치단체마다 ‘농촌마을정책의 민관협치형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연차별로 공모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옴. 6년에 걸친 실천과정을 거쳐 충남도는 농촌마을정책의 선진지로 발돋움함
- 당진시는 충남도 공모사업에 2018년에 처음 선정되어 2019년부터 2개년에 걸쳐 추진하고 있는 과정임. 본 공모사업은 ‘당진시 농촌마을정책의 민관협치형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1) 행정의 지원체계 정비, (2) 민간 네트워크 구축 및 법인 설립, (3)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설치 및 효율적 운영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당진시는 2019년 1차년도 사업으로 착수하여 민관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

공동학습과 토론의 장을 마련하였고, (1) 행정의 전담 ‘과’ 및 ‘팀’ 신설, (2)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제정, (3) 행정직영의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이 이루어짐. 향후 마을만들기협의회 및 네트워크 법인 설립, 중간지원조직의 민간 독립 등이 큰 과제로 남아 있음([그림 1-2] 참고)

[그림 1-2] 당진시 농촌마을정책의 민관협치형 시스템 구축 추진현황(2020.12. 기준)



□ 2019년 1차년도 과업 수행의 성과

- 마을만들기의 행정 지원체계 분석과 효율화 방안 제시
 - 마을만들기 행정 사업 추진 현황 분석과 평가
 - 관련 행정 조직 및 업무체계 분석과 효율적 업무협조체계 구축 방향
 - 행정의 전문성 강화와 지속가능한 지원 시스템 구축 방향
- 마을만들기 민간 협의회 및 네트워크 구축 방향 제시
 - 마을만들기 관련 민간단체 현황 조사
 - 마을만들기(위원장)협의회 및 민간 네트워크의 의미와 구축 방향
- 마을만들기의 민관 거버넌스 구축 방향 제시
 - 마을만들기 관련 조례 현황과 향후 방향

-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과 설치 및 운영 방향
- 특히 통합형 중간지원조직의 설치 경로
- 종합평가와 신규 사업 제안
 - 당진시 마을만들기 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본방향 제시
 - 마을만들기 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한 당면과제와 향후 일정 제안
 - 마을만들기 행정 사업의 기본방향 및 2020년 신규 사업 제안

2. 2020년 2차년도 과업의 목적과 개요

□ 과업의 목적

- 본 연구는 총 2개년(2019~2020)에 걸쳐 추진된 연구의 2차년도에 해당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해 추진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향후 방향을 제안하는 것을 핵심적인 목적으로 함
- (1) 당진시 마을만들기 행정 지원체계 정비 방향
- (2) 당진시 마을만들기 관련 당사자 협의체 설립 방향
- (3)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의 효율적인 운영 방향
- (4) 2021년 당면과제 및 향후 일정, 주요 사업 제안 등

□ 과업의 개요

- 과 업 명 : 「당진시 중간지원조직 구성 용역(2차)」
- 과업기간 : 2019년 12월 26일 ~ 2020년 12월 25일
 -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과업기간을 연장함
- 소요예산 : 19,600,000원(일금 일천구백육십만원정)
- 공간적 범위 : 당진시 일원
- 내용적 범위
 - 당진시 지역 특성 분석에 기초하여 공동체 전담 ‘과’와 마을만들기 주무부서의 역할 정립 등 행정 지원체계 강화 방향 제안

- 당진시 ‘마을만들기 정책 시스템 구축 및 중간지원조직 운영’ 관련 추진 상황 모니터링 및 주요 쟁점 정리, 향후 방향 제안
- 당진시 행정직영 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조직, 사업, 예산 등의 분석과 사업 모델 개발 제안
- 향후 통합형 지원센터의 설치와 민간독립(민간위탁, 재단법인 등) 경로에 대한 현장밀착형 자문 등

제2절 과업의 주요 내용과 추진 방향

1. 주요 과업 내용

□ 당진시 공동체새마을과의 행정 지원체계 강화 방향 제안

- 전담 ‘과’ 및 ‘팀’ 신설에 따른 업무 협의 및 향후 방향 제안
 - 마을만들기 총괄·조정 부서의 업무 조정 및 향후 발전 방향 제시
 - 신설 ‘과’ 및 농촌 마을만들기 전담 ‘팀’의 기능 강화 방안 제시
- 조례에 따른 행정지원협의회 구성과 운영 방향 제안
 - 마을만들기 행정지원협의회 운영 모니터링과 활성화 방안 제시
- 담당 공무원 역량강화 방향 제안

□ 당진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방향 제안

- 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성격과 역할에 대한 민관 설명회 개최 지원
 -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대한 민관의 합의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지속적인 토론과 지역공론화 과정 지원
 - 중간지원조직 통합 범위 및 경로 결정을 위한 마을대학 및 정책워크숍 제안
- 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주요 사업에 대한 자문과 상담, 방향 제안
 - 2020년 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조직, 사업, 예산 등에 대한 분석 및 평가
 - 향후 민간독립을 위한 사전준비 과제 도출 및 개선 방향 제안
-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상근자 역량강화 방안 제안

□ 당진시 마을만들기협의회(가칭) 설립과 운영을 위한 자문 및 제안

- 당사자협의체로서 마을만들기협의회의 설립과정 자문 및 모니터링
 - 마을대학 개최와 연계하여 마을만들기협의회 구성을 위한 합의과정 도출 및 주요 쟁점별 대안 제시
 - 마을만들기 관련 민간 기관·단체와의 협력관계 및 민간 네트워크 구축 방향 제안

- 마을만들기협회의 역할과 주요 사업 등에 대한 자문 및 제안

□ 당진시 마을만들기 관련 정책 영역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 마을만들기 및 관련 영역과의 연계·협력을 위한 기본방향과 선진 사례 분석
 - 마을만들기 및 관련 영역과의 연계·협력의 기본 방향 고찰
 - 마을만들기와 관련 영역의 지역사회 내 연결망 구축 사례
 - 충남 시군의 마을만들기 연계·협력 사례분석
- 마을만들기 관련 영역의 중간지원조직 설치 및 논의 동향 분석
 - 도시재생지원센터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공익활동지원센터 및 공동체통합지원센터
- 마을만들기 통합형 중간지원조직의 설치 및 운영 방향 제안

□ 재정분권에 따른 당진형 마을만들기 사업 제안

- 타 시군의 특색있는 농촌마을정책 사례 분석
- 당진시의 향후 독자적인 농촌마을정책 방향 제안
- 마을만들기 사무 이양과 농촌협약, 농촌공간계획 등 농식품부 정책 동향 분석 및 활용 방안 제안

2. 과업 추진 방향

□ 현장지향형 연구추진체계 구축

- 충남도 민선6기 마을만들기 정책 방향을 제안했던 충남연구원에서 연구 책임을 맡아 과업의 큰 방향 설정과 조사 결과 분석 등에 적극 참여함. 또 충남연구원에서 2016년 8월부터 수탁운영 중인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주도하여 당진시 중간지원조직 설치 및 운영 방향 수립에 일상적으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함

- 당진시 공동체새마을과 마을공동체팀과 협력하여 사업 현장조사와 마을 대학 모니터링, 중간지원조직 활동 모니터링 등을 시행함. 이를 통해 당진시 마을만들기 행정 및 지원센터의 역량강화와 통합형 중간지원조직 설치 및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한 기반 구축에 기여함
- 또한 충남공익활동지원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 광역의 중간지원조직과 당진시의 다양한 민간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공동학습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민간 네트워크 강화와 향후 지속성 유지 등에 기여함

□ 타 시군과의 협력방안 모색

- 본 연구용역과 같은 성격의 과업을 충남 14개 시군에서 다음과 같이 수행해왔고, 2020년 현재 2차년도 사업으로 서산시와 당진시가 계속 추진 중임([표 1-3] 참고)
 - 천안시, 아산시, 논산시, 예산군, 홍성군(이상 2015~2016년 수행)
 - 보령시, 서천군, 청양군, 태안군(이상 2016~2017년 수행)
 - 금산군(2017~2018년 수행)
 - 부여군(2018년 수행)
 - 공주시(2018~2019년 수행)

[표 1-3] 2020년 충남 시군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연구용역 현황(2개 시군)

구분	2차년도	
	서산시	당진시
계약기간	2020.3.25.~11.19.	(변경전) '19.12.26.~'20.8.25. (변경후) '19.12.26.~'20.12.25.

주 : 당진시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계약기간을 변경하여 추진

- 본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충남연구원이 중심이 되고 충남도의 협조를 받아 타 시·군과의 협력관계를 모색하면서 상호 경험의 공유가 충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함

□ 타 시군 공동연구 성과의 적극적 반영

- 2015년부터 수행된 타 시군의 연구용역도 기본적으로 “자치단체 농촌마

을정책의 민관협치형 시스템 구축”이란 동일한 목적으로 추진된 것임. 따라서 본 연구도 그동안의 연구성과를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당진시 실정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적용함

- 각 시군별로 지역별 여건과 출발상황에 차이가 있고, 세부 과업내용도 다르지만 동일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민관협력의 정책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적 환경이나 중앙정부 동향, 제도적 상황 등에서는 유사성이 매우 많음. 또한, 각 시군 사이에 상호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고 선행경험을 공유하면서 윈-윈 할 수 있는 공동의 전략을 수립하기에 용이함
- 또 연구용역 최종보고서가 행정과 마을리더, 중간지원조직 상근자, 마을활동가 등이 공동으로 학습하고 토론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타 시군 보고서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본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에 따라(아래 박스 참고) 충남도의 동일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인 타 시군에서 수행한 공동연구 성과를 활용하되, 보고서에 각주로 “공동연구 성과임”을 명기함

IV. 과업수행 지침

○ 본 과업은 공공행정의 절차와 방식에 준하여 추진한다.

1. 일반 및 보안사항

가. 본 과업은 2015년부터 충남도의 14개 시군에서 동시 추진중인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설치 및 민간네트워크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타 시군과의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연구 및 컨설팅을 진행해야 한다.

- 과업의 특성상 선진지 사례 분석과 통합모델 검토, 법·제도 분석, 신규사업 발굴 등은 14개 시군의 공동 연구를 통해 도출될 것으로 보고, 이러한 공동연구 성과에 대해서는 보고서에 “공동연구 성과임”을 반드시 명기해야 한다.
- 단, 지역 특성에 맞추어 관련 자료를 세심하게 분석·제안해야 한다.

제2장.

당진시 마을만들기 행정지원체계 강화 방향

제1절 마을만들기 행정의 전담부서 기능 강화 방향

1. 행정의 전담부서 현황과 기능 강화 방향

1) 행정의 마을만들기 총괄·조정 부서 구성 및 운영 현황

□ 행정 지원체계 정비의 기본 방향¹⁾

• 농촌 마을만들기 전담 팀의 신설과 총괄·조정 역할 강화

- 기본적으로 농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심으로 전담 팀을 신설하고, 농촌 마을만들기 사업 중 H/W와 S/W 사업 담당자를 구분하여 배치함
- 당진시는 2020년 1월 조직개편을 통해 기존의 건설교통과 기반조성팀에서 공동체새마을과 마을공동체팀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심의 전담 팀으로 재편됨
- 당진시는 앞으로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전담부서 설치와 총괄·조정 권한을 명확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음

• 관련 행정 부서 사이의 업무협조체계 구축

- 공동체새마을과 내의 주민자치, 마을만들기, 사회적경제, 새마을 업무와 강력한 업무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함. 이외에도 지속가능담당관실 및 농촌정책영역(농촌관광과 귀농귀촌, 6차산업 등)과도 협조체계가 중요함
-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제13조에 규정된 ‘행정지원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근거하여 행정의 업무협조체계가 강력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함. 이를 위해 제13조 2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2021년 상반기에 규칙을 제정하여 2021년 5월에 신청할 예정인 농촌협약 공모사업을 체계적으로 준비함

제13조(마을만들기 행정지원협의회의 설치·운영)

- ① 시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의 각종 행정 사업을 담당하는 관련 부서들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마을만들기 행정지원협의회(이하 “행정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행정지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1) 이하는 당진시의 1차년도 연구 이후에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1차년도 보고서의 제안을 요약하고 일부 내용을 추가하여 제안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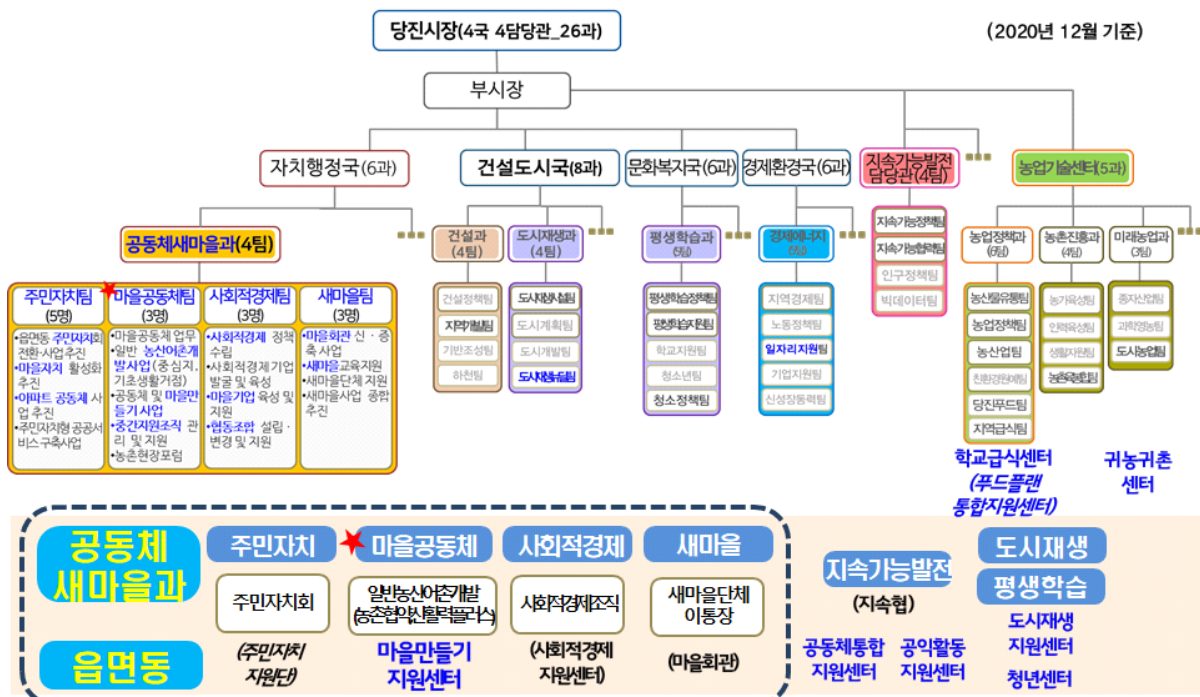
• **민관협치 관점에서 미래지향적인 정책 수요 반영**

- 행정의 지원체계를 정비해 나가는 과정 자체가 민관협치(거버넌스) 관점을 반영하여 행정과 민간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중앙정부 정책동향을 적극 반영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함
- 민간의 정책 수요를 정확하게 수렴하는 과정과 병행되어야 함. 농촌 마을의 객관적 상황을 파악하고 마을리더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야 함
- 또한 중앙정부의 새로운 정책 동향에도 적극 대응하는 방향이 되어야 함. 특히 기획재정부의 재정분권, 농식품부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재편과 지방사무이양, 행안부의 주민자치회 전환 등의 정책 동향이 향후 매우 중요한 정책 흐름이 될 것임

□ **마을만들기 총괄·조정 부서의 구성 및 업무 현황**

- 당진시는 2020년 1월 행정 조직 개편을 통해 공동체새마을과를 신설하여 (농촌)마을만들기와 주민자치, 사회적경제, 새마을 등이 한 부서로 편제되면서 정책 융복합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통합형 중간지원조직 설치의 가능성도 확대됨([그림 2-1] 참고)

[그림 2-1] 당진시 마을만들기 관련 주요 담당부서 조직도



- 당진시는 조직 개편에 따라 농촌 마을만들기 업무는 공동체새마을과 마을공동체팀 중심으로 이관되었음. 농촌정책 영역 중에서 농촌체험휴양마을과 6차산업 업무는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6차산업팀, 농산물유통 및 로컬푸드 업무는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산물유통팀, 그리고 귀농귀촌 업무는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과 도시농업팀에서 담당하고 있음
- 향후 농촌협약을 염두에 둔다면 공동체새마을과 마을공동체팀과 농촌정책 관련 업무 부서 사이의 협조체계가 잘 구축되어야 할 것임
- 농촌 마을만들기 관련 업무 전담부서인 마을공동체팀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심의 주요 H/W 업무와 시군역량강화사업 등의 S/W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중간지원조직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하는 총괄 조정 부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표 2-1] 참고)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농촌현장포럼, 시군역량강화사업, 희망마을 선행사업, 중간지원조직 운영 및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앞으로 신활력플러스, 농촌협약 등 신규 공모사업에도 도전해야 하는 등 업무량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농촌 마을만들기와 관련된 많은 업무가 한 팀에 집중되어 있고, 행정직영 마을만들기 지원센터가 초기단계인 점 등을 고려하면 담당인력에 비해 여전히 업무량이 많다고 할 수 있음

[표 2-1] 당진시 공동체새마을과 마을공동체팀 분장 사무(2020. 12. 기준)

직 위	성 명	분 장 사 무	발령일자
행정6급 (팀장)	심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공동체 업무 총괄 ○ 공동체 및 마을만들기 사업 발굴 ○ 예산편성 및 집행지도 감독 ○ 공동체 및 마을만들기 조례에 관한 사항 ○ 공동체 및 마을만들기 사업 기획 및 홍보 ○ 취약지역 생활여건 공모사업 추진 	2020.1.1.
시설8급	임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농촌중심지활성화) 추진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추진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마을만들기_계속사업)추진 ○ 그 밖에 공동체 및 마을만들기사업에 관한 사항 	2020.7.1.
행정8급	유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 관련 사항 ○ 충남형 마을만들기 사업 공모 추진 ○ 희망마을 선행사업 ○ 마을공동체 서무 및 예산 관련사항 ○ 그 밖에 공동체 및 마을만들기사업에 관한 사항 	2020.1.1.

자료 : 공동체새마을과 마을공동체팀 제공

- 조직개편을 통해 중간지원조직의 통합형 설치 논의가 원활해짐
 - 당진시는 공동체 중심으로 전담 행정조직이 신설됨에 따라 행정직영 중간지원조직으로 이미 설치된 마을만들기지원센터를 기반으로 주민자치와 사회적경제 업무를 통합할 수 있게 됨
 - 향후 설치 예정인 공익활동지원센터(공동체통합지원센터)와 기존에 설치된 도시재생지원센터 등과의 통합형 설치 논의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

2) 마을만들기 전담 ‘팀’의 기능 강화 방향

□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제도적인 위상 확보

- 당진시 마을공동체팀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심의 주요 하드웨어 업무와 중간지원조직 운영 및 관리, 그리고 역량강화 프로그램 사업 등을 담당하는 농촌 마을만들기 총괄·조정 부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향후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제13조에 명시된 행정지원협의회를 적극적으로 운영하면서 농촌 마을공동체 관점에서 관련 사업의 총괄·조정에 관한 권한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아야 할 것임. 또 당진시의 독자적인 마을만들기 시책사업 개발과 추진, 행정 내 관련 사업 정보 축적과 관-관 소통, 쟁점 분야의 조정 등 역할도 요구됨
 - 또 신활력플러스와 농촌협약 등 중앙부처의 신규 공모사업에도 도전해야 하는 등 향후 업무량이 계속 늘어나고 역할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농촌협약까지 염두에 두고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농촌(지역)정책 위원회를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하고 전담부서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임
- 이처럼 조례에 근거한 행정지원협의회나 정책위원회 등의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하면서 농촌마을정책의 총괄·조정부서로서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해나가야 할 것임

□ 공동체새마을과의 업무연찬 강화와 업무협조체계 구축

- 당진시는 마을만들기와 여러 공동체 분야의 업무협조를 염두에 두고 공동체 전담 ‘과’를 신설하였으나 아직까지 정책간의 연계·협력이나 업무조정은 충분하지 못함

- 현재 주민자치팀, 마을공동체팀, 사회적경제팀, 새마을팀의 4개 팀은 기존의 부서에서 수행하던 사업을 그대로 이관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새롭게 조정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임
- 공동체새마을과 소관 4개 팀의 업무연찬을 강화하여 상호연계성이 높은 사업의 업무 재배치나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함
- 당진시에 축적된 공동체정책의 경험을 기초로 지역 실정에 맞는 업무 분장 및 조직체계를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함
- 특히 도농통합시 특성을 반영하고 통합형 중간지원조직의 설치 및 운영을 고려할 때 읍면동 주민자치회 운영과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마을회관 리모델링 등의 업무는 적극적으로 결합해야 함
- 또 지속가능발전담당관실에서 추진중인 여러 사업도 연계성이 매우 높고, 도시재생이나 마을교육공동체(평생학습) 등의 정책 영역과의 적극 결합해야 함
- 그리고 향후 농촌정책의 통합성을 고려하고 농촌협약 및 농촌공간계획 등을 염두에 둔다면 농촌관광, 농촌산업(6차산업), 사회적농업, 농촌복지, 푸드플랜 등의 정책 영역과 적극 결합해야 할 것임

□ 행정 사업의 ‘역량단계별 지원체계’를 지렛대로 업무협조체계 강화

- 마을만들기 행정사업의 ‘역량단계별 지원체계’는 현장경험을 통해 검증된 방향성임. 작은 사업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축적한 마을, 사업계획서가 아니라 실제 실천해본 경험으로 도전하는 마을, 이런 마을에 행정 사업이 지원되어야 성공가능성이 높음
- 사업계획서만 가지고 도전하는 마을, 마을리더의 정치력으로 도전하는 마을, 작은 경험을 축적하지 않고 큰 사업에 무모하게 도전하는 마을은 배제하겠다는 취지임. 2007년에 전북 진안군에서 도입되어 전국으로 확산되고, 충남도도 2011년에 도입하고, 농식품부가 정책적으로 인정한, 지금까지 정착된 그나마 검증된 방향성임
- ‘역량단계별 지원체계’에는 마을공동체팀의 행정사업만이 아니라 공동체새마을과의 다른 팀과 다른 부서 사업들도 다수 관련됨. 충남도(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작성하여 보급한 『마을사업 한번에 파악하기 길라잡이 2019』 자료와 같이 농촌 마을만들기의 다양한 행정사업을 상호연계하여

지원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렇게 마을만들기 행정사업을 역량단계별로 배치하기 위해서라도 행정지원협의회의 적극적인 운영이 필요하고, 이런 과정을 주도하면서 마을공동체팀의 권한이 강화될 수 있음
 - 당진시 자체적으로 마을만들기 행정사업 목록을 정리하여, 마을의 역량단계별로 주민교육과 공모사업을 연계하는 정책 체계를 정립하고, 매년 자료집을 작성하고 연초에 읍면을 순회하며 공동설명회를 개최하는 방식을 적극 도입해야 함
 - 이 과정에서 마을공동체팀과 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임. 처음부터 전체 부서로 확대하기 어렵기에 공동체새마을과 소관의 마을사업부터 먼저 검토할 것을 제안함

2. 2020년 마을만들기 행정 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방향

1) 행정사업 추진 현황

□ 마을만들기 역량단계별 행정사업 추진현황([표 2-2] 참고)

- 당진시는 농식품부 및 충남도에서 정립한 ‘역량단계별 지원체계’에 따라 마을만들기 행정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다만 소액사업의 배치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토론이 필요함

[표 2-2] 당진시 2020년 마을만들기 역량단계별 행정사업 추진 현황

사업명칭	사업예산	대상지구	비고
마을만들기 소액사업	60백만원 (5개 마을)	벽화그리기: 2개 마을(정미면 산성리, 우산리) 주민 주도형 작은 사업(화단정비): 3개 마을(송산면 오도리, 대호지면 적서리, 신평면 도성2리)	도비 매칭
농촌현장포럼	30백만원 (10백만원*3개)	정미면 산성리, 송산면 삼월리, 대호지면 적서리	지방이양 자체 시비
희망마을 선행사업	150백만원 (30백만원*5개)	송악읍 반촌2리, 신평면 신흥1리, 신송2리, 도성2리, 송산면 반촌리	도비 매칭
마을만들기 (자율개발)	200백만원 (100백만원*2개)	고대면 진관1리, 신평면 신송1리	지방이양 (도비매칭)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1,115백만원	계속_우강면(40억), 대호지면(40억), 정미면(40억) 신규_없음	국비 매칭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3,372백만원	계속_고대면(60억), 면천면(60억) 신규_없음	

주/자료 : 공동체새마을과 마을공동체팀 제공. 이외에 대호지면 장정리 창조적마을만들기(경관) 계속 사업(약 2억원) 등이 있음

□ 농식품부 시군역량강화사업 추진 현황([표 2-3] 참고)

- 2020년의 농식품부 시군역량강화예산이 20백만원에 불과하였고, 대부분 2018년, 2019년의 이월예산 중심으로 집행함
- 코로나19 상황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을공동체팀이 신설되고 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운영되면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함
- 특히 마을대학 운영, 민관합동워크숍 개최, 225개 행정리 마을자원 전수조사 등을 추진하고 새로운 경험을 축적함

[표 2-3] 당진시 2020년 시군역량강화사업 추진 현황

명칭	예산	내용	대상	비고
조사연구	91,111천원	행정리 마을전수 조사	11개 읍면 225개 행정리	이월 예산
	13,600천원	주민 수요조사	인터뷰: 마을리더 및 활동가 22명 설문: 일반시민	
지역인적 자원육성	20,200천원	마을대학 1기	현장포럼, 희망마을선행사업 대상 마을리더	
	20,200천원	마을대학 2기	마을리더, 현장활동가 등 40명 내외	
	20,200천원	마을공동체만들기 (연극)	신평면 신송1리, 정미면 하성리	
	21,000천원	마을공동체만들기 (목공예)	관내 중고등학생	
교육 및 컨설팅	10,000천원	현장포럼	송산면 부곡리	2020년 예산
홍보 마케팅	14,800천원	권역 홍보	금초권역	
	18,000천원	권역 홍보	검은들권역	

주/자료 : 공동체새마을과 마을공동체팀 제공. 실제 집행결과를 기준으로 재작성

□ 충남도 살기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 현황([표 2-4] 참고)

- 도비 사업은 크게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100백만원과 ‘희망마을 선행사업’ 150백만원(30백만원×5개)으로 구분할 수 있음

[표 2-4] 당진시 2020년 충남도 살기좋은 희망마을만들기 사업 추진 현황

사업목	예산	세부 사업명	비고
연구개발비	21,000천원	희망마을 선행사업(S/W)	5개소
	19,600천원	중간지원조직 구성용역	
	20,400천원	지원센터 홍보컨텐츠개발	
	21,000천원	교육·홍보영상 제작	
	18,500천원	마을만들기 기본계획수립	
	21,500천원	마을활동가 양성교육	
	21,000천원	민관거버넌스구축	
시설비 및 부대비	96,866천원	희망마을 선행사업(H/W)	4개소
	19,744천원	그림이 있는 농촌마을 만들기(벽화그리기)	2개 마을 5개소
	19,200천원	주민 주도형 작은사업(화단정비)	3개마을
	17,800천원	금초권역 사후관리	
	112,025천원	센터 리모델링	
	19,267천원	센터 옥상데크	
행사운영비	20,200천원	공동체 창안대회	
민간자본이전	25,000천원	희망마을 선행사업(H/W)	1개소

주/자료 : 공동체새마을과 마을공동체팀 제공

□ 당진시 자체 시비사업 현황

- 황토권역 다목적복지회관 주변정비사업(시설비) : 총 30백만원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지구 시설관리(추경3회) : 총 5,850천원(1개)
- 마을공동체 만들기 예비계획서 작성 지원 사업 : ①송산면 기초생활조성 공모사업 예비계획서 용역(19백만원), ②신활력플러스사업 예비계획 용역(19백만원), ③충남형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예비계획서(19백만원), ④ 2021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공모사업(26백만원)

2) 행정사업 추진 상황 분석과 향후 방향

- 2018, 2019년도의 농식품부 시군역량강화사업은 당진시 건설교통과 기반조성팀 소관 사무였는데 적은 인원수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업무량 때문에 대부분이 이월됨
- 당진시는 2020년에 이월된 시군역량강화사업비(259,440천원)를 최대한 활용하여 신규 마을 발굴 및 소액사업 지원, 마을만들기지원센터 개소와 운영, ‘민관협치형 정책 시스템 구축’ 등에 적절하게 활용함
- 하지만 충남도 타 시군에 비해 당진시는 여전히 역량단계별 추진체계가 미약함. 그리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경험이 충분하지 않은 가운데 2020년 1월에 신설된 마을공동체팀이 마을만들기 행정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마을만들기지원센터 개소와 운영을 진행하고, 다양한 국도비 공모사업에 도전하는 등 큰 변화가 나타나
- 현재 4~5백만원의 소액사업으로 추진중인 ‘그림이 있는 농촌마을 만들기(벽화그리기)’ 사업과 ‘주민 주도형 작은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를 통해 당진형 주민자치회와 연계, 협력방향을 강화하고, 새로운 혁신 정책으로 ‘마을공동체수당’을 검토해보는 등의 논의로 확장해볼 수 있을 것임
- 또 현재 수립중인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통해 행정사업의 체계적인 배치와 연계, 협력 방향 등에 대해 종합적인 전략이 도출되어야 할 것임. 또 공모사업으로 신청할 예정인 신활력플러스와 농촌협약과 연계하여 신규 사업 발굴 자체보다는 ‘정책 시스템 구축’에 더욱 집중해야 할 것임

제2절 행정지원협의회 구성과 운영 방향

1. 행정지원협의회 운영의 기본 방향

□ 행정안전부의 협업 활성화 정책과 제도 강화²⁾

- 행정안전부(2020.10.)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근거하여 ‘범정부 협업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협업이음터(www.gwanghwmoon1st.go.kr)’를 운영하며, ‘협업인재상’을 시상하는 등 행정 협업을 강조하고 있음
- 현재 입법 예고된(’ 20.10.15.) 「행정절차법」 개정(안)에서는 행정청 간 협업의 원칙과 노력 의무를 명문화하고 있으며, 협업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등 행정협업 활성화를 위한 직접적인 근거를 담고 있음
 - 중앙정부 중심이기는 하지만 위 규정 46조에서는 협업책임관, 협업지원관, 협업 매칭 매니저를 두도록 하고 있고, 지자체와 공공기관으로 계속 확대 중에 있음
 - 또한, 부처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복잡·다양한 다수 부처의 국정·사회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19년부터 ‘연계나 협력이 필요한 협업과제 수행을 위해 파견하는 인력을 지원하는 정원’을 협업정원(2년 범위내 한시정원으로 운영)으로 분류하는 제도도 도입중임
 - 지자체 혁신평가에서도 ‘대국민 서비스의 질 향상 및 업무 효율성 제고’와 ‘협업문화 조성’ 등 정성적인 평가항목에서 반영함. 또 2021년 상반기에 개정 예정인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인사혁신처 예규)에서도 협업 실적과 능력에 대한 평가가 강화되고 있음
- 행정안전부는 타 지자체와 협업하여 주민서비스 개선을 하는 경우 재정적인 지원도 하고 있음
 - 특별교부세 : 지방자치단체 협업 지원 사업
 - 보통교부세 :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지표 반영(2019년 신설)

2) 서산시 2020년 2차년도 공동연구의 성과에 해당함

□ 행정지원협의회의 성격과 필요성

- 행정지원협의회는 ‘당진시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제13조에 근거를 두고 설치되는 회의체로서 행정 부서 사이의 업무협조를 제도적으로 규정하는 것임. 참가 부서의 정기적이고 의무적인 참가를 통해 책임있는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실효성이 있음
- 행정 내 다양한 마을 관련 사업의 정보 공유와 사업간 협의를 위해서는 행정 내의 관·관 업무협조회의가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함
- 마을만들기 관련 유사 사업의 통합, 연계 운영을 통해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 방안이 도출될 수 있음
- 특히, 중앙정부 농촌정책의 동향을 보면 자치분권 추세에 맞추어 신활력 플러스나 농촌협약 같은 신규 정책에서는 행정의 업무협조체계를 매우 강조하고 있음.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도 전체 농촌정책을 염두에 두고 행정지원협의회 구성을 적극 검토해야 함

[참고] 농촌협약의 전제조건

③ 시·군(시·도)에 협약을 담당하는 **전담조직(부서)***을 두고, 협약 당사자 등으로 구성된 **농촌협약 위원회****를 조직하며, **중간지원조직*****을 운영

* 농촌지역개발사업 총괄부서(행정기구 설치·운영 조례의 최소단위)로 농촌협약 기획, 신청, 시행, 준공, 사후관리까지의 전 과정을 담당하며, 아래 조건(i·ii 또는 i·iii)을 충족
 i) 부서장을 제외하고 최소 5인(농촌협약 정책과제만을 담당) 이상으로 구성
 ii) 부서에서 농촌협약 정책과제의 이행을 담당하는 인원(5인 이상)이 과반수이거나,
 iii) 농촌협약 정책과제의 이행을 담당하는 인원(5인 이상)이 과반수가 아니더라도, 그 외 나머지 인원이 모두 과제 이행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는 경우

** 시·군 및 시·도 전담부서, 지역주민 대표, 지역 공동체, 중간지원조직 등으로 구성

*** 중심지활성화, 마을만들기, 귀농·귀촌 등 관련 다수의 중간지원조직을 통합 운영 시 가점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020.10., 2021년 농촌협약 설명회 자료집, 6쪽

2. 당진시 행정지원협의회 운영 현황 및 활성화 방안

1) 당진시 행정지원협의회 운영 경험과 향후 구상

□ 2020년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행정TF팀 운영 경험

-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행정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하였으나 농식품부 심사에서 선정되지 못하고 한시적인 운영에 그침
- 구성 : 총 17명(TF팀장 : 부시장)
 - 자치행정국장, 공동체새마을과장, 공동체새마을과 마을공동체팀장 · 주민자치팀장 · 사회적경제팀장 · 새마을팀장
 - 기획예산담당관 기획팀장 · 예산팀장
 - 지속가능발전담당관 지속가능협력팀장 · 청년정책팀장
 - 평생학습과 평생학습지원팀장, 사회복지과 복지정책팀장, 도시재생과 도시재생뉴딜팀장, 농업정책과 친환경원예팀장, 농촌진흥과 생활지원팀장, 미래농업과 도시농업팀장
- 운영 실적 : 2회 개최(4.7, 4.22)
 - 코로나19 상황에서 소규모 관계자 업무협의로 대부분 대체함

[표 2-5] 당진시 신활력플러스 사업추진단 구성 및 논의 과정

구 분		일자	주요 내용	비고
1	업무보고	20. 01. 29.	· 2021년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제안 시장보고	
2	1차 협의	20. 02. 27.	·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방향 및 일정협의	
3	2차 협의	20. 03. 09.	·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협의	
4	3차 협의	20. 03. 23.	· 1차 온라인 의견수렴 결과 공유	
5	4차 협의	20. 04. 07.	· 2차 온라인 의견수렴 결과 공유	
6	1차행정TF	20. 04. 07.	· 부서간 연계 · 후속사업 협의	행정
7	5차 협의	20. 04. 21.	·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주요사업 도출	
8	2차행정TF	20. 04. 22.	· 부서간 연계 · 후속사업 연계 강화방안 협의	행정
9	워크숍	20. 04. 28.	·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예비계획서 초안 검토	

주/자료 : 당진시, 2020.5., “당진시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예비계획서”, 5쪽

□ 당진시의 기본 구상

- 당진시는 아래와 같이 마을공동체 관련 부서간 연계·협력사업 발굴, 마을 관련 유사 사업의 통합 및 연계운영을 통한 예산 절감 도모하기 위해 행정지원협의회 운영을 지원할 계획임³⁾
 - 기본적으로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제안사항을 수용하는 방식임
- 운영시기 : 정기회의(분기별 개최), 수시회의(현안발생시 개최)
- 구성(안) : 10명(대표 ; 부시장)
 - 마을공동체팀장, 주민자치팀장, 사회적경제팀장, 지속가능정책팀장, 청년정책팀장, 평생학습지원팀장, 도시재생팀장, 농업정책팀장,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사무국장 등
 - 각 부서마다 협업담당자 지정 및 업무분장 명시를 통해 일상적인 협업 추진
 - 협업담당자 인사고과에 반영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실효성 제고
- 사업비 : 비예산
- 필요성 및 주요 내용
 - 분야별 지원센터의 분산 설치로 공동체 정책 간 단절이 발생되며 이로 인한 주민 피로감 및 효율성 저하 문제 발생
 - 다양한 마을관련 사업의 정보 공유와 사업간 협의를 위해서는 행정내 업무 협조 및 마을만들기지원센터(중간지원조직)와 연계 필요
 - 조례에 근거를 두고 설치되는 회의체로서 정기적인 의무 참가를 통해 책임 있는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추진

3) 공동체새마을과 마을공동체팀 자료 제공. “당진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 2020년 운영계획” 에서 부분 정리

2) 충남 타 시군의 행정지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 사례⁴⁾

□ 보령시 마을공동체 행정지원협의회 사례

- 보령시는 2015년 12월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면서 제 13조에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함
 -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제안한 표준조례안을 수용하는 방식이었음

[참고] 보령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제13조(행정지원협의회 설치·운영)
시장은 마을공동체 사업을 담당하는 관련 부서들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마을공동체 행정지원 협의회(이하 "행정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 한다.

- 2015년 5월 7일에 행정내 다양하게 흩어져 있는 마을 사업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행정지원협의회 추진단이 조직됨
 - 총 6개 분야, 11개 부서 14개 팀, 27명으로 구성함([그림 2-2] 참고)
- 주요 역할
 - 중앙부처 마을만들기 사업공모 시 협조
 - 농촌 지역사회개발정책의 행정 내 핵심 역할 수행(신규분야의 적극적 개척 및 융복합)
 - 마을만들기 사업의 행정 내 연계와 성과의 외연적 확산 도모 : 로컬푸드, 6차산업, 농촌창업, 귀농귀촌, 주민자치, 평생학습 등
- 추진단이 구성된 2015년도에는 워크숍 개최와 공모사업 추진협의 등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졌으나 부서개편, 인사이동 등으로 조직체계에 변동이 생기면서 현재는 활동이 저조함
- 2018년도에는 행정과 민간, 중간지원조직이 칸막이를 허물고 함께 소통하고 교류·협력하여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행정(11개 실·과 12개팀)과 민간단체(마을만들기협의회, 귀농·귀촌협의회, 농업인단체, 농촌체험마을, 문화·예술단체 등), 중간지원조직(마을만들기지원센터, 귀농·귀촌센터, 노인복지센터 등)의 삼자 협의회인 ‘보령 삼통회(가칭)’ 구성을 시도하였으나 실제 운영되지 못함

4) 이하 내용은 2015년부터 수행한 14개 시·군 공동연구 성과를 반영하여 현재 시점에 맞게 일부 수정·보완하여 정리한 것임

- 2020년 3월 현재, 보령시도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협의체를 구성하여 예비계획서 작성 과정에서 수 차례 회의가 이루어짐

[그림 2-2] 보령시 마을공동체 행정지원 협의회 조직체계(2015년 조직 당시)

협의회 추진단장			
부 시 장			
부 단 장			
경 제 개 발 국 장			
구 분	부 서 명	팀명	담당업무
총괄팀	기획감사실	정책기획팀	◦ 포괄보조사업 총괄
농산어촌 개발	건설과	마을만들기팀	◦ 희망마을, 권역사업 추진 ◦ 마을만들기사업 총괄
	해양정책과	항만지원팀 섬자원개발팀	◦ 어촌개발사업 ◦ 도서지역 개발
	산림공원과	산림경영팀	◦ 산촌개발
문화· 복지	문화공보실	문화예술팀	◦ 행복문화마을만들기
	사회복지과	경로복지팀	◦ 공동생활홈
농업농촌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농 정 팀	◦ 농어촌체험휴양마을 ◦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
		로컬푸드팀	◦ 로컬푸드 운영 ◦ 학교급식지원센터
		마케팅지원	◦ 지역특화 융복합산업 ◦ 향토, 6차산업 총괄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생활자원팀	◦ 농촌관광 업무 ◦ 농촌체험마을
		교육귀농팀	◦ 귀농귀촌업무에 관한 사항
사회적 경제	지역경제과	고용정책팀	◦ 마을기업관리 ◦ 사회적기업 육성관리
주거환경개 선	건축허가과	주택팀	◦ 농어촌주거환경개선 ◦ 농어촌주택개량 및 빈집 정비
	도시과	도시재생팀	◦ 도시재생사업 ◦ 새뜰마을 사업

□ 천안시 행정지원협의회(‘한울타리’) 사례

- 천안시는 2016년 5월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면서 9조에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함
-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제안한 표준조례안을 수용하는 방식이었음

[참고] 천안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제9조(행정지원 협의회 설치·운영)

시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담당하는 관련 부서들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지원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천안시는 2017년도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가 모여 ‘한울타리’라 부르는 행정지원 협의회를 설치하고 협업 논의 및 공무원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함
- 구성원은 10개 과, 20팀, 28명([표2-6] 참고)
- 2017년도에는 연 4회 과정(분기별 1회)으로 매회 행정지원협의회 회의 및 간담회(1시간) 후 교육(3시간)을 진행함([표2-7] 참고). 이 때 교육 참석 제고를 위하여 공무원 상시학습 인정 혜택을 부여함

[표 2-6] 천안시 마을만들기 행정지원협의회 ‘한울타리’ 구성(2017년 조직 당시)

천안시 관련 행정 부서		담당업무	참여 인원
과	팀		
자치협력과	분권팀	주민자치, 천안NGO센터, 민관협치 관련업무	3명 내
	새마을협력팀	안심마을만들기, 동네자치, 자원봉사	
여성가족과	출산장려팀	출산정책, 출생축하금 지원 등	2명 내
	아동청소년팀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시설 운영관리	
노인장애인과	노인정책팀	노인일자리사업, 노인복지관, 노인회 련업무	3명 내
	사회적경제팀	원도심 상권활성화 사업, 전통시장, 소상공인	
지역경제과	마을만들기팀★	마을만들기사업, 지역역량강화	4명 내
	농업정책팀	농업정책,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농업정책과	농산물유통팀	농산물 유통, 수출지원, 농산물 직거래	2명 내
	농식품산업팀	6차산업 육성	
축산식품과	로컬푸드급식팀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명 내
	농지기반팀	희망아울 선행사업, 중간지원조직, 정주환경개선사업	
건설도로과	원도심재생팀	원도심 재생사업	5명 내
	재생정책팀	재생정책	
도시재생과	도시디자인팀	도시디자인 업무, 옥외광고물, 공공디자인	2명 내
	교육지원팀	도시재생대학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농촌자원개발팀	농촌관광, 체험휴양	3명 내
	도시농업팀	공동체 도시농업, 화훼체험교육	
정보교육원 평생교육과	평생교육팀	평생교육, 평생학습	2명 내
	자치센터지원팀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 2017년도 행정지원협의회 운영 현황 : [표 2-7], [그림 2-3] 참고
 - 일시 : 2017년 6월 26일(월) 15:00 ~ 17:00
 - 장소 : 천안시 서북구 보건소 회의실(3층)
 - 참석 인원 : 행정 15명 (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 2명, 일자리창출과 2명, 농업정책과 1명, 산림녹지과 1명, 자치민원과 2명, 노인장애인과 1명, 체육교육과 2명, 도시재생과 3명), 공동체지원센터 5명
 - 주요 내용
 - ① 한울타리 운영 취지 및 노사공동체팀 소개
 - ② 천안시 공동체지원센터 소개
 - ③ 2017년 전국 마을 중간지원조직 및 마을정책 간담회 내용 공유
 - ④ 초청강연 : 안현경 전문위원(홍성군 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 ‘행복한 마을 공동체의 열쇠, 행정!’

[표 2-7] 천안시 마을공동체 행정지원협의회 ‘한울타리’ 운영 프로그램 계획안(2017. 1.)

일정	시간	내용	비고
1분기 3.22.(수)	13:40~14:00	◦ 참석자 등록 및 교재 배부	
	14:00~15:50	◦ 한울타리 회의 및 간담회	보건소 강당
	15:50~16:00	◦ 휴식	
	16:00~18:00	◦ 행복한 마을공동체의 열쇠, 행정!	보건소 강당
2분기 6.14.(수)	13:40~14:00	◦ 참석자 등록 및 교재 배부	
	14:00~14:50	◦ 한울타리 회의 및 간담회	보건소 강당
	14:50~14:55	◦ 휴식	
	14:55~16:25	◦ 마을공동체 기본 이해 교육 및 사례공유	보건소 강당
	16:25~16:30	◦ 휴식	
3분기 9.13.(수)	16:30~18:00	◦ 마을공동체속 사회적 경제 역할	보건소 강당
	13:40~14:00	◦ 참석자 등록 및 교재 배부	
	14:00~14:50	◦ 한울타리 회의 및 간담회	외부 강당
	14:50~15:00	◦ 휴식	
4분기 11.8.(수)	15:00~18:00	◦ 의사소통과 갈등해결 방법(퍼실리테이션 기법)	외부강당
	09:00~18:00	◦ 완주 마을공동체 현장탐방(완주공동체지원센터 연계)	

[그림 2-3] 천안시 마을만들기 행정지원협의회 '한울타리' 활동 모습



- 2019년도 행정지원협의회 진행

- 일시 : 2019년 1월 31일(목) 16:00 ~ 17:50

- 장소 : 천안시청 중회의실(7층)

- 참석 인원 : 행정 24명 (일자리경제과 2명, 자치민원과 2명, 교육청소년과 2명, 농업정책과 4명, 환경정책과 2명, 산림휴양과 2명,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4명, 도시재생과 2명, 정책기획과 2명, 행정지원과 2명)

- 주요 내용

- ①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 상호 연계되는 업무 협의

- ② 조직 개편 후 업무범위가 모호한 부분 조정

- ③ 적극 행정 추진을 위한 부서간 업무 조정

- 천안시는 2020년에 들어와 행정부서가 농업정책과로 이관하면서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해지고 혼선이 많아져 행정지원협의회 운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3) 당진시 행정지원협의회의 활성화 방향

- 행정지원협의회는 ‘당진시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제13조에 근거를 두고 설치되는 회의체로서 행정 부서 사이의 업무협조를 제도적으로 규정하는 것임. 참가 부서의 정기적이고 의무적인 참가를 통해 책임있는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실효성이 있음
- 행정지원협의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정비’ 되어야 한다는 것이 핵심적인 방향임. 공무원 순환보직제 상황에서 안정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조례에 규정된 설치 근거를 잘 활용하고, 참여 부서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하며, 각종 인사 시스템과 연계되어야 효과적임
- 이에 따라 조례 제13조 2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2021년 상반기에 규칙을 제정하여 2021년 5월에 신청할 예정인 신활력플러스와 농촌협약 공모사업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함. 아래의 기본적인 방향성을 참고하여 2021년 상반기에 반드시 1~2회 개최해야 함

□ 행정지원협의회 운영에 관한 상세 내용은 규칙으로 규정

- 주요 역할 : 각종 행정 사업 정보의 공유(특히 교육 사업), 공모사업 방법론 정리,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절차, 예산 및 사업계획 협의, 중간지원조직 지원방안, 정책위원회 상정 안건 정리 등
- 정기회의 : 연간 상반기, 하반기 각 1회 이상 개최. 협의회가 구성된 초기에는 분기별 1회 이상이 되어야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음
- 참가대상 : 관련 부서의 팀장급이 참가하고 사업 담당 주무관이 배석
- 마을만들기 정책위원회 개최와 연계하여 행정 내 부의안건 사전 정리

□ 행정지원협의회 정기회의의 안정된 운영과 경험 축적

- 회의 결과물 : 회의 자료 및 결과를 모아 자료집으로 제작하고 행정망에 공유 (정책위원회 운영 시에는 정기회의 상정)
- 상반기 정기회의 - 매년 1월중 (당해 연도 예산 및 사업계획 확정 후)
 - ① 신년도 주요 사업계획의 공유와 협조방안 토론

- ② 마을 및 단체 보조사업의 공모절차와 방식 공유
- ③ 연중 주요 행사 일정 공유 : 연1회 공동체 관련 연례행사 포함
- 하반기 정기회의 - 매년 9월중 (다음 연도 예산 및 사업계획 수립 전)
 - ① 당해 연도 주요 사업 추진상황 공유
 - ② 다음 연도 사업 및 예산계획(개략) 공유와 협력 방안 논의
 - ③ 하반기 주요 일정 공유 : 마을 평가 및 행사

□ 행정지원협의회 참여 부서 지정과 '협업담당자' 지정

- 참여 범위(정책 영역) : 기본적으로 공동체새마을과 내의 농촌 마을만들기와 주민자치, 사회적경제, 새마을 담당의 4개 '팀'을 기본으로 구성하고 나머지는 협의를 통해 직접 관련성이 높은 부서를 10개 이내로 선정함
 - 신활력플러스, 농촌협약 등 공모사업 추진을 염두에 두고 농촌체험관광, 6차산업, 귀농귀촌, 로컬푸드, 평생교육, 마을교육공동체, 도시재생, 지속가능발전, 공익활동, 참여예산제 등의 업무 부서를 우선적으로 검토함
 - 또 신활력플러스 사업 자체도 행정지원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협의회 구성을 동일하게 중복하여 구성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임
- 담당 지정 : 각 부서마다 업무상 책임 소재가 분명하도록 인사명령을 통해 '협업담당자'를 지정하고, 업무분장 명시를 통해 일상적인 협업이 가능하도록 함
- 참가 부서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핵심사업에 따라 매년 변동될 수 있을 것임(매년 행정 지침 조정 필요)

□ 행정지원협의회 참여 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인센티브 제공 : 협업담당자에 대해 인사고과에 반영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어야 실효성이 높아짐
 - 담당 부서의 성과 관리를 위해 협업 사업에 적극적인 부서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 행정안전부(2020.10.)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잘 활용하여 대외적인 동향을 보면서 인센티브를 적극 검토함

- 당진시는 공동체새마을과 중심으로 당진시 본청의 관-관 협업, 본청과 읍면동 사이의 협업, 또 민-관의 협업을 추진하는 등 행정 협업의 선도모델로 성장하기에 매우 유리한 여건을 갖추고 있음
- 공동체새마을과가 중심이 되어 신활력플러스와 농촌협약 공모를 추진하기 때문에 관련 부서 사이의 업무협조체계를 강력하게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읍면동 사무소에 마을자치지원관이 1인씩 배치되어 있고, 주민자치회로 모두 전환하였기에 본청과 읍면동의 협업도 매우 유리함. 특히 읍면동 주민총회에서 제안되는 사업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공동체새마을과의 권한과 위상이 크게 강화될 수 있음
- 중간지원조직의 수위탁을 둘러싸고 민간 네트워크 법인의 설립이 논의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민관협치의 정책 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함

□ 인사 시스템과의 연계하여 ‘전문직위군’ 제도 도입 검토

- 인사이동 과정에서 행정지원협의회에서 유사 업무를 추진했던 부서 내부에서의 인사이동을 적극 장려 : 행안부 ‘전문직위군’ 제도 적용 검토
- 이를 통해 행정지원협의회 내에서 업무 연계성과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시행착오 경험을 줄이면서 단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임
- 농촌협약 공모사업을 염두에 둔다면 이런 인사 시스템이 매우 유용하고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을 것임

제3절 마을만들기 담당 공무원 역량강화 방향

- 마을만들기 행정 공무원의 역량강화 방안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 순환보직제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는 것과 자주적인 학습 동아리 활동을 장려하는 것, 두 가지가 핵심적인 방향이라 할 수 있음
- 이러한 제도적 바탕 위에 열정적인 공무원의 의욕이 꽃을 피울 수 있는 문화적 환경이 중요함. 공무원 역량강화 방향은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행정혁신 정책과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검토해야 함
- 여기서는 위 두 가지 제안에 대해 2019년 당진시 1차년도 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면서 일부 보완하여 제안하고자 함

1. 공무원 순환보직제 단점 극복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마을공동체팀의 전문직위 제도 도입 및 임기제 공무원 추가 채용

- 무엇보다 공동체 영역에서도 공무원 전문직위 제도를 도입하여 마을공동체(농촌개발)와 주민자치, 사회적경제 등의 직위를 전문관으로 지정하여 최소한 3년 이상 안정된 근무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총괄·조정팀은 관련 정보(사업, 사람, 예산 등)의 축적과 활용이 매우 중요한 역할이기에 장기 근무가 바람직하고, 이에 따라 전문관 지정과 보다 강력한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함
- 자치분권 패러다임 속에서 순환보직제 문제는 행안부에서도 계속 보완방향을 검토중에 있음
- 당진시 공동체새마을과에서 선도적으로 도입하여 정착시키고 성과모델을 도출함으로써 인센티브가 될 수 있는 방향을 지속적으로 모색함
- 공동체새마을과 마을공동체팀에 민간 전문가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추가 채용하여 농촌협약 등 농촌개발정책의 빠른 흐름에 대응하고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함

- 농촌협약 공모사업에 선정되고 협약을 체결하게 되면 농촌정책의 매우 넓은 영역에 걸쳐 다양한 중장기 종합계획을 관리하고, 사업간의 조정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등 전문성이 요구됨
- 이 때문에 민간 전문가는 농촌/도시계획 영역의 박사학위 소지자 혹은 컨설팅기관 경력자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가’ 급 채용이 바람직함. 2021년의 행정직영 상태에서는 마을만들기지원센터장을 겸직하도록 할 수 있고, 민간독립 이후에는 행정에 남아 센터 업무 담당으로 전환될 수 있음

[참고] 직위공모제와 전문직위제의 차이와 제도적 근거

○ 공모직위 제도

- 특정 부처 내 주요 직위에 대해 해당기관 내부 또는 외부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선발시험을 치러 임용하는 제도
- 관련 근거 : (1)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개방형직위), 제29조의5(공모직위), (2) 당진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31조(직위공모)

○ 전문직위 제도

- 공무원의 순환보직제에 따른 잦은 인사이동으로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분야에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적 장치
- 필수 보직 기간 3년
- 관련 근거 : (1)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3(전문직위의 지정 등), (2)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126호, 시행 2020.9.22.), (3)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특수업무수당)【별표9의9·나】, (4) 충청남도 공무원 인사 규칙 제25조의3(전문직위의 지정·운영)

□ 중심지활성화, 주민자치, 사회적경제 분야도 민간 전문가 채용 확대

- 향후 중앙정부 정책 동향에도 발빠르게 대응하고 대규모 국도비 공모사업의 선정과 성공적 수행을 위해 민간 전문가 채용에 장점이 많음
- 농촌협약을 염두에 두고 읍면 생활권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중심지활성화사업을 담당할 수 있는 민간 전문가 채용을 우선 검토함. 농촌/도시계획이나 건축을 전공한 석사 과정 이상으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나’ 혹은 ‘다’ 급을 적극 검토함.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산하에 읍면계획팀을 신설하고 팀장 역할을 담당하도록 함
- 주민자치 영역도 적극 검토함. 현재는 읍면동 사무소에 마을자치지원관 형식으로 배치되어 있으나 이를 총괄조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본청 기능이 취약함. 청양군 사례처럼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산하에 주민자치 업무를 배

치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음

- 사회적경제 영역도 향후 중간지원조직 설치를 염두에 두고 행정의 정책 시스템을 이해할 수 있는 민간 전문가를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임기제 공무원 채용을 적극 검토함. 2021년에 전문관으로 배치되는 공무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설치과정을 주도하도록 함
- 특히 농촌협약 공모사업을 염두에 둔다면 농촌공간계획의 취지를 이해하고 당진시 현장 실정을 파악하면서 행정과 민간의 가교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민간 전문가가 매우 중요함
- 행정에서 임기제 공무원으로 2~4년 근무하고 중간지원조직의 센터장 혹은 사무국장, 팀장(임기제 ‘급’에 따라 조정)으로 채용되는 경로가 당진시의 민관협치형 정책 시스템 구축 측면에서 매우 효과적인 전략임

□ 관련 부서 사이의 업무협조 체계 강화와 ‘전문직위군’ 도입

- 행정의 순환보직제 단점을 극복하면서 부서 간 업무협조체계를 강화하며 담당 공무원 사이의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정책 전문성 향상에 기여하는 방향이 될 것임. 이런 우호적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 혁신의 사례들이 도출될 수 있을 것임
- 또 행정지원협의회에 참여하는 담당부서 중심으로 ‘전문직위군’을 지정하여 유사한 업무로 인사이동을 통해 정책 전문성이 강화되고 행정 효율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함. 공무원 교육을 통해 축적된 경험이 유사 정책 영역으로 연결될 때 공무원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될 수 있을 것임

2. 공무원 학습동아리 활동 장려를 통한 역량 강화

□ 홍성군 공무원 학습동아리 ‘마을통’ 운영 경험(2016.4. ~ 2017.12.)⁵⁾

- 홍성군에서 운영하는 2016년 ‘학습동아리 육성 지원사업’에 홍성통의 행정 부서 공무원들이 마을만들기와 관련된 다양한 사례를 홍성군 중심으

5) 2016년도 홍성군 연구보고서를 기초로 현재 시점에 맞추어 일부 내용을 수정함. 홍성군은 마을통 활동 이외에 2017년 9월에 정식으로 행정지원협의회가 구성되고 1차 회의를 가짐

로 체험하고 학습하기 위해 학습동아리 ‘마을통’을 구성하여 신청하고 선정됨

홍성군 학습동아리 육성 지원사업(2016년 지침)

- 특정 주제에 관심을 갖는 행정 구성원이 모여 학습동아리(CoP: Community of Practice)를 조직하고 지속적인 공동 학습, 창의 활동, 소통 활성화 지원
- 동아리 당 공무원 4~10명 권장, 동일 부서 직원 40% 이내, 1인 1동아리 가입 원칙. 직원 상시학습 인정
- 충청남도 지식동아리 운영 및 경진대회(2015.11.) 사례 참고
- 총 4개 학습동아리(핵심가치 1개, 업무중심 2개, 자율과제 1개) 선정

• ‘마을통’ 구성 현황

- 2016년 : 1실(기획감사실), 1센터(농업기술센터), 4과(농수산과, 건설교통과, 문화관광과, 행정지원과) 총 15명
- 2017년 : 1센터(농업기술센터), 5과(농수산과, 건설교통과, 문화관광과, 행정지원과, 재무과) 총 11명(※회차마다 참석자는 변동 있음)

• ‘마을통’의 주요 활동 상황

- 2016년 운영상황

- * 1회차(16.04.14.) : 참석자 소개 및 마을통 모임 취지, 운영방향 논의
- * 2회차(16.04.21.) : 유럽 농촌체험 사례 발표(이항재), 홍성군 농촌체험의 이해(유준재),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참가 논의
- * 3회차(16.06.14.) : 현장 체험(봉암마을)
- * 4회차(16.09.08.) : 현장 체험(한솔기권역)
- * 5회차(16.10.21.~22.) : 현장 체험(천수만 속동캠핑장)

- 2017년 운영상황

- * 1회차(17.04.25.) : 축산과 마을만들기(결성면 원천마을 사례, 이도현 성우농장 대표 특강)
- * 2회차(17.06.01.) : 농촌의 건축과 마을(장곡면 오누이다목적센터 사례, 정기황 도시문화연구소장 특강)
- * 3회차(17.07.14.) : 홍성군 농촌관광의 현황과 과제(전영미 홍성도농교류센터장 특강)
- * 4회차(17.10.30.) : 홍성군 마을사례(행복마을콘테스트 등) 공유(정진규 홍성군 건설교통과 마을공동체팀장 발표)
- * 5회차(17.12.15.) : 마을통 운영의 의미와 과제(구자인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장 특강)

- 2018년도 이후에는 특별한 활동이 없는 상태임

□ 홍성군 학습동아리 ‘마을통’ 운영경험의 평가와 시사점

- 홍성군은 이미 홍성통 운영 경험을 통해 농촌지역개발 관련 담당 공무원 중심의 행정협회는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고, 타 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업무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2016년부터 시작된 학습동아리 ‘마을통’은 공무원의 자주적인 학습활동이라는 측면에서 높게 평가할 수 있음. 이를 통해 담당 공무원 사이에 우호적인 신뢰관계와 업무 협조관계도 형성됨. 또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개별 역량뿐만 아니라 조직적인 역량강화로 이어짐
- 다만 주도하는 담당 공무원(농정발전기획단)의 헌신적인 노력이 전제되어야 가능한 방식으로 제도적인 뒷받침이 매우 중요함. 또 단체장의 적극적인 응원과 지지가 전제될 때 참석율도 높아짐
- 결국 공무원 학습동아리 활동도 초기 단계에서는 일부 공무원의 열정으로 시작되고 운영될 수 있지만 제도적인 시스템이 뒷받침될 때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음. 예를 들어, 행정지원협의회나 정책위원회, 전문직위군 등의 제도적 장치 도입과 병행되어야 학습동아리 활동도 지속될 수 있음

3. 마을만들기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과 사업 제안

□ 시군 담당 공무원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광역 행정의 역할 강화

- 충남도는 타 시·도에 비해 마을만들기 행정 지원체계가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정비되어 있음. 14개 시군(계룡시 제외) 행정에는 다양한 경험이 축적되어 있고, 선배 경험자가 후배 공무원을 지도하며 부족한 개인 역량을 보완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됨
- 공무원 개개인의 역량 강화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협력 네트워크 속에서 상호발전하는 방향이 마을만들기의 기본정신에도 부합됨(‘열 사람의 한 걸음’ 중시)
- 또 마을만들기 밴드와 단톡방이 개설되어 다양한 정보의 체계적인 공유도

이루어지고 있음. 중앙정부의 정책 동향도 빠르게 흡수할 수 있고, 시행착오를 통해 경험한 노하우도 전수될 수 있음

- 농촌마을정책 측면에서 지역 상황에는 차이가 있지만 제도적 환경은 유사하고 극복해야 할 과제도 공통적인 부분이 많음. 이 때문에 시군 공무원의 협력 네트워크는 매우 중요하고, 상호협력과 적절한 경쟁의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빠르게 공무원 역량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음
- 시군 공무원 사이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는 광역 행정(농촌활력과 마을가꾸기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상근자들은 광역 센터 주도로 다양한 학습기회를 확보하고 역량이 축적되어 가는 반면에 시군 행정 공무원은 순환보직제 틀 속에서 단절되는 경우가 많이 때문임
- 민선6기까지는 3농혁신(3농정책) 차원에서 4월의 3농대학 마을만들기 과정, 11월의 마을만들기 충남대회 등 연간 2회 이상 1박2일간의 마을만들기 관계자 전체 연수가 지속되어 옴. 이를 통해 마을만들기 담당 공무원들도 중앙정부 정책 흐름을 체계적으로 흡수하고, 충남 광역의 농촌마을정책 방향도 빨리 숙지함
- 앞으로 광역 행정이 주도하여 담당 공무원의 업무 연수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이를 통해 민관협치의 정책 시스템을 이해하고, 타 시군 상황을 보면서 개개인의 역량강화도 빠르게 가능할 것임

□ 공동체 전담 ‘과’ 설치 및 운영 정책워크숍 개최

- 2020년 12월 현재 충남도에 6개 시군에서 공동체 전담 ‘과’가 운영되고 있으며, 2021년 1월에는 태안군이 조직 개편이 예정되어 있는 등 7개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함
- 당진시가 주도하여 행정안전부(지역공동체과) 및 충남도(공동체지원국)와 협력하여 정책 융복합을 강화하는 정책 워크숍을 선도적으로 개최함. 이를 통해 업무 담당 공무원의 자부심이 높아지고, 추진해야 할 정책 방향성에 대해 자신감도 가질 수 있을 것임. 또 당진시의 정책 브랜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행정 공무원과 민간 리더가 함께 하는 선진지 견학 혹은 해외 연수

- 행정 공무원과 마을리더, 마을활동가 등이 자주 접촉하면서 정책토론을 거듭할수록 정책 전문성이 향상될 수 있음. 마을만들기와 같은 민관협치 분야는 이론적인 학습만으로는 역량강화가 쉽지 않음
- 정기적으로 만나 공동학습과 토론을 거듭하며 상호간에 대한 신뢰감이 높아지고, 서로의 장점을 존중할 수 있게 될 것임. 신활력플러스나 농촌협약에서도 이런 민관협력 관계를 매우 중시하는 것도 정책 전문성 향상과 업무 효율성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임
- 행정 공무원과 민간 리더가 매년 정기적으로 선진지 견학을 함께 가는 것도 좋은 학습방법임. 오고가는 전세버스에서 서로간의 애로사항을 나누고 공동의 발전방향을 논의하면서 신뢰관계가 형성될 수 있음. 또 격년제로 인센티브 성격을 병행하여 해외 연수를 추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임. 작은 성과를 축적하면서 지역사회에 민관협치의 정책적 환경이 조성된다면 단계적으로 추진해볼만한 사업임

제3장.

당진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방향

제1절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모니터링

1. 당진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설치과정 모니터링

□ 센터 개요

- 설치근거 : 당진시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2019.7.15. 제정) 제14조
- 설치목적 : “마을만들기 사업의 체계적이고 원활한 추진”
- 설치시기 : 2020년 6월 30일(개소식 기준)
- 설치유형 : 행정직영의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 사무실 : 당진시 읍내동 549-2 3층(옛 당진군청 앞 농협 건물 리모델링)
- 관련 웹사이트 : (밴드)<https://band.us/band/79262837>

(블로그)<https://blog.naver.com/dangjinmaeul>

□ 설치과정

- 설치 준비과정 : 2017년 ~ 2018년
 - 2017년 9월 충남도의 2018년 공모사업으로 ‘당진시 마을만들기 민간 네트워크 구축과 중간지원조직 설립 및 운영 지원 사업’을 신청하여 선정
 - 2018년 당진시 내부 사정과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지원 여력이 되지 않아 1년간 유예하는 것으로 결정함
- 설치 추진과정 : 2019년 ~ 2020년
 - 2019년 7월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제정
 - 2019년 7~12월 사무국장 1인(임기제공무원) 채용 행정절차 진행
 - 2020년 1월 공동체새마을과 신설 및 업무이관
 - 2020년 4월 사무국장 1인 채용 결정(행정 사무실에 함께 근무 시작)
 - 2020년 6월 30일 지원센터 개소식 개최
 - 2020년 7월 지원센터 상근자 3명 구성으로 출발

□ 지원센터의 역할(조례 제15조 규정사항) : [그림 3-1] 참고

-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주민 교육 및 마을 컨설팅
- 마을만들기 사업 완료 후 사후관리
- 마을만들기 사업 조사 및 통계정보 수집과 정리·배포
- 마을만들기의 홍보와 소통을 위한 미디어 제작과 배포
- 국내외 마을만들기 방문객 대상의 견학 안내 및 연수 지원
- 마을만들기 사업 관련 민간단체 및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 마을만들기의 조사 및 연구, 분석 사업
- 그 밖에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상근인력 구성 현황

- 인력구성 : 총 3명(사무국장 1명 + 팀원 2명,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 상근자 인적사항 : [표 3-1] 참고
 - 당진시 지역사회에서 사회단체 활동을 경험한 활동가 출신으로 구성
 - 3명 모두 기간제근로자가 아닌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신분으로 채용

[표 3-1] 당진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상근자 인적사항

구분	신분	성별	연령	전공	주요 경력	비고
사무국장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다'급	남	40대	사진	당진시대 당진문화연대	2020. 4.6일자 임용
팀원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마'급	여	40대	사회복지	당진남부사회복지관, 북부 행복나눔복지센터	2020. 7.1일자 임용
팀원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마'급	여	30대	교육학	당진시청 당진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당진YMCA	2020. 7.1일자 임용

□ 인력채용과정 : [표 3-2] 참고

- 채용 준비과정 : 사전에 행정협의를 조정 등 절차 진행
 - 2019년 1년간은 건설교통과 기반조성팀에서 실무 준비를 진행
 - 채용인력 규모, 신분, 역할 등에 대해 지속적인 협의 진행

- 공개채용설명회에 참가하여 채용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널리 홍보
- 채용 심사과정 : 사전에 행정협의회와 조정 등 절차 진행
 - 2020년 1월부터 업무이관으로 공동체새마을과 마을공동체팀에서 실무 진행
 - 엄격한 심사과정으로 진행하여 1차, 2차 채용공고에서 적격자를 선정 못함
 - 3차 채용공고에서 사무국장 1명만 채용 결정
 - 4차 채용공고에서 팀원 2명 채용 결정

[표 3-2] 당진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상근자 채용과정

제목	내용	세부 내용	비고
공개채용 설명회	공동 채용설명회 참여	· 일시: 2019년 6월 10일(월) 15:00~17:00 · 장소: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 공간U · 참여시군 : 청양군, 부여군, 당진시 등	충남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주관
1차 채용공고	사무국장 채용공고	· 기간: 2019.10.18.(금)~2019.10.27.(일)/10일간 · 접수: 2019.10.28.(월)~2019.10.30.(수)/3일간 · 인원: 1명 · 직급: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주35시간)	합격자 없음
2차 채용 공고	사무국장 채용공고	· 기간: 2019.12.18.(수)~2019.12.31.(화) · 접수: 2020.1.2.(목)~2020.1.6.(월) · 인원: 1명 · 직급: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주35시간)	합격자 없음
공동채용 설명회	공동 채용설명회 참여	· 일시: 2020년 1월 20일(월) 10:30~12:30 · 장소: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 공간U · 참여시군: 보령, 홍성, 서천, 태안, 당진, 청양, 부여 등	충남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주관
자체 채용 설명회	자체 채용설명회 개최	· 일시: 2020. 2. 25.(화) · 장소: 당진시청 중회의실	코로나19 확산으로 취소
3차 채용 공고	사무국장, 팀원 채용공고	· 기간: 2020.2.15.(토)~2020.2.25.(화)/11일간 · 접수: 2020.2.26.(수)~2020.2.28.(금)/3일 간 · 인원: 사무국장 1명, 팀원 2명 · 직급: 사무국장-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팀원-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사무국장 1명 채용 (4월6일자 임용)
3차 채용 재공고	팀원 채용 재공고	· 기간: 2020.3.12.(목)~2020.3.23.(월) · 기간: 2020.3.24.(화)~2020.3.26.(목) · 인원: 팀원 2명 · 직급: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합격자 없음
4차 채용 공고	팀원 채용 재공고	· 기간: 2020.5.8.(금)~2020.5. 18.(월) · 접수: 2020.5.19.(화)~2020.5.21.(목) · 인원: 팀원 2명 · 직급: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팀원 2명 채용 (7월1일자 임용)

[그림 3-1] 당진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역할



자료 : 당진시청 공동체세마을과, 2020.8., “당진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 2020년 운영계획” , 2쪽

□ 업무공간 현황

- 2020년 5-6월에 165평 규모의 (구)농협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6월 30일 (개소식)에 입주함
- 1층 기계실 및 주차장, 2층 도시재생지원센터, 3층 주민커뮤니티센터(회의실 및 공유주방), 4층 마을만들기지원센터
- 4층 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업무공간 면적은 135.2㎡로 약 41평임

- 당진시청과는 차로 5분 정도 거리에 있고, 옛 군청(현재 리모델링중) 가까이 원도심에 위치하고 있음
- 향후 옛 군청에 입주하는 여러 시민사회단체, 중간지원조직들과 교류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주차가 매우 어렵고 농촌 마을과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음

[그림 3-2] 당진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위치도 및 사진



2. 당진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운영 모니터링

□ 센터 상근자의 업무분장

- 농식품부 시군역량강화사업을 중심으로 상근자 3명이 역할분담을 통해 개별 사업을 추진함
- 3명이 역할분담을 하고 있으나 많은 사업이 공동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어 항상 과다한 업무량 속에 있음

[표 3-3] 당진시 공동체새마을과 마을공동체팀 분장 사무(2020. 12. 기준)

직급	분장 사무			비고
	분야 및 업무명		내용	
사무국장	네트워크 구축	센터 총괄운영	○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운영계획 수립	시간선택 임가제 다급
		민간네트워크 구축	○ 역량강화 교육, 현장포럼 등 총괄관리	
		공모사업 지원	○ 마을만들기 협의회 구성	
		마을활동가 육성	○ 일반농산어촌개발, 신활력플러스 등 공모사업 지원	
		완료지구 사후관리	○ 마을대학 등 마을활동가 육성 및 관리, 지원 ○ 사업 완료지구 사후관리	
팀원1	교육/활성화 지원	역량강화 교육	○ 주민 대상 역량강화 교육	시간선택 임가제 마급
		상담 및 컨설팅	○ 읍면동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	○ 행복마을만들기 컨테스트 지원 ○ 마을사업 관련 상담 및 사업 지원 등	
팀원2	마을자원 발굴	마을 자원조사	○ 마을단위 유무형 자원 조사, DB구축	시간선택 임가제 마급
		마을계획 수립 지원	○ 농촌현장포럼	
		홍보 및 총무	○ 희망마을 선행사업 ○ 온오프라인 홍보, 센터 비품 관리 등	

자료 : 공동체새마을과 마을공동체팀 제공

□ 센터 상근자대상 맞춤형 컨설팅 및 애로사항 청취

- 2020년 3월중에 당진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상근자 3명을 대상으로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운영방향과 당면과제, 애로사항 등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총 3회 연속으로 실시함

- 1회차 맞춤형 컨설팅
 - 일시: 2020년 7월 7일(화) 12:00~16:00
 - 장소: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
 - 참석자: 당진센터 3명, 충남센터 2명
 - 주요 내용: 시군 마을만들기 지원 시스템 구축에 대한 설명, 센터 상근자 역할과 인재상 소개
- 2회차 맞춤형 컨설팅
 - 일시: 2020년 7월 15일(수) 14:00~16:00
 - 장소: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
 - 참석자: 당진센터 2명, 충남센터 2명
 - 주요 내용: 1회차 컨설팅 내용과 관련된 질의응답,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사업 운영방안
- 3회차 맞춤형 컨설팅
 - 일시: 2020년 7월 24일(금) 14:00~18:00
 - 장소: 당진시마을만들기지원센터
 - 참석자: 당진센터 3명, 당진시 마을공동체팀 2명, 충남센터 2명
 - 주요 내용: 행정과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향후 방향성,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사업 운영 계획안 검토

[그림 3-3] 당진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상근자 맞춤형 컨설팅 진행사진(2020년 7월중)



□ 센터 상근자 대상 인터뷰 결과

• 업무분장과 운영체계에 대한 의견

- 행정과 센터간의 업무분장, 센터내 상근자간의 업무분장이 불명확하여 갈등의 소지가 있음. 상호 논의과정을 통해 업무와 역할을 보다 명확히 분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 업무분장 후에는 담당자에게 업무추진에 대한 기본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동시에 책임을 요청함으로써 보다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함
- 가짓수가 많은 예산사업을 소수인력 3명이 수행하다 보니, 센터의 고유 업무인 마을조사와 분석, 상담 및 컨설팅 등 현장밀착형 활동을 진행하기 어려움. 인력충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업무환경에 대한 의견

- 센터 사무실이 좁은 공간에서도 다시 나누어져 답답한 느낌이 들고 공유사무실로 쓰기에는 딱딱한 사무실 분위기라서 마을 활동가들이 자유롭게 방문하기 어려운 상황임. 좀 더 자유로운 사무실 환경조성이 필요함
- 시청과 공간이 독립되어 있어 행정체계를 익히고 소통하기가 쉽지 않음. 센터 설치 후 바로 독립이 아닌 시청 내에서 근무하면서 행정 분위기를 익히는 인큐베이팅 기간을 몇 달 정도 가진 후 독립을 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있음

• 업무내용 및 사업추진 계획에 대한 의견

- 센터 내부회의를 통해 내년도 예산사업에 대해 상근자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계획하는 것이 좋았음
- 2020년은 행정사업 위주의 업무였으나 2021년 사업은 시군역량강화사업을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계획하고 진행하므로 인력충원과 명확한 업무분장을 통해 좀 더 센터의 존재감을 알리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기타 애로 및 건의사항

- 올해 코로나로 인해 센터 상근자들의 개인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대내외 활동이 줄고 활발히 참석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쉬움
- 마을만들기에 대한 기본과 원칙,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업무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 등을 위해 상근자의 체계적인 역량강화 교육이 있었으면 함
- 회의나 학습모임 등을 통해 센터내 소통구조가 확대되었으면 함
- 시군 센터간 유사한 사업은 공통사업화하고 매뉴얼화 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서로 경쟁적으로 활동하기보다는 연계·협력했으면 좋겠음

제2절 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2020년 주요 사업 추진 현황

1. 주요 사업 추진 현황

- 당진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는 설치 1차년도로 센터 기반구축과 지역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와 연대·협력 활동 등 고유 업무 중심으로 진행됨
- 행정직영 센터이고 연도 도중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군역량강화사업은 용역사와의 협력관계를 통해 추진함([표 3-4] 참고)

[표 3-4] 당진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 2020년 활동 현황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1) 지원센터 기반 구축	센터 시설 조성	리모델링, 집기류, 시설설비, 정리 및 청소 등
	센터 시스템 구축	사업계획 및 비전수립
2) 지원센터 고유사업	소통과 홍보	SNS운영, 엠블럼 제작 등
	조사와 연구	사업 완료지구 사후관리 모니터링 등
	교육과 상담	마을 상담 및 컨설팅
	협력과 연대	대화마당, 워크숍 참가, 마을사무장 협의체 구축, 마을만들기협의회 설립 지원
3) 시군역량강화사업		마을자원조사, 마을대학, 농촌현장포럼, 민관워크숍, 창안대회, 마을공동체만들기프로그램, 마을활동가 양성교육

1) 마을만들기지원센터 기반 구축

□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시설 조성

- 행정직영으로 설치된 당진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는 시청 담당부서 내 업무공간이 협소하여 독립된 사무공간을 마련한 후 개소하게 됨. 센터 개소 2개월 전에 사무국장이 임용되어 사무실 공간 리모델링 과정을 지원함
- 노후화된 (구)농협건물을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리모델링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와 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함께 입주함. 계약부터 공사완료까지 약 5개월 정도 소요됨
- 4층 리모델링 예산은 충남도의 중간지원조직 사업을 활용함

□ 마을만들기지원센터 활동계획 수립

- 센터 자체 워크숍과 타 시군 사례 공동학습 등을 통해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의 비전과 목표, 전략방향 등을 자체 수립함([그림 3-8] 참고)

[그림 3-4] 당진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비전과 목표, 전략방향, 주요사업 등



2) 마을만들기지원센터 고유 사업1 : 소통과 홍보

□ SNS(네이버 밴드, 블로그)를 활용한 소통과 홍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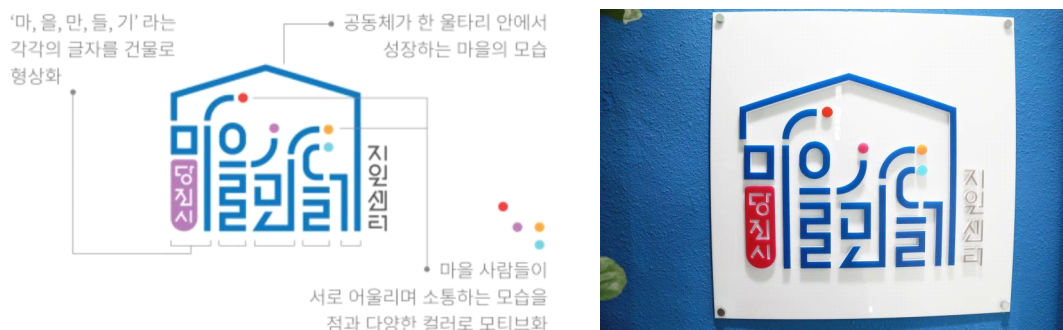
- 개설일 : 네이버 밴드, 2020년 3월 / 블로그, 2020년 6월
- 운영현황(2020년 12월 현재)
 - 네이버 밴드 : 회원수 115명, 일주일에 평균 4-5건의 글 업데이트
 - 네이버 블로그 : 아직은 활동이 거의 없음
- 추진 내용 : 마을만들기지원센터 활동 공유 및 홍보, 관련 정보 공유

[그림 3-5] 당진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사업(소통과 홍보) : SNS 홍보



□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엠블럼 제작

[그림 3-6] 당진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사업(소통과 홍보) : 엠블럼 제작



자료 : 당진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블로그

3) 마을만들기지원센터 고유 사업2 : 협력과 연대

□ 대화마당, 마을만들기 관련 워크숍 참가

- 추진 목적 :
 - 마을만들기 관련 워크숍 및 설명회 참가를 통한 관계자 연결망 확대 및 연대·협력의 기반 마련
- 주요 추진 내용 :
 - 2020년도는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팬데믹을 일으킨 감염병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전국 및 광역 단위의 대규모 집합식 행사는 취소되거나 온라인 비대면 형식으로 진행됨으로써 협력과 연대 활동이 상당히 위축됨
 -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가능하면 다양한 학습모임과 협력행사에 참가하려고 노력함([표 3-6] 참고)

[표 3-5] 당진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사업(협력과 연대) : 워크숍, 설명회 등 참가 내역

날 짜	내 용	주 관	비 고
2020년 5월-10월 (월 마지막주 금요일)	충남 마을만들기 대화마당	충남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온라인(4회차 이후)
8.5.-8.26.(총4회)	충남 마을만들기 정책연구회		온라인
09.24.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농식품부	온라인
10.16.	2020 실패박람회 in 충남	행안부	온라인

- 2020년 8월에 개최된 4회차 대화마당은 ‘마을회관’을 주제로 하여 당진시 대호지면 장정리 문화공간에서 열림
- 새마을팀 팀장이 발표와 토론에 참가함. 당진시에서는 마을회관 사업을 마을공동체팀과 같은 공동체새마을과 소속인 새마을팀에서 담당하고 있음

□ 당진시 마을사무장 협의체 구축 추진

- 추진배경
 - 마을대학에 참가했던 마을사무장들의 요청으로, 정보공유 및 각 마을사업 간 사례공유를 통해 애로사항과 당면과제를 파악하고 공동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마을사무장 모임을 추진함

- 추진개요

- 참가대상 : 마을사업 추진위원회 사무장, 권역사업 추진 사무장,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및 일반농산어촌 사업 추진 마을 사무장
- 일시 : 매월 둘째 주 화요일 오후 14:00
- 장소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마을 사무실을 순차별로 방문

- 추진경과 : 2회 정기모임 개최

- (1) 제1회 정기모임

- 일시 : 2020.10.21.(수) 11:00
 - 장소 : 당진시마을만들기지원센터 교육실
 - 참가자 : 총6명(사무장 3명, 당진센터 3명)
 - 주요내용 : 실무자(사무장) 정기모임 일자 확정 및 총무 선출, 실무자 역량 강화 교육 수요 파악, 각 사업단위별 2021년 사업계획 공유

- (2) 제2회 정기모임

- 일시 : 2020.11.10.(수) 10:00
 - 장소 : 신평면 금초권역센터 회의실
 - 참가자 : 총11명(사무장 9명, 금초권역센터 위원장, 당진센터 2명)
 - 주요내용 : 금초권역센터 사업 추진현황 설명, 금초권역센터 운영계획(안) 공유, 12월 정기모임 장소를 석문면 초락도리 푸레기마을로 결정

- (3) 제3회 정기모임

-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잠정 연기

□ 마을만들기협의회 설립과정 지원

- 2020년 10월 마을대학 과정을 통해 마을만들기협의회 준비위원회가 발족됨(제4장제1절1항 참고)
- 마을대학 수료 후에 선출된 9명으로 구성된 준비위원회는 매달 첫째, 셋째주 수요일 10시에 정기회의를 갖기로 합의함
- 2020년 12월 현재까지 3번의 정기회의가 이루어졌으나, 이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잠정 중단된 상태임(제4장제1절2항 참고)

- 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서는 준비위원회의 정기모임 장소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무국장이 준비위원들과 소통하면서 회의자료 작성과 기록, 연락 등을 지원하는 간사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4) 시군역량강화사업 등 행정사업 지원

- 시군역량강화사업은 용역사에 의뢰하여 추진하되, 센터 상근자는 용역사와 협력하여 사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결합하여 추진과정을 모니터링하고 노하우를 전수받으면서 추진함
- 단기간에 집중하여 많은 사업들이 추진되고, 코로나19 상황으로 일정에 혼선이 생기는 등으로 센터 상근자들의 업무 부담이 강하게 작용함

□ 마을자원조사 지원

- 당진시 전체 225개 행정리를 대상으로 마을전수조사 실시
- 6명의 조사원을 모집하여 2인1조로 편성 후 총 3개 팀으로 나누어 각 75개 마을씩 11주 동안 조사 진행
- 센터 지원내용 :
 - 마을조사단 모집 공고 및 홍보, 마을조사단 교육계획 및 프로그램 기획, 조사 시트지 검토 및 수정보완, 현장조사 시 참가하여 모니터링, 연락 및 상담 등을 통해 조사활동 지원
 - 1주일에 한번 마을조사단 모임을 주최하여 진행과정을 체크하고, 정보와 애로사항 등을 공유

[그림 3-7] 마을자원조사 진행사진



자료 : 충청일보, 충청매일 인터넷뉴스

□ 마을대학 지원

- 마을대학 : 정식 개최는 센터 개소 이후 1회에 해당
(자세한 내용은 제4장제1절1항 참고)
- 센터 지원내용 :
 - 마을대학 진행과정에서 참가자 모집 및 장소 섭외, 행사 홍보 및 보도자료 작성, 행사진행시 코로나 대응 방역활동 등 전반적인 진행과정을 지원

□ 농촌현장포럼 지원

- 추진 일정 : 2020년 4월 ~ 12월
- 추진 대상 : 3개 마을(정미면 산성리, 송산면 삼월리, 대호지면 적설리)
- 추진 내용 : 마을 역량단계별 교육 커리큘럼 구성 및 전문가 컨설팅
 - 마을별 사전 설명회
 - 대상마을별 사전조사
 - 맞춤형 주민교육을 통한 마을자원조사
 - 마을별 특색이 있는 테마 발굴 워크숍
 - 선진지 견학(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2개 마을은 우수사례교육으로 대체)
 - 마을발전계획컨설팅
- 센터 지원내용 : 대상지별 사전 설명회 및 5회에 걸친 집합교육에 참여하여 마을의 기본현황과 사업진행 상황 등을 조사하고 지원

[그림 3-8] 농촌현장포럼 진행사진



자료 : 당진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제공

□ 민관합동워크숍 지원

- 추진목적 : 민선7기 공동체새마을과 신설 및 당진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개소에 따른 마을만들기에 대한 주민 공감대 형성 및 공동체 관련 정책 사업간 협업을 위한 역량강화 워크숍
- 추진 대상 : 마을만들기 사업관계자 및 읍면동 마을자치지원관
- 주요 내용 :
 - (1) 최근 자치분권에 따른 중앙정부와 지자체 정책변화 동향, (2) 재정분권에 따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방이양과 당진시의 대응, (3) 당진시 주민 자치와 마을만들기, 사회적경제 등 정책융복합의 의미, (4) 당진시마을만들기 관련 협의회 구성 논의, (5) 당진시마을만들기 관계자들의 분임토의를 통해 당진형 마을만들기 발전방향 모색
- 센터 지원내용 : 참가자 연락 및 장소 섭외, 행사 홍보 및 공유, 코로나 대응 방역활동 등 행사 진행과정을 지원

[그림 3-9] 민관합동워크숍 진행사진



자료 : 당진시마을만들기지원센터 제공

□ 창안대회 지원

- 아이디어 공모 기간 : 2020년 10월 5일 ~ 10월 23일(19일간)
- 창안대회 : 2020년 11월 18일(수) 14시
- 추진 내용 :
 - 당진시민을 대상으로 마을환경 개선, 주민모임 활성화 등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관련 활동 및 정책 제안 아이디어 공모
 - 전문가 사전심사와 사전 온라인 투표를 통해 5개를 선정하고, 현장발표 심사를 통해 차등 시상

- 센터 지원내용 :
 - 아이디어 공모 및 행사 홍보, 보도자료 준비, 참석자 섭외 등 행사진행에 있어서 전반적인 행정사항 지원

[그림 3-10] 창안대회 진행사진



□ 마을공동체프로그램 사업 지원

- 사업내용 : 목공예와 연극, 2개 사업으로 분리하여 추진
 - (1) 당진 관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예술문화창작 활동 및 진로체험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한 목공예 프로그램
 - (2) 2개 마을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추억 놀이, 그림그리기, 동화구연 등을 연습하고 공연도 해보는 연극 프로그램
- 센터 지원내용 : 프로그램 기획 및 진행 지원, 행사 홍보 및 안내, 보도자료 작성, 참가자 모집 등을 지원

[그림 3-11] 마을공동체프로그램 사업 진행사진



자료 : 당진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밴드

□ 마을활동가 양성교육 지원

- 사업목적 :
 - 당진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마을만들기 관련 다양한 사업에 대한 홍보와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마을만들기 소식지 발행을 목적으로 소식지를 직접 기획, 취재, 제작할 수 있는 활동가를 양성하는 목적으로 실시
- 센터 지원내용 :
 - 교육프로그램 기획 및 강사섭외, 행사 홍보 및 참가자 모집, 보도자료 작성, 센터활동에 대한 발표 등 전반적인 교육 진행과정을 지원함
- 주요 교육과정

[표 3-6] 마을활동가 양성교육 프로그램

회차	주요 교육내용	강사
1회	- 마을만들기에 대한 이해	정석호 /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 박사
2회	- 어떤 소재가 뉴스가 될까(콘텐츠 발굴)	한수미 / 당진시대신문사 취재차장
3회	- 스마트폰으로 사진 및 영상 촬영하기 및 현장실습	김형태 / 사진작가
4회	- 기사작성 원리 알기 및 기사쓰기	임아연 / 당진시대신문사 편집부장
5회	- 인터뷰 기사쓰기 이론교육 및 인터뷰 기사 쓰기	심규상 / 오마이뉴스 기자
6회	- 칼럼 이론교육 및 칼럼쓰기(마을기자 칼럼)	우희창 / 언론학박사

[그림 3-12] 마을활동가 양성교육 진행사진



자료 : 당진시마을만들기지원센터 밴드

2.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당면과제 및 개선 방안

1) 당면과제

□ 지원센터 상근자의 체계적인 역할 분담과 인력 충원 필요

• 지원센터 본연의 역할 중심으로 체계적인 업무 분장 필요

- 향후 시군역량강화사업 수행 시 업무가 지원센터에 집중되면서 센터 고유 업무에 대한 집중도가 약해질 수 있음
- 지원센터 고유 업무와 시군역량강화사업을 구분하되 협력할 수 있도록 업무 분장과 인력 배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센터 상근자 간 인력배치 및 업무분장을 위해 정확한 사업범위, 세부계획, 일정, 예산 등이 고려된 사업 추진 전략이 필요함

•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센터 상근자 충원 필요

- (1) 시군역량강화사업 등의 업무를 2020년에는 컨설팅 업체에 위탁했으나 2021년 사업부터는 지원센터가 5개 사업을 직접 담당해야 하고 위탁사업도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인력 충원이 필요함
- (2) 2021년에는 신활력플러스 및 농촌협약 공모사업에 새롭게 도전해야 하고, 마을만들기협의회 설립과 민간 네트워크 구축 및 법인화 등 매우 중요한 신규업무가 집중되어 있으므로 현재의 인력으로는 집중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함
- (3) 신활력플러스 및 농촌협약 공모사업에 도전하기 위해서라도 사전에 센터 인력이 충원되는 것이 매우 유리함. 2021년 12월까지 임기로 임기제공무원 혹은 기간제근로자 형태로 채용하고 신활력플러스 사업에 선정되면 추진단 사무국으로 다시 채용하는 방식도 가능함. 농촌협약에 선정될 경우에는 훨씬 많은 역할들이 요구될 것임
- 이와 같이 신활력플러스 및 농촌협약 공모사업 신청과 선정까지 염두에 두고 센터장 역할을 겸임할 수 있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가’ 급 채용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지원센터 상근자의 역량강화 프로그램 추진

• 상근자의 전문성 강화 필요

- 행정과 민간, 민간과 민간의 중간 지대에서 협력 지원을 수행해야 하는 센터 업무의 특성상 현재의 상근자는 상대적으로 행정사업 절차와 집행에 관한 노하우가 부족함
- 마을만들기 활동에 필요한 조사, 계획 수립, 컨설팅 관련 지원에 있어서 체계적인 역량강화가 필요함
- 광역센터와 타 시군 센터와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당진시 센터의 부족한 내부 역량이 보완될 수 있도록 외부 협력 시스템도 구축해야 함

• 자체적인 역량강화 프로그램 시행

- 무엇보다 마을만들기 활동에 있어서 중요한 마을조사 및 분석 방법론, 계획 수립 기법, 마을별 특성 및 유형화, 행정 지원사업의 실행 지원 등과 같이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 학습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또 민간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지원, 분야별 선진 사례를 파악하는 등의 정보 축적 노력도 병행되어야 함

• 광역 및 전국 단위 네트워크 구축

- 광역 기관(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 충남농촌활성화지원센터 등)과 전국 단위 네트워크(한국마을지원센터연합, 마을만들기전국네트워크 등)에서 제공하는 분야별 교육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한국마을지원센터연합의 회원 센터로 가입하거나 준회원으로 활동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보기 바람

2) 개선 방안

□ 내부의 안정된 운영기반 구축과 협력 네트워크 확장

- 중간지원조직 인력 충원과 체계적인 업무 분장 등을 통해 농촌마을 현장에 보다 밀착하여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진화해 나가야 함
- 작은 중간지원조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원센터 외부에 협력할 수 있는 다양한 마을만들기 사회적경제조직(마을조사단, 마을기자단, 마을컨

설팅기관 등)을 집중 육성하고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토록 함

□ 우수사례 조기발굴을 통한 지원센터의 제도적 위상 강화

- 농촌 마을공동체 활동의 우수사례를 조기에 도출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의 전략을 채택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중간지원조직의 제도적 위상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내 입지를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임
- 마을만들기 조례에 근거한 중간지원조직으로서 2022년 1월에 민간위탁으로 전환하고 ‘행정과의 대등한 협력관계’를 통해 민관협치 시스템을 구축해나가는 전략을 선택해야 함
- 농촌 마을만들기의 중간지원조직으로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내에서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보해야 함(문턱이 없는, 찾아오는 지원센터 지향)

□ 대내외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소인수 센터의 한계 극복

- 행정리 마을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은 규모로 볼 때 4인 이상 근무가 쉽지 않음. 읍면 단위 중심지활성화(기초생활거점육성) 사업과 신활력플러스, 농촌 협약 등의 정책 협력을 통해 확장이 가능함
- 또 농촌 마을만들기 영역이 주민자치회, 사회적경제, 공익활동, 도시재생, 청년창업 등의 관련 정책 영역과 협력할 때 작은 중간지원조직의 한계도 극복할 수 있음
- 그리고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의 각종 사업을 통해 사회적경제조직을 적극 육성하고, 또 읍면 주민자치회 사무국(혹은 행정복지센터 마을자치지원관)과 협력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함

제3절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상근자 역량강화 방안

1. 중간지원조직 상근자의 기본적인 자세와 역량⁶⁾

-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의 상근자에게 때로는 지나치게 높은 수준의 역량을 요구받고 있는 것이 현실임. 상대적으로 충남은 광역의 ‘정책적 유도’를 통해 시군 센터가 안정되게 정착되고 있는 셈임
- 짧은 시간에 상근자의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쉽지 않고, 중간지원조직의 유입경로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충남 광역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공동으로 극복해가야 함
- 시군 센터도 적은 인력으로 모든 역량을 갖추는 것은 무리이기 때문에 지원센터 외부에 다양한 사회적경제조직을 육성하면서 대내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함
- 여기서는 중간지원조직 상근자 일반에게 요구되는 관점과 자세, 공통적인 역량 중심으로 간단하게 소개함

1)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관점과 자세

□ 마을과 주민에 대한 애정 :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 ”

- “굵은 나무가 선산을 지킨다” “뿌리 깊은 나무가 꽃 좋고 열매 많나니” (용비어천가) : 농촌 마을을 지켜온 주민들의 삶 그 자체를 존중하며 주민을 가르치려는 것이 아니라 마을을 통해 항상 삶의 지혜를 배우려는 자세
- “마을은 오래된 미래” : 마을을 통해 공동체적 삶의 가치를 생각하고,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항상 성찰하며 동료들과 토론하는 자세
- “대면적인 상호작용 과정을 중시하다” : 선형적인 사회적 가치를 강요하지 않고, 직접 얼굴을 맞대고 만나는 상호작용을 통해 현재에 이르게 된 역사적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

6)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 2020.11., “중간지원조직 상근자 맞춤형 교육 4차 자료집”, 18~23쪽에서 부분 인용

□ 항상 중간지원조직의 ‘기본과 기초’에 충실 : “인건비에 기반한 활동”

- “주민과의 만남을 항상 즐겁게” : 행정 사업을 집행하는 것을 우선하기 보다 주민과의 만남과 소통을 중시하는 자세
- “정보의 공유와 소통은 일상적으로” : 의식적으로 모든 정보는 마을과 주변 동료들과 공유하고 소통하려는 자세
- “칸막이를 극복하고 연대하고 협력하는 훈련” : 관련 기관, 단체와 정보를 공유하며 칸막이를 극복하기 위해 일상적으로 협력하는 자세

□ 공동학습과 토론, 합의의 존중 : “최선을 고집하기보다 차선에 합의”

- “공동학습과 토론 중시” : 항상 호기심을 가지고 함께 공부하며 일상적인 것에도 질문하고 토론하며, 함께 답을 찾아가려는 자세
- “문서작성과 기록공유는 기본” : 회의는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문서를 작성하여 토론하고 항상 기록을 남기려는 자세
- “약속과 합의사항의 존중” : 주민과의 약속, 동료들과의 합의사항은 존중하고 지키려는 자세

□ 중간지원조직 스스로 모범을 보이는 자세 : “지원센터는 또 하나의 마을”

- “마을(주민)에 대해 항상 낮은 자세” : 월급을 받으며 상근하는 전업활동가로서 마을을 지원하는 의무감이 필요하고, ‘또 다른 갑’ 이 아닌 자세
- “지원센터 자체가 함께 하는 공동체 조직” : 지원센터 상근자들이 주민들에게 모범을 보이며 스스로 갈등을 해결하고 공동체적 삶을 지향하는 자세
- “지원센터 공간 자체가 ‘또 하나의 마을’ ” :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뤄질까 / 무엇이 내게 정말 기쁨을 주는지 / 돈인지 명예지 아니면 /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인지” (god, '길 '), 항상 이것을 생각하며 성찰하는 자세

2) 중간지원조직 활동가에게 요구되는 기본 역량(공통)

□ 조정과 소통 역량 : 민-관, 민-민 ‘중간’ ‘지원’ 역할

- **조정 역량** : 항상 ‘중간’에 있다는 외로움과 어려움이 존재. 민-관, 민-민 갈등의 중심에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유연한 조정 역량이 중요
- **소통 역량** : 중간에서 부지런하게 정보를 수집하고, 체계적 정리하며, 원활하게 공유하는 역량이 중요. 소통을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의 체계적인 제공이 기본적으로 중요
- **균형 감각** : 지나치게 가치지향적인 주장을 우선하기보다 ‘개인적 판단과 조직적 판단의 조화’를 중시하는, 최선을 고집하기 보다 ‘차선에 합의’할 줄 아는 균형 감각 필요
- **지원 역량** : 민의 입장에서 관을 설득하고(민을 대변하고), 관의 애로사항도 이해하며 민에 전달(설명)하며 법·제도를 협력하여 개선하려는 역량이 필요

□ 분석과 학습 역량 : 농촌 지역사회의 객관적 이해

- **조사, 분석 역량** : 항상 배우려는 자세로 농촌 마을에 대한 객관적 조사와 분석을 통해 역사적이고 구조적인 이해가 중요. 책과 자료를 가까이 하고, 조사방법론을 익히며 사업집행 경험을 평가, 반성하면서 접근
- **자료관리 역량** : 지원센터가 수행하는 많은 일들은 타 지역 중간지원조직에도 유사한 경험이 축적되어 있을 수도 있기에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오프라인 자료실을 구축하고, 또 컴퓨터 파일 형태로도 관리 필요
- **공동학습 역량** : 단편적인 몇 가지 사업 집행으로는 농촌의 복잡한 구조적 문제 해결이 쉽지 않기 때문에 공동학습과 토론을 통해 객관적 현실을 이해하고 구조적 문제에 근본적으로 접근

□ 사업 기획과 융복합 역량 : 구조적 문제에 근본적으로 대응

- **목표 설정 역량** : 중간지원조직의 정체성과 미션을 이해하고 현재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단하며 개별 사업이 지향해야 할 목표와 목적을 정확하

게 이해. 상근 규모에 맞지 않게 지나치게 많은 사업을 배치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위탁기간을 염두에 두고 3년, 5년 중기계획에 입각하여 단계적으로 접근

- **사업 기획 역량** : 중간지원조직의 중장기적 목표와 역할에 맞추어 개별 사업을 전략적으로 배치하고, 우선순위를 판단하여 기획. 모든 사업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하고, ‘주어진 요구’를 단순 반복하는 관행(매너리즘, 관료화)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유의
- **사업 융복합 역량** : 작은 중간지원조직이 할 수 있는 사업의 규모와 가지는 한계가 명확하고, 그래서 관련 영역과 협력관계를 구축하며 융복합(협업)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 개별 사업만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연대와 협력을 통해 일정 기간 반복하며 추진할 때 성과(우수 사례) 도출이 가능

□ 민간 조직화와 역량강화 지원 역량 : 행정과 대등한 민간 조직 육성 지원

- **주민조직화 역량** : “스스로 말하게 하라”는 관점에서 주민 당사자들이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당사자 조직의 설립과 자율적 훈련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 마을 단위 추진위원회, 마을과 마을이 협력하는 마을만들기협의회 설립을 적극 지원하고 협력
- **수탁법인 역량강화** : 중간지원조직을 수탁하여 운영하는 법인의 이사회와 회원들의 개인적, 조직적 활동에 협력하고, 민간단체 협력 네트워크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설립 초기단계에서는 지원센터가 사무국 역할의 일부를 담당하고, 법인 산하의 연구소나 사업단 등 별도 조직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 지원센터 상근자 스스로 법인 산하 조직으로 단계적으로 이동하려는 자세 필요
- **민간 네트워크 구축과 법인 설립 지원** : 지역사회 민간단체 사이의 칸막이를 극복하고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중간지원조직 고유활동의 일환으로 추진. 행정 직영 센터에서는 민간위탁의 과도기 단계에서 민간의 네트워크 법인 설립과정을 적극 지원하는 역할 수행

□ 문서 작성, 편집 역량 : 항상 문서로 소통하고 시각적으로 표현

- **문서 작성 역량** : 중간지원조직은 행정과 문서로 소통하고 기록을 남기는 것이 기본. 문서 작성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행정과 대등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움. 평상시에 ‘글쓰기’ 훈련을 체계적으로 해야 하며, 교정과 교열 작업을 꼼꼼하게 하여 오타자가 없는 문서를 생산하고 공유하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에 해당
- **사업기획서 작성 역량** : 행정에 대해 사업 제안 문서나 사업 기안문을 작성하는 것은 중간지원조직 상근자의 일상적인 활동에 해당. 기획서를 작성하고 검토하며 수정, 보완하는 훈련을 반복해야 하는 ‘운명’. 다양한 형태의 기획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좋은 문서를 참고하면서 상황에 맞게끔 반복적으로 작성 필요
- **보고서 편집 역량** : 각종 행사자료집이나 사업결과보고서와 같이 수십 쪽의 보고서를 체계적으로 편집하는 역량도 필요. 특정 1인이 담당하기 어렵기에 사업 담당자의 개인 역량을 향상시키는 노력도 필요. 한글 문서 편집은 상근자 누구나가 익혀야 할 기본적 역량이고, 파워포인트나 엑셀, 동영상, 화상회의 등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활용 역량도 갈수록 중시되는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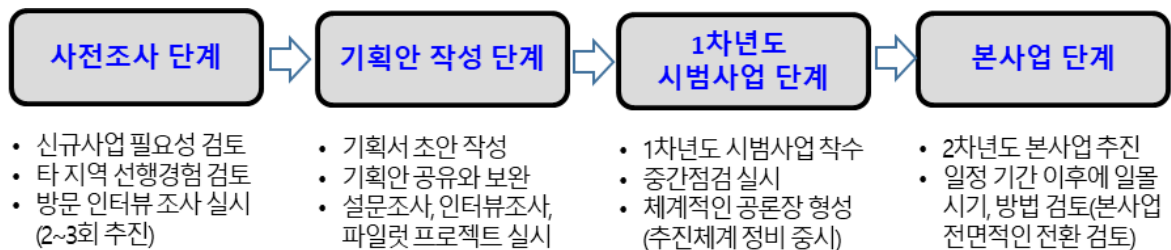
□ 분야별 실무 역량 : 총무/회계, 편집/디자인, 교육/컨설팅 등

- **주어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개인 역량 개발** : 스스로에게 주어진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역량 개발. 전임자로부터 인수인계 절차를 정확하게 밟고, 타 지역 센터의 관련 업무 담당자로부터 경험을 전수받는 등 직무 전문성 강화. 후임자에게도 경험이 체계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업무매뉴얼 형식의 자료를 생산하고 체계적으로 관리
- **개인 스스로의 전문영역 개척** : 본인의 적성과 지향점을 반영하여 전문성 강화를 위한 학습활동 강화. 지원센터 사업비를 활용하여 개인연수 뿐만 아니라 직무 관련 학습동아리 구성과 운영,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의 방식으로도 추진 가능

□ 신규 사업 도입의 기본 관점 : ‘8:2 원칙’ 중시

- **신규 사업은 줄이고 기존 사업의 개선에 충실** : 매년 사업평가를 통해 기존 사업의 질적 향상에 집중하는 것이 우선. 20% 정도의 ‘일몰사업’에 해당하는 만큼 신규 사업을 도입하는 ‘8:2 원칙’ 관점 유지. 또 중간지원조직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직접사업)과 구분하여 마을 혹은 사회적경제조직, 컨설팅기관 등에 배분하는 사업(배분사업)의 비율도 적절하게 배려하면서 접근
- 신규 사업 도입은 지원센터의 인력 규모를 고려하면서 적절한 절차를 거쳐 체계적으로 검토하면서 시도해야 함. [그림 3-13]과 같이 체계적인 검토를 거쳐 추진해야 ‘사업의 질’을 높일 수 있음

[그림 3-13] 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신규 사업 도입과 검토, 추진 절차 제안



2. 중간지원조직 상근자 역량강화 방안

1) 상근자 역량강화의 기본관점과 방향

□ 센터 내 학습과 토론구조 형성

- 정답이 없는 마을만들기 활동은 끊임없는 학습과 합의를 통해 차선책을 찾아가는 과정임. 보다 나은 차선책을 찾기 위해서는 일상적으로 학습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마을 내 갈등과 문제에 대해 갈등관리라는 명목으로 회의기법을 교육하면서 정작 지원센터 스스로는 회의와 토론에 익숙하지 못하고 소통과 합의에 서투르다는 것이 문제임
- 개인적 성향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 만큼 쌍방의 이해와 노력이 필요하고, 공동의 학습과 토론장을 정기적으로 마련하여 일상적으로 소통하는 내부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함

□ 타 시군 센터와의 협력 네트워크 형성

- 충남 14개 시군 중에서 센터가 가장 늦게 설치된 것을 장점으로 살려, 타 시군 센터들이 앞서 겪은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그들의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흡수할 필요가 있음
- 그러기 위해서는 타 시군 센터의 활동에 일상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피는 것이 필요하며, 서로의 활동을 존중하고 응원하며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함

□ 센터 주변의 활동가를 지원하고 연계, 협력하면서 외연 확장

- 충남도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의 표준모델을 고려하더라도 행정직영일 경우에는 2명, 민간위탁일 경우에는 4명의 상근자에 그침. 이처럼 농촌 마을만들기 정책 영역만으로는 센터 규모가 작을 수밖에 없고 인력을 늘리는 데에 한계가 있음. 이 때문에 내부역량강화만으로는 문제해결이 쉽지 않음. 따라서 센터 주변에 다양한 활동가를 발굴, 육성하면서

체계적으로 연계·협력하고, 외연을 넓혀나가는 것도 센터의 조직적 역량을 키우는 하나의 방법임

-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의 각종 사업을 통해 사회적경제조직을 적극 육성하고, 센터 사무실을 공유오피스로 개방하여 연계·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한 방법임. 또 읍면 주민자치회 사무국(행정복지센터 마을자치지원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함

2) 상근자 역량강화의 구체적인 프로그램 제안

□ 주 1회 자주적인 학습 프로그램 진행

- 주1회 정기적인 공동학습 시간 확보 : 매주 월요일 오전 시간에 회의 1시간 이외에 2시간 정도의 공동학습 시간을 정기적으로 확보하여 의도적으로 추진함
- 공동학습의 자료 : 유튜브에 있는 유명 강사의 각종 강의자료, 광역 센터의 각종 연구보고서, 타 시군 센터의 사업결과보고서, 서점 시판중인 마을만들기 단행본 등. 단행본 책을 정독하고 토론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유튜브 동영상 자료를 가볍게 지속적으로 학습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음
- 이 방법은 금산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개소 초기부터 상근자 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 지속적으로 시도한 방식임

□ 마을을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인터뷰하는 액션러닝 방식 강화

- 실천학습(액션러닝) 방식의 관점 중시 : 마을만들기는 이론보다는 직접 참여하여 자주적으로 학습하는 액션러닝 방식이 가장 효과적인 교육 방법론임. 특히 마을을 방문하고 주민들을 만나 실질적인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 방향을 공동으로 모색하는 과정에서 실천적인 학습이 이루어짐
- 마을조사단, 마을기자단 사업 결합 : 마을조사단이나 마을기자단 활동을 통해 주민들의 희로애락 경험을 청취하고 정리하는 과정은 매우 효과적인 학습기회에 해당함. 특히 마을 어르신들의 살아있는 경험을 청취하는 것은 젊은 활동가들에게는 큰 자극이 될 수 있음

- 센터 상근자들이 프로그램 기획과 진행에 그치고 실질적으로 직접 참여하지 않으면 학습효과가 매우 떨어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함

□ 농식품부 시군역량강화사업 예산 활용

- 센터가 주도하거나 컨설팅 기관에 위탁하는 사업 활용 :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강의를 청취하고, 실습에 직접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학습 기회로 활용해야 함
- 역량강화 프로그램에 직접 반영 : 스스로 학습하고 싶은 주제를 선정하거나 듣고 싶은 강사를 섭외하는 것도 프로그램 기획자로서 센터 상근자가 할 수 있는 방법임
- 핵심은 센터 상근자가 단순히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역량강화 기회로 센터 사업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것임

□ 타 시군 센터 및 광역, 전국 조직과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

- 당진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안고 있는 대부분의 고민들은 타 시군 센터에서도 동일하게 안고 있는 것임. 역량강화를 필요로 하는 분야도 대개는 비슷하다 할 수 있음
- 충남도 타 시군 센터 교육 프로그램 참여 : 충남의 튼튼한 광역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타 시군 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역량강화 프로그램 정보를 수집하고 필요한 교육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함. 직접 기획하지 않더라도 타 시군 센터에는 매우 좋은 프로그램이 많이 있기 때문임. 이를 위해서는 타 시군 센터를 방문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참관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와 응원이 필요함
- 광역 및 전국 조직의 교육 프로그램 참여 :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를 포함하여 한국마을지원센터연합에도 다양한 교육 기회가 있음. 전국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면서 당진시에 도움이 될 교육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함

제4장.

당진시 마을만들기협의회(가칭) 설립과 운영 방향

제1절 당진시 마을만들기협의회 설립 추진 현황

- 2019년부터 마을만들기 당사자 협의체 설립의 필요성을 계속 설명하였으며 당진시는 2020년 제1회 마을대학 개최를 계기로 마을만들기협의회 설립을 적극 검토하기 시작함
- 여기서는 제1회 마을대학 추진과정을 모니터링하고 마을만들기협의회(가칭) 준비위원회 논의과정을 정리하면서 향후 방향을 제안하고자 함

1. 2020년 제1회 마을대학 모니터링

□ 추진목표

- 마을만들기의 당사자 협의체 구축을 위한 마을대학 교육으로 관계자들과 협의체 구성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하여 마을만들기 사업의 발전적 방향 도출

□ 운영 개요

- 기간 : 2020년 9월 15일(화) ~ 10월 8일(목) / 총 6회
- 장소 : 당진시청 중회의실
- 참여대상 : 9개 읍면 마을리더 및 활동가 42명(중 21명 수료)
- 주요 내용
 - 2020년 마을대학 사업 및 당진시마을만들기지원센터 운영방향 공유
 - 마을만들기 지원 시스템 이해
 - 마을만들기 마을사업 소통 및 네트워킹
 - 농촌에서의 공동체와 네트워킹
 - 마을만들기 협의체 구축의 필요성 논의
 - 협의체의 활동/목적 이해 증진
 - 준비위원회 임원 선정 및 로드맵
 - 마을만들기협의회 준비위원 발족식 진행

□ 상세 프로그램 : [표 4-1] 참고

[표 4-1] 당진시 2020년 제1회 마을대학 프로그램

회차	요일	시간	시수(h)		교육내용	강 사
			이론	실습		
1	9/15 (화)	14:00~ 14:30		0.5	입교식 및 과정안내	당진시 공동체새마을과 (주)디에스교육컨설팅 외
		14:30~ 15:00	0.5		2020년 마을만들기 사업 및 중간지원조직 운영방향 설명	당진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
		15:00~ 17:00		2.0	팀빌딩을 통한 당진시 마을사업 소통과 네트워크 형성	박현미 퍼실리테이터
2	9/18 (금)	14:00~ 15:30	1.5		농촌에서 마을이란 무엇인가? 공동체와 네트워크의 의미, 중요성	공동체세움 복권승 이사
		15:30~ 17:00	1.5		민관협치 관점의 마을만들기 지원시스템 구축 방안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 구자인 센터장
3	9/22 (화)	14:00~ 15:00	1.0		마을 자치규약 만들기 활동 사례	마을디자인 노정기 고문
		15:00~ 16:00	1.0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방향과 지역의 준비사항	충남대학교 김정연 교수
		16:00~ 17:00		1.0	마을 당사자 협의체 구성논의를 위한 사전 주민의견 수렴	NGF연구소 나는 박현미 박현미
4	9/25 (금)	14:00~ 15:00	1.0		보령시 마을 당사자 협의체 구성 및 운영/활동사례	보령시마을만들기협의회 권영진 회장
		15:00~ 17:00		2.0	마을 당사자 협의체 구성 논의 I - 우리에게 마을협의체가 필요한 일인가? 필요하다면 왜 필요한가? - 사례발표 및 교육내용 복기를 통한 우리가 나아갈 길 (무엇을 생각하고 준비해야 하는가?)	NGF연구소 나는 박현미 박현미 외 보조 퍼실리테이터
5	10/6 (화)	14:00~ 17:00		3.0	마을 당사자 협의체 구성 논의 II - 준비위원회 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무엇인가? - 목적, 조직, 자격 등 당사자 협의체 구축을 위한 정관 논의	NGF연구소 나는 박현미 박현미 외 보조 퍼실리테이터
6	10/8 (목)	14:00~ 17:00		3.0	마을 당사자 협의체 구성 논의 III - 협의체 조직을 준비하기 위한 실무 진은 누가할 것인가? 이들의 역할은 무엇인가? - 준비위원회에서 효율적으로 일을 진행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NGF연구소 나는 박현미 박현미 외 보조 퍼실리테이터
		17:00~ 18:00		1.0	당진시 마을만들기협의회 준비위원회 결성 발족식, 설문조사 및 기념촬영	당진시 공동체새마을과 (주)디에스교육컨설팅

□ 추진결과

- 마을만들기 지원 시스템, 마을자치규약,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대한 전문가 강의를 통해 마을만들기 개념과 사업에 대해 학습하고 이해
- 타시군(보령시) 마을만들기협의회의 선진 사례를 통한 당사자협의체의 필요성과 역할에 대한 공감대 형성
- 분임토론을 통해 마을만들기 사업의 애로사항과 당면과제를 도출하고 개선방안 모색
- 마을만들기 당사자 협의회 준비위원회 구성
 - 마을대학에 참석한 18개 마을 추진위원장, 이장, 마을대표, 사무장, 위원들의 전원 동의로 구성하기로 함
 - 마을 가입을 원칙으로 하고, 마을을 대표할 수 있는 추진위원장, 이장으로 구성
 - 마을 대표 자격을 갖춘 10개 마을 중 참석한 7개 마을 추진위원장, 이장(마을사업 대표) 8명이 호선하여 위원장(김선호), 부위원장(허석, 유순호) 선임

[그림 4-1] 당진시 제1회 마을대학 진행현황 사진



2. 당진시 마을만들기협의회 준비위원회 정기회의 모니터링

□ 추진개요

- 일시 : 준비위원회 발족 이후 매달 첫째 · 셋째주 수요일 오전10시
- 장소 : 당진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
- 참석대상 : 마을만들기협의회 준비위원회 위원([표 4-2] 참고), 당진시청 마을공동체팀, 당진센터, 충남센터

[표 4-2] 당진시 마을만들기협의회 준비위원회 명단

번호	직책	성명	지역	마을사업추진경험	비고
1	준비위원장	김선호	고대면	희망마을선행사업	이장
2	부 위원장	허석	고대면	황토권역사업	추진위원장
3	부 위원장	유순호	신평면	농촌현장포럼	이장
4	준비위원	김종두	신평면	농촌현장포럼	이장
5	준비위원	박성우	송산면	농촌현장포럼	이장
6	준비위원	박연규	면천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추진위원장
7	준비위원	문한석	정미면	시군역량강화사업	이장
8	준비위원	이종운	합덕면	희망마을선행사업	이장
9	준비위원	최규범	대호지면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	이장

□ 1차 회의 개요

- 일시: 2020.11.4.(수) 10:00
- 참석자(총 8명): 준비위원위원회 위원 5명(김선호, 허석, 이종운, 박성우, 최규범), 당진센터 최운연 사무국장 / 충남센터 구자인 센터장 · 이윤정 연구원
- 주요 논의내용
 - 마을만들기협의회 준비위원장 인사
 - 특강: 농촌 마을만들기 당사자협의체의 설립 의미와 주요 쟁점(구자인 센터장)

- 질의응답 및 토론: ①마을만들기협의회 회원 자격의 기준과 범위, ②마을만들기
협의회의 역할과 권한 및 타 단체와의 차별성, ③협의회 구
성과 조직체계 등

□ 2차 회의 개요

- 일시: 2020.11.18.(수) 10:00
- 참석자(총 8명): 준비위원위원회 위원 5명(김선호, 허석, 박성우, 이종운, 김종두), 당진센터 최운연 사무국장 / 박현미 대표 / 충남센터 이운정 연구원
- 주요 논의내용
 - 마을만들기협의회 정관안 검토: 보령시 마을 만들기 협의회 정관안을 초안으로 하여 논의 후 다음 사항을 수정보완함
 - 마을만들기협의회 창립총회와 마을대학 연계추진 방안 논의

- ① 제4조(소재지)를 ‘당진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로 수정
- ② 제5조(회원의 자격)에서 제시된 3안 ‘자격조건에 구체적인 세부조항 넣기’, ‘현 초안대로 가기’, ‘특별한 조건을 정해서 넣기’에 대해 추후 다시 논의
- ③ 제8조(가입 및 탈퇴)에서 ‘4항’추가
- ④ 제10조(임원구성)에서 ‘4. 사무국장 1명’내용 추가, ‘5. 기타 각 읍면을 대표하는 운영위원 9명’으로 수정
- ⑤ 제14조(임원의 보수)에서 ‘실비 범위는 내규로 정함’을 추가
- ⑥ 제15조(임원의 해임)2항에 운영위원회 구성원에 대한 내용을 수정하고, ‘3. 협의회 회장은...(생략)’을 추가

□ 3차 회의 개요

- 일시: 2020.12.02.(수) 10:00
- 참석자(총 9명): 준비위원위원회 위원 5명(김선호, 허석, 이종운, 김종두, 문한석), 마을공동체팀 심장보 팀장, 당진센터 최운연 사무국장 / 박현미 대표 / 충남센터 이운정 연구원
- 주요 논의내용

- 2차 회의에서 논의 결정된 정관안(제1장~제3장)에 대한 재확인
- 「제4장~부칙」에 대한 내용을 논의·검토하여 다음 사항을 수정보완함
- 향후 진행방안에 대한 논의

- ① 제18조(회의구분)에서 회의시간을 ‘오전 10시’로 수정하고, 3항과 4항의 기재 순서를 바꿈
- ② ‘제21조(운영위원회 정기회의)’에 대한 내용을 추가
- ③ 제23조(회비)1항의 ‘가입비는 정관 공포일 현재 가입회원까지만 면제한다.’ 삭제
- ④ 제23조(회비)2항의 정기회비 입금 방법을 별도 3항으로 기재하고 ‘마을회 또는 마을법인 통장’을 추가 기재. ‘입금할 수 있다’를 ‘입금한다’로 수정
- ⑤ 부칙의 ‘마을공동체팀’을 ‘마을만들기 담당팀’으로 수정, 월회비를 연회비로 수정하고 날짜를 1월 31일로 기재

□ 진행결과 및 향후 방향

- 3차에 걸친 논의를 통해 당진시 마을만들기협의회 정관(안) 결정(정관안은 [부록2]에 수록)
- 향후 2021년 1-2월 농한기를 이용하여 충남도 타 시군 마을만들기협의회를 견학하고, 제2회 마을대학을 통해 집중학습과 토론을 거쳐 상반기 마을만들기협의회 발족을 목표로 추진함
- 12월 셋째 주 4회차 회의 때는 모든 준비위원들이 필히 참석토록 하여 결정된 정관안을 확인하고 추후 진행방향에 대해 논의하기로 함

[그림 4-2] 당진시 마을만들기협의회 준비위원회 정기회의 모습



3. 향후 주요 쟁점 제안⁷⁾

- 이하 내용은 1차년도 보고서에서 제안한 내용에 해당하고, 이후 제2회 마을대학에서도 지속적으로 토론해야 할 쟁점에 해당함. 핵심적인 쟁점만 다시 제안함

□ 쟁점1 : 목적과 필요성

- “우리 마을이 왜 참가해야 하는가? 참가하면 무슨 도움이 되는가?” 마을의 참여를 자극할 수 있는 ‘동기 부여’가 명확해야 함
- 일반적으로 이익, 명분, 재미의 3박자가 갖출 때 협의회 조직으로서 참가 필요성이 명확해지고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음
- 당진시 마을만들기협의회의 참여 마을들이 지속적으로 참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어야 하고, 참가함으로써 얻는 이익도 명확해야 함

□ 쟁점2 : 책임에 따르는 권한 부여(확보)

- “협의회 회원으로서 참여하면 어떤 권한이 생기나? 더구나 회비까지 낸다면 구체적인 이익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회원의 책임감에 수반되는 ‘권한’이 명확하게 부여되어야 지속적으로 참가할 수 있음
- 마을만들기협의회의 권한에 대해서는 행정과 충분한 협의가 사전에 필요함. 예를 들어, 별도 소액 보조사업 지원, 역량단계별 지원체계 신청권한 부여, 사무장 배치 권한 부여 등을 검토해야 함

□ 쟁점3 : 회원 자격 기준과 의무사항(벌칙)

- “회원의 자격 기준은 무엇이고, 어떤 의무사항을 가져야 규율이 유지되나?” 회원이라는 점이 명예로서 다가와야 하고, 의무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벌칙이 있어야 조직은 관리될 수 있을 것임

7) 이하는 당진시 1차년도 보고서의 해당 부분 제안을 요약한 내용에 해당

- 참여 자격은 가능하면 개방하되, 책임과 의무를 수반하여 ‘문턱이 있는 조직’ 이 되어야 할 것임
- 초기에는 마을만들기 행정사업 경험이 있는 마을 중심으로 회원자격을 제한하여 내부 규율과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한 이후에 단계적으로 개방하는 방안을 제안함

□ 쟁점4 : 조직형태와 체계

- “바쁜 사람 더 바쁘게 하는 것 아닌가? 옥상옥 조직이 되는 것 아닌가?” 조직체계를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참여 위원장이 덜 바쁘고 실용적일 수 있도록 조직 및 회의체계를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함
- 분과 체계, 사무국 운영, 특별위원회 등 많은 사람이 권한을 배분하여 골고루 책임지는 방식을 찾아야 ‘오래갈 수 있는 협의회’로 운영 가능함

□ 쟁점5 : 외부 협력단체 활성화

- 마을만들기(위원장)협의회의 역량강화와 관련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농촌 마을과 밀접한 농촌관광, 소득사업, 마을 단위 문화 및 복지 영역까지 지속적으로 개척해야 함
- 협의회에서 향후 분리되어 독립해나갈 경제사업단도 분명 있을 수 있고, 밀접하게 연계·협력해야 할 외부 단체도 있음. 이러한 협력관계가 있을 때 ‘작지만 강한 협의회’가 될 수 있음

제2절 충남 타 시군의 마을만들기 민간조직 현황

1. 충남 시군 및 광역 마을만들기협의회 설립 현황

□ 시군 마을만들기협의회 설립 현황

- 시군 단위 마을만들기협의회는 민선5기 3농혁신의 일환으로 희망마을만들기 학습조직에서 출발하여 단계적으로 변해옴
 - 초기에는 다수 시군에서 희망마을포럼 형태로 활동하다가 홍성, 논산 이외에는 오래 지속되지 못함
 - 2015년부터 3농대학, 충남대회 등의 기회를 활용하여 마을만들기의 당사자인 마을리더가 협의체를 설립하여 ‘주민 주도’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함. 이런 과정을 거쳐 2020년 12월 현재 충남의 10개 시군에서 협의회가 설립되어 활동중임([표 4-3] 참고)

[표 4-3] 충남 시군 마을만들기협의회 설립 현황(2020.12. 기준)

시군	명칭	회원 마을수	창립일	회 장	광역 협의회	비고
홍성	희망마을협의회	40	2013.03.11.	조홍식		
보령	마을만들기협의회	22	2014.07.01.	권영진	대표 회장	희망마을포럼 에서 전환
논산	농촌마을만들기협의회	55	2017.01.17.	김시환		희망마을포럼 에서 전환
서천	마을만들기협의회	18	2017.04.11.	하창호	감사	
예산	마을만들기협의회	60	2017.09.26.	신웅균	사무국장	
천안	마을만들기협의회	45	2018.04.13.	이성근		
청양	마을만들기협의회	45	2018.09.17.	황준환		
아산	마을만들기협의회	26(명)	2019.12.09.	유진돈	부회장	회원수에 개인 포함
공주	마을만들기협의회	32	2020.01.17.	양근승		2대 회장
부여	마을만들기협의회	44	2020.12.08.	이민우		

* 창립일순으로 기재. 비고란은 광역협의회 임원

□ 충남 광역 마을만들기협의회 설립

- 또한 시군 협의회가 모이는 광역 협의회 설립 논의도 2017년부터 더디지만 지속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져 2020.10.15. 창립총회를 개최함
 - 2017.7.28. 제6회 마을만들기 대화마당(서천)에서 “시군 협의회 구성과 운영”을 주제로 5개 시군 사례 발표와 토론 진행. ‘10대 쟁점토론’을 거쳐 시군 협의회 설립 필요성과 방향을 공유함
 - 2018.11.2. 제5회 마을만들기 충남대회(예산)에서 “8개 시군 협의회 임원진 간담회”를 개최하여 광역 협의회 논의를 2019년부터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오전, 대화마당 개최 전에 정기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의함
 - 2019.12.19. 9개 시군 협의회 임원진 40명이 참석하여 “시군 협의회 광역 네트워크 구축” 간담회를 개최하고, 전체 행정리의 10% 이상이 참여하도록 조직을 확대하기로 결의하고, 또 2020년 1월부터 광역 협의회 설립을 본격 논의하여 6월말경으로 예정된 충남대회(천안)에서 설립총회를 개최하기로 결의함
 - 2020.10.15. 코로나19 상황에서 시군 협의회 운영위원 3명씩 모여 총 343개 마을이 참여하는 충남마을만들기협의회 창립총회를 개최함(앞의 [표 4-3] 참고)
- 농촌 마을만들기의 광역 협의회는 전국 최초로 설립된 것임

2. 마을만들기 민간 네트워크 구축 및 법인 설립 현황

□ 충남 시군 단위 민간 네트워크 구축과 법인 설립 현황

- 2020년 12월 현재, 충남 15개 시군 중에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가 설치된 곳은 14개 시군이고, 이 중에서 네트워크 법인이 설립되어 중간지원조직의 민간위탁이 이루어진 시군은 5개임
- 민간 네트워크 조직을 설립하지 못하고 중간지원조직이 지자체 출연의 재단법인으로 최종 정리된 곳은 청양군과 부여군임. 서천군도 2020년 12월

부터는 민간위탁에서 재단법인으로 전환함

- 아산시는 민간 네트워크 조직으로 아산시공동체네트워크를 임의단체로 설립하였으나 활동가 개인이 결합되는 형태로 유지됨. 향후 마을만들기협의회와 협력하여 네트워크 법인 설립이 검토되고 있음
- 공주시는 주로 읍면동 단위 주민자치 활동가와 단체가 결합하여 연합체 형식의 (사)공주시마을공동체네트워크를 설립함. 향후 마을만들기협의회와의 역량 강화와 더불어 중간지원조직의 수탁이 가능한 네트워크 법인 설립도 검토될 것으로 예상됨

[표 4-4] 충남 시군 마을만들기 네트워크 법인 설립 현황(2020.12. 기준)

지역명	법인 명칭	설립년도	조직화 방식	비고
홍성군	(사)홍성지역협력네트워크	2016. 4.	관련 협의체의 대의원 방식	‘홍성통’ 운영경험 발전
천안시	(사)공동체네트워크 함께이룸	2016. 5.	리더 개인과 전문가 주도	협의체 미발달 지역
보령시	(사)만세보령공동체네트워크	2016.12.	마을만들기협의회 주도 + 전문가 보완	일반 모델
예산군	(사)예산군행복마을네트워크	2017.11.	마을대학 5회로 협의체 조직화 + 네트워크	마을대학 육성 모델
서천군	(사)서천마을누리네트워크	2019. 4.	마을만들기협의회 주도 + 지속협 연계	일반 모델
금산군	풀뿌리주민네트워크 (사)금산&사람들	2020. 1.	지원센터 주도 + 분야별 개인, 조직 결합	지원센터 주도형

□ 설립경로의 공통점과 특이점

- 설립과정에서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주도하는 마을대학, 워크숍, 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앞에서 살펴본 3대 쟁점에 대한 토론과 합의를 거쳐 법인의 구성과 형태, 구조 등을 지역 스스로 결정함
- 네트워크 자체가 법인이 되는 ‘일치형’ 방식을 취하고(쟁점2), 법인 형태는 모두 설립이 용이하고 의사결정이 단순한 이사회 중심의 사단법인이라는 공통점이 있음(쟁점3)
- 하지만 설립경로(쟁점1)는 지역의 특성과 마을만들기 역량, 지원센터 역

할 등을 반영하여 ① 협의체 주도형, ② 전문 활동가 중심형, ③ 지원센터 주도형 등 3개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 대체로 마을만들기 역량이 축적되고 행정의 이해도가 높은 곳은 ① 유형을 선택함. 한편, 대부분은 행정직영으로 설치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가 법인 설립과정을 직접 지원하는 ③ 유형이 많은 셈임

□ 설립경로 유형 1 : 협의체 주도형 - 홍성군, 보령시

- 홍성군 : 홍성군 농정기획단의 제안과 주도로 2011년부터 민관협치 거버넌스 조직으로 활동이 시작된 홍성통의 경험이 축적되어 2015년에 홍성군지역협력네트워크가 발족하고 2016년 4월에 법인으로 전환함.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도농교류, 재능기부 등 4개 그룹의 기관, 단체가 모여 네트워크 법인을 대의원방식으로 조직함. 2016년 11월부터 지원센터를 수탁 운영함
- 보령시 : 2016년 3월에 행정직영의 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설립됨. 그 이전부터 활동하던 희망마을협의회가 주도하여 마을대학을 통해 법인 설립 경로에 대해 학습을 강화함.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제안과 토론을 통해 희망마을협의회가 주도하되 농촌관광, 사회적경제, 도시재생 영역의 당사자 주민리더와 활동가가 참여하는 형태로 네트워크 법인 (사)만세보령공동체네트워크를 2016년 12월에 설립함. 2017년부터 바로 민간위탁이 이루어짐

□ 설립경로 유형 2 : 전문 활동가 중심형 - 천안시

- 천안시 : 2010년 이후 5년간 농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시행되지 못하여 마을만들기 활동 경험이 충남도 사업으로 제약되어 있었음. 2015년부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새로 시행되고, 충남연구원이 적극 참여한 민관협치워크숍을 연속으로 개최(6~10월)하여 법인 설립을 우선하고 처음부터 중간지원조직을 민간위탁 형식으로 설치·운영하기로 결의함. 법인도 농촌마을과 농촌관광, 공익활동, 사회적경제, 도시재생 등의 정책

영역에서 활동중인 활동가 중심으로 (사)공동체네트워크 함께이름을 2016년 5월에 설립함. 당사자협의체도 민간위탁의 중간지원조직을 통해 단계적으로 육성하기로 결의함

□ 설립경로 유형 3 : 지원센터 주도형 - 예산군, 서천군, 금산군

- 예산군 : 2015년 12월에 공주대학교(예산캠퍼스) 산학협력단에 민간보조사업 형태로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마을대학을 집중적으로 개최하면서 당사자협의체를 의식적으로 조직함. 5회에 걸친 마을대학 개최 이후에 (사)예산군행복마을네트워크를 2017년 11월에 설립함. 2018년부터 중간지원조직을 수탁운영함
- 서천군 : 2016년에 행정직영의 마을만들기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마을대학을 개최하면서 마을만들기협의회 설립과 네트워크 법인 설립과정을 계속 토론함. 당사자협의체가 발달하지 못하고 민관협치 시스템 구축이 어려운 상태에서 마을만들기협의회와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결합하는 형태로 (사)서천마을누리네트워크를 2019년 4월에 설립함. 민간위탁은 2020년부터 이루어짐
- 금산군 : 2017년부터 행정직영의 마을만들기지원센터를 우선 설치함. 마을대학을 지속적으로 개최하며 법인 설립을 우선하고 민간위탁이 이루어진 이후에 당사자협의체의 설립과 육성을 추진하는 경로로 결정함. 지원센터가 주도하여 약 2년간의 활동 경험을 축적하면서 관련 영역의 활동가들을 조직하여 네트워크 법인으로 (사)금산&사람들을 2020년 1월에 설립함. 올해 10월에 민간위탁 절차가 이루어짐

제3절 당진시 마을만들기 민간 네트워크 구축 방향

- 수탁법인의 설립과정과 경로는 지역마다 상이할 수 있는데, 당진시의 경우에는 당사자협의체 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마을만들기협의회 설립을 통해 관련 영역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나가야 함
- 행정은 이런 과정을 ‘인큐베이팅’ 관점에서 적극 응원하고 장려해야 함. 특정 부서만의 과제가 아니므로 협치형 중간지원조직을 운영하는 행정부서가 행정지원협의회를 구성하여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가능함
- 이 절에서는 기본원칙과 주요 쟁점, 사례 등을 간략하게 소개함

1. 민간 네트워크 구축의 기본 원칙과 제도적 이해

1) 민간 네트워크 구축의 기본 원칙과 방향

□ 민간 네트워크 구축의 기본 원칙

- 지역사회의 대표성 확보 : 일부만이 참여하는 ‘그들만의 리그’가 아닌, ‘우리 모두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 모색
- 민주성에 기반한 의사결정 : 당사자 그룹의 다수 참가를 통해 대중성을 확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의 민주성 확보
- 당사자협의체의 대표성 존중 : 관련 당사자 협의체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되 대표, 임원 중심으로 결합하는 협력 네트워크 모색
- 효율적인 운영 시스템 모색 : 네트워크 조직이 ‘옥상옥’이 되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일하는 조직’ 형태로 모색

□ 참여 영역의 선정

- 당진시 공동체새마을과의 업무 영역을 우선으로, 마을만들기협의회와 주민자치회, 사회적경제, 새마을 조직을 중심으로 1차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점진적으로 관련 영역으로 외연 확장

- 농촌 현장의 마을만들기를 중심으로 하고 농촌정책 쪽의 귀농귀촌, 6차산업, 체험휴양, 로컬푸드 등 관련 영역별 대표성을 가진 협의체 단위로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재능폴 영역을 별도로 두어 활동 경험과 전문성 갖춘 인력 참여 유도
- 향후 타 부서에서 추진중인 도시형 마을만들기, 도시재생, 평생학습 등의 영역도 추가하여 확장

2) 민간 네트워크 구축의 제도적 이해

□ 민간 네트워크 구축의 방법론과 설립 의미

- 기본적으로 개별 마을이나 단체, 개인 등 당사자가 참여하는 당사자 협의체 조직이 있고, 이들이 모인 민간단체 협력 네트워크 조직, 그리고 이와 직접 연계된(참여한 혹은 일치되는) 법인 조직의 구조가 됨([그림 4-3] 참고)
 - 이처럼 “당사자 → 당사자 협의체(000협의회) → 민간협력 네트워크 → 법인” 등의 경로로 설립되는 것이 일반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음
 - 당사자 협의체의 조직 명칭은 일반적으로 ‘협의회’를 사용하며 ‘네트워크’란 용어는 이후 민간단체 협력 네트워크 조직에 사용하는 것이 편리할 것임
- 민간 네트워크 조직을 강조하는 이유는 시군 중간지원조직이 기본적으로 행정 칸막이를 극복하고 통합형 지원센터를 지향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함
 - 또 행정직영의 중간지원조직이 가진 한계를 인정하고, 민과 관의 ‘대등한 협력관계’를 통해 지역역량을 강화하고 내발적 발전을 추구하기 위한 전략 과도 연계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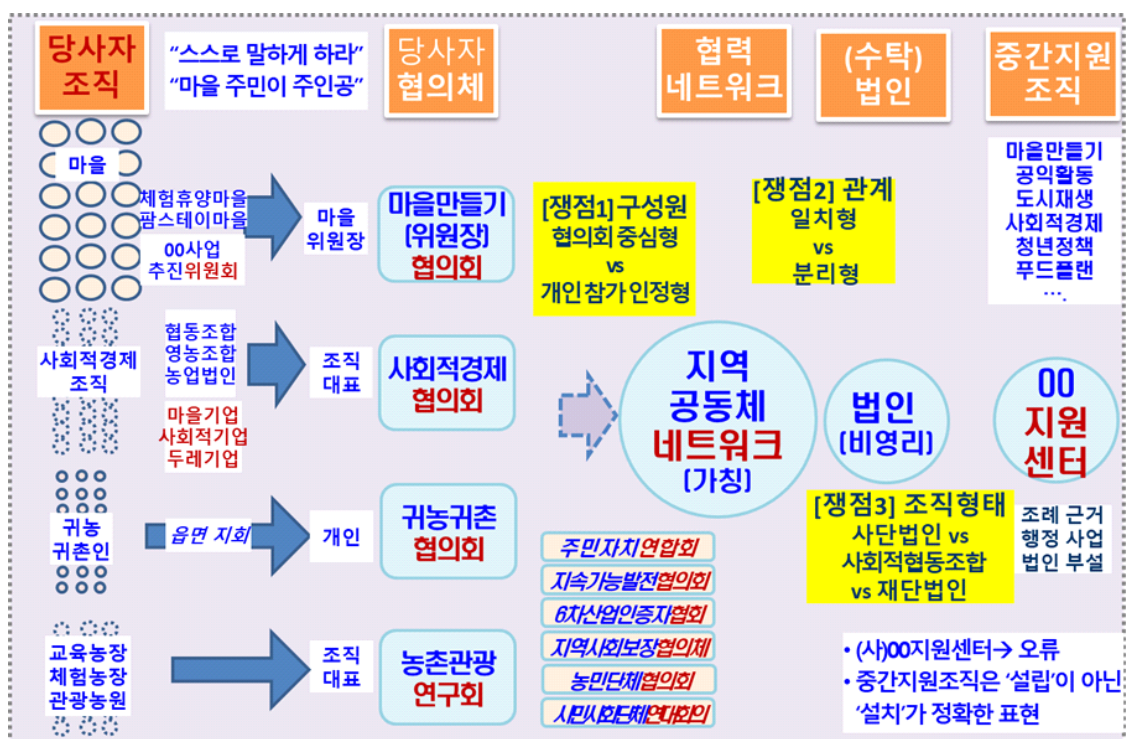
□ 중간지원조직의 수위탁을 둘러싼 제도적 이해

- 민간 네트워크 구축은 현실적으로 중간지원조직 수탁 법인 설립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

-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은 ‘행정 사무의 민간위탁’ 성격으로 공개적인 절차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설치 및 운영되는 ‘행정 사업’에 해당함
- 위탁 기준은 ‘행정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하여 비영리 법인·단체가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업무를 수탁 받을 수 있음
- 지역 실정에 따라 민간 네트워크 구축의 경로와 방식은 다양할 수 있음

[그림 4-3] 마을만들기 민간 네트워크 구축의 일반 경로와 3대 쟁점



2. 마을만들기 민간 네트워크 구축의 경로와 주요 쟁점

1) 민간 네트워크 구축의 일반 경로

- 마을만들기 관련 민간 네트워크의 미래상에 대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경로를 예상할 수 있음. 어느 길이나 장단점이 있으며, 두 가지를 조합하는 형태의 새로운 길도 있을 것임

□ 제 1 경로 : 농촌 마을공동체와 사회적 가치 영역이 결합하는 네트워크

- 희망마을 선행사업, 체험휴양마을, 권역사업 등 추진위원장을 주축으로 마을만들기(위원장)의 대표 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이후에 사회적경제나 농촌관광, 주민자치(동네자치), 평생학습 영역 등과 강하게 결합하는 경로
- 이 경로는 홍성군, 아산시, 보령시 사례가 있고 신규로 마을협의회 설립을 시도하는 시군에서 일반적으로 선택하는 방식임
- 사회적경제조직이 어느 정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협의체도 조직되어 있는 지역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서로의 결합을 통해 생활공동체와 경제공동체의 원-원을 모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하지만 각자의 개별 조직 활동이 튼튼하지 못하고 협의체 조직도 취약한 상태에서는 시너지효과가 없고 오히려 갈등이 발생하기 쉬움

□ 제 2 경로 : 농촌정책 관련 영역으로 결합하는 네트워크

- 농촌지역(마을)개발 영역으로 더욱 전문화하여 마을공동체와 농촌관광, 귀농귀촌, 6차산업 등의 그룹이 강하게 결합하는 경로. 이 경로는 농촌의 특성상 행정 사업과 더욱 강하게 결합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농업·농촌 영역으로 네트워크를 집중하는 방향이기도 함
- 농촌관광이나 6차산업, 귀농귀촌 영역의 개별 조직은 대개 사회적경제조직과 강하게 연계되어 있음 하지만 농촌 마을공동체와 상대적으로 동질성이 강하고 농정 분야로 국한되기에 결합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음. 또 마

을 주민들 관점에서도 이해하기 쉽고, 행정의 전통적 업무 체계와도 일치된다는 장점이 있음. 하지만 사회적경제, 주민자치 등의 영역과 단절되고 경제 활동이 취약해지는 문제점이 발생함

2) 민간 네트워크 구축을 둘러싼 3대 쟁점⁸⁾

- 민간네트워크 구축 및 수탁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다양한 쟁점이 있을 수 있고, 사전에 충분한 학습과 토론이 필요함
 - 다음에서 제기하는 세 가지 쟁점에 대해서는 향후 민간위탁형 중간지원조직의 수위탁을 둘러싼 제도적 형식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한 토론이 필요함
- 아래의 선택지는 향후 토론 과정을 통해 변동될 수 있으며, 어디까지나 당사자인 마을리더와 민간 활동가, 그리고 중간지원센터 상근자들이 모여서 결정할 사항임. 각각의 대안별 장단점이나 사례 등에 대해서는 타 지역 연구보고서를 참고바람

□ 쟁점1 : 민간 네트워크 구성원의 조직화 방식

- ①안(협의체 중심형) : 마을만들기(위원장)협의회 같은 당사자 협의체의 임원이 중심이 되어 구성하는 네트워크 조직형태
- ②안(개인 중심형) : 개별 마을과 단체 및 개인이 네트워크의 회원으로 참여하는 대중적 조직형태
- 대안별 장단점
 - ①안 : 협의체 임원 중심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조직이 단순하고 의사결정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임원 개개인의 성향이 지나치게 드러나거나 회의 참여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음
 - ②안 : 희망하는 마을과 단체, 개인 등이 모두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대중적이고 민주적이라 할 수 있는 반면, 기존의 당사자 협의체

8) 3대 쟁점은 아산시의 두 차례에 걸친 마을대학(2016)에서 최초로 정리되어 시군 순회하며 토론하는 과정에서 보완됨. 상세 내용은 아산시(2016) 등 타 지역 연구보고서를 참고바람. 당진시도 민간 네트워크 구축과 법인 설립이 당면 과제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소개함

역할이 모호해지고 의사결정 과정이 느릴 수 있다는 단점이 있음. 또 대다수의 마을과 단체가 참여하지 않으면 대표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음

□ 쟁점2 : 민간 네트워크와 중간지원조직 수탁법인 관계

- ①안(일치형) : 민간 네트워크 조직 자체를 법인으로 설립하고 중간지원조직의 수탁법인이 되는 방안
- ②안(분리형) : 민간 네트워크 조직은 일반 민간단체로 남아 행정과의 ‘적절한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별도 법인을 설립하는 방안
- 대안별 장단점
 - ①안 : 개별 마을과 조직의 대표성과 현장성을 잘 반영하고 참여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단체 간이나 리더 사이의 갈등이 발생할 경우에 의사결정이 늦어지는 등 조직 운영이 불안정해지고, 수탁 중간지원조직 사업의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음
 - ②안 : 중간지원조직 사업을 중심으로 전문성과 안정성, 지속성이 잘 확보될 수 있는 반면, 조직이 이원화되면서 ‘옥상옥’ 성격으로 변질되거나 지역사회와 괴리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음. 또 중간지원조직 활동이 확대되면 수탁법인에 비해 민간 네트워크 조직의 역량이 약화될 수 있음. 다른 측면에서 민간 네트워크 조직은 중간지원조직 수탁과 형식적으로는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과의 ‘적절한 긴장관계’를 유지하며 민간 영역의 고유활동에 충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될 수 있음

□ 쟁점3 : 중간지원조직 수탁법인의 의사결정 권한(이사회 구성)

- ①안(전문가 중심형) : 중간지원조직의 상근 직원도 참여하는 등 마을만들기 분야의 전문가 중심으로 이사회를 구성하는 방안
- ②안(협의체 임원 중심형) : 당사자 협의체 임원과 개별 단체 대표 일부가 중심이 되어 이사회를 구성하는 방안
- 대안별 장단점
 - ①안(전문가 중심형) : 지자체 전체에 걸쳐 실제 현장과 접촉하는 상근 활동가

와 전문가들도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협의체 대표들의 부족한 지역 전문성이 보완되고 추진력과 집행력이 있다는 장점이 있음. 반면에 지역사회의 대표성이 낮아지고 다양한 의견 수렴이 미흡하여 지역과 괴리될 우려도 제기됨

②안(협의체 임원 중심형) : 협의체 임원들이 지역 대표성을 가지고 참여하기에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수렴이 용이하고 임원들의 현장 경험도 잘 반영할 수 있음. 반면에 이사회 내부에서 갈등과 대립이 발생하거나 조직이 기주의가 나타날 때 중간지원조직 운영에 큰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음

3. 당진시 마을만들기 민간 네트워크 구축의 선택 방향 제안

□ 기본방향 : 공동학습과 토론, 합의 과정 중시

- 마을대학을 통해 마을만들기 당사자협의체 구성을 지원하고 마을만들기 당사자협의체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학습과 토론을 통해 자주적인 법인 설립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민간 네트워크 구축의 기본원칙에 충실하면서 현실상황을 고려하여 민간 단체 사이의 ‘합의’ 과정을 중시함
 - 민간 네트워크 구축 역량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단체 위주의 ‘옥상옥’ 회의조직이 되지 않도록 다양한 단체 활동을 보장해야 함
-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등 중간지원조직의 통합범위와 민간위탁 시점을 우선 합의하고 일정을 역순으로 배치하여 민간 법인을 설립하도록 추진하고 행정에서도 ‘적절한 신호’를 보내야 함
- 2021년 상반기에 3회 마을대학을 통해 마을만들기협의회를 우선 설립하도록 지원하고, 6월까지 네트워크 법인 설립의 경로와 방식에 대해 합의 도출

□ 쟁점1 : 민간 네트워크 구성원의 조직화 방식 - 조합형 선택

- 당진시는 마을만들기(위원장)협의회도 설립되어 있지 않고 당사자 협의체가 발전되지 못한 상황임.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당사자 협의체 설립을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동시에 전문성과 대표성을 가진 개인의 참가도 존중하는 방식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을 제안함
- 다만 개인 자격으로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존중하여 제한적으로 참여를 유도함

□ 쟁점2 : 민간 네트워크와 중간지원조직 수탁법인 관계 - 일치형 선택

- 당진시 여건에서는 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민간 네트워크 조직 자체가 중간

지원조직의 수탁법인이 되는 ‘일치형’ 을 기본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함

- 다만 당사자협의체의 역량이 성숙하면 시민사회단체의 협의체와 협력으로 통해 중장기적으로는 분리형의 방향도 적극 검토함

□ 쟁점3 : 수탁법인 이사회 구성 - 조합형

- 당진시는 당사자가 협의체가 발달되어 있지 않지만 “스스로 말하게 하라” 원칙에 비추어 협의체 임원을 중심으로 이사회를 구성하되, 중간지원조직 상근자가 노동자 대표로 참여하고, 또 외부 전문가도 일부 참여하는 형태로 이사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함
- 법인 형태로는 설립이 가장 용이한 사단법인을 권장함
- 다만, 중간지원조직과 법인의 운영을 둘러싼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법인 이사회의 공동학습과 행정(공동체새마을과 4개 팀)을 포함한 업무 연찬을 수시로 실시해야 함

제5장.

당진시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발전 방향

제1절 마을만들기와 관련 영역의 연계 · 협력 방향

1. 농촌 마을만들기와 관련 정책 영역⁹⁾

1) 농촌 마을만들기의 성격과 정책 융복합

□ 마을만들기는 지방자치와 함께 성장한 주민자치운동

- 1990년대 이후 지방자치의 진전과 풀뿌리 주민자치운동의 발달로 주민들이 개인으로서, 또 조직 형태로 지역사회의 주체로 등장함
 - 1980년대까지의 거대 담론 운동에서 벗어나 주민 스스로의 생활세계를 방어하고 발전시키려는 ‘새로운 사회운동’으로 주목함
 - 국가(행정)와 시장경제가 해결하지 못한 영역을 주민 스스로 삶의 현장에서 직접 해결하는 주민자치운동으로 성장함. 예) 공동육아, 작은도서관, 대안학교, 생산자협동조합, 자활공동체 등
- 하지만 지방자치가 발달하지 못하고 주민자치 역량이 성숙하지 못한 한국 농촌사회에서 마을만들기는 2000년대 들어와 체험휴양마을 사업을 계기로 등장하여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며 현재에 이름
 -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활용한 ‘도시와 농촌의 직접적 교류(그린투어리즘)’가 크게 강조되었는데, ‘농외 소득향상’과 이를 위한 대도시 소비자를 유치하는 경쟁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부작용이 발생함
 - 정부의 농촌개발 정책도 ‘주민 주도, 상향식’을 강조하였지만, 마을리더의 지나친 희생과 봉사, 외부 컨설팅기관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부작용이 드러남

□ 우리 모두가 꿈꾸는 지역사회 모델 : ‘풀뿌리 공동체(지역사회)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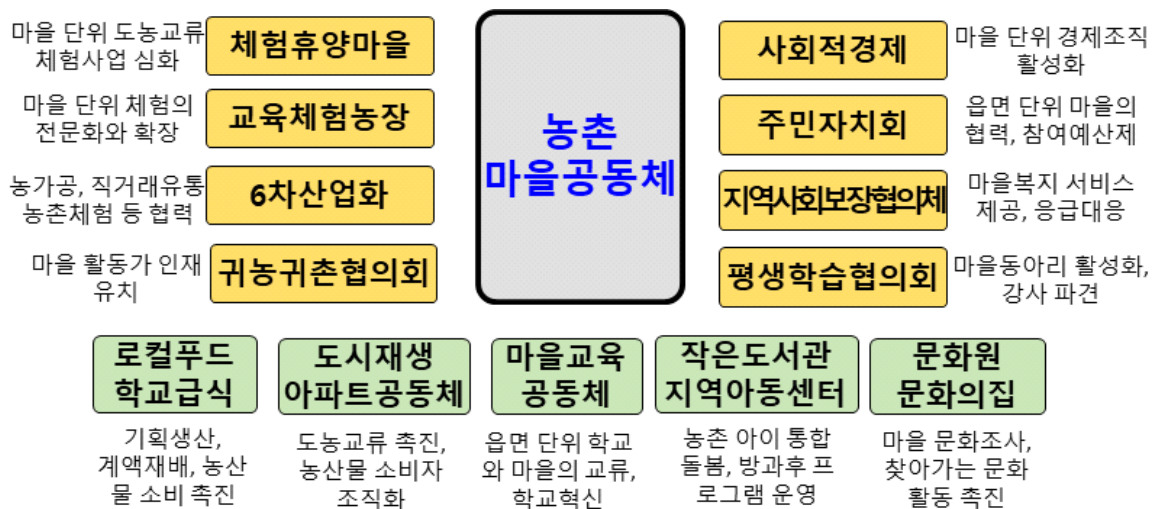
- 마을만들기는 역사적으로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 걸

9) 이하 5장 내용은 2015년부터 수행한 14개 시·군 공동연구 성과(특히 서산시)를 반영하여 현재 시점과 당진시 실정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정리한 것임

음’을 강조하며 주민 모두가 같은 꿈을 꾸는 ‘더디 가더라도 제대로 가는 길’을 모색하는 원칙을 중시함

- 일부 주민자치운동은 국가 정책으로 수렴되어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며 제도화의 길을 걷게 되고, 더불어 새로운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새로운 자치운동이 등장
- 결국 농촌 마을만들기(공동체)와 주민자치, 사회적경제, 평생학습, 지역복지 등은 모두 지역사회(공동체) 발전을 위해 유사한 지향점을 가진 ‘한 뿌리에서 나온 다른 운동’에 해당함.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연대와 협력이 이루어질 때 서로의 목적 달성도 가능함([그림 5-1] 참고)

[그림 5-1] 농촌 마을공동체와 관련 정책 영역과 협력사업



2) 당진시 특성에 맞는 도농순환형 마을만들기 모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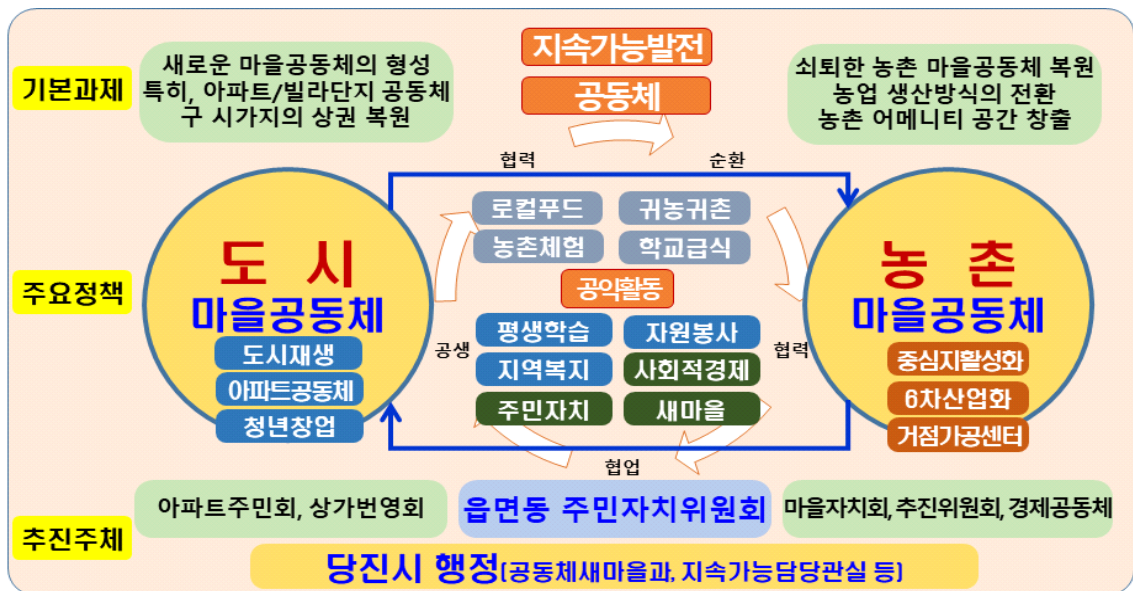
□ 도농순환형 유사 정책 사이의 연계·협력 강화

- 도농통합시인 당진시의 특성에 맞게 농촌마을과 도심지역을 연계하여 지역발전의 성과가 내부에서 순환되고 축적되며 확장될 수 있도록 지역순환 경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그림 5-2] 참고)
- 여기에는 다양한 정책 영역이 결합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읍면동 주민자

치(위원)회를 매개로 농촌형 마을만들기와 도시형 마을만들기가 강력하게 결합하는 방향으로 정책 융복합을 강화해야 함

- 이를 통해, 도농순환형 마을공동체 복원에 이바지하고 마을단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해 내발적인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임

[그림 5-2] 당진시 도농순환형 마을만들기와 관련 분야간 상호협력 관계 개념도



□ 특히 ‘공동체’,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협력 강화

- 당진시는 2020년 1월 조직개편을 통해 ‘공동체’ 전담부서로 공동체새마을과를 신설함
 - 그래서 농촌 마을만들기의 1차적인 정책 협력의 방향은 주민자치, 사회적경제, 새마을 분야로 볼 수 있음
 - 공동체새마을과 산하의 4개 팀이 정책협력을 우선적으로 강화하면서 단계적으로 관련 영역으로 확장하는 방향을 선택함
- 또 당진시는 ‘지속가능발전’을 시정 제1과제로 하여 정책을 추진중이고, 마을만들기와의 관련성이 역사적으로 매우 높음
 - 지속가능발전 정책은 민관협치 조직인 지방의제를 통해 발전해왔고, 역사적으로 ‘마을의제’의 발굴과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함

- 당진시 지속가능발전담당관실의 공익활동지원센터 및 공동체통합지원센터 업무와의 관련성 측면에서도 마을만들기와 적극 협력할 필요가 있음
- 공동체와 지속가능발전은 모두 사회적가치를 지향하는 정책으로 당진시 읍면동 전체에 걸친 정책으로서 서로 긴밀하게 협력해야 성과 도출이 용이함

2. 농촌 마을만들기와 관련 정책과의 연계·협력¹⁰⁾

1) 당진시 농촌 마을만들기와 읍면 주민자치회의 연계·협력 방향

□ 읍면 단위 주민자치회로의 전환과 당진시 추진 성과 극대화

- 행안부 주도로 2018년부터 읍면동 단위의 주민자치위원회를 실질적인 대표기구로서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음
- 기초자치단체에 사업 추진 전담팀을 구성하고, 또 읍면동 사무소에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며, 이에 필요한 인력은 자치단체 기준인건비에 반영하고 있음.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읍면동 사무소에 주민자치 1명, 복지2명, 간호1명을 배치하겠다는 구상이었음
- 현재 인근 당진시를 포함하여 다수의 지자체에서 마을자치지원관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여 읍면동 사무소에 배치하고 있음
- 정부의 각종 정책은 부처별·사업별로 추진주체를 구성하여 진행되어 왔으나 이는 지역 내 한정된 소수의 지역리더를 놓고 주민조직 내 칸막이를 형성하는 방식이었음. 앞으로는 주민과 지역의 관점에서 주민자치회 전환을 통해 통합적 접근을 강조함

□ 읍면 단위 정책 융복합과 생활SOC시설복합화 : 농촌협약의 핵심 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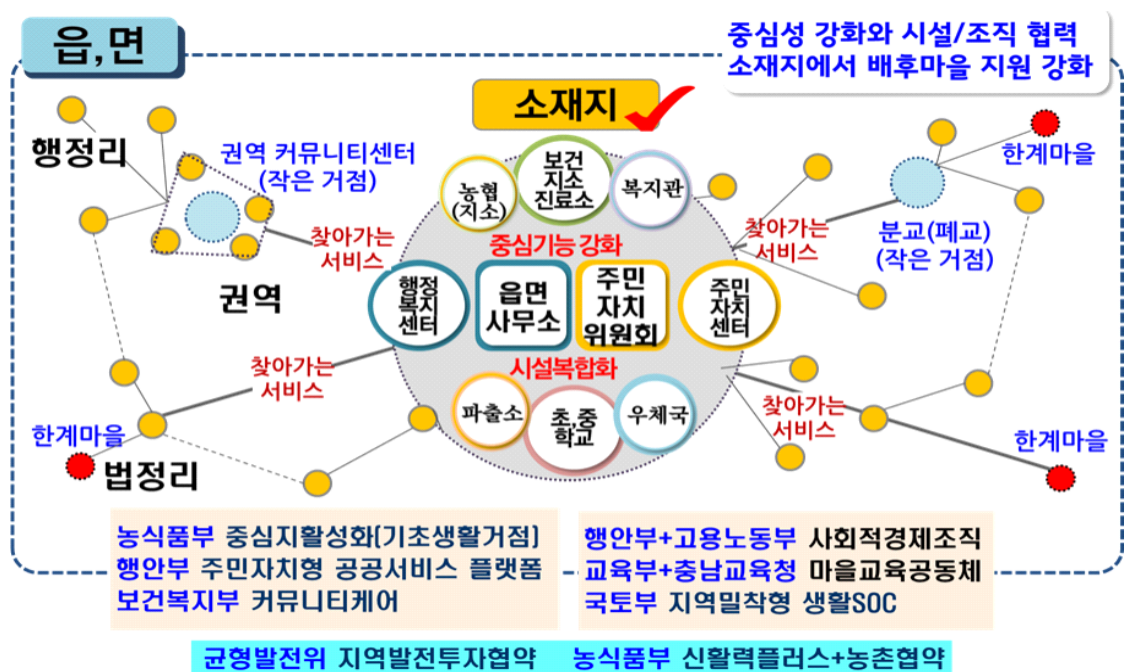
- 당진시 전체 차원에서는 유사 정책 사이의 ‘제도적’ 협력체계를 모색하

10) 이하 5장 내용은 2015년부터 수행한 14개 시·군 공동연구 성과(특히 서산시)를 반영하여 현재 시점과 당진시 실정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정리한 것임

고 읍면 단위에서는 주민자치회 주도로 실질적인 정책 융복합을 시도함

- 최근 시행되는 국도비 대형 공모사업이 동일 읍면에서 정책 칸막이를 통해 시행되면서 서로 충돌하는 경우가 많음. 공모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사업 구역과 추진위원회, 사업내용 등을 조금씩 달리 하지만 본질적으로 지역발전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함
- 정책사업이 시행되는 현장에서는 유사한 목적의 사업이 거의 동시에 시행되는 경우가 많음. 주민자치회가 주도하여 각각의 공공시설과 조직이 상호 협력하여 읍면 소재지의 중심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함([그림 5-3] 참고)
- 예를 들어, 농식품부 중심지활성화(기초생활거점육성) 사업과 국토부 도시재생뉴딜(+생활밀착형 SOC)사업은 하드웨어 성격이 강하고, 농촌 자치단체의 읍소재지에서 거의 동시에 추진중임. 또 행안부의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플랫폼 사업, 보건복지부의 커뮤니티케어 사업, 교육부의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은 프로그램 성격이 강한데 기본적으로 읍면 단위로 시행되는 특징이 있음. 또 거의 모든 사업이 추진주체로 사회적경제조직을 강조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음

[그림 5-3] 읍면 단위 정책사업의 융복합을 위한 종합발전계획 수립 전략



- 초고령화 시대에 정책 융복합을 통해 읍면소재지의 생활SOC시설을 복합화하고, 자치분권과 농촌협약에 적극 대응해야 함
- 읍면소재지의 다양한 시설을 복합적으로 설계하여 주민들의 이동거리를 줄여주고, 또 다양한 시설 및 조직 사이의 연계·협력을 통해 중심지 기능을 강화해야 함
- 이를 통해 정책수요자인 주민의 필요에 맞추어 다양한 공공서비스의 원스톱 제공이 가능해지고, 다양한 시설의 이용효율성도 향상될 것임.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 시대에 시설복합화를 통해 주민 필요에 부응해야 함. 주민자치회 전환과 농촌협약 등의 정책이 기대하는 것도 바로 이런 방향임

□ 향후 전망: 주민자치회 역량의 성장과 병행하여 제도적 정비 강화

- 자치분권 패러다임으로의 전환과 병행하여 시군 권한 중에서 주민 생활에 밀착된 권한은 읍면으로 이양될 것으로 예상됨. 특히 초고령화 문제와 연계하여 보건복지 분야의 권한과 사무가 지속적으로 이양될 것으로 예상됨
- 농촌 읍면 단위의 주민자치회 권한이 지속적으로 강화됨으로써 주민자치회 산하에 상근 사무국이 구성되고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임
- 전국 농촌 지자체에도 읍면장 주민추천제로 능력있는 공무원이 발령받거나 개방형 직위제로 민간 전문가가 채용되는 사례도 늘어날 것임
- 인접한 당진시는 ‘충청남도 개방형 읍면동장제’ 시범사업을 통해 신평면장을 개방형직위로 공모하여 주민심사를 통해 임기제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임용하였음
- 또한, 충남도는 충남형 주민자치 모델을 구상하고 ‘주민자치회 중심의 주민 참여 활성화’, ‘지역 공동체 활성화’, ‘지속 가능한 기반조성’, ‘현장 자치 역량 강화 및 공감대 확산’의 4가지 추진모형 및 각 세부과제를 개발하여 2018년부터 각 시군 읍면동 주민자치회 전환을 지원하고 있음

2) 당진시 농촌 마을만들기와 사회적경제의 연계·협력 방향

□ 농촌 마을 기반의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방향

- 마을만들기와 마찬가지로 사회적경제 분야에서도 민관협치의 정책 시스템이 구축되고, 서로 협력할 수 있어야 정책적인 효과 도출이 가능함
- 농촌 마을마다 여건이 다르기에 주민 스스로 선택하도록 유도하고, 성장과정을 밀착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같은 외부 지원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야 성공가능성이 높음
- 마을 내부에서 현장포럼이나 희망마을 선행사업 등을 통해 경제공동체의 조직화를 시도하고 사회적경제조직 발굴 및 육성을 지원하는 별도 공모사업을 활용하여 단계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전략을 선택함
- 다만, 마을 현장과 분리되어 지나치게 시장경제를 지향하거나 규모화를 시도하는 것은 위험하고, 가까운 지역사회(읍면, 당진시) 내에서 대면적 협력 관계를 형성하는 전략(관계망 시장 확보)이 보다 유리함
- 마을에서 공동소득 창출이 가능한 영역으로는 아래와 같은 분야를 생각할 수 있음. 다만 아래 분야를 통합하는 마을기업에서 출발하여 시장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함. 반드시 협동조합일 필요는 없고, 작목반이나 영농조합법인, 주식회사 형태에서 출발할 수도 있음
- 농업생산 연계 : 농산물 공동생산, 특화작물 가공, 직거래 유통(특히 학교급식, 공공급식망 연결) 등을 담당하는 마을기업
- 도농교류 연계 : (전담자가 있다는 전제 하에) 특히 마을교육공동체 활동과 연계하여 도농교류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식생활교육, 농촌숙박 등과 연계하는 마을기업
- 기타 분야 : 마을의 전통문화 자원을 연계하여 둘레길, 농촌유학, 캐릭터 상품, 공유사무실 제공, 장기체재형 숙박 등 다양한 프로그램 사업을 상상할 수 있음. 전국의 선진지 사례를 통해 다양한 경험을 배울 수 있을 것임
- 무엇보다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 유의하여 방향을 모색함
- 마을 내부의 조직화가 우선되어야 함. 마을 공동사업의 경험을 축적하면서

경제공동체를 조직하고 생활공동체와 상호협력할 수 있는 역할분담이 잘 되어야 함. 이런 마을조직도를 구체적으로 그리고, 협력관계가 구축될 때 마을기업으로서 성장할 수 있음

- 농업생산 활동과 충분히 연계되어야 함. 기본적으로 농업생산 영역의 소득 창출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이를 기본으로 도농교류나 전통문화, 경관 환경 등을 결합하는 방향으로 마을기업의 소득 영역을 개척해나가야 함
- 행정사업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음. 사회적경제조직을 육성하는 다양한 공모사업이 제시되어 있고, 이를 적절하게 활용하여 마을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의 애로사항을 극복할 수 있음. 다만 내부에서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 예산을 지원받아 실패한 경우가 매우 많다는 점에 유의해야 함

□ 읍면 소재지와 연계한 사회적경제조직 설립 및 육성 방향¹¹⁾

-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의 역사는 오래되었지만 농촌 읍면을 기반으로 하여 현장에 밀착하여 성공한 사례는 많지 않음. 농촌정책과 충분히 결합되지 못하여 다양한 인적, 물적 자원을 공유하지 못한 채 시행착오를 반복하는 상황임
- 농촌문제가 심각한 곳에 주민 수요도 높고 정책사업도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읍면은 사회적경제조직이 활성화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음. 현실에서는 다양한 정보나 사업이 공유되지 못하고 정책 칸막이나 민간단체 협력체계 미흡, 중간지원조직 미설치 등 다양한 이유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자연발생적으로 읍면 단위에서 사회적경제조직이 출현하거나 당사자 신청을 기다리는 방식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지정공모 방식으로 육성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음
- 지정공모 방식을 시도해볼 수 있는 분야로 [표 5-1]과 같이 4대 영역을 제안할 수 있음. 각각은 농촌의 당면과제로 문제가 심각하고 시급한 정책영역이라고도 할 수 있음. 행정의 보조사업 집행방식을 바꾼다면 공공성과 수익

11) 이하 내용은 충남연구원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 2020. 2., 『농산어촌 유토피아 구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시범계획 수립』 158~160쪽을 참고하여 요약 정리한 것임

성의 조화를 이룬 사회적경제조직이 빠르게 등장하고 확대될 수 있음

- 각 조직의 상근인력 규모는 3명 내외로 크지 않지만, 경제사업이 늘어나는 시기에는 주변에 반상근이나 비상근 형태로 결합할 수 있는 주민이 훨씬 많을 수 있고, 이것이 농촌 방식에 맞는 고용방식이라 할 수 있을 것임
- 또 처음에 문제를 제기하고 조직화를 시도하는 그룹의 특성이나 논의의 출발계기, 추진 경험, 성과 등에 따라 각 분야들이 서로 결합하거나 혹은 분리되면서 지역 실정에 따라 다양하게 달라질 수 있음
- 읍면 현장밀착형 사회적경제조직 육성의 4대 핵심(지정공모) 분야
 - 첫째, 농촌경관개선사업단. 도로변 예초 작업, 가로수 관리, 설치미술 작업, 마을정원 시공 등 마을가꾸기 활동 전담. 경험을 축적하여 경관계획 수립이나 컨설팅도 가능. 농식품부 농업환경프로그램사업, 공익형직불제 정책과 결합하여 성과 확대
 - 둘째, 빈집수리사업단+주거복지센터. 빈집 수리와 관리, 임대사업 담당. 독거노인이나 사회적약자의 주거복지 지원 활동 등 담당. 시군 자활복지센터(집수리사업단)나 주거복지센터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성과 확대
 - 셋째, 로컬푸드사업단. 소규모 농산물의 안정된 수집과 집하 및 유통, 못난이(B급) 농산물의 가공 등 담당. 마을 단위 생산자 조직화(기획생산과 계약재배) 교육,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공동급식 및 반찬나눔 등과 연계. 학교급식 및 푸드플랜 정책과 연계하여 읍면 1조직 관점에서 추진하면서 성과 확대
 - 넷째, 노인요양원+주간보호센터. 행정리 마을 중심으로 거동이 가능한 노인들을 위한 주간보호센터 운영 지원, 면소재지 적절한 곳에 노인요양원 설립 운영 등. 읍면 내 사회복지 관련 자격증 소지 주민 중심의 학습모임에서 출발하여 실태조사 추진, 법인 설립 준비모임으로 전환. 1~2년의 중장기 현장실습(특히 법인 경영관리) 등의 절차를 거쳐 의료사회적협동조합이나 사회복지법인 설립. 최소한 10명 정도의 일자리 확보 가능

[표 5-1] 읍면 현장밀착형 사회적경제조직 육성의 4대 핵심 분야

구분	분야	주요 내용	일자리 규모	비고
①	농촌경관개선 사업단	· 계획 수립, 교육·컨설팅, 시공 등 · 도로변 예초, 마을정원 시공, 가로수 관리, 설치미술 작업 등	· 최소 2~3명	· 노인일자리, 농업환경프로그램, 공익형 직불제 등과 연계
②	빈집수리사업단+주거복지센터	· 계획 수립, 교육·컨설팅, 시공 등 · 빈집 수리 및 임대, 주거관리, 주거/에너지복지 서비스 제공 등	· 최소 3~4명	· 자활복지센터(집수리사업단), 주거복지센터 등과 협력
③	로컬푸드사업단 (먹거리복지센터)	· 계획 수립, 교육·컨설팅, 판매 등 · 마을 생산자 조직화, 농산물 기획생산(계약재배) 지도 · 지역농산물 공동급식, 반찬나눔 · 지역 농산물 유통, 판매 등	· 최소 5명이 상 (지역농업 규모 반영)	· 지역 식당, 학교(공공)급식망, 로컬푸드 직매장, 거점가공센터 등과 연계
④	노인복지법인	· 조사분석, 계획 수립, 위탁교육, 컨설팅·자문 등 · 주간보호센터/요양원 운영,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 등	· 최소 5명이 상	· 법인 설립 중시 · 영광군 여민동락공동체 사례 참고

주: 일자리 규모는 최소로 추정된 것이고, 여기에 반상근, 비상근 일자리가 다수 결합될 수 있음
 자료 : 충남연구원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 2020. 2., 159쪽

제2절 통합형 중간지원조직 설치 및 운영 방향

1. 당진시 중간지원조직 논의 현황과 통합형의 기본 방향

1) 마을만들기 관련 영역의 중간지원조직 설치 논의 현황

□ 당진시 읍면 주민자치회 운영 및 중간지원조직 논의 현황

- 당진시는 2015년 주민자치협의회 출범을 시작으로, 2016년부터 주민세 세입을 주민자치사업 재원으로 환원하여 읍면동 맞춤형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2018년에는 5개 읍면동에서 주민총회를 실시하는 등 주민자치 활성화에 노력해 옴
- 2018년에는 충남 최초로 행안부 주민자치 선도도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2019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을 통해 마을자치지원관과 사회복지분야, 간호분야 전담인력을 채용하여 8개 읍면동에 시범 배치하고, 주민총회를 전체 읍면동으로 확대 개최함
- 2020년 6월에는 14개 읍면동 전체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되어 마을자치지원관(일반임기제)을 채용하여 모든 읍면동에 1명씩 배치함. 마을자치 교육 및 마을사업 발굴, 주민총회 개최 등을 전담하는 인력을 읍면 현장에 둠으로써 주민주도 상향식 정책 실현의 가능성이 높아짐
- 현재는 당진시에서 주민자치 분야의 중간지원조직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음. 향후 14개 읍면동 주민자치회 및 마을자치지원관의 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본청과 협력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함
- 특히 주민자치 활성화 기본법 논의가 대두되고 있고 2021년 1월중에 입법 발의될 예정이라 하며, 이를 통해 중간지원조직 논의는 더욱 활성화될 것임. 도시 지역의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다수(약 30개)는 주민자치 지원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상황임

□ 당진시 도시재생지원센터(행정직영) 설치 및 운영 현황

- 설치목적 : 당진 도시재생의 허브역할을 통한 지속가능한 구도심 활성화
- 설치시기 : 2015년 4월 13일
- 설치근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당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14.12.29. 제정)」 제6조
- 위 치 : 당진시 읍내동 549-2 1층
 - 당진1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인 주민커뮤니티 거점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구) 농협건물을 매입 후 리모델링하여 2020년 6월 26일에 입주
 - 같은 건물 4층에 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입주
- 관련 웹사이트 : (블로그)<https://blog.naver.com/dangjincity4430>
- 조직 구성 : 센터장 1명(공무직), 사무국장 1명(임기제공무원), 사무원 1명(행정공무원), 총괄코디네이터 1명(반상근)
- 주요 활동
 - 소식지 ‘다시, 당진’ 발간, 도시재생추진협의체 운영 등
 - 도시재생 추진 사업 : 도시활력증진사업, 당진1동 소규모 재생사업, 당진1동 도시재생뉴딜사업, 당진2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신평면 소규모재생사업
 - 주민역량 강화사업 : 도시재생대학, 주민제안공모사업, 당진폴뱅이장터, 도시재생 활동가 양성교육, 사회적경제 교육 및 워크숍

[그림 5-4] 당진시 도시재생지원센터 활동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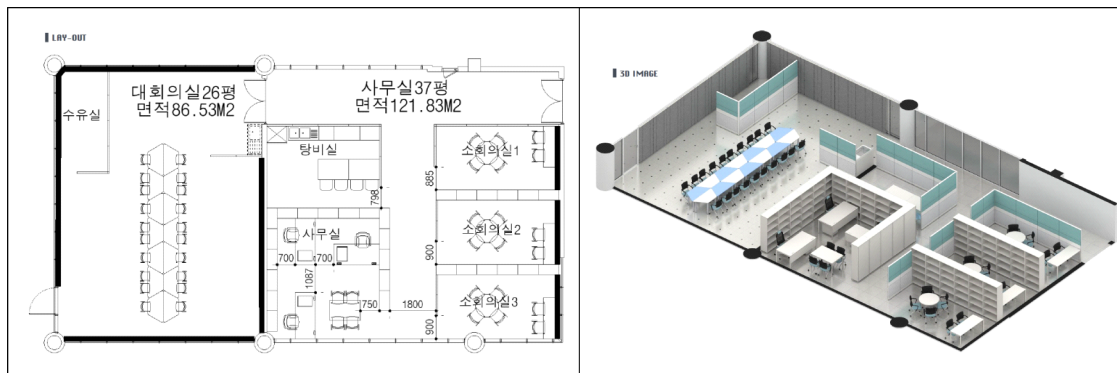


자료 : 당진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밴드

□ 당진시 공익활동지원센터(행정직영) 설치 동향

- 충청남도는 풀뿌리 단위의 다양한 공익활동의 모델 발굴 및 육성, 주민주도 지역사회문제해결 기반 조성을 위해 “시군 공익활동지원센터 설치·운영 지원을 위한 공모사업”을 추진함
 - 2019년 3월에 기설치(08년 12월)된 천안을 제외하고 미설치된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공모를 통해 서산시와 논산시가 선정됨
- 당진시는 2020년 사업으로 금산군과 함께 선정됨. 사업담당은 공동체새마을과가 아니라 지속가능발전담당관실에게 맡는 것으로 정리함
- 당진시 지속가능발전담당관실에서는 2020년 6월의 3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총 2억원)하고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함
- 2020년 7월에 「당진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컨설팅 용역」을 통해 ‘시민추진단’을 구성함. 이후 11월까지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한 사업설명회, 설문조사와 집담회, 워크숍, 현장방문,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 등을 진행하면서 센터의 필요성과 역할, 방향 등에 대해 제안하고 토론했음
- 2020년 11월에 관련 조례안을 결정하였고, 인력 2명(임기제공무원)을 확보하여 사업대상지(당진시 대호만로 31 서부새마을금고 2층) 공간 리모델링 후에 12월말에 개소할 예정임

[그림 5-5] 공익활동지원센터 공간 구성 계획



자료 : 당진시청 지속가능발전담당관 제공

□ 당진시 공동체통합지원센터 설치 논의 동향

- 충남도는 공동체 관련 중간지원조직의 통합형 설치를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 성격의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2019년부터 “공동체 통합 지원센터 설치 지원사업”을 도입함
 - 별도 센터 설치를 의무화하지 않고 중간지원조직의 통합형 설치를 장려하는 예산 지원으로 공모사업 방식으로 선정함
 - 주로 공동체정책에서 빠져 있는 도시형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 영역으로 특화된 업무를 담당하는 방향으로 제안됨
- 2021년 지원내용: 2개소 총 190백만원
 - 통합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용역비, 건물 리모델링 설계비, 운영비, 인건비(최대2명) 등 경상적 경비 지원
 - 주로 시군 공익활동지원센터 설치와 연계하여 합동으로 공모하고 심사하여 선정하는 방식으로 추진
- 당진시는 2020년에 3월에 본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공익활동지원센터와 마찬가지로 지속가능발전담당관실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함
- 2020년 6월의 3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95백만원)하여 사업을 추진함. 이와 관련하여 2020년 9월~12월까지 「공동체 통합(중간지원조직 통합 지원) 용역」을 진행중이며, 중간지원조직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와 기관 인터뷰를 실시함

2) 중간지원조직 ‘통합형’의 개념과 통합 범위 검토(1차년도 요약)

□ 중간지원조직의 ‘통합형’ 설치 개념과 유형

- **공간적 통합** : 동일 건물내에 입주하여 협력 형태로 통합
- **물리적 통합** : 같은 조직 내에 관련 사업 영역을 배치하여 협력관계 유지
- **화학적 통합** : 하나의 조직 내에 배치하되 업무 유형별로 통합하여 운영

□ 통합형 센터의 통합 영역(범위)

- **마을만들기지원센터** : 행정직영의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운영 1년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영역으로 확대 통합. 경험이 더욱 축적되면 현재 상근자는 타 영역으로 전환 배치 검토도 가능
- **주민자치지원단(센터)** :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자치회 전환을 밀착하여 지원하고, 읍면동 단위의 관련 정책 융복합을 담당할 중간지원조직 성격. 별도 공모사업은 현재 없지만 향후 행안부 및 충남도 정책과 연계하여 강력하게 대두될 것임. 읍면동 사무소에 배치된 마을자치지원관 일부를 본청에 배치하고 행정직영 마을만들기지원센터 파견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현재는 논의가 진전되고 있지 않지만 향후 중앙정부 및 충남의 각종 지원사업을 계기로 설치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될 것임
- **공익활동지원센터** : 당진시도 충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속가능발전담당관실에서 추진하고 있기에 최대한 빨리 행정직영으로 우선 설치하여 운영 경험을 축적. 2021년의 통합형 설치 논의에 따라 토론과 합의 과정을 거쳐 공동의 경로를 확정
- **공동체통합지원센터** : 충남도 공모사업으로 당진시도 선정되어 지속가능발전담당관실에서 추진중임. 별도 센터 설치를 의무화하지 않고 있고, 관련 중간지원조직의 통합형 설치를 촉진하기 위한 기능에 해당. 주로 도시형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 영역으로 특화된 업무 담당 검토

3) 중간지원조직의 통합형, 민간위탁형 설치를 위한 3대 전제조건

□ 전제1 : 행정조직의 개편과 업무 조정

- 마을만들기를 포함하여 통합하고자 하는 정책 영역의 업무를 같은 과에 배치하여 연계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형성함
- 관계성이 높은 업무를 같은 부서에 배치하여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효율적인 정책사업 실행이 가능함
- 당진시에서는 마을만들기와 같이 공동체새마을과에 배치되어 있는 주민 자치, 사회적경제 영역의 중간지원조직은 빨리 통합형으로 배치가능함
- 하지만 지속가능담당관실에서 논의중인 공익활동지원센터와 공동체통합지원센터는 공간적 통합은 가능해도 물리적 통합은 가능하지 않음.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도 동일 법인에게 위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예산이나 조직 관리 측면에서 통합성은 높지 않음

□ 전제2 : 정책영역별 당사자 협의체의 구성과 역량 강화

- 비슷한 처지의 당사자들이 모여 공통의 해결책을 모색하고 현장 실정에 맞는 과제를 발굴하기가 용이함
- 또 정책영역별 당사자 협의체가 발전해야만 민간단체 간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법인 설립도 원활할 수 있음
- 당진시에서는 마을만들기협의회가 2021년 2월중에 창립총회를 준비중이고, 사회적경제네트워크도 설립되어 있으나 민간단체의 역량강화에는 상당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함

□ 전제3 : 네트워크 법인의 설립과 수탁 역량 강화

- 당사자 협의체 간의 상호활동 교류와 학습회 진행 등을 통해 경험을 공유하여 시행착오의 경험을 답습하지 않도록 함
- 민간단체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법인 설립, 그리고 중간지원조직 수탁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행정과의 대등한 협력관계 구축도 가능해짐. 이러한 수탁법인이 있을 때 중간지원조직의 민간위탁도 가능해지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도 구축됨

- 당진시에서도 당사자협의체 설립과 역량강화에 이어 네트워크 법인 설립에 대해서도 2021년 6월경까지 적극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음

2. 타 시군의 마을만들기 관련 통합형 중간지원조직 설치 사례

1) 충남 시군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설치 및 운영 현황

□ 중간지원조직 설치 및 운영 현황 : 총 14개 시군 완료([표 5-2] 참고)

- ‘민간위탁형’ (5개) : 천안, 예산, 홍성, 보령, 금산
- ‘재단법인형’ (3개) : 청양(2020.7.), 부여(2020.11.), 서천(2020.12.)
- ‘행정직영형’ (6개) : 아산, 논산, 태안, 공주, 서산, 당진

[표 5-2] 충남 시군 마을만들기(공동체) 중간지원조직 설치 및 운영현황(2020.12월 현재)

시군	센터명	개소일	설치유형	사업영역	센터장	상근인력	사무실	민간네트워크
아산시	공동체 지원센터	2015. 7	행정직영	농촌마을+ 사·경	-	4명	어울림경제센터	아산시공동체 네트워크
논산시	(자치 새마을팀)	2015.10	행정직영 (공무직)	농촌마을	-	2명	논산시청	-
예산군	행복마을 지원센터	2015.11	민간위탁	농촌마을+ 신활력	반상근	7명(중사업단2 명)	예산읍 을지빌딩2층	(사)예산군행복마을네트 워크
보령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2016. 3	민간위탁	농촌마을+ 행복생활권	비상근	8명(중사업단3 명)	농업인다목적 회관	(사)만세보령공동체 네트워크
천안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2016. 8	민간위탁	농촌마을+ 신활력	상근	9명(중지원사업 3명)	도시창조두드림센 터	(사)천안시공동체 네트워크 함께이룸
홍성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2016.12	민간위탁	농촌마을+ 도시재생+ 마을조사업	비상근	11명 (중법인5명)	청운대학교 수신관 407호	(사)홍성지역협력 네트워크
서천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2017. 1	재단법인	농촌마을	비상근	4명	길산내우리터 1층	(사)서천마을누리 네트워크
청양군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2017. 4	재단법인	농촌마을 (+확장중)	상근	5명	청양읍 (구)자원봉사센터	청양군 지역활성화재단
태안군	농어촌마을 지원센터	2017.11	행정직영	농어촌마을	-	3명	태안군청	-
금산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2018. 8	민간위탁	농촌마을+ 신활력	상근	9명 (중신활력팀3명)	금산시네마 2층	풀뿌리주민네트워크 (사)금산&사람들
서산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2019. 6	행정직영	농촌마을	-	2명	서산시민센터 2층	-
공주시	공동체종합 지원센터	2019. 7	행정직영	농촌마을+ 사·경	-	4명	공주시청 별관	(사)마을공동체네트워크
부여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2019.10	재단법인	농촌마을	-	3명	부여상권활성화재 단	부여군 지역활성화재단
당진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2020. 6	행정직영	농촌마을	-	3명	도시재생지원센터 3층	(추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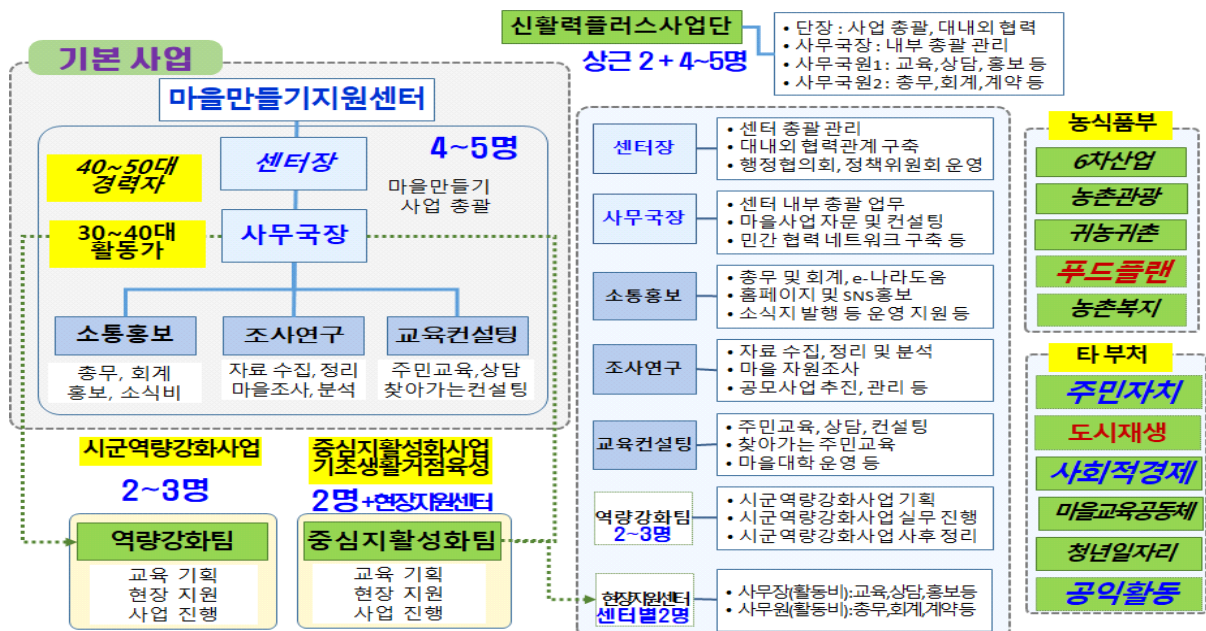
□ 당면과제 : 농식품부 시군역량강화사업을 활용한 전담기구 지정

- 농식품부는 지역사회의 역량 향상과 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상시 교육이 가능한 ‘역량강화 전문기관’ 개념 도입. 새로운 조직 양성보다 기존 중간지원조직 및 지역 단체의 연계 및 통합운영 권장
 - 시군의 중간지원조직,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시·군 소속·산하기관, 사회적경제조직 등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직접 시행
 - 30% 지방비 매칭 범위 내에서 최대 2인까지 인건비 책정 가능
- 농식품부 지침에서는 시군역량강화사업의 전담기관이 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경우 사업비 한도 증액(+1억)
- 향후 신활력플러스추진단 설치, 농촌협약지원센터 지정 등과 연계하여 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채용인력은 계속 확대되고 민간위탁 전환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

□ [참고] 농업농촌정책 영역 중간지원조직의 인력 규모 추정

- 일회성의 보조사업이 아니라 중장기 관점의 민간위탁 사무 방식으로 동시에 추진할 경우 기초자치단체마다 20~30명 규모 예상([그림 5-6] 참고)

[그림 5-6] 기초 지자체 농촌정책 영역 중간지원조직 수요와 인력 규모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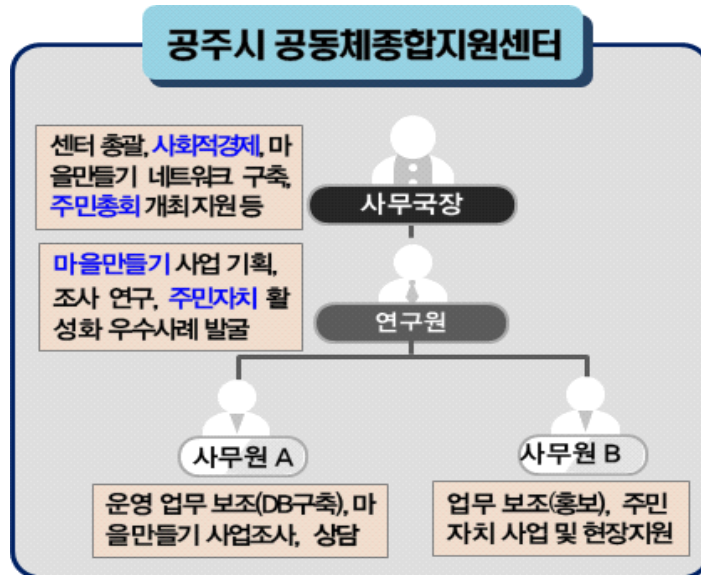
2) 충남 시군의 마을만들기 관련 통합형 중간지원조직 설치 사례

- 충남에서는 아산시, 공주시, 청양군, 부여군 등이 마을만들기 관련 중간지원조직을 통합형으로 설치하여 운영중임

□ 공주시 사례(행정직영 유형)

- 공주시 공동체종합지원센터(행정직영) : 마을만들기+사회적경제+주민자치
- 2019년 7월에 사회적경제 업무와 센터운동을 총괄하는 사무국장(시간제임기제) 1명, 마을만들기의 S/W사업 관련 업무와 주민자치를 담당하는 연구원(시간제임기제) 1명을 채용하였고, 이 후 사무원(기간제)을 추가로 채용 배치하여 현재 4명으로 운영되고 있음([그림 5-9] 참고)

[그림 5-7] 공주시 공동체종합지원센터 조직도



• 업무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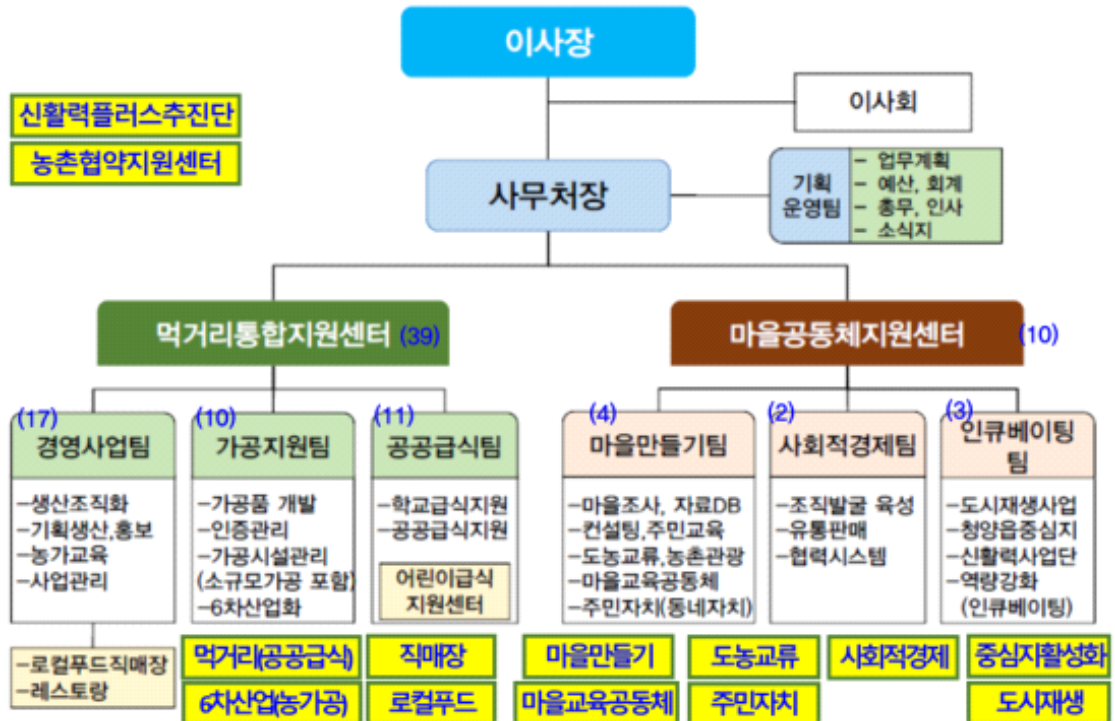
- 사무국장 : 공동체종합지원센터 ‘모여유’ 운영 및 통합운영체계 구축 지원, 마을만들기 네트워크 구축 및 농촌개발사업 운영 지원, 주민대표기구 구성 및 운영지원, 자치계획 수립 및 시행, 주민총회 개최 지원, 사회적경제 기업 상담 및 컨설팅, 사회적경제 활성화 홍보, 사회적경제 기업 발굴 및 네트워크 운영관리, 그 밖의 마을공동체 협력연대와 관련된 사항

- 연구원 : 마을대학 운영,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홍보, 마을만들기 사업 조사연구 및 지역자원 발굴, 농촌개발사업 운영 지원, 마을 활동 서포터즈 운영, 주민자치 활성화 우수사례 발굴, 그 밖의 마을공동체 조사연구, 주민교육, 소통홍보와 관련된 사항
- 사무원 : 공동체종합지원센터 ‘모여유’ 운영 업무보조, 마을공동체 자원조사 및 조사결과 입력, 주민자치 관련 자료 정리 및 상담, 현장 업무 지원 등
- 충남에서 가장 먼저 설치된 아산시 공동체지원센터도 유사한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음. 다만 관내에 수탁법인이 없어 2015년 7월 처음 설치된 이후 지금까지 계속 행정직영 상태를 유지중임

□ 청양군 사례(재단법인 유형)

- 청양군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재단법인 청양군 지역활성화재단) : 마을만들기+사회적경제+도시재생+푸드플랜
- 2020년 7월 1일에 발족한 청양군 지역활성화재단은 마을만들기와 주민자치, 사회적경제, 도시재생을 통합한 마을공동체지원센터(10명)와 로컬푸드, 공공급식, 6차산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39명)로 구성되어 총 54명(파견 5명) 규모임([그림 5-10] 참고)
- 주요사업(청양군 지역활성화재단 정관 제4조, 별표1 中)
 - (1) 공동체 활성화·회복 지원사업 : 마을(교육) 공동체 지원사업, 공익활동 지원사업, 민관협력 시스템 구축 등
 - (2) 마을만들기 지원사업 : 마을자원조사, 자료DB, 컨설팅, 주민교육, 도농교류, 농촌관광 등 연대·협력사업
 - (3) 주민자치회 운영 : 주민자치(동네자치)
 - (4) 사회적경제 지원 : 조직발굴 육성, 유통판매, 협력시스템
 - (5) 도시재생지원사업 : 도시재생사업(공모사업 대응), 청양읍중심지, 신활력사업단, 역량강화
 - (6) 학술연구용역 : 농산물 생산 및 유통, 가공 등 먹거리 분야 연구용역, 마을만들기, 주민자치, 사회적경제 및 농산어촌개발 등 공동체분야 관련 연구용역
 - (7) 행사진행 : 행사 진행 및 관련 물품 대여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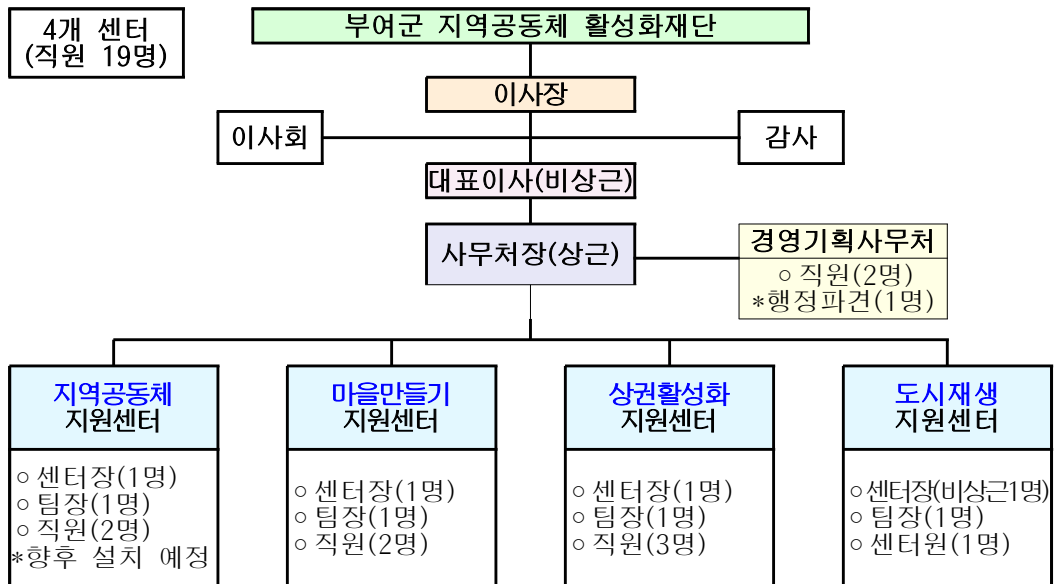
[그림 5-8] 청양군 지역활성화재단 조직도 및 인력 배치(2020.7.1. 기준)



□ 부여군 사례(재단법인 유형)

- 부여군 지역공동체 활성화재단: 마을만들기+상권활성화+도시재생
- 기존의 상권활성화 재단과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통합하고 추가로 지역공동체지원센터를 신설하여 4센터, 1사무처로 구성됨
- 2020년 10월 30일에 창립총회를 통해 총 19명 규모로 출발함([그림 5-11] 참고)
- 주요 업무영역 : 산하 4대 중간지원조직
 - (1) 지역공동체지원센터 : 지역공동체 일반, 주민자치, 공익활동 등
 - (2) 마을만들기지원센터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역량강화
 - (3) 상권활성화지원센터
 - (4) 도시재생지원센터

[그림 5-9] 부여군 지역공동체 활성화재단 조직도 및 인력배치(2020.10.30.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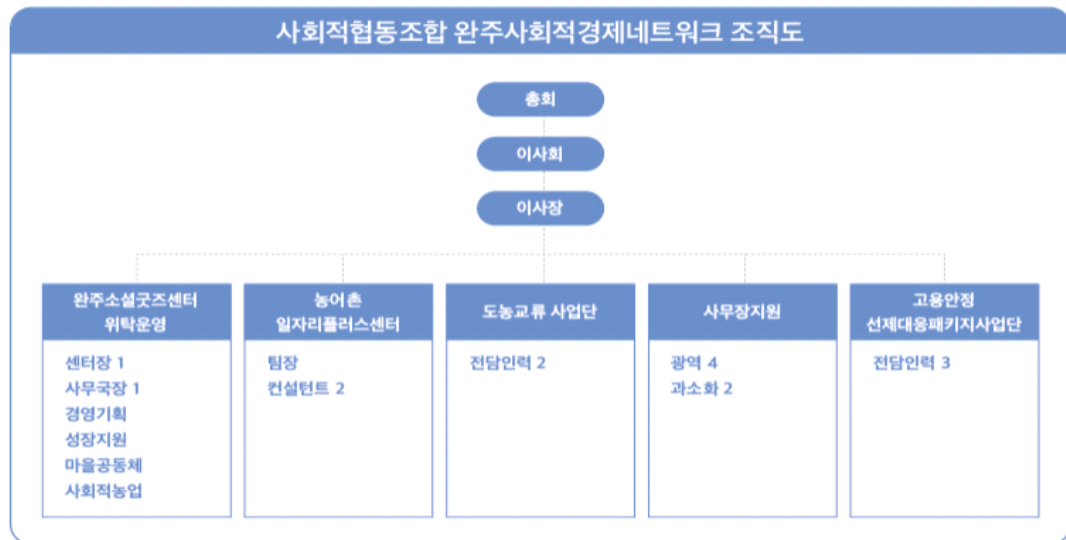
2) 충남 외 지역의 마을만들기 관련 통합형 중간지원조직 설치 사례

□ 완주군 사례(민간위탁 유형)

- 완주소셜굿즈센터 : 마을공동체+도시공동체+청년정책+사회적농업+사회적경제
- 완주군은 2007년 자체 시범사업으로 주민소득 창출과 지역특성을 반영한 ‘파워빌리지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2008년에 ‘약속프로젝트’와 함께 ‘마을공동체회사’ 육성방안을 수립하여 지역경제공동체 육성 전략을 병행함
- 이 후 추진된 파워빌리지, 마을공동체회사, 두레농장, 커뮤니티비즈니스사업 등은 주민주도의 공동체사업 추진과 사회적경제 조직 활성화의 중요한 기반이 되었으며, 2015년에는 아파트공동체까지 영역이 확장되었음
-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완주공동체지원센터’가 주민주도의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모델 만들기를 위해 다양한 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지원해 옴

- 2019년에 ‘완주소셜굿즈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현재 사회적협동조합인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가 수탁받아 농촌마을, 사회적경제, 도시공동체, 청년 등의 정책 영역을 통합하여 운영중임([그림 5-12]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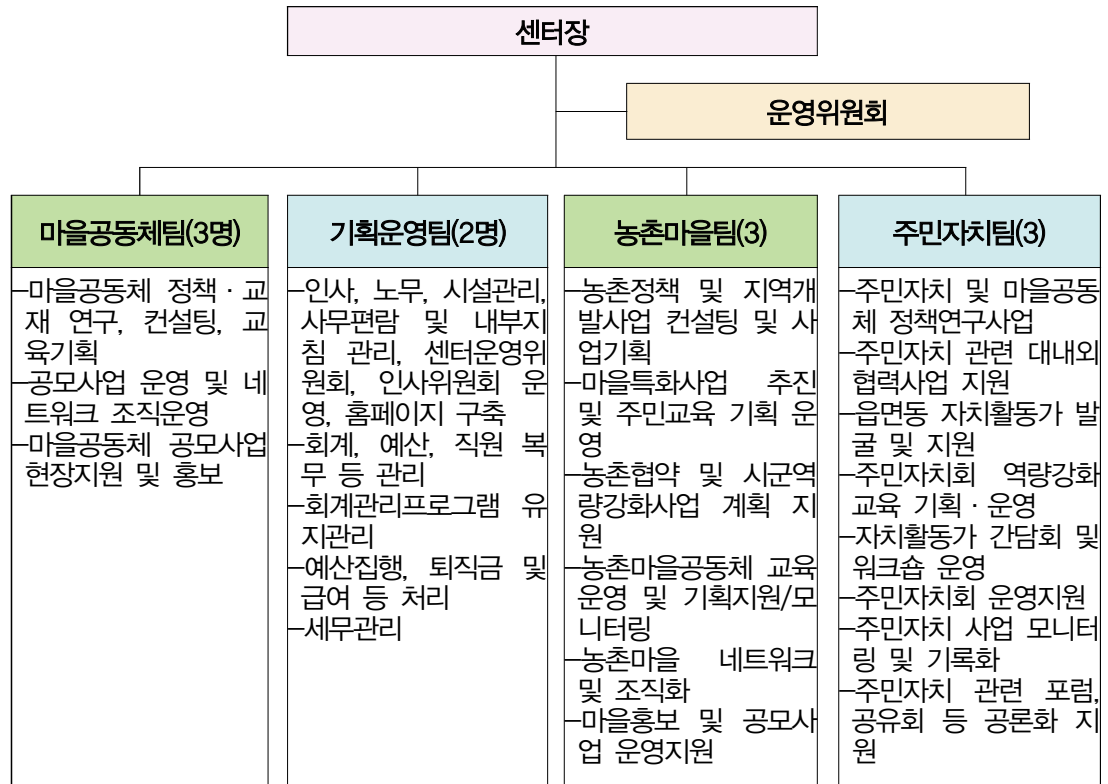
[그림 5-10] 완주군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조직도(2020.11. 기준)



□ 화성시 사례(민간위탁 유형)

- 화성시마을자치센터 : 마을공동체+농촌마을+주민자치의 형태로 구성([그림 5-13] 참고)
- 2012년 ‘화성시 사회적경제조례’ 및 ‘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가 제정되면서 마을만들기와 사회적경제 분야를 통합한 화성시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를 개관함
- 2019년에 마을만들기 분야를 확대하여 주민자치 업무와 통합하고, 사회적경제와 분리하여 화성시마을자치센터를 개관함. 마을만들기 및 주민자치회 지원의 자율성과 독립성, 유연성 확보를 위해 민간위탁으로 운영중임
- 화성시마을자치센터는 마을공동체 일반과 농촌마을, 주민자치회를 총괄하는 통합형 센터로써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을 포함하여 총 12명이 상근함. 이외에도 비상근 마을활동가도 20여 명이 중간지원조직과 협력하며 활동중에 있음(2020년 11월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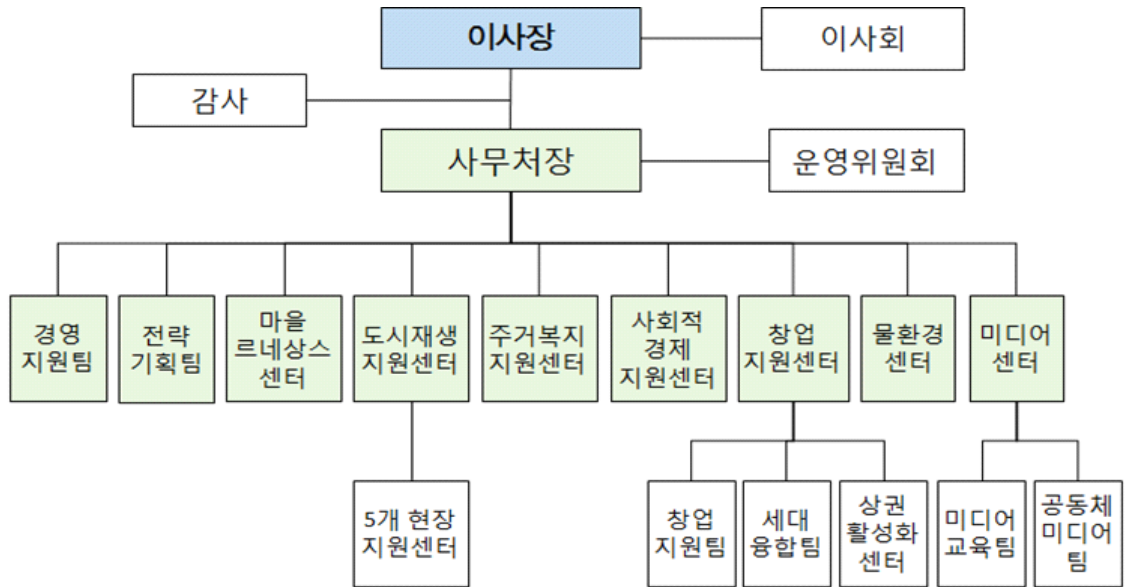
[그림 5-11] 화성시 마을자치센터 조직도 및 업무 분장, 인력 배치((2020.11. 기준)



□ 수원시 사례(재단법인 유형)

-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 마을공동체+도시재생+주거복지+사회적경제 등
-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공공서비스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증가하면서 복합적인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2016년에 도시재단을 설립함. 마을공동체와 도시재생, 주거복지, 사회적경제, 상권활성화를 비롯하여 물환경, 공공미디어 등 지속가능한 도시발전과 관련 된 분야를 통합하여 운영중임. 2개팀, 7개 센터로 총 71명 규모임 ([그림 5-14] 참고)
- 그 중에서 마을공동체 및 마을만들기 분야는 ‘마을르네상스센터’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센터장 1명과 실무진 5명(대리2, 주임1, 코디네이터2)으로 구성되어 있음

[그림 5-12]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조직도((2020.11. 기준)



3. 선진지 사례의 시사점과 당진시의 향후 방향

1) 행정조직 개편 사례의 주요 시사점

□ 유사 업무 사이의 정책 협력 강화

- 과내 팀을 중심으로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업무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타 관련 업무부서로 참여를 점차 확대함으로써 정책실행의 시너지효과 창출

□ 중간지원조직의 통합형 설치

- 재정분권과 융복합을 요구하는 중앙정부의 정책흐름에 맞춰 관련 중간지원 조직의 통합운영에 따른 연계·협력을 통해 효율적인 정책사업 집행 가능
- 복합적인 농촌문제 해결과 다양한 서비스증진을 위한 종합적이고 지속가능한 실행체계구축

2) 향후 3대 기본방향

① 공동의 학습과 합의과정 중시

- 마을만들기와 관련 영역이 서로 연계·협력하는 통합모델 조성을 위해서는 민과 관이 지역사회발전이라는 공동목표를 위해 공동학습과 합의를 모색하는 과정이 중요함
- 특히 행정과 민간의 양 영역에서 ‘칸막이’를 극복하고(차이점을 존중하면서도), 협력할 수 있는 필요성이 상호 공유되고 공감대가 정책적으로 형성되어야 적극적인 논의가 시작될 수 있음
- 마을대학과 같은 형식을 빌려 공동으로 학습하고 합의하는 자리가 지속적으로 마련되어야 함

② 일상적인 소통과 정보 공유를 통한 신뢰관계 구축

- 기본적으로 각 영역별로 이루어지는 각종 활동 상황이 지속적으로 온·오프라인을 통해 객관적인 정보가 공유되어야 함. 또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소통 훈련이 시도되어야 상호 신뢰관계를 구축할 수 있음

- 농촌 마을만들기뿐만 아니라 주민자치, 사회적경제, 새마을 등의 공동체정책 영역과 귀농귀촌, 농촌관광, 6차산업, 푸드플랜 등의 농촌정책 영역, 나아가 도시형 마을만들기(동네자치, 도시재생)와 평생학습, 지역복지 등으로 확장된 연계·협력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일상적인 정보공유와 소통 훈련이 반복되어야 함
- 이런 ‘작고 소소한’ 일상 경험의 축적을 통해 더욱 높은 수준의 네트워크로 발전할 수 있음. 행정직영으로 출발한 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이런 역할을 일상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임

③ 작은 공동행사를 통한 성과 공유의 경험 축적

- 통합모델이 실제로 작동하면서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실질적 사업을 통한 성과 도출’ 경험이 상호 축적되어야 지속될 수 있음. 이 때문에 작은 공동사업이나 행사를 통해 융복합(협업) 활동의 성공사례 경험을 민과 관 모두 경험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매년 초에 공동의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연말에 공동의 성과발표회 혹은 축제 한마당을 개최하는 것도 좋을 것임. 매월 1회 읍면 순회 대화마당을 시도하는 것도 한 방안일 것임

3) 3대 당면과제

- 당진시는 단기적인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민간단체 활동 경험은 많으나, 장기적인 정책 비전을 위한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민간의 활동 역량은 상대적으로 부족함
- 행정직영의 중간지원조직은 아직 행정 사무 대행에 치중되어 현장밀착형 활동에 대한 성과가 미흡하여 주민들의 공감대를 얻기에 여전히 부족함

① 중간지원조직의 통합형 민간위탁을 위한 ‘정책적 신호’ 발신

- 농업농촌분야 업무의 효율적인 연계·협력을 위한 행정조직개편

- 통합형 지원조례 제정
- 민관 거버넌스를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② 당사자 협의체 설립의 강력한 지원

- 마을대학을 통해 학습과 토론의 장 마련(제2, 3회 마을대학 제안)
- 당사자협의체 설립을 위한 준비 모임을 정기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중간지원조직이 사무국 역할을 지원

③ 통합형 네트워크 법인의 설립 지원

- 시급하지만 지역실정에 맞게 단계적으로 접근
- 지속적인 학습과 토론을 통해 자주적인 법인 설립에 대한 논의

제3절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의 민간독립 방향

- 당진시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은 행정직영 상태로 운영중인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민간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상근자 규모를 늘리거나 예산집행의 유연성을 확대하고, 민간 주도성을 확보하는 등의 측면에서 매우 필요함
- 또 중간지원조직의 향후 경로는 신활력플러스와 농촌협약 공모일정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밖에 없고, 또 중간지원조직의 통합형 설치 논의 자체가 공모사업 선정에 매우 유리하다는 점을 충분히 숙지하고 접근함

1.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의 3단계 발전 전략과 향후 일정 제언

1) 당진시의 선택 방향 : 3단계 구분 접근

- 중간지원조직은 어느 설치형태나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에 지역주민 관점에서 단계별로 적절한 방식을 찾아 선택해야 할 것임
 - 당진시 공동체새마을과의 중간지원조직은 모두 행정직영 상태에 있고, 향후 민간위탁 혹은 재단법인, 둘 중에서 대안을 선택하여 향후 경로를 설계해야 함
- 2021년 상반기에 마을대학을 통해 공동학습을 강화하고 그 성과를 반영하여 우선순위를 선택하기를 제안함
 - 지역사회 공동학습을 전제로 어느 유형이나 장단점이 있기에 민관의 합의 수준과 지역 역량에 따라 결정됨
 - 민간위탁은 법인의 높은 전문성과 지역사회 대표성 등이 확보되어야 함
 - 재단법인은 시의회 동의를 기본으로 지역사회의 높은 합의 수준이 필요함
 - 2021년 6월까지 민관의 공동학습 결과를 반영하여 운영 법인 유형 선택
- 중간지원조직 설치의 4대 유형과 설치유형별 장단점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3단계로 나누어 중간지원조직 설치 및 운영방안을 제시함

□ 1단계(행정직영) : 행정직영 센터의 설치, 운영 경험 축적(~2021.12.)

- 행정직영 상태에서 다양한 경험을 축적하고, 특히 행정과의 신뢰관계 구축과 행정 절차에 대한 이해 등이 반드시 필요함
- 설치 초기부터 마을대학 등의 공동학습 기회를 충분히 확보하여 지역사회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향후 경로를 결정함
- 통합형의 중간지원조직으로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여기에는 민간위탁 혹은 재단법인 설립의 두 가지 방향이 있음
- 정책 영역 통합의 범위는 행정조직의 업무 분장과 핵심적으로 연계되어 있음
- 행정직영으로 운영되는 기간은 2021년말까지를 기본전제로 역순으로 논의해야 합의과정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음

□ 2단계(민간위탁) : 2022년부터 민간위탁으로 전환(2022.1.~2023.12.)

- 1안(지역내 법인 설립) : 원론적으로 지역내 네트워크 법인 설립을 우선하여 검토함. 2021년 6월까지 집중적인 토론과 합의과정을 거쳐 11월까지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면 2022년부터 직접 민간위탁이 가능함
- 2안(지역외 법인 발굴) : 지역내 네트워크 법인 설립에 대한 합의가 쉽지 않고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된다면 당진시 외부에서 수탁가능한 법인을 찾아볼 수 있음. 늦어도 9월까지 판단을 해야 2022년 민간위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3단계(안정화) : 통합형 중간지원조직의 안정화와 재단법인 전환 검토

- 현재의 민간위탁 제도가 가진 한계를 고려한다면 재단법인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함. ‘재단법인 설립 타당성 분석 연구용역’ 성과를 반영하여 재단법인 설립도 적극 검토함. 재단법인 설립에 대해서는 단체장의 의지, 행정과 의회, 지역사회 등의 충분한 합의가 핵심적인 판단사항임
- 2022년 본예산 혹은 1차 추경으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행정 절차를 서두르면 2023년 12월까지 재단법인 설립이 가능할 것임

2) 2021년 일정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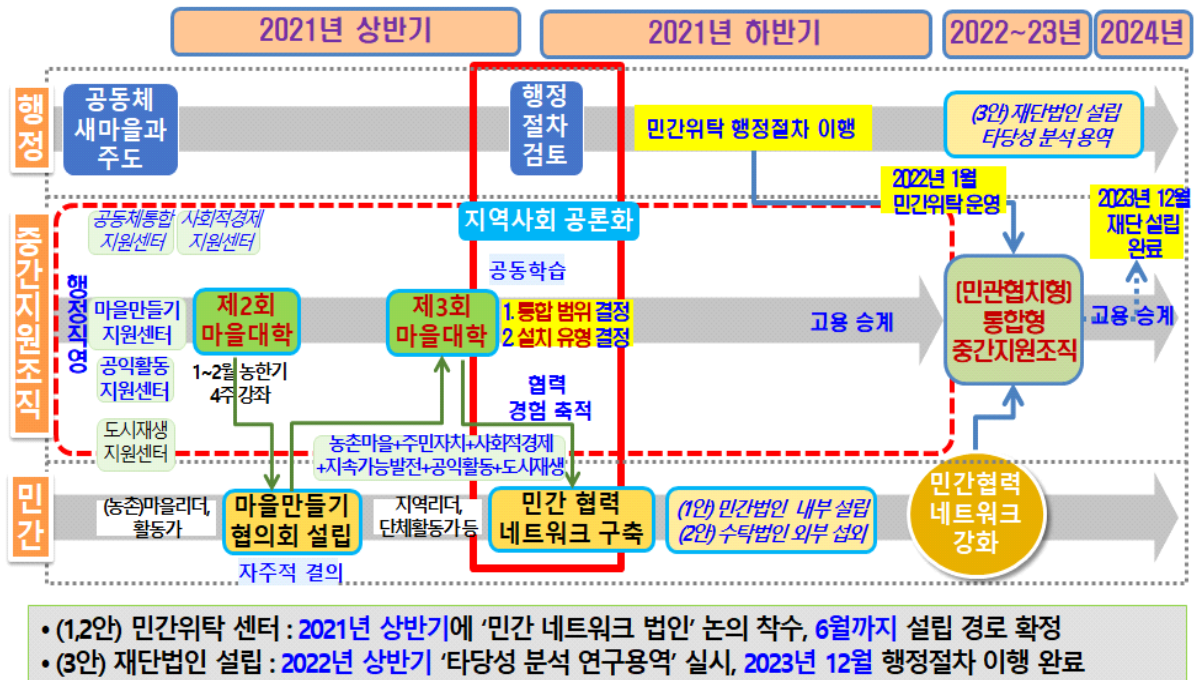
□ 2021년 상반기 기본 일정 제안

- 2021년 5월의 신활력플러스 및 농촌협약 공모사업 신청을 염두에 두고 상반기에 최대한 일정을 집중하여 추진함
 -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될 것을 염두에 두고 소인수의 집중적인 토론 방식을 통해 성과를 도출함
- 2021년 1~2월에 제2회 마을대학을 통해 당사자 협의체로서 마을만들기 협의회 설립을 우선 추진함. 그 이후에 제3회 마을대학 형식으로 당진시 중간지원조직 관련 민간단체들이 모여 행정과 함께 향후 경로에 대한 공동학습을 강화하고 기본방향에 대해 합의를 도출함
 - 당진시 공동체정책의 중장기 방향에 대해 지역사회 공감대를 확보하는 과정에 해당함
- 2021년 6월까지 민간위탁 방식에 대해 아래의 민간단체들이 모여 1안과 2안 중에서 경로를 결정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함. 3안도 동시에 검토하되 행정절차 측면에서 상당 시간이 걸리기에 1안과 2안 다음 단계로 접근함
- **관련 민간단체(통합범위) 우선순위 :**
 - 1단계 주도(공동체새마을과 소관) : 마을만들기협의회(마을만들기지원센터), 주민자치회연합회(주민자치지원단), 사회적경제네트워크(사회적경제지원센터)
 - 2단계 검토(지속가능담당관실 소관) : 시민사회단체협의회(공익활동지원센터, 공동체통합지원센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 기타 검토 대상 : 도시재생지원센터, 청년센터 등
- **민간운영의 유형 선택 :**
 - 민간위탁 1안 : 지역내 수탁법인 설립(지역내 충분한 합의 전제)
 - 민간위탁 2안 : 지역외로 수탁법인 개방(지역내 합의가 늦어질 경우)
 - 3안 : 재단법인 설립(100% 행정출연이 아니라 민관 공동출연 중시)

□ 2021년 하반기 이후 기본 일정 제안

- 민간위탁 절차 이행 : 2021년 상반기에 통합형 조례 제정을 적극 검토하고, 2021년 6월 이후에 민간위탁의 행정절차를 이행함
- 위탁기간 : 2년
 - 1안 선택 시, ‘2년’으로 하되 재단법인 설립 논의결과에 따라 2023년 연도 중간에 협약을 변경할 수 있음을 명시함
 - 2안 선택 시, 지역 내 수탁법인 설립 지원을 의무사항으로 명시함
- 재단법인 설립 필요성도 동시 검토 : 제3회 마을대학에서 집중 검토
 - 2021년 3회 마을대학을 통해 재단법인 설립에 대한 필요성이 확인되면 ‘재단법인 설립 타당성 분석 연구용역’ 사업을 2022년 본예산 혹은 1차 추경예산에 반영하고, 2022년 상반기부터 검토를 계속함
 - 연구용역을 통해 재단법인 설립이 결정되면 2023년 12월까지 모든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고(지역사회 합의 정도에 따라 시기를 당길 수도 있음), 중간지원조직 상근자의 고용승계를 통해 재단법인으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함

[그림 5-13] 당진시 중간지원조직의 통합형 설치와 민간독립 추진 일정



□ 유의사항

- 행정과 지원센터, 민간의 당사자협의체, 시의회 등이 모여 정책토론을 통해 향후 일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해나감
- 합의정도 수준에 따라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민관협치의 정책 시스템 구축도 가능함
- 민간위탁형과 재단법인형, 두 경우 모두 장단점이 있고, 지역상황을 반영하여 단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공동학습과 합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중요함

2. 2021년 12월 민간위탁 과정의 유의사항 : 민관협치 관점의 중시

1) 기본방향과 유의사항

□ 지역 공감대의 충분한 형성

-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수탁을 희망하는 민간 기관이 많은 경우 또는 대표성 및 역량이 의심되는 기관이 수탁을 희망하는 경우 갈등이 충분히 예상됨
 - 반대로 지역사회에 수탁기관이 없다고 판단하여 지역제한을 없애는 경우에도 사업취지에 비추어 부적절할 수 있으므로 이 또한 갈등이 예상됨
 - 당진시의 추진상황을 볼 때 2021년에 민간위탁의 필요성과 방법 등에 대해 지역사회의 공감대를 사전에 충분히 형성해야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마을만들기지원센터도 고유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음
- **공청회 개최** : 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성격과 역할 등에 대해 지역사회의 동의 절차를 충분히 이행하고, 마을 주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유도함(특히 의회 역할 존중)
- 위탁공고와 병행하여 **사업 설명회 개최** : 사업 취지와 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이행할 뿐만 아니라 이후에 제기될 수 있는 갈등을 사전에 예방함

□ 수탁기관의 자격 요건 등 유의사항

- 자격요건 : 지역 제한, 활동 분야 제한, 비영리성 강조 필요
 - “당진시에 소재지를 두고” 혹은 “충남도에 소재지를 두고”,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로 국한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다만 통합형 중간지원조직 형태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국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도 검토함
 -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선정될 경우에는 ‘학교 밖 활동’ 이 쉽지 않고, 지역사회단체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어렵다는 문제점도 고려해야 함
- 지역 내 신설 법인의 불리함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함

2) 행정안전부 ‘협치형 민간위탁 활성화 가이드라인’ 적극 도입

- 행정안전부는 2018년 3월부터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했던 시민사회의 요청을 받아들여 “협치형 민간위탁 활성화 가이드라인” (2020.9.)을 제정하고 시군 담당 공무원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함
- 민간위탁 업무는 2008년 이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 자치사무에 해당하고 중앙정부가 민간위탁 제도 전반을 규율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 행정안전부의 기본적인 입장이었음
- 반면에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위탁 관련 조례의 제·개정 시에 행정안전부의 지침이 없다는 이유로 미온적인 입장을 보임
- 이런 상황을 반영하여 행정안전부가 지방행정연구원 연구용역 “협치형 민간위탁 활성화 방안 마련 연구(2020.7.)” 수행과 가이드라인 제정 TF 구성(BH, 행안부, 시민사회)과 논의 과정을 거쳐 ‘권고’ 수준이지만 표준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게 된 것임
- 이를 통해 기존의 중간지원조직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제도적으로 불합리한 점이 상당히 개선됨. 당진시도 민간위탁 과정에서 이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음. 이하에서는 앞에서 소개한 내용은 제외하고 간략하게 정리함

□ 가이드라인 제정 목적 : 협치형 민간위탁 활성화

-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중간지원조직을 협치형 민간위탁 대상으로 규정하고, 가이드라인 제정 목적을 “수탁기관의 자율성 확대를 통해 수탁사무의 수행성과를 제고하여 지방행정의 효율성, 시민사회 역량 및 주민 서비스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 임을 밝힘
- 가이드라인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과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및 지방자치단체 내부규정 등에 근거한 민간위탁 관리·운영 기준 및 절차 등을 최대한 준수하되, “협치형 민간위탁 활성화를 위해 최소한의 규정 정비 및 운영방식 개선”을 제안함
- 2020년 정부혁신과제로 선정 : 시민사회 협력 제도 자율성 확대 중 ‘협치형 민간위탁 활성화 및 성과 제고’

□ 가이드라인 적용방향 : 권고하는 형식

- 지자체는 행정여건 등에 따라 선별적으로 적용하거나 확대 적용 가능함.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책임을 부인하는 취지로 해석하거나 활용해서는 안됨. 또 가이드라인은 민간위탁 업무추진 절차(단계)별로 필요사항을 안내하고 ‘권고’ 하는 형식임
- 가이드라인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관리하는 민간위탁사무에 한하여 적용함. 개별 법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조례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선정기준·위탁기간·평가기준 및 방식 등에 있어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간위탁 기본조례 및 동 가이드라인을 적용함(상위법 및 특별규정 우선의 원칙)

□ 협치형 민간위탁 사무의 선정 : 사회적 가치 구현이 핵심 기준

- 협치형 민간위탁 사무란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해 수탁기관과 협업하여 다양한 관련 민간주체들을 지원하고 이해관계자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하는 사무”를 말함
- 이 판단 기준에 따라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도시재생, 공익활동, 협동조합 등을 협치형 민간위탁의 대상이 되는 중간지원조직 영역으로 예시함. 대신에 노인복지관, 청소년센터 등은 대상이 아님을 밝힘
- 가장 큰 기준이 되는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는 “사회·경제·환경·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라고 개념을 정의하고, “헌법적 가치로서 사회권을 실질화하기 위한 가치이며, 경제적·환경적·문화적 가치를 포괄하는 상위 가치”로 해석함
- 또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 중 사회의 재생과 건전한 발전을 위한 가치로서 인권, 노동권, 안전, 사회적 약자 배려,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의 실현 등 공동체와 사회 전체에 편익을 제공하는 가치”라고 설명함

□ 협치형 민간위탁 사무의 사전 적정성 검토

- 조례에 명시된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 검토 기준은 물론이고 아래 박스

의 협치형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적정성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협치형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사전 적정성 검토 기준>

1. 사무의 주된 기능이 주민에게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것이 아닌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주체(주민 모임 포함)들을 대상으로 필요한 정보와 인적·물적 자원을 연결하는 등 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를 지원 하는 것에 있는지
2. 자치단체가 수탁기관을 통하여 다양한 민간주체들과 협업하고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사무인지

□ 민간위탁 기간 : 5년을 최대한 보장할 것을 권장

- 통상 민간위탁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탁기간(5년 이내)에 따르되, 상위 법령에서 달리하는 경우에는 상위법 우선의 원칙을 적용함
- 수탁사무 중에 공유재산을 포함하는 경우, 관리위탁 기간은 수탁기관의 안정적 사업수행을 위하여 공유재산관리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위탁기간(5년)”을 최대한 보장할 것을 권장함

□ 수탁기관 선정 방법 : 수의계약 형태로 선정 가능

- 통상 민간위탁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수의협약 형태로 수탁기관 선정 가능
- 공유재산을 포함하는 위탁은 개별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 외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를 적용
- 일반적인 사무위탁은 개별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 외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를 차용하여 적용

□ 예산 편성과 위탁수수료 권장 : 기준은 지자체가 자체 판단

- 민간위탁예산은 원칙적으로 민간위탁금(307-05)으로 편성·운영하고, 민간경상보조나 사회단체보조금, 출연금 등과 구분함
- 협치형 민간위탁의 경우에는 수탁기관에게 적정 위탁수수료(일반관리비)

를 민간위탁 예산에 포함하여 운영할 것을 권장함

<적정 위탁 수수료 및 일반관리비 포함하여 예산 편성한 사례>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17호(17. 기타용역 : 100분의 6)를 차용하여 중간지원 조직형 수탁기관의 사업비에 일반관리비 6% 산정(○○시)
- 자치공동체 지원센터 수탁사업비에 일반관리비를 사업비의 5% 산정·반영(○○시)

□ 수탁기관 선정 기준 : 사회적 가치 실현, 고용 승계 중시

- 민간위탁 일반사항(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 외에 사회적 가치 실현 여부에 가산점 부여, 고용승계 등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 등을 포함하여 평가함
- 사회적 가치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기관 우선 고려(선정시 가산점 부여)
- 고용승계 및 유지, 합리적 임금체계 및 지급수준, 취약계층 채용, 노동관계법령 준수,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등 고려(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노동 조건)
 -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고용부 공공기관노사관계과 -2666(' 19.12.5.)호 및 2709(12.12.)호) 참조
 - 서울시는 수탁기관 선정 과정에서 고용유지 및 승계의무(80%)를 명시

□ 위수탁 협약 체결 : 상호 협의 중시

- 협약서 일반사항 외에 노동자 고용 및 고용조건 개선에 관한 사항,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권장함
- 협치형 민간위탁은 위탁기관(사업부서)과 수탁기관의 충분한 상호협의(7~10일)를 통해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변경 역시 상호협의하에 변경할 것을 권장함(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과 관련한 충분한 협상기한 부여 등)
- 위탁하는 공유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경우에 대규모 수리 및 보수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리비용을 수탁기관에 부담시키는 일부 사례가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왔음. 공유재산관리법 제20조(수탁재산의 관리)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할 것을 의무 준수사항으로 명시함

□ 수탁기관의 회계처리 : 수탁기관의 자율성 중시

- 지방회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처리에 대해 규정하는 법령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수탁기관의 회계처리에 이 기준 및 절차를 적용하는 것은 올바른 준용방식이라고 볼 수 없음을 명확히 명시하고 있음
- 민간위탁 추진에 있어 수탁기관의 회계처리 기준으로 “지방회계법령의 기준 및 절차를 가져다 쓰는 것은 일반적으로 민간위탁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 되지만, 이 경우에도 “포괄적·일반적(예 : 지방회계법을 준용한다.)으로 규정할 수 없고, 해당 조항을 특정하거나 명시하는 방식으로 준용” 하여야 함을 명시함
- 수탁기관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협치방식으로 행정을 수행하는 협치형 민간위탁의 역할을 고려할 때, 수탁기관의 회계처리기준으로 지방회계법령의 기준 및 절차를 과도하게 반영하지 않도록 권고함

□ 3자 재위탁 금지를 완화하는 전대(轉貸) 개념 안내

- 민간위탁 일반사항은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다시 위탁(제3자 재위탁)하는 것을 금지” 하고 있음
-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공유재산법의 전대(轉貸)라는 유사 개념을 안내함으로써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있는 길을 소개함
 - 전대(轉貸) :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수탁기관)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있음
 - 이를 통해 수탁받은 행정재산을 활용하여 공유카페 등에 사회적경제조직이 입주하여 활동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예산 운영의 자율성 확대

- 행정의 개입이 아닌 수탁기관의 책임 하에 이해관계자(행정, 지원대상, 파트너기관 등)들의 참여하에 주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함
- 현재 민간위탁 예산은 계획수립이나 전용 등이 제한되고 있으나, 현실적인 여건 변경으로 변경 또는 전용이 필요한 경우 수탁기관에 일정한 자율성을 부여함. 또 수탁기관의 조직 및 프로그램 관리 등 경영자율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관련 사항을 협약서에 명문화할 수 있도록 함

□ 성과 평가 : 평가지표 개발과 적용 권장

- 성과 평가 기준으로 민간위탁 일반사항 외에 협치형 민간위탁은 그 성격의 차이로 인해 다음 [표 5-3]과 같은 평가지표 개발과 적용을 권장함

[표 5-3] 협치형 민간위탁의 성과 평가지표 예시(추가사항)

평가 범주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 방법
협치형 민간위탁 사업성과	거버넌스 구축도	▶ 다양한 이해관계자 그룹 구축도 ▶ 민민 중재자 역할 기여도 ▶ 민관 조정자 역할 건수(기여도)	정성/ 정량
	민간주체에 대한 지원 노력도	▶ 지원프로그램의 민간주체 참여도(수) 및 만족도 ▶ 지원프로그램 수 ▶ 지원 대상 민간주체 증가율 ▶ 자발적 시민참여확대 노력도 ▶ 네트워크를 통한 협력사업 집행노력도	정성/ 정량
	사회문제 해결도	▶ 지역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을 위한 사회공헌도 ▶ 사업추진과정 중 모니터링 활동으로 현안과제 도출 건수 및 해결도	정성/ 정량

자료 : 행정안전부, 2020.9., “협치형 민간위탁 활성화 가이드라인”, 33쪽

- 협치형 민간위탁의 수탁기관은 주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는,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주체(주민 모임 포함)들을 대상으로 필요한 정보와 인적·물적 자원을 연결하는 등 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를 지원하는 역할이 중요하므로 ① 거버넌스 구축도, ② 민간주체에 대한 지원 노력도, ③ 사회문제 해결도 등을 가중해서 평가하는 별도 지표를 개발·활용할 것을 제안함

□ 기타 사항

- 본 가이드라인의 행정사항으로 자치단체마다 ‘자치법규-내부 지침-협약서’의 규정사항이 상이함을 지적하고, 자치법규 개정 없이 정비할 수 있는 내부 지침 및 협약서 규정사항은 우선 정비할 것을 요구함
- 행정안전부는 2021년 지방혁신평가에 협치형 민간위탁 도입기반 마련, 우수사례 추진 등이 평가에 포함될 수 있도록 2020년 하반기에 협의하여 추진하겠다는 일정을 제시함
- 본 가이드라인에는 이외에도 민간위탁 조례 개정안(예시)을 제시하고(26~31쪽), 또 위수탁 협약서 표준안도 제시함(34~41쪽)

제6장.

종합평가와 당진형 마을만들기 독자사업 제안

제1절 종합평가와 향후 방향 및 당면과제¹²⁾

1. 당진시 ‘마을만들기 지원 시스템 구축’의 성과와 향후 방향

□ 2020년 추진성과와 현재 진단

• 행정의 조직개편과 업무 조정, 칸막이 극복

- 당진시는 2020년 1월에 조직개편을 통해 공동체새마을과를 신설하여 농촌 마을만들기와 주민자치, 사회적경제, 새마을 등의 업무가 하나의 ‘과’ 아래에서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함
- 이를 통해 건설교통과 기반조성팀에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과 각종 기반정비사업을 동시에 진행해야 했던 한계를 극복하게 됨. 또 행정이 스스로 모범을 보임으로써 마을 주민들과 단체 활동가들에게 민관협치의 관점에서 ‘민간의 역할’을 요구할 수 있는 정당성을 확보함
- 당진시는 1년간의 공동체새마을과 운영 경험을 활용하여 관·관 협력과 업무 융복합(특히 4개 팀 사이) 실험을 확대하고 향후 확산될 자치분권과 농촌협약 등의 정책 동향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됨

• 행정직영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의 설치와 운영

- 당진시의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은 2020년 4월부터 행정직영의 사무국장 1인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여 우선 발족하고, 이후에 2인을 추가 채용하여 상근자 3인 시스템으로 농촌 마을 현장 가까이에서 마을공동체 활동을 지원해오고 있음
- 행정직영의 작은 조직이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농촌현장포럼, 시군역량강화사업, 마을조사단, 중심지활성화 등 관련 행정 사업에 결합하여 다양한 경험을 축적해오고 있음. 또 마을만들기 당사자 협의체 설립을 지원하면서 민관협치의 정책 시스템을 구축하는 매개자 역할도 수행함

12) 이하 6장의 구성과 많은 내용은 서산시의 2020년 보고서에서 기본 형식을 빌려와 당진시 실정에 맞추어 제안하는 것임. 당진시나 이웃 서산시나 제도적 환경(행정조직, 중간지원조직, 민간단체 등)이나 지역 여건 측면에서 유사한 점이 많고 당면과제도 공동대응해야 할 측면이 많기 때문임

- 또 사무실을 행정 밖에 설치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타 중간지원조직과도 교류를 시작하면서 민-민 네트워크 활동에도 관여하기 시작함

• 행정리 단위 마을만들기 경험의 축적과 체계화

- 당진시는 2020년에 행정조직 개편(공동체새마을과)과 중간지원조직 설치(행정직영)가 이루어졌으나 충남에서는 상대적으로 늦게 출발하여 ‘주민 주도, 상향식’ 마을만들기 활동이 미흡한 상태임
- 하지만 그동안 축적된 주민자치회 성과와 연계하면서 사회적경제 및 새마을과도 협력할 수 있는 기회가 확장됨. 기존에 점(点)적인 활동에서 마을대학 개최, 공모사업 공개심사, 독자사업 도입 등을 통해 더디지만 마을과 마을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상호협력과 경쟁 구도도 도입함. 늦게 시작하였지만 행정의 모범과 강력한 리더십을 통해 신규 마을의 발굴과 성장과정 지원, 사후관리 등이 체계를 갖추기 시작함
- 농촌 마을리더들도 행정의 우호적인 정책환경을 통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회복하고, 타 시군과의 경쟁의식도 발휘하며 마을대학과 공모사업 등에 적극 참여하고, 마을만들기협의회 설립준비위원회도 활동중임

□ 기본방향1 : 행정리 마을자치와 읍면동 주민자치와의 협력체계 구축

• 기본인식 : 대면적 정책 결정이 어려운 ‘기초자치단체 규모 문제’ 극복

- 우리나라는 기초자치단체의 규모(면적, 인구)가 유럽이나 미국, 일본에 비해 매우 크고, 이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는 직접민주주의 실현이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인식할 필요가 있음
- 당진시는 마을 주민들의 실질적인 생활권인 읍면 단위로 직접민주주의를 실천하고 마을만들기의 민간 주도성을 강화하며, 관련 정책의 융복합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함

• 읍면동 주민자치회 전환과 적극 연계하여 행정리 마을자치 강화

- 당진시는 읍면 주민자치회 주도로 ① ‘읍면 발전계획’ 수립과 ② ‘주민총회’ 의결, ③ ‘주민참여예산제’ 활용 등의 경험을 선도적으로 추진해옴. 중앙정부 정책 동향에 강력하게 결합하여 제도 개선과 선진적 실험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함

- 이 과정에서 ① 행정리 마을에서 주민 스스로 상부상조를 통해 자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 ② 마을이 서로 협력하여 읍면 단위에서 주민자치회를 통해 해결해야 할 일, ③ 행정의 지원을 통해 공공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 등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접근함. 특히 읍면동마다 주민자치회 상근 기능을 강화하고, 마을공동체분과를 설치하여 행정리와 소통을 강화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함

• 중장기 방향 : 민관협치, 읍면 주민자치, 행정리 마을자치의 구분과 조화

- 한국 지방자치 현실을 반영하여 당진시 차원에서 ‘민관협치의 정책 시스템 구축’을 우선하여 출발하고, 읍면 주민자치회 성과를 축적하면서 행정리 마을자치회로 지속적으로 확장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함([그림 6-1] 참고)

[그림 6-1] 지자체 민관협치와 읍면 주민자치, 행정리 마을자치의 개념적 구분



- 행정리 단위의 마을만들기 활동도 주민조직 정비와 자치규약 제정, 재산관리, 회의 및 기록관리 등 마을자치 시스템 구축을 강력하게 유도하고 읍면 주민자치회 활동과 상호작용을 통해 발전하는 전략을 모색함
- 당진시는 공약사업으로 당진형 주민자치의 최종단계(3단계)에 해당하는 “마을자치 활성화 사업”을 추진중에 있음. 관내 282개 마을회 전체를 대

상으로(동 지역 포함) 마을총회의 기능을 개선하여 마을사업 발굴 방법을 교육하고, 마을공동체활성화와 주민 갈등 해소 등의 사업비를 지원함(2021년 총 사업비 846백만원, 전액 시비)

- 향후 농촌지역도 행정리 단위 마을자치의 역량이 성숙되면서 ‘주민 주도, 상향식의 마을만들기’가 실현되고 읍면 단위 주민자치회 활동과 연계하고, 당진시 전체의 민관협치 정책 시스템에 당사자로서 적극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함
- 당진시에게 신활력플러스와 농촌협약 등의 정책사업은 이런 과정에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지렛대에 해당함. 2021년부터 전략적인 접근을 통해 행정과 민간이 협력하는 정책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야 할 것임

□ 기본방향2: 마을 주민 당사자의 등장과 조직화 지원

• 기본인식 : ‘스스로 말하게 하라’는 당사자 운동성 중시

- 마을만들기는 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이 주인공이 되어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전면에 나서는 생활운동이고, 풀뿌리 주민자치운동으로서 등장함
- ‘주민 주도’의 마을만들기가 전제가 되고 존중되어야 행정과의 역할분담도, ‘대등한 협력관계’도 가능함. 특히 마을과 마을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면서 공통의 과제를 인식하고 연대와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가능함. 주민들의 자치역량이 성장하고 공동학습을 통해 합리적인 의견을 제안하기 시작할 때 행정은 ‘행정의 역할’에 충실해질 수 있음. 일반 주민의 ‘민원’과 마을만들기 주민조직의 ‘정책 제안’을 구분하여 판단해야 함

• 마을만들기(위원장)협의회 설립과 역량 강화

- 마을과 마을이 협력하여 농촌 마을이 안고 있는 공통의 과제들을 공동으로 해결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전략 차원에서 마을만들기협의회 설립과 운영은 매우 중요함. 2020년 12월 현재, 충남에는 10개 시군에서 마을만들기협의회가 구성되어 활동 중이고 2020년 10월 15일에는 1년간의 실무준비 과정을 거쳐 충남마을만들기협의회도 설립함(약 400여 개 마을 참여)

- 당진시도 2020년 10월부터 마을만들기협의회 설립 준비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중이고, 2021년 1~2월중에 개최되는 마을대학을 거쳐 창립총회를 준비중에 있음. 준비위원회 내부 회의를 통해 협의회에 참가하는 마을의 자격 요건과 권리와 의무, 주요 사업 등에 대해 1차 토론을 마친 상태이고, 마을 대학 프로그램을 통해 당진시 실정에 맞는 정관이 확정될 것임

• **중장기 방향 : 농촌 마을만들기 관련 민간단체 협력 네트워크 구축**

- 농촌 마을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업정책과 농촌관광, 6차산업, 귀농귀촌, 푸드플랜 등의 정책과도 협력해야 하고, 또 주민자치와 사회적경제, 도시재생, 마을교육공동체, 청년정책 등과의 협력도 필요함
- 각 정책 영역마다 당사자협의체가 구성되고 서로 협력하는 네트워크 조직이 설립될 때 민간 주도성이 강화되고, 칸막이를 넘어 설립목적 실현도 가능하며, 행정과의 대등한 협력관계도 구축 가능함. 또 네트워크 조직이 비영리법인(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으로 발전될 때 통합형 중간지원조직의 수탁자 자격이 주어지고, 민관협치(거버넌스)의 정책 시스템이 제도적으로 구축되며, 연차적으로 경험 축적을 통해 실질적인 정책 융복합도 가능함

□ **기본방향3: 중간지원조직의 통합형 설치와 민간독립**

• **기본인식 : ‘광역은 전문화, 기초는 통합화’ 원칙으로 추진**

- 중간지원조직 자체는 예산 측면에서 상근자 규모를 확대하기 어려워 규모화에 한계가 존재함. 이에 광역자치단체는 전문화를 추진하되, 정책 칸막이를 넘어 협업을 제도적으로 모색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함
- 시군 차원에서는 통합형 설치를 원칙으로 추진하고, 통합할 정책 범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정책동향과 당진시의 특수성(시정방향, 행정조직, 민간역량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함
- 당진시는 공동체 관점에서 공동체새마을과 소관의 업무 분야 중심으로 중간지원조직의 통합형 설치를 기본적으로 추진해야 함. 여기에 지속가능담당관실 소관의 지속협과 공익활동지원센터와 강력하게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함. 또 통합형 운영 경험을 축적하면서 농촌협약과 연계하여 농촌 마을만들기와 각종 농업농촌정책을 융복합할 수 있도록 방향으로 통합 방향도 검토해야 할 것임

- **통합형 중간지원조직의 민간위탁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3대 조건 중시**
 - ① **행정의 조직개편과 업무 조정** : 통합을 희망하는 중간지원조직 담당 부서를 하나의 ‘과’로 통합하고, 통합형 기본조례 제정이 필요함. 현재의 공동체 영역 이외도 이런 전제 하에 조직개편을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함
 - ② **당사자협의체 설립과 역량 강화** : 통합할 정책 영역마다의 민간 당사자 협의체가 구성되고 역량이 강화되어 당사자의 목소리가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정책 환경 조성이 필요함
 - ③ **민간 네트워크 구축과 법인 설립** : 민간의 당사자 협의체들이 협력하는 네트워크 법인이 설립되고 의사결정과정의 대표성을 확보해야 함. 재단법인의 경우에도 기본재산 형성과 이사회 구성 등에서 민간의 조직적 대표성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민관협치 기능이 작동될 수 있음
 - 당진시는 위에서 ①은 기본적으로 1차 정비된 상태이고, ②가 추진중에 있음. ③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2021년중에 지속적으로 토론해야 하는 상황임. 타 지역 사례를 참고하면서 민간의 네트워크 법인 설립과 자치역량 강화가 지속적으로 모색되어야 통합형 중간지원조직의 민간위탁이 가능해짐
- **중장기 방향 : 최소 2년의 민간위탁 경험을 축적하고 다음 단계 검토**
 - 2021년 1년간은 행정직영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서 경험을 더욱 축적하고, 민간위탁의 전제조건이 되는 당사자협의체 설립과 민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독립과정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함
 - 원칙적으로 2022년 1월 민간위탁을 염두에 두고 역순으로 일정을 검토함. 이를 위해 2021년 6월까지의 민간위탁의 기본방향(위탁시기, 수탁자 선정 방법, 지역법인 설립 가능성 등)에 대해 행정과 민간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을 추진함. 이 과정에서 지속가능담당관실의 공익활동지원센터와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 1차 검토가 필요함
 - 핵심은 수탁법인의 선정방법에 있고, (1) 역량은 부족하지만 지역내 법인 설립을 서두를 것인지, 아니면 (2) 외부 수탁기관을 찾는 방향으로 갈 것인지 결정하는 것임. 두 방법 모두 장단점이 있으므로 당진시 내부 역량 진단과 향후 경로에 대해 충분한 합의 과정을 거쳐 선택해야 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음

- 중장기적으로는 지자체 출연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계속 검토해야 함. 설립 필요성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가 이루어지면 2022년 본예산에 ‘재단법인 설립 타당성 분석 연구용역’ 예산을 상정하고, 약 2년에 걸쳐 연구용역과 행정절차를 거쳐 2023년 하반기에는 재단법인 설립이 완료될 수 있을 것임

2. 당진시 농촌 마을만들기의 2021년 당면 과제

□ 농촌마을정책의 민관협치형 시스템 구축과 강화

- **기본인식 : 자치분권과 농촌협약 등의 정책동향에 선제적으로 대응**
 - 당진시는 충남의 타 지자체에 비해 마을만들기가 가장 늦게 출발하였지만, 주민자치회 운영 측면에서는 선행 경험이 축적되어 있음.
 - 중앙정부의 정책동향(특히 농촌정책)은 지자체에 대해 지속적으로 ‘민관협치의 정책 시스템 구축’을 강조하고 있음(자치분권종합계획, 농특위 결의안건, 신활력플러스 및 농촌협약 사업지침 등) 이런 정책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구축해야 민간 주도성도 확보되고, 중대규모 국비 공모사업 선정에 유리한 지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임
- **행정지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 : 업무연찬 강화(특히 공동체새마을과)**
 - 정책의 칸막이를 넘어 업무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행정지원협의회를 제도적으로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임. 각종 중대규모 공모사업의 전제조건에도 해당하므로 2021년에는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마을만들기 조례’에 규정된 행정지원협의회를 본격적으로 운영함. 또 공동체새마을과의 4개 팀부터 업무연찬을 통해 업무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융복합 방향을 모색함. 2021년 1~2월중에 행정지원협의회 1차 회의를 개최하여 참가 부서별로 내년도 각종 시행사업의 정보를 공유하고 업무 협조 방안을 검토하면서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추진함
- **공동체새마을과 내부의 업무협력 강화와 성공사례 도출**
 - 공동체새마을과 산하의 4개 팀은 세부 사업별로 서로 협력해야 할 필요성과 연계성이 매우 높음. 예를 들어, 주민자치팀에서 수행하는 “마을자치 활성화 사업”은 마을공동체팀의 각종 마을만들기 사업과 직접 연결됨. “주민자치 특화사업 지원”도 주민총회에서 발굴된 의제들이 행정리 마을의제와 중복되기 쉬움. 사회적경제팀의 “당진시 사회적경제 아카데미”와 “당진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사업, 새마을팀의 “마을회관 신증축 및 보수 사업”등도 업무 연계성이 높음

- 단순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나 시설비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역량단 계별 지원체계를 설계하거나 주민교육과 공모방식을 연계시키는 등의 방식으로 효과를 높일 수 있음. 연초의 업무연찬을 통해 서로 사업내용을 공유하고 상호협력 방향을 모색함. 그 결과를 반영하여 읍면 순회 합동설명회를 개최하는 것도 매우 유용함
- **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 농촌협약 공모 연계**
 - 민관협치 관점에서 ‘정책의 공동생산’을 위해서는 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이 필요함. 좁은 의미의 마을공동체에 국한하지 않고, 관련 정책과의 통합적인 정책위원회 운영이 효과적임. 농촌협약까지 염두에 두면서 관련 조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효율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방향으로 통합형 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함
 - 농촌 마을만들기를 기본으로 주민자치와 사회적경제를 포함하고, 농촌정책의 관련 영역까지 확장하는 방향에서 정책위원회 구성을 검토함. 2021년 상반기에 1차 임시회의를 개최하고, 운영 실적을 농촌협약 예비계획서에 포함될 수 있도록 추진함. 농촌협약의 선정결과를 반영하면서 정책위원회의 구성과 분과체계, 운영방식, 제도적 근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함
- **민간단체 협력 네트워크 구축(법인화) : 무리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추진**
 - 마을만들기를 포함하여 사회적 가치 지향의 정책에 대해 민간 주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당사자협의체 설립과 민간단체 협력 네트워크 구축이 반드시 필요함. ‘어렵지만 꼭 가야할 길’이란 관점에서 무리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함
 - 2021년 1~2월에 마을대학을 통해 마을만들기협의회를 설립하고, 관련 정책 영역과의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와 간담회, 워크숍 등을 개최함. 2021년 5월 농촌협약 공모 신청, 2022년 1월 민간위탁 등의 일정과 연계하여 2021년 6월까지 네트워크 법인 설립의 방향성을 명확히 정함. 법인화의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민간 스스로 판단하도록 지원하고, 행정과 협력관계 속에서 통합형 중간지원조직의 민간위탁 방식에 대해서도 협의함

□ 행정직영 중간지원조직 운영 경험 축적과 민간위탁의 지역공감대 확산

• 기본인식 : 통합형 중간지원조직의 민간위탁 절차를 체계적으로 준비

- 소규모 행정직영 중간지원조직의 한계는 명확하기에 민간 주도성을 강화하고 정책의 성과를 조기에 도출하기 위해서는 중간지원조직의 통합형 설치와 민간위탁이 꼭 필요함
- 서로 이질적인(또는 이질적으로 보이는) 정책 영역 사이의 통합형 운영은 일상적이고 실질적인 교류 경험을 축적하면서 상호신뢰 관계가 구축될 때 가능함
- 여러 중간지원조직 사이에 작고 소소하지만 상호협력의 기회를 의도적으로 확보하고, 통합형 민간위탁의 방향성에 대해 상근자 사이에서도 공감대 형성이 필요함

• 행정직영 센터의 경험을 1년간 더 축적하고 지역공감대 형성

- 행정직영으로 운영 중인 당진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2021년 1년간 경험을 더 축적하면서 당사자협의체 설립 및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행정과 민간의 가교 역할을 강화함
- 지역사회에서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과 의미, 통합형 설치 등에 대해 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 활동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와 응원이 전제되어야 가능함. 이를 위해 2021년중에 시의원 초청 정책토론회, 마을대학 심화과정 운영 등을 통해 지역공감대를 확산하는 기획을 의도적으로 추진해야 함

□ 가시적인 성과 도출과 혁신적인 시범사업의 지속적인 시도

• 기본인식 : 2022년의 지방선거 이전에 가시적인 성과 축적

- 2021년은 당진시가 그 동안 축적된 경험을 통해 가시적 성과를 조금씩 도출하고, 2022년의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시기에 해당함
- 이 점도 고려하면서 2021년에 집중해야 할 가시적 성과목표를 의도적으로 설정하여 접근하고, 정책토론회를 수시로 개최하며 당진시 특성에 맞는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제안하는 공론장도 자주 가질 필요가 있음

• 가시적인 성과 도출을 위한 목표 사업 선정(아래 예시 참고)

- **농식품부 신활력플러스 공모사업 도전** : 그 동안의 추진성과와 2020년 도전 경험을 기초로 신활력플러스 공모사업에 다시 도전함. 농촌협약에 비해 경쟁률도 낮고 농촌마을정책 시스템이 앞서 있는 충남은 훨씬 유리한 상황임. 2020년 예비계획서를 재검토하면서 일부 수정 보완하고, 중앙계획지원단 위원들의 자문 정도로 충분할 것임. 2021년에 선정되어 2022년부터 본격 추진하는 일정이 될 것이고, 농촌협약에 선정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는 성격도 포함하여 적극 검토함
- **마을만들기협의회 설립과 ‘공동체 주간’ 행사 개최** : 마을만들기협의회가 농촌마을정책의 결정 과정에 합리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다양한 기회를 부여함. 그 일환으로 협의회가 주도하고 행정(공동체새마을과, 지원센터)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11~12월중에 당진마을대회(48백만원 행사운영비)를 개최함. 여기에 추가하여 주민자치회와 사회적경제, 새마을 등 공동체새마을과 소관의 연례행사를 하나의 주간 행사로 엮어서 진행하는 ‘당진시 공동체 주간’ 행사를 처음으로 기획하여 추진함. 충남에서는 최초이고, 전국에서도 매우 드문 행사에 해당할 것임. 필요 예산은 당진마을대회를 포함하여 공동체 관련 2~3개 행사성 사업의 조합을 통해 확보할 수 있을 것임

[‘당진시 공동체 주간(가칭)’ 행사(안)]

- 사업일시 : 11~12월 농한기 중 2~3일에 걸쳐 유사행사를 연속적으로 진행
- 주관 : 마을만들기협의회, 주민자치연합회, 사회적경제네트워크, 새마을운동협의회 등
- 참가대상 : 약4백명 - 마을 주민과 활동가, 공무원 등
 - 농촌 마을만들기 사업 대상 마을 주민
 - 읍면동 주민자치회 위원, 사회적경제 조직, 공동체 사업 참여자, 새마을 단체
 - 기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교육체험농장, 도시재생뉴딜사업지구 주민 등
- 주요 프로그램 내용(예시)
 - (공통) 개막식 및 기조강연, 정책토론회, 폐막식 등
 - (마을만들기) 활동성과 보고회 및 우수마을 심사, 정책토론회, 우수마을 순회방문
 - (주민자치회) 우수사례 발표회 및 심사, 정책토론회
 - (사회적경제) 우수사례 발표회 및 심사, 정책토론회
 - (새마을) 우수사례 발표회 및 심사, 정책토론회
 - (공통 부대행사) 문화 공연 및 공동체영화 상영, 전시회, 농민장터, 체험 등 이벤트

- 공동체 전담 ‘과’ 설치 및 운영 정책워크숍 개최 : 2021년 1월에는 충남도에 7개 이상 시군에서 공동체 전담 ‘과’ 가 운영될 것으로 예상함. 당진시가 주도하여 행정안전부(지역공동체과) 및 충남도(공동체지원국)와 협력하여 그 동안의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정책 융복합을 강화하는 정책 워크숍을 선도적으로 개최함. 이를 통해 당진시 정책 브랜드로 발전시킴
- 혁신적인 시범사업 도입의 지속적인 검토(아래 예시 참고)
 - 농촌마을공동체수당 도입 검토 : 농민수당(지자체), 농촌기본소득(경기도), 공익형직불금(농식품부) 등의 단점을 보완하고, 농촌 공동체 활동을 지속적으로 자극할 수 있는 대안의 하나로 마을공동체수당 시범사업 도입을 계속 검토함. (세부 내용은 충남연구원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 2020. 2., 『농산어촌 유토피아 구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시범계획 수립』 187~188쪽 참고). 2021년에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2022년 본예산에 반영하여 당진시가 선도적으로 도입해볼 것을 제안함. 읍면 경쟁을 통해 3개 면 정도를 우선 선정하고, 행정리 1개소당 매년 3백만원, 3년간 지원하면 매년 약 10억원의 예산 소요를 추정할 수 있음
 - 공동체정책 전문직위군(群) 제도 선제적 도입 : 전문직위군 제도는 한 직위에서 3년 이상 근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전문직위 제도를 유사한 정책영역으로 확장하여 하나의 군(群)으로 묶어 5년 이상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임. 문재인정부 들어와 자치분권 추세 속에서 행안부가 신규 도입한 제도로 향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당진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하면서 선제적 대응을 통해 정책 선명성을 확보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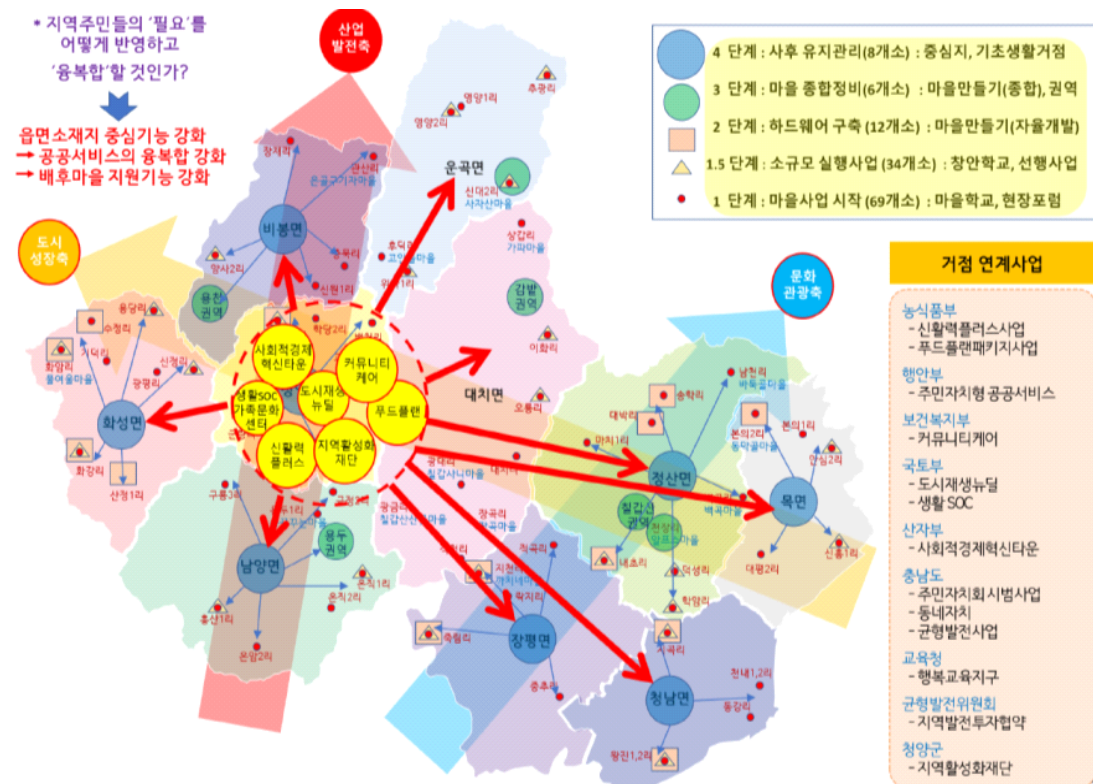
제2절 2021년 신규 사업 및 추진 방향 제안

1. 타 시군의 특색있는 농촌마을정책 사례

□ 청양군 사례 : 3대 핵심 이음

- 청양군은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을 수립하면서 역량단계별 지원체계와 연계하여 “함께이음” 정책으로 발전시킴
- 3대 핵심 이음
 - 1. 공간이음 - 거점 중심기능과 배후마을의 지원기능 연계([그림 6-2] 참고)
 - 2. 사업이음 - 역량단계별 주민교육과 공모사업의 연계([그림 6-3] 참고)
 - 3. 사람이음 - 행정과 민간의 연계(민관거버넌스 시스템)
- 청양군은 이러한 자료를 읍면별로 모두 만들어 연초에 순회하며 설명함

[그림 6-2] 청양군 ‘함께이음’정책 : 거점 중심기능과 배후마을 지원기능의 연계 체계



[그림 6-3] 청양군 '함께이음'정책 : 주민교육과 공모사업을 연계한 연차별 정책 체계



□서산시 사례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행정 직접수행 TF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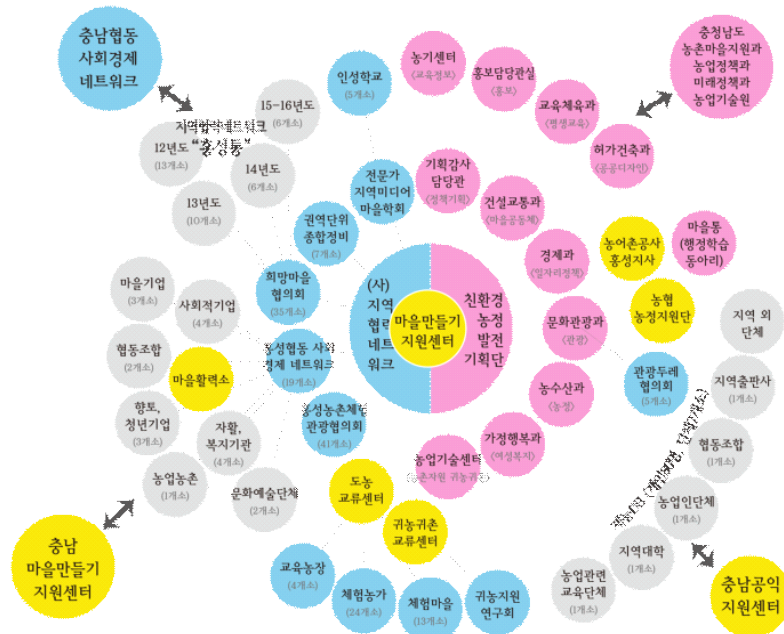
- 서산시는 2020년부터 기존에 주로 공기업(농어촌공사) 대행사업으로 수행해 온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H/W사업)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직접 추진 TF팀’을 설치하여 시에서 직접 추진하기로 결정함
- 2020년 서산시 발전 10대 핵심과제의 하나로 선정되어,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지역 주민의 만족도를 높임은 물론 대행수수료 17억원을 절감하고 부서간 칸막이를 혁파하는 등 실질적인 협업모델 구축을 목적으로 함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행정의 인력부족과 전문성 부족 등으로 대부분 공기업대행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따라서 전국 농촌 지자체에서 선구적인 사례에 해당됨

- 서산시의 이 사례는 향후 신활력플러스나 농촌협약 등의 공모사업 선정에 매우 유리한 실적이 될 수 있고, 또 선정 이후에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행정 시스템에 해당함
- TF팀 구성 현황
 - 설치 근거 : 서산시 프로젝트팀 설치 운영 조례(2020.1.30. 일부개정)
 - TF팀장 : 자치행정국장
 - TF팀원(8명): 시민공동체과장, 마을공동체팀장, 마을공동체팀(시설직 2명, 건축직 1명), 회계과 공업직 2명, 정보통신과 방송통신직 1명
 - 외부자문 :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장

□ 홍성군 사례 : 지역 거버넌스 ‘홍성통’

- 홍성군은 2013년 3월에 운영위원회 발족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홍성통을 운영해 오면서 그 경험을 통해 실무자 중심의 행정협회는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고, 타 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업무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출범 당시 5개 부서, 83개 단체가 참여하였으며, 2020년 현재 마을만들기, 사회적경제, 지역관광 및 귀농귀촌, 평생교육 등의 관련 12개 부서, 9개 민간단체, 183개 조직이 참여하고 있음([그림 6-4] 참고)
- 활동 개요
 - 2020년 현재 운영위원회는 관련 행정부서 팀장과 민간단체 및 중간지원조직 실무자, 전문가 등 2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표없이 행정과 민간에 코디네이터 각1인을 두고 운영 중임(행정: 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 민간: 홍성지역협력네트워크). ‘청년통(청년정책만들기), 협사통(관련주체 역량강화), 관광통(관광주체 네트워크)의 세 개 분과로 구성되어 있음
 - 활용사업 : 일반농산어촌개발 시군역량강화사업
 - 회의운영 : 월례회의(매월 마지막주 화요일 14시) / 분과회의(월1회 기본)
 - 기록을 정리한 홍성통 백서 발간

[그림 6-4] 홍성군 지역 거버넌스 ‘홍성통’ 참여 구성원



□ 금산군 사례 : 찾아가는 마을학교, 권역단위 공동사무장

• (1) 찾아가는 마을학교 ‘금마지 사용설명서’

- 금산군마을만들기지원센터(금마지)에서 읍면 또는 마을을 순회하며 주민주도형 마을만들기 및 역량단계별 지원사업을 안내하고 마을공동체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려는 마을을 발굴하고자 함
- 읍면 이장단협의회와 공동 진행함으로써 이장단협의회 회원 및 마을리더들의 네트워크 구축 및 상호 협력체계 구축에도 이바지할 것임

• (2) 권역 공동사무장

- 현재 추진중인 신활력플러스사업의 일환으로 기존 완료된 권역단위종합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권역 단위 공동사무장(기간제근로자)을 채용하여 권역사업의 활성화와 네트워크 구축을 꾀함
- 금산군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6개 사업지구에서 추진된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을 통해 7개소의 커뮤니티센터가 조성되었으며, 사업의 성숙도와 운영주체의 역량에 따라 센터활성화 정도의 편차가 큼
- 이에 공동사무장을 두어 커뮤니티센터 현황을 파악하고 그 유희도에 따라 주민활동과 연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그 활성화를 도모함

2. 당진시 기존 사업의 리모델링과 보완 방향 제안

1) 농식품부 시군역량강화 사업과 보완 방향 제안

□ 사업개요와 시사점

• 농식품부 2020 사업지침의 핵심적인 변경사항

- 역량강화 전담기관 지정과 우대 : 시군 내 중간지원조직이나 비영리법인, 사회적경제조직, 산하기관 등 상시 교육이 가능한 조직이 대상. 전담기관 운영 시에 사업비 한도 1억원을 증액 지원함. 대신에 사업의 직접 시행을 강조함 (일부 재위탁, 용역만 인정)
- 인건비 지원 : 30% 지방비 매칭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 2인까지 인건비 사용이 가능함(자치단체자본보조 예산과목의 유연성 확대)
- 2022년 사업부터는 전담기관 지정·운영 시에만 시군역량강화사업 예산 신청을 허용하는 것으로 명시함. 또 중심지·기초거점사업의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 사업을 전담기관이 추진 가능하도록 지침을 개정할 예정임을 밝힘

• 충남도 시군별 예산현황

- 재원 비율 : 국비(균특회계) 70%, 도비 9%, 시군비 21%
- 최고액 시군(국비 기준) : 308백만원(천안, 공주, 예산)
- 최저액 시군(국비 기준) : 154백만원(금산)

• 시사점

- 시군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의 사업비로 안정된 재원 확보 가능 : 충남도 지원사업 예산(민간위탁 총 200, 행정직영 총 100백만원. 도비:시군비=5:5)은 최대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중심으로 활용해도 무방함(지침 내용)
-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이 계속 증대되고 추가 인건비 확보 가능 : 농식품부에서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의 육성과 인센티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지원 예정이고, 향후 중심지·기초거점사업과 농촌협약 등과 연계하여 역량강화 전담기구로서 역할이 더욱 확장될 것으로 기대함

□ 당진시 시군역량강화사업의 2021년 사업계획과 검토 과제

• 당진시의 2021년 시군역량강화사업 등([표 6-1] 참고)

- 총 14개 사업이 계획되어 있고(센터운영비 제외), 전체 사업을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이 주도하되, 행정과 역할분담을 통해 추진함
- 농식품부 시군역량강화사업 부분의 비중이 가장 높고, 충남도 지원 중간지원조직 운영 사업과 지방이양 농촌현장포럼사업으로 구성됨

• 농식품부 시군역량강화사업 예산 : 12개 사업 총 230백만원

- 센터 직접 수행(예정) : 5개 세부사업, 62백만원
- 용역 수행(예정) : 7개 세부사업, 168백만원

• 기타 마을만들기지원센터 관리 사업과 예산 : 2개 사업 총 93백만원

- 지방이양 농어촌마을 현장포럼 45백만원
- 충남도 지원 중간지원조직운영 100백만원 사업이 있음(당진마을대회 포함)

• [참고] 공동체새마을과 마을공동체팀의 주요 사업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유지관리” : 순성면 봉소리, 백석리 일원에 대한 완료지구 사후관리 사업, 60백만원
-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 수립 260백만원, 충남형 마을만들기 예비계획 수립 컨설팅 19백만원
- 이외에 희망마을선행사업, 충남형마을만들기, 중심지활성화사업 등이 있음

• 검토과제

- 현재 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상근인력 규모와 경험에 비해 업무량이 과다 : 3명이 5개 세부사업을 직접 수행하고, 나머지 9개 세부사업에도 관여해야 하는 상황임. 특히, 행정직영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과목이 세분화되어 있고, 코로나19 상황과 연계하여 여러 변수가 있기 때문에 사업변경도 쉽지 않음. 현재 상근자 규모와 경험에 비해 업무량이 매우 과중한 것은 분명하고, 추진과정에서 협력할 수 있는 민간 활동가 그룹이 다수 필요함
- 연중 업무흐름도 재작성 필요 : 2021년 상반기는 신활력플러스와 농촌협약 공모사업에 도전해야 하는 상황으로 각종 역량강화사업과 체계적으로 연계되어야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음. 코로나19 상황이 상반기에도 지속될 것을

염두에 두고 연중 일정표 작성이 필요함. 이를 통해 상근자의 연중 역할 배분도 가능하고, 주민들에게도 연중 예측 가능한 일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임

[표 6-1] 당진시의 2021년 시군역량강화사업 등 중간지원조직 추진 사업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명	주요 내용	시기	사업비	예산	비고
예산합계					375,000	
센터 자체 운영	1 찾아가는 읍면학교 (12월 기획)	센터 홍보 및 추진사업 소개 실무회계, 마을사업계획서 작성	1월 6월, 7월	농식품부	24,670	모든 사업에 대해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 등 3개 과목으로 구분하여 편성
	2 마을대학 (1월 기획)	1회차 2회차 3회차	3월 7월 10월		12,970	
	3 마을기자단 양성교육 (1월 기획)	마을홍보 및 지역 활동가 양성 (총 6회차 운영)	2월		4,360	
	4 마을해설사 양성교육 (8월 기획)	이야기를 들려주는 주민 해설사 (총 7회차 운영)	10월		8,000	
	5 우리동네 마을캠프 (6월 기획)	우리 마을로 놀러와요~! (6백만원 × 2회)	8월		12,000	
용역 입찰 & 수의	6 마을활동가 교육 (1월 기획 및 발주)	농어촌퍼실리티데이터 자격증과정 양성교육	2월, 3월	시군 역량 강화 사업	22,000	행사운영비
	7 온라인 마을활동가 교육 (12월 기획, 1월 발주)	사이버 마을활동가 교실(영상물제작 및 평생교육포털 등록)	年中		22,000	행사운영비
	8 마을콘테스트 지원 (9월 기획 및 발주)	우수마을 발굴 및 지원	11월		10,000	행사운영비
	9 영상물 기록사업 (1월 기획 및 발주)	마을 홍보마케팅 및 소개영상 제작	年中		22,000	행사운영비
	10 완료지구 컨설팅 (2월 기획 및 발주)	프로그램 활성화	年中		22,000	행사운영비
	11 마을소식지, 웹진 발간 (12월 기획, 1월 발주)	테마별 연간 4회 발간 (마을기자단 양성 후 적극 활용) (각 7.5백만원 × 4회)	웹진 (매월) 소식지 (분기별)	시비 (지방이양)	30,000	행사운영비
	12 소액사업 (연중 계획)	주민 주도형 작은 사업 (5백만원 × 8개 마을)	年中		40,000	민간자본보조
	13 농촌현장포럼 (1월 기획 및 입찰)	농어촌마을 현장포럼 (9백만원 × 5개 마을)	年中		45,000	연구용역비
	14 당진마을대회 (9월 기획, 10월 발주)	사례 공유 및 평가, 시상	11월		48,000	행사운영비
센터 운영 비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연중	충남도 중간지원 조직운영	5,000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홍보물품, 사무용품, 옥외간판	연중		28,000	사무관리비
	자산취득비	범프로젝트 등 집기, 비품 구입	연중		19,000	

자료 : 당진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제공 자료를 가공하여 작성

□ 주요 수정, 보완 방향 : 전담인력의 최대 확보

- 임기제 공무원 추가 1인 채용 검토 : 신활력플러스 및 농촌협약 대응
 - 신활력플러스 및 농촌협약 공모 신청을 선제적으로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임기제 공무원의 추가 채용을 적극 검토함
 - 이를 통해 부족한 업무 역량을 보완하고 신활력플러스사업 선정과 농촌협약 선정 이후까지 기약할 수 있음
 - 채용된 임기제 공무원은 ‘가’ 급으로 하여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센터장 역할을 담당함. 향후 신활력플러스 및 농촌협약 선정 이후에는 각종 중장기 종합계획의 관리, 통계 분석, 사후관리 등 총괄 관리를 담당함
- 농식품부 시군역량강화 전담기구 인건비 예산 활용 : 2022년 이후
 - 지방비 30% 내에서 2인 이내의 상근자를 채용할 수 있는 지침 규정에 근거를 활용하여 상근자 1인을 추가 채용하는 방향을 지속적으로 검토함
 - 행정직영 상태에서 임기제공무원 혹은 기간제근로자 신분으로 채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에 2022년 민간위탁을 통해 적극 추진

□ 세부 사업별 주요 진행방식 검토 의견

- 1. 찾아가는 읍면학교 운영(센터 직접 사업)
 - 연초에 공동체새마을과 전체 사업 홍보를 병행하여 읍면 순회 교육(설명회) 방식으로 진행함. 주민용 배포자료를 알기 쉽게 작성하는 것에 우선 집중하고(청양군 사례 참고), 1차년도 시범사업에 해당하기에 향후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감
 - 각종 마을만들기 사업을 홍보하고 신규 교육 및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마을을 발굴하는 차원도 병행하여 추진
- 2. (1~3회차)마을대학 운영(센터 직접 사업)
 - 1회차는 “마을만들기협의회 설립 및 운영”을 주제로 1~2월중 조기에 추진함. 5월로 예정된 신활력플러스와 농촌협약 공모 신청을 염두에 두고 당사자 협의체 설립과 역량강화에 집중함
 - 2회차는 마을만들기의 기본과 기초를 강화하기 위해 “마을자치 시스템 구

축”을 주제로 주민조직도 작성, 자치규약 제정, 공동재산관리 등의 내용으로 구성함(청양군과 아산시의 2020 대화마당 참고). 마을별로 3~4명 참석을 유도함. 경우에 따라 2회차는 농촌협약의 행정리 마을조사와 연계하여 2~3월중에 마을조사원의 모집과 심화교육으로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음

- 3회차는 2022년 공모사업을 염두에 두고 소액사업과 사후관리, 현장포럼 등의 사업 대상 마을을 사전에 선정하기 위한 창안학교 방식도 검토함. 하반기 8~9월 농한기에 개최하고 연말의 ‘14. 당진마을대회’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함

• 3. 마을기자단 양성교육(센터 직접 사업)

- 도시지역 시민 중에서 농촌 마을을 지원할 수 있는 활동가 발굴과 양성 관점에서 접근함. 단순한 집합식 교육방법론을 바꾸어 기초교육보다는 액션러닝 방식의 심화교육과 조직화에 집중함
- 농촌협약을 염두에 둔다면 2~3월중에 마을조사단 양성 교육으로 대체하여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함. 이 경우에는 마을기자단이 실제 마을을 방문하여 인터뷰조사하고 글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방식이 될 수 있을 것임

• 4. 마을해설사 양성교육(센터 직접 사업)

- 주민 해설사를 양성하기 위한 7회차 교육으로 하반기 추진을 예정하고 있음. 흔히 체험휴양마을의 해설사와 같은 방식이 아니라 마을활동가의 육성과 조직화 관점을 더 강력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음
- 또 일반적인 마을해설사보다 전문성이 가미된 해설사 교육이 보다 효과적임. 예를 들어, 마을의 역사 해설사, 전통문화해설사, 마을숲해설사, 마을박물관해설사 등임

• 5. 우리동네 마을캠프(센터 직접 사업)

- 전문기관을 통해(예산과목이 행사운영비) 2개 마을 대상으로 마을캠프 행사를 진행해보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8월중 한여름 진행을 예정하고 있음. 행정리 단위의 마을행사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마을활동가들도 결합하여 마을만들기 네트워크 행사 성격이 보다 효과적임
- 다만 코로나19 상황을 염두에 두고 기획하고, 마을이 당진시 관내 마을리더

와 활동가를 초대하는 ‘팸투어’ 형식을 가미하는 것도 한 방법임

• 6. 마을활동가 교육(외부 위탁)

- 외부 전문기관 위탁 형식(행사운영비)으로 농어촌퍼실리테이터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교육으로 기획중임. 자격증 취득도 필요하지만 마을만들기지원센터와 협력하여 주민교육을 전담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조직 설립 지원에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임
- 교육수료생의 조직화 과정을 염두에 두고 소인수의 집중적인 교육이 더욱 중요함. 2~3월중에 시행할 구상인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퍼실리테이터 양성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교육방법론 개선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임

• 7. 온라인 마을활동가 교육(외부 위탁 사업)

- 평생교육포털에 등록하여 온라인 교육을 통해 연중 마을활동가를 양성하려는 구상임. 실무회계나 사업계획서 작성 등을 포함하더라도 온라인 교육의 주제와 강의 방식 등에 대해 세심한 기획이 필요함
- 마을활동가의 개념을 확장하여 마을리더나 읍면 담당 공무원 등도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이 좋을 것임

• 8. 마을만들기 콘테스트 지원(외부 위탁 사업)

- 2021년 8월에 예정된 콘테스트에 도전할 마을을 1~3월 농한기에 사전 발굴하고, 전문기관이 결합하여 연중 활동을 컨설팅하면서 체계적으로 준비하도록 지원함
- 당진시의 선도마을을 발굴하고 그동안의 활동성과를 드러내며 대외적인 위상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집중할 필요가 있음

• 9. 마을 영상물 기록 사업(외부 위탁 사업)

-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마을 홍보마케팅과 소개영상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상중임. 당진시 관내 전문조직과 결합하여 상호학습의 관점에서 농촌마을을 순회하며 영상물로 기록하고, 또 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각종 활동까지 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임
- 각종 영상 자료는 마을만들기 콘테스트나 당진마을대회 등 각종 행사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SNS를 통해 수시로 홍보함. 당진시의 브랜드 사업으로 마을 동영상 제작과 온라인 홍보 영역을 개척할 수 있을 것임

• 10. 완료지구 컨설팅(외부 위탁 사업)

- 권역센터 중심으로 사후관리 활성화 차원에서 전문기관에 용역 형식으로 지원함. 기본적으로 권역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주민조직도 작성과 자치규약 제정에 집중함
- 우수 사업지구는 적절한 심사과정을 거쳐 별도로 지원하는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비 사업과 연계하여 2022년 사업 지원을 검토함

• 11. 마을소식지, 웹진 발간(외부 위탁 사업)

- 마을기자단을 양성한 이후에 매월 웹진 발행, 분기별 1회 소식지 발간으로 구상중임. 2021년에는 당진시 관내 전문기관에게 위탁하는 방식으로 추진 하되, 마을기자단 자체가 사회적경제조직으로 발전하여 직접 발행하는 방향으로 검토함
- 당진시 마을기자단의 향후 발전 경로에 대해서는 완주군 마을소식지 완두콩 사례(<http://www.wandookong.kr/>)를 적극 참고할 수 있을 것임. 웹진과 소식지 발간만이 아니라 기자 교육과 홍보물 인쇄, 영상 제작, 출판사업 등으로 확장할 수 있을 것임

• 12. 마을만들기 소액사업(민간자본보조 사업)

- 주민들의 실천학습(액션러닝) 관점에서 적절한 경쟁을 통해 8개 마을을 선정하고 지원함. 다만, 1개 마을에 5백만원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 ‘자본’ 보조 예산과목 편성이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함
- 희망마을선행사업, 현장포럼 등과 연계하여 역량단계별 지원체계 속에 적절한 단계를 부여해야 사업 성격이 명확해지고 사업의 지속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임

• 13. 농촌현장포럼(외부 위탁, 지방이양 시비 사업)

- 총액 45백만원을 활용하여 5개 마을을 선정하여 지원하려는 구상임. 기존의 농촌현장포럼 방식에 대한 반성을 기초로 당진형에 맞는 방식을 모색함. 집합식 교육과 방문 교육을 병행하면서 주민조직도 작성, 자치규약 제정 등 마을자치 시스템 구축에 초점을 두고 접근함
- 예비계획서 작성을 지나치게 강조하지 않도록 하고,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

한 도출되고 진행과정에 대한 기록물을 많이 남기는 것이 중요함. 마을발전 계획은 지도 위 작업을 통해 가시적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함. 공동체새마을과 주민자치팀에서 추진하는 “마을자치 활성화 사업” 과도 연계하여 추진함

• 14. 당진마을대회(외부 위탁, 충남도 지원 사업)

- 당진시의 다양한 마을만들기 사례의 공유와 평가, 시상 등을 위해 기획하는 첫 사업임. 행사운영비 예산과목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마을만들기협의회를 통해 집행하는 방식을 적극 검토함
- 지자체 차원의 연간 1회 마을만들기 행사를 추진하고 있는 홍성군, 아산시, 보령시, 청양군, 천안시 등의 추진 경험을 흡수하여 당진시 마을만들기의 네트워크 행사로 추진함. 가능하면 공동체새마을과의 주민자치, 사회적경제 등의 연1회 행사와 결합하여 연말에 ‘공동체 주간’ 행사로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함

□ 연중 업무 흐름도 작성

• 각종 역량강화사업과 공모사업의 연계

- 연중 그리고 연차별로 전체적인 사업흐름도를 당진시 방식에 맞게끔 계속하여 정리해나가야 할 것임. 마을만들기의 역량단계별 지원체계에 따라 주민교육과 공모사업은 체계적으로 연결되어야 함
- 주민 대상의 교육은 1~3월 농한기에 집중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공모사업 대상이 되는 마을 선정과 교육을 집중적으로 추진함. 2022년 공모사업 대상 마을은 2021년 하반기 당진마을대회에서 선정되도록 기획함
- 4~10월 농번기에는 정책토론회, 워크숍, 찾아가는 교육 등을 추진함. 지원센터에서는 마을 사업을 진행중인 마을 대상으로 컨설팅과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추진함
- 11~12월 중에는 당진마을대회를 활용하여 전체 사업의 성과발표회를 개최하고, 이 자리에서 2022년 공모사업 신청 마을도 선정함(현장포럼, 희망마을선행사업, 충남형마을만들기 등)
- 역량강화사업과 각종 공모사업을 연계하는 방식과 개념 설계, 일정 등에 대

해서는 청양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경험을 체계적으로 전수하여 추진함

• 1월중에 업무연찬 강화, 집중워크숍 개최

- 당진시는 2021년 상반기에 신활력플러스와 농촌협약 공모사업에 도전하기 위해 매우 복잡하고 바쁜 일정 속에 있음. 마을만들기지원센터도 적은 인력과 짧은 경험 속에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야 함
- 이에 각종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할 전문기관과 농촌협약 연구용역 기관,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마을공동체팀 등이 체계적으로 협력하지 않으면 매우 혼란스러울 수 있음
- 전체 사업과 연구, 행사 등의 중심을 명확히 하면서 서로 협력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기획하고, 연중 및 월별 계획이 체계적으로 배치되어야 민관협력의 정책 시스템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1월초에 공동체새마을과 내부의 업무연찬, 마을공동체팀(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중심이 되어 외부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집중워크숍 등을 개최하면서 전체 흐름을 조정해야 함
- 이를 통해 연중 업무흐름도를 작성하고 행정과 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충분히 공유할 수 있어야 할 것임

2) 충남형 마을만들기 공모 사업과 접근 방향 제안

□ 사업개요와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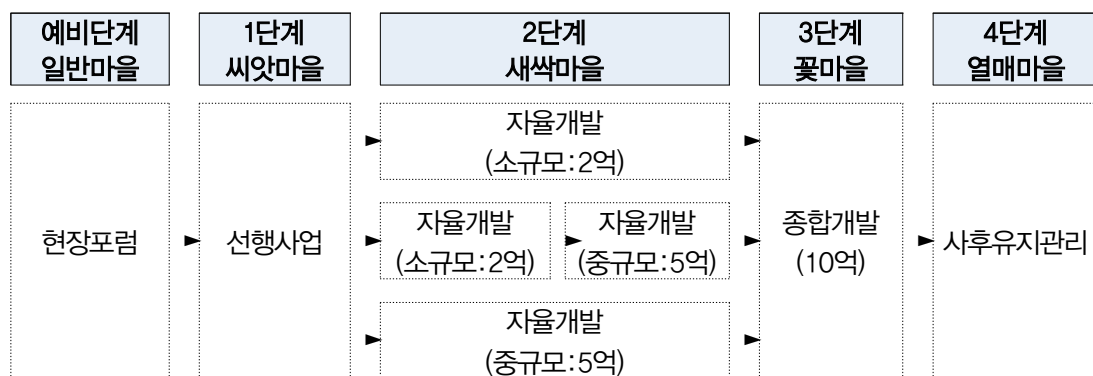
• ‘충남형 마을만들기 사업’의 도입배경

- 문재인정부의 자치분권 로드맵에 따라 농식품부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2020년부터 지방이양 사무로 분류하고,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을 통해 재원도 지방 이양함
- 충남도는 자치분권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충남형의 마을만들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2020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하여 5월부터 약 10회에 걸쳐 공개, 비공개 회의를 개최하고 사업지침을 확정함
- 충남도 자체 사업지침 작성과정에서 각종 쟁점토론을 통해 시군 행정과 민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정리함
- 다만 2021년 예산 확보과정에서 충남도의 가용 재원 부족으로 본예산에 상정하지 못하고 2020년 11월 현재 대체 방안을 계속 검토중인 상황임

• 충남형 역량단계별 지원체계(신규) : 사업 신청자격

- 신청 마을은 역량단계별 지원방식(씨앗, 새싹, 꽃, 열매)을 유지하여 신청해야 함([그림6-5] 참고)

[그림 6-5] 충남형 마을만들기 사업의 역량단계별 지원체계(신규)



- 1단계 사업을 집행한 마을은 자율개발(소규모_2억 이하)과 자율개발(중규모_5억 이하) 중에서 선택하여 2단계 사업 신청이 가능함
- 자율개발(소규모_2억이하) 사업을 완료한 마을은 사업성과가 명확하게 드러날 경우에 자율개발(중규모_5억 이하) 사업을 신청할 수 있음

- 종합개발(10억원) 사업은 역량단계별 지원체계에 따라 성장한 마을(행정리)이 중심이 되어 단일 마을 자체로, 혹은 인근 2~4개 마을과 협력하여 공동으로 신청 가능함. 또 면소재지 마을이 배후 마을 다수와 협력하는 사업도 신청할 수 있음
- **사업 예산과 유형별 지원 한도액**
 - 지원기준 : 도비 30%, 시군비 70%(자부담 별도)
 - 사업기간 : 3년간
 - 사업유형별 지원 한도액([표 6-2] 참고)

[표 6-2] 충남형 마을만들기 사업의 유형별 지원한도액과 주요 사업

구 분	자율개발		종합개발
	소규모	중규모	
지원한도액	2억원 이하	5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주요 사업	프로그램 사업 중심 소규모 하드웨어 사업	중규모 하드웨어 사업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마을 협력 네트워크 사업 읍면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자율개발 주요사업 포함)

- **지침 작성과정의 주요 특징**
 - 충남의 기존에 축적된 경험을 반영하여 농식품부 기존 지침 한계를 극복하고 차별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함([표 5-3] 참고)
 - 농식품부 농촌협약 등에서 ‘마을만들기 사업’의 유지를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으나 예산규모나 방식 등에서 기존의 지침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이 때문에 마을만들기 사업의 전면적인 전환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고, 이런 가운데 충남형 사업지침을 작성해야 했다는 한계가 있음
 - 하지만 농촌 마을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면서 민관협치의 정책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사업지침에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함
- **사업지침의 주요 특징 : 농식품부 기존 지침과의 비교([표 6-3] 참고)**
 - ① 신청자격 확대 : ‘종합개발’에 한하여 1개 행정리만이 아니라 2~4개가 협력하여, 혹은 면소재지 마을과 연계하여 신청 가능
 - ② 2억원 소액사업 도입 : 농촌 마을 현실을 고려하여 기존의 자율개발 5억원 사업을 분리하여 2억원 사업을 신설하고 다수의 마을로 사업 기회 확대

- ③ 사무장 인건비 인정 : 2021년 사업에서는 ‘종합개발’에 한정하되, 점차 확대하는 방향으로 상근 사무장 인건비 사용 인정(1년차부터 집행 가능)

[표 6-3] 충남형 마을만들기 사업의 특징 : 농식품부 기존 지침과의 비교

구 분	농식품부 기존 지침	충남형 마을만들기	비교(특징)
신청 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1개 행정리로 국한 ‘10가구 이상’ 조직만 인정 역량단계별 지원체계 미흡(소액 사업) 해수부 관할 마을 불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합개발’은 2~4개 행정리 연계, 읍면네트워크도 가능 ‘5가구 이상’으로 완화하되 마을협약 강화 역량단계별 지원체계 강화 해수부 관할 인정(해안가 제외) 	고령화 상황 반영하여 작은 행정리 한계 극복 사전준비단계 강조 현실화
개소당 지원액	5억원(자율), 10억원(종합)으로 소규모 사업 없음	2억원(자율개발_소규모) 신설로 행정리 마을 현실 반영	다수 마을 기회 제공 선행사업 연계 강화
사무장	사무장 활동비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무장 활동비 인정 1년차부터 집행 가능 종합개발부터 상근 적용. 자율개발(중규모)은 향후 계속 검토 	현장 활동가 중시 농촌 현실 반영
중간지 원조직	컨설팅 기관 의존, 중간지원조직 명시 없음	중간지원조직 역할 명시(사전교육, 심사, 사후관리 등)	충남 경험 확장
역량강 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계획 승인 후에 집행 컨설팅 기관 의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1년차부터 집행 가능 주민조직, 중간지원조직 강조 전액 총괄 공기관대행 금지 	주민조직 등 ‘기본과 기초’ 중시
계획 수립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분리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통합 수립 원칙	사업신청서 강조 주민주도 계획 강화
시설물 건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기관대행사업 집행(일반) 경쟁입찰 방식(일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 디자인 강조 ‘협상 입찰’ 중시 	‘좋은 건축’ 강조
부지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전 매입, 지방비 매칭 불인정 사업선정 후 부지변경 다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신청서 심사 강화 사전매입, 지방비 매칭 인정 	부지 변경 사례 예방
시설물 위탁	재위탁 금지	전체 면적의 50% 이내 일부 위탁 인정	시설 활성화 유도
사유 시설물	‘10가구 이상, 집단화’된 경우만 인정	‘집단화’ 규정 삭제	현실화
마을 기금	‘보조금의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조금의 1~2% 마을협약 중시 	현실화 사전 협약 강화
평가 방식	서류평가, 대면평가 중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면평가와 현장평가 병행 시군 정책위원회 역할 명시 	평가 과정 강조(교육 측면)
시군 평가	별도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군 민관합치 시스템 가점 마을만들기협의회 가입 가점 	시군 평가도 반영

- ④ 중간지원조직 역할 명시 : 14개 시군에 설치된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이 사전교육과 심사, 사후관리 등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의무 부여
- ⑤ 기본계획 승인 전에 역량강화사업 시행 인정
- ⑥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통합적 수립을 원칙으로 제시
- ⑦ 기타 평가 가점으로 마을 자체 이외에 ‘시군 단위의 마을만들기 정책 시스템 구축 성과’를 평가항목에 반영

• 시사점

- 기존의 농식품부 사업지침의 한계를 상당 부분 극복하고, 당진시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과 협력하여 ‘주민 주도 마을만들기’가 실현될 수 있는 길이 더욱 확장됨
- 향후 2~3년간의 시행 경험을 축적하면서 더욱 현장 실정에 맞는 방향으로 사업지침이 수정될 것으로 기대함
- 다만 2021년도 본예산에 신규사업의 도비 예산(약 12억원)이 반영되지 못한 문제를 현실적으로 극복해야 하는 과제가 발생한 상황임

□ 당진시의 2021년 관련 사업예산계획 현황(예산안 기준)

- 충남형 마을만들기 추진 마을 : 3개소 선정
- 2021년 충남형 마을만들기 사업 예비계획 수립
 - 2021년 본예산 상정 : 연구용역비, 19백만원 1식
- 2021년 충남형 마을만들기 사업(신규) 심사 : 2021년 상반기 예정
 - 충남도의 1차 추경예산 준비과정을 보면서 결정

□ 당진시의 향후 추진 방향 제안

- 기본관점 : 당진시의 독자적인 마을만들기 정책 추진 필요
 - 자체 재원 확보 : 재정분권에 따라 시군 지자체 자체 사무로 이양되었다는 점과 농촌협약 공모사업의 전제조건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염두에 둔다면 도청의 2021년 1차 추경예산 확보 여부와 관계없이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는 것을 적극 검토함

- 2021년 1차 추경예산에 반영 : 농촌협약 공모 신청 이전에 완료되어야 신청자격이 부여되기 때문임
- **2021년 사업 준비 마을 대상의 예비계획 수립 : 조기 착수**
 - 2021년 충남형마을만들기사업 예비계획 수립 계획(연구용역비, 19백만원 1식)은 도청의 추경예산 확보 결과에 관계없이 1월중에 조기 발주하여 3개 마을에 대해 집중적인 컨설팅을 추진함
 - 다만, 마을에 대해서는 도비 및 1차 추경 예산 확보를 전제조건으로 진행함. 마을의 적극적인 참여와 자치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강조하면서 예비계획서를 3월 이전에 수립하도록 제안함

3) 신활력플러스 공모사업 재도전

(1) 신활력플러스 사업의 개요와 시사점

□ 도입 취지와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기존에’ 지역개발사업 등으로 구축된 다양한 자원과 민간 조직을 활용하여 지역 특화산업 고도화, 선순환 경제 육성 등 ‘자립적 지역발전’ 기반 구축
 - 신규 사업보다는 ‘기존에’ 지원된 시설이나 사업, 조직 등을 최대한 활용
 - 특정 분야의 테마보다 ‘자립적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 시스템 구축 중시
- **사업추진의 필수 요소 : ASPP 모델**
 - ① 민간 활동가 및 사업주체(액션그룹)의 집중적인 육성(Actor)
 - ② 농촌정책의 플랫폼 기능을 담당할 민간 중심의 사업추진단 구성(System)
 - ③ 계약 협약(Planning Contract)을 염두에 두고 연계, 협력사업 발굴
 - ④ 지역특화산업,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등을 통한 창의적 사업 추진(Project)
- **사업담당 부서** : 농식품부 농촌정책국 지역개발과
 - 충남도 농림축산국 농촌활력과 마을가꾸기팀
- **사업예산** : 시군당 4년간 총 70억원(국비 49, 지방비 21)
 - 년차 10%, 2~4년차 각 30%
 - 총사업비의 30% ‘이상’은 S/W 사업(활동가 양성 및 조직화, 민간 네트워크 구축 등)에 사용
- **사업선정**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123개 시군 중에서 총 100개 시군 선정
 - 2021년 사업지구까지 80개 시군 선정 완료
 - 2022년 사업지구로 신규 20개 시군 선정 예정
- **중앙계획지원단** : 시군 선정과 컨설팅, 자문, 기본계획 승인 등 수행

□ 기존 정책 사업과 다른 신활력플러스 사업의 3대 특징

① 사업내용 : 총사업비의 30% ‘이상’은 S/W사업 예산으로 활용

- 활동가 발굴 → 액션그룹 조직화 → 역량 강화 → 사업의 지속성 확보라는 절차와 원칙 고려
- 하드웨어(H/W) 사업의 경우 기존 시설물과의 연계 및 재활용을 우선 고려
- 지역의 활력제고를 위해 청년층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사업 우선 선정
- 단위사업(H/W, S/W)의 운영주체는 반드시 명기하고, 공모를 통해 운영주체를 선정하는 경우, 공모절차, 시기, 방법, 기준 등을 명시

② 액션그룹 발굴과 육성 방법론 : 2단계를 원칙으로 성장과정 중시

- (1단계) 현장 활동가 발굴, 액션그룹 구성 및 연계 네트워킹 유도
 - * 신활력플러스사업의 목표를 정하고 조직 구성과 계획수립, 시행 등 공동체 활동 기본원칙 교육
- (2단계) 액션그룹 제안 반영, S/W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조직적 역량 배양
 - * 사회적경제조직 참여 유도. 청년층 아이디어를 반영한 조직 우대

③민관협치 추진체계 구축 : 민간 주도를 원칙으로 추진주체별 역할분담

- 추진위원회 : 최고의사결정기구. 세부계획 승인, 사업비 투자결정, 사무국 직원 채용, 감사 등
- 추진단장: 사업총괄
- 사무국: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역량강화 사업 발굴 및 운영, 액션그룹 발굴 및 지원
 - * 사무국장 : 상근 근로, 사업비 집행 등 사무국 총괄
 - * 사무원 : 상근 근로, 사무국장 사무보조
 - * 코디네이터 : 반상근(비상근) 근로, 액션그룹 발굴 및 조정, 지원 등
- 액션그룹: H/W, S/W사업(프로젝트) 실행 주체
- 전담부서: 사업비 교부 및 집행, 지원조례 제정 및 개정, 사무국 지원(인건비 확보 및 직원 파견 등

(2) 당진시의 2020년 신활력플러스 사업 예비계획서 개요와 특징

□ 당진시 예비계획서 개요

• 사업목적

- 面단위 주민 공론장을 통한 수요발굴과 실행으로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체계 고도화
- 面별 통합실행조직(LAG)으로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안정적·지속적 추진기반 마련
- 面별 커뮤니티센터를 통합실행조직이 운영·관리하는 농촌거점공간으로 활용도 제고
- 面단위 농촌정책 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해 시 단위 통합지원체계 구축

• 사업명칭(비전) : “面 통합실행조직으로 행복한 농촌(面)생활”

• 주요 사업내용과 예산 : [표 6-4]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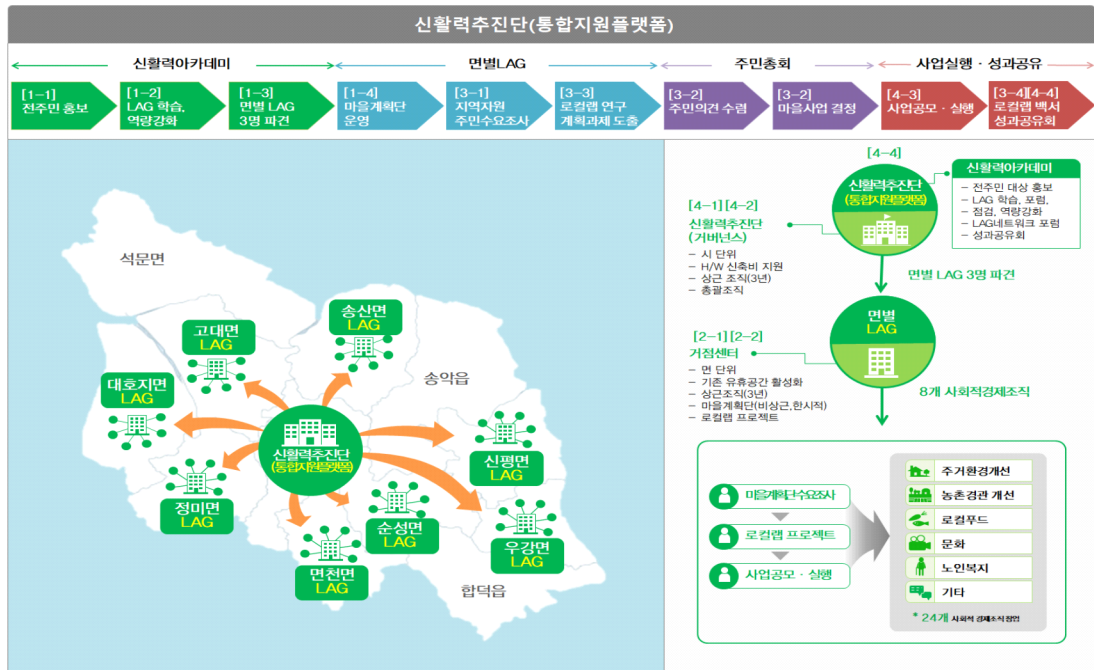
[표 6-4] 당진시 신활력플러스 예비계획서의 주요 사업별 예산

목표			총액(백만원)		
			합계	국비	지방비
총계			10,270	4,900	5,370
본 사업			7,000	4,900	2,100
연계/후속사업			3,270	-	3,270
면별 통합실행 조직 구축 (유휴공간 연계)	Hn/W	신활력 아카데미 기초	60	42	18
	Hn/W	신활력 아카데미 실무	280	196	84
	Hn/W	면별 통합실행조직(LAG) 운영	560	392	168
	Hn/W	마을계획단 운영	334	233	101
	H/W	면별 거점센터 운영	144	101	43
	H/W	면별 거점공간 조성지원	240	168	72
		소계	1,618	1,132	486
내부 역량강화로 농촌정책 추진체계 고도화	S/W	통합실행조직(LAG) 운영 매뉴얼 제작	30	21	9
	S/W	로컬랩 운영	622	435	187
	S/W	로컬랩 백서 제작	120	84	36
	S/W	(연계) 면별 주민총회 개최·발전계획 수립	-	-	-
		소계	772	540	232
통합지원 체계 고도화	Hn/W	신활력플러스 추진단 운영	476	334	142
	H/W	통합지원플랫폼 구축	3,500	2,450	1,050
	S/W	통합실행조직(LAG) 네트워크 포럼 운영	24	16	8
	S/W	로컬랩 프로젝트 지원	510	357	153
	S/W	로컬랩 박람회	100	70	30
		소계	1,110	777	333
2020~21년 연계·후속 사업	Hn/W	223개 농촌마을 기초조사	110	-	110
	Hn/W	읍면동 마을계획 수립 및 주민총회 지원사업	1,400	-	1,400
	Hn/W	2020년 지역주민 소통협력사업	400	-	400
	Hn/W	마을자치지원관 지원 *인건비 지원	1,260	-	1,260
	H/W	주민참여 경관프로그램 운영	100	-	100
		소계	3,270		3,270

자료 : 당진시, 2020.5., “당진시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예비계획서”, 47쪽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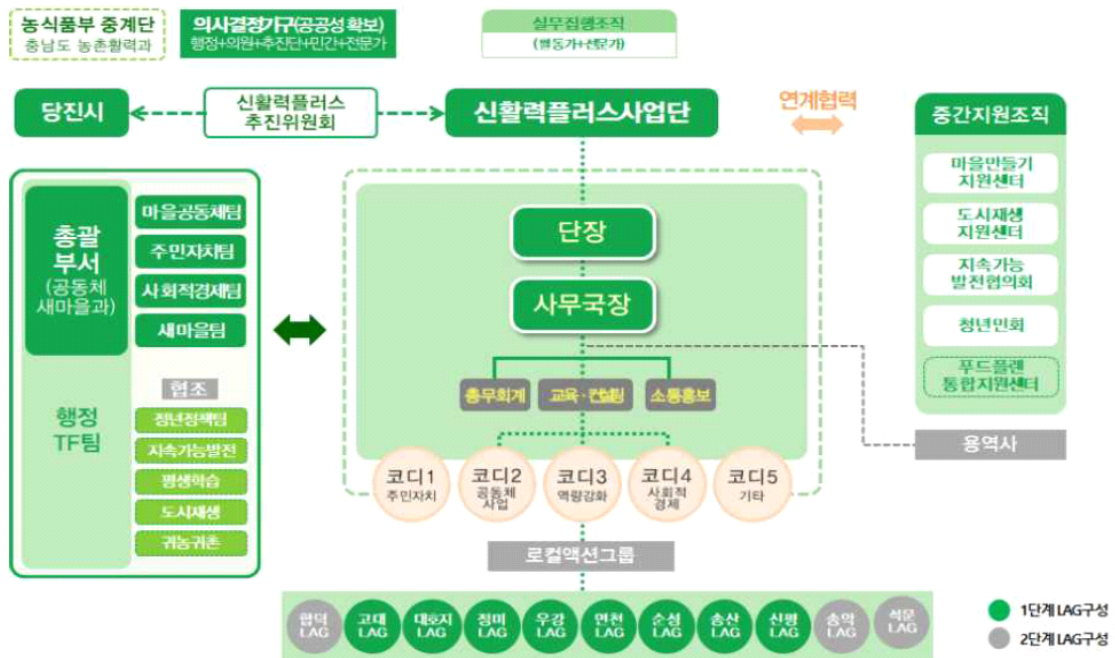
• 사업간, 기능간, 공간간 연계도

[그림 6-7] 당진시 신활력플러스 사업의 사업간, 기능간, 공간간 연계도



• 사업 추진체계도

[그림 6-8] 당진시 신활력플러스 사업의 추진체계도



□ 당진시 예비계획서의 주요 특징(장점)

- **도농통합시 특성을 고려한 농촌개발 정책의 종합계획 성격 : 점, 선, 면**
 - 당진시 내부의 도농격차에 주목하고 체계적인 농촌개발 방법론으로 접근
 - 주민자치 영역에서 구축된 성과를 최대한 활용하여 농촌개발과 연계 추진
 - 도시 지역의 인적 역량을 마을활동가로 육성하여 도농상생 전략 모색
- **농촌 면(面) 주민생활권 정책의 융복합 중시 : 연계·협력사업 발굴**
 - 2018년부터 14개 읍면동에서 개최한 주민총회 성과를 최대한 활용
 - 농촌 면(面) 주민자치회와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를 긴밀하게 연계 추진
 - 기존 8개 면에 구축된 커뮤니티센터 공간의 체계적인 운영주체 육성
- **농촌협약의 마중물 사업 성격 : 민간 주체의 체계적 발굴과 육성 전략**
 - 농촌의 체계적, 전략적 사업추진을 위해 면(面인) 단위 통합실행조직에 주목
 - 당진시 차원의 공동체 관련 정책 융복합을 통해 통합지원플랫폼 구축
 - 당진시에서 구축중인 민관협치의 정책 시스템을 읍면 단위로 확대하는 전략

□ 당진시 예비계획서 신청 결과

- **충남도 심사결과 : 충남도 1등 통과**
 - 준비 및 추진과정의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심사위원들이 사업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고, 상대적 평가에서 1위로 통과함
 - 충남도 심사에서 2등, 3등으로 신청한 공주시, 보령시가 오히려 선정되는 결과가 나타남.
- **농식품부 심사결과 : 탈락**
 - 기존의 전통적인 농촌개발 정책과 달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내용으로 심사위원들이 단시간(15분 내외)에 사업의 취지와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움
 - 특히 농촌 면(面) 단위 주민생활권에 주목하고, 주민자치와 사회적경제까지 연계하여 농촌협약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려는 전략을 예비계획서와 짧은 질의응답으로 이해시키기 어려웠다는 것이 가장 큰 약점이었음

(3) 당진군의 2021년 신활력플러스 사업 대응방향

□ 기본적인 접근방향

- **지속적인 도전 : 농촌협약의 마중물 사업으로 재도전**
 - 신활력플러스 사업의 도입취지와 방법론을 고려할 때 현재 추진중인 ‘농촌 마을정책의 민관협치형 시스템 구축’을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임
 - 향후 농촌협약을 체결하여 농촌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생활권 단위 민간주체의 준비된 역량이 가장 중요하고, 이를 위해 본 사업은 사전에 시행될 필요가 있음
 - 신활력플러스 예비계획서에 제시된 사업내용은 공동체새마을과 소관의 4개 팀이 상호협력하여 협업의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가장 좋은 사업임
- **예비계획서의 재검토 : 농촌정책의 익숙한 용어와 사업내용으로 재정리**
 - 농촌정책의 전반에 관여하지 않는 심사위원들(농촌산업이나 농촌토목 중심)은 주민자치와 사회적경제, 통합실행조직(LAG) 등에 대해 잘 모르거나 반감을 가지는 경향이 있음
 - 예비계획서 사업내용 중에서 일부는 강하게 부각시키고, 일부는 감추는 방식으로 전통적인 농촌정책에 보다 가까운 방식으로 용어와 사업내용을 재정리함
- **민간 추진단의 자치역량 강화 : 추진단 핵심인력의 워크숍 개최**
 - 준비기간 부족으로 추진단장을 포함하여 추진단 위원이 본 예비계획서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발표했던 것은 사실임
 - 2021년 준비과정에서 추진단 핵심인력 중심으로 1월부터 자체 워크숍을 개최하면서 사전에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접근하며 향후 실질적인 운영주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함
- **민관협치의 정책 시스템 구축 기여 : 농촌협약을 체계적으로 준비**
 - 예비계획서에서 강조하고 있듯이 농촌협약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본 사업을 활용하여 민관협치의 정책 시스템을 사전에 구축해야 함
 - 본 공모사업을 준비하고 다시 도전하는 과정에서 마을만들기지원센터를 비롯하여 행정과 민간이 체계적으로 협력관계를 구축하도록 함

□ 예비계획서의 보완 방식(전략) : 코로나19 상황, 2021년 5월 제출 고려

- 아래 과정들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5월 제출을 염두에 두고 역순으로 일정을 배치하여 기본적인 절차를 완료함
- **예비계획서를 자료로 소인수 공동학습회 개최 : 수정과 보완 작업 추진**
 - 취지 : 준비과정 자체가 역량강화에 기여하는 신활력플러스 사업취지 반영. 현재 예비계획서의 취지와 내용에 대한 숙지를 전제로 한 수정방향 도출, 세부 사업의 수정 내용에 대한 공감대 형성, 행정과 민간 추진단 사이의 협력관계 구축 등을 목적으로 10인 이내 소인수의 공동학습회를 3~4회 개최
 - 참석범위 : 예비계획서 작성 컨설팅기관(지역재단), 행정 담당부서, 민간 추진단 위원(단장 포함), 외부 전문가 1~2인 등 10인 이내
 - 일정 : 1~2월중에 조기 추진
 - 방식 : (1안) 예비계획서를 작성한 컨설팅기관에 추가 의뢰하여 소액 컨설팅으로 수행하는 방안, (2안) 행정의 일반운영비로 개최하고 강사료 형태로 지출하는 방안, (3안) 농촌협약 과업지시서에 포함하여 선정된 컨설팅기관에 의뢰하는 방안
- **중계단 위원 상대로 사전 설명, 자문 요청 : 2~3월중 실시**
 - 취지 : 심사위원들에게 사업의 취지와 방법론, 당진시 예비계획서의 특징 등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자문을 받는 상호작용 과정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함
 - 일정 : 2~3월중 추진. (4월 이후에는 심사에 대한 부담감으로 무리)
 - 방식1 : 개별 방문하여 자문을 받는 방안. 추진단장과 행정, 컨설턴트 3~4인이 방문하여 설명하고 의견 수렴
 - 방식2 : 중계단 위원을 초청하는 심화학습 토론회 개최. 10인 이내의 참석을 전제로 중계단 위원 4~5인을 동시에 초청하여 설명하고 토론하며 당진시 예비계획서의 장단점 파악
- **관련 행정사업과의 연계 추진 : 특히 농촌협약 공모일정 연계**
 -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자체 사업 : 마을자원조사 결과 분석 포함
 - 농촌협약 과업지시서 작성, 컨설팅기관 선정, 세부내용 및 일정 조정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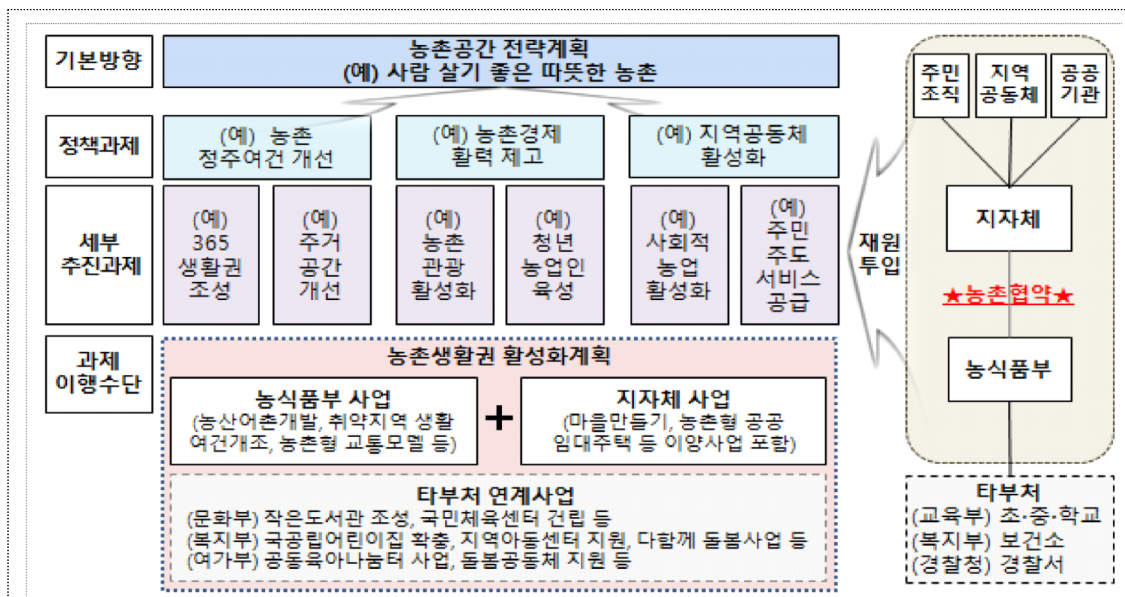
3. 농식품부 농촌협약 공모사업과 당진시의 접근 방향

1) 농촌협약제도의 개요와 시사점

□ 농촌협약 제도의 개요 : [그림 6-9], [표 6-5] 참고

- **협약 주체** : 농식품부 장관과 시장·군수가 협약의 직접 당사자에 해당함
 - 지자체 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지원을 위한 중간지원조직, 민간 주체, 공공기관 등 핵심 관계자도 협약 당사자로 참여할 수 있음
- **협약 대상** : 복수 사업의 통합 추진계획인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이 구체적인 협약 대상이 됨
 - 구체적인 세부 사업은 사전에 농촌공간 전략계획과 농발계획 등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함
 - 농식품부 농촌정책국 세부(내역)사업 외에도 지자체 자체사업과 지방이양사업, 공공기관 및 민간 투자사업 등을 모두 협약의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음
- **협약 기간** : ‘5년을 기본’ 으로 중대 사유가 있을 경우 조정 가능함
- **협약 규모** : 국비 지원은 최대 300억/개소(+ α) + 지방비, 민간투자금 등

[그림 6-9] 농촌 협약의 기본 개념도(예시)



[표 6-5] 농촌공간 전략계획과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의 비교

	농촌공간 전략계획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시간적 범위	20년	5년
공간적 범위	사군	사군 내 생활권
기본 개념	사군의 중장기 발전계획	전략계획에 따라 국가지자체·민간 등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복수의 사업들의 통합계획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군 전체의 사회경제환경 및 기초생활서비스 공급 현황 · 생활권별 서비스 공급접근성 현황 · 사군 전체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비전 및 목표 · 각 생활권별 향후 개선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생활권의 개선·활성화를 위한 비전 목표 및 세부추진과제 · 세부과제별 향후 추진계획 : 추진 예정 사업목록, 소요예산, 자원, 일정 등 제시 · 정책과제별 성과목표 및 관리계획

□ 농촌협약 체결의 3대 전제조건

① 반드시 마을만들기사업을 포함하고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 연계

- 기존 농식품부 사업의 내용·기간·방식 등을 동일하게 유지 권장

② 지역의 중장기 계획(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제2기 농발계획과 연계된 통합적 지역발전계획(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수립

③ 시·군에 농촌협약 담당 전담조직, 농촌협약위원회, 중간지원조직 설치

- 농촌협약 이행을 위한 전담조직(농촌지역개발사업 총괄부서) 운영
- 행정, 민간, 중간지원조직, 공동체 등이 참여하여 농촌협약 위원회 운영
- 농촌협약 이행을 전담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 운영 : 중심지활성화, 마을만들기, 귀농·귀촌 등 관련 다수의 중간지원조직을 통합 운영 시 가점

□ 농식품부 2021년 추진일정(예정)

- 전제조건 : 사업 신청 이전에 위의 3대 전제조건을 모두 이행해야 함

- 농촌협약 전담부서, 위원회, 중간지원조직 포함
- 전제조건을 충족하는 시군 중에서 시도지사 추천을 받은 곳

* 단, 1개소라도 마을만들기 계속지구의 2021년 예산을 미편성했거나, 2021

년 신규지구 예산을 미편성한 시군은 응모 불가

- 신청서류 : 농촌공간 전략계획(예비), 활성화계획(예비), 증빙서류 등
- 협약기간 : 2022~2026, 5개년
- 우대사항, 고려사항
 - 읍면 소재지, 배후 마을 등의 빈집 정비를 정책과제에 포함하는 경우 우대
 - 농촌지역 균형발전 관점에서 특정 시도에 편중되지 않도록 고려할 예정
- 2021년 추진일정(예정)
 - 2021년 추진 공모 : 2021년 1월 알림, 5월 접수 예정
 - 응모 시군 평가 : 2021년 5월 ~ 6월
 - 선정 결과 발표 : 2021년 6월말

□ 충남 시군의 농촌협약 공모 준비 상황 : [표 6-6] 참고

- 전국 선정 현황 : 전국 9개 + 예비지구 3개 시군(2020.06. 발표)
 - 홍성군, 임실군, 원주시, 영동군, 순창군, 보성군, 상주시, 김해시, 밀양시
 - * 1차(2019.12.20.~2020.1.17.), 25개소 응모, 2개 시군(홍성, 임실) 선정
 - * 2차(2020.4.17.~6.10.), 19개소 응모, 7개 시군 선정
 - 예비지구 : 이천시, 영월군, 괴산군
- 충남에서 선정되어 협약 체결을 준비중인 시군 : 홍성군
 - 2020년 11월 현재, 농식품부 주도로 2주 1회 빈도로 자문회의를 진행하며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생활권계획 범위 설정 등에 대해 계속 토론 중임
 - 별도로 선정된 지역발전투자협약사업(국토부)과도 관련하여 조직개편을 통해 농촌정책의 전담 '과' 신설을 검토하였으나 이루지 못한 상태임(2020년 11월 현재)
- 2021년 신규 공모 신청을 추진중인 시군(7) : 예산, 부여, 서천, 공주, 청양, 보령, 금산
 - 예산군 : 2020년도 심사에서 탈락하였지만 준비 정도가 가장 앞선 상태
- 2021년 본예산에 반영한 시군(3) : 아산, 당진, 서산 등

[표 6-6] 충남 시군의 농촌협약 공모 준비 상황(2020.12. 현재)

시군	용역기관	용역금액	계약일시	비고
홍성군	충남연구원	180,000천원	2019.12.~2020.11.	수익계약
예산군	(주)우리누리	18,662천원	2019.11.~2021.05.	수익계약
부여군	(주)착한동네	300,000천원	2019.11.~2021.06.	일반협상에 의한 계약 역량강화사업 370백만원 통합 발주
서천군	지역농업네트워크 충청협동조합	20,240천원	2020.02.~2020.07.	수익계약 (전략계획 용역비 ' 21년 예산 반영)
공주시	(주)정앤서	255,000천원	2020.07.~2021.05.	일반협상에 의한 계약
청양군	(주)지역활성화센터	294,000천원	2020.07.~2021.05.	가격경쟁입찰 (수익계약)
보령시	(주)정앤서	217,500천원	2020.08.~2021.06.	일반협상에 의한 계약
금산군	(주)지역활성화센터	270,000천원	2020.09.~2021.06.	일반협상에 의한 계약
아산시	(충남연구원 우선 검토중)	300,000천원	2021년 발주	
당진시	(충남연구원 우선 검토중)	260,000천원	2021년 발주	
서산시	(충남연구원 우선 검토중)	380,000천원	2021년 발주	

* 주 : 추진 중인 시군은 계약금액 기준이고, 2021년 준비 시군은 본예산 기준

□ 당진시의 농촌협약 추진상황

- 2020년 하반기부터 타 지자체 사례 수집, 농촌협약 설명회 참여, 충남연구원 방문 등을 통해 정책 동향을 분석하고 당진시 추진방향을 검토함
 - 상대적으로 늦게 출발하였지만 타 지자체에 비해 빠르게 대응함
- 예산 : 2021년 본예산으로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260백만원 상정
- 당진시 관련 상위계획 검토1 : 당진시 농발계획(2016.12.) 참고
 - 당진시의 농발계획은 2017~2021년의 5개년을 계획기간으로 하고 있고, ‘농촌협약’ 관련 분야는 상대적으로 매우 빈약하게 다루어짐
 - 농발계획은 생활권 분석을 별도로 하지 못하고 있음. 충남연구원에서 수행한 중심지 기능지수 분석을 통해 읍면별 중심지 계층 구분만 하고 있는 상황임(242쪽)

- ‘제4장 삶의질과 지역역량 강화’ 부분에서는 당진시 통계연보에 기초하여 각종 생활환경과 복지 현황을 읍면별로 분석하고 있음
- 현재의 농발계획은 매우 내용이 빈약하므로 농촌협약에서 요구하는 상위계획과의 정합성을 판단하기 어렵고 1차 생활권계획에 포함될 예비 읍면도 선정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임. 세부 사업내용도 단위 사업을 나열하는 정도에 그침([표 6-7] 참고)

[표 6-7] 당진시 농발계획(2017~2021)의 농촌협약 관련 사업 및 예산투자계획

부문	사업명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농촌 지역 개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신규 2개소)	0.0	1,500.0	6,234.0	3,800.0	2,466.0	14,000.0
	마을사무장 제도 운영	48.0	120.0	120.0	120.0	120.0	528.0
	마을 공적공간 리모델링 지원사업	300.0	600.0	600.0	900.0	900.0	3,300.0
	역량강화 및 마을발전계획수립	50.0	50.0	50.0	50.0	50.0	250.0
	창조적 마을만들기(권역/마을)	6,000.0	6,000.0	6,000.0	6,000.0	6,000.0	30,000.0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설치	150.0	150.0	150.0	150.0	150.0	750.0
	정주여건(기초 생활정비)	600.0	600.0	600.0	600.0	600.0	3,000.0
	녹색에너지 마을 조성(태양광지원)	200.0	200.0	200.0	200.0	200.0	1,000.0
	농경문화 테마존 조성사업	300.0	300.0	300.0	300.0	300.0	1,500.0
	귀농인의 집 설치	100.0	100.0	100.0	100.0	100.0	500.0
	합덕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 시설	500.0	1,300.0	0.0	0.0	0.0	1,800.0
	소계	8,248.0	10,920.0	14,354.0	12,220.0	10,886.0	56,628.0
삶의질 및 지역 역량 강화	읍면별 지역발전계획 수립 의무화	비예산사업					
	지역혁신 추진단 운영활성화	100.0	100.0	100.0	100.0	100.0	500.0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100.0	100.0	100.0	100.0	100.0	500.0
	노인 공동생활홈 시범운영	0.0	500.0	500.0	500.0	0.0	1,500.0
	농민의료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운영	0.0	0.0	500.0	0.0	0.0	500.0
	융합형 농촌문화 교육센터 건립 지원	0.0	500.0	500.0	500.0	0.0	1,500.0
	농촌 학습조직 교육 프로그램 지원	100.0	100.0	100.0	100.0	100.0	500.0
	생활농협 특색사업 지원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5,000.0
	고령농업인 아름다운 요양시설 건립	0.0	0.0	0.0	0.0	5,000.0	5,000.0
	소계	1,300.0	2,300.0	2,800.0	2,300.0	6,300.0	15,000.0
농정 거버 넌스	농업회의소 지원조례 제정	비예산사업					
	농업 부시장제도 도입						
	농업회의소 역량강화 지원	40.0	40.0	40.0	40.0	40.0	200.0
	읍면순회 정책설명 및 신문고 운영	10.0	10.0	10.0	10.0	10.0	50.0
	당진시 농정추진지침 개발 보급	10.0	10.0	10.0	10.0	10.0	50.0
	당진시 농업재단기금 조성	5,100.0	5,200.0	3,500.0	500.0	700.0	15,000.0
	당진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설립	비예산사업					
	당진시 6차산업화활성화센터 설립						
	농업인 자발적 학습조직 운영	30.0	30.0	30.0	30.0	30.0	150.0
	소비자 자발적 학습조직 운영	15.0	15.0	15.0	15.0	15.0	75.0
	소계	5,205.0	5,305.0	3,605.0	605.0	805.0	15,525.0

* 주 : 당진시, 2016.12., 『당진시 3농혁신 및 농업·농촌·식품산업 발전계획』, 545~546쪽

- 당진시 관련 상위계획 검토2 : 당진시 종합발전계획(2014.03.) 참고
 - 당진시 2030년 도시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중심권, 서북권, 동남권의 3대 권역으로 구분함([그림 6-10] 참고)
 - 동남권에 합덕읍과 면천, 순성, 신평, 우강 등 4개 면을 배치하고 ‘교통 및 역사·문화·관광 중심 지역’으로 육성하는 전략을 제시함. 3대 프로젝트로 지역 특화발전 특구(명월초 한방약초) 조성, 합덕역 역세권과 연계한 첨단 지식 비즈니스 타운 조성, 남부권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제안함

[그림 6-10] 당진시 2030년 도시기본계획과 종합발전계획에서 제안하는 권역 구분



자료 : 당진시, 2014.03., 『당진시 종합발전계획』, 9쪽 슬라이드

□ 농촌협약 관련 정책 동향의 시사점

- ‘총론 찬성, 각론 이견’ 상황이 지속중
 - 자치분권의 큰 흐름 속에서 균형발전특별법 제20조에 기초한 계획협약 방식은 앞으로 지향해야 할 큰 방향인 것은 분명하고, 이에 맞추어 지자체 정책 시스템을 사전에 정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0조(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 등)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이나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업내용 및 투자 분담 등이 포함된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균형발전위원회가 주도하고 국토부가 주관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사업도 균형발전특별법의 협약 제도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는데, 충남에서 유일하게 선정된 홍성군도 추진상황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평가임
- 또 국무조정실(생활SOC추진단) 주도로 균형발전위원회가 협력하여 행안부, 국토부, 농식품부 등에서 추진하는 생활SOC복합화 사업도 유사한 관점에서 지역발전투자협약 방식으로 추진 중에 있고, 사업규모가 계속 확대 중에 있음
- 이러한 계획협약 방식이 실효성이 있고 타당한 전략인지, 사업을 주도해야 할 지자체의 정책 전문성이 있는지, 민간의 자치역량이 준비되어 있는지 등 여러 비판들이 제기되고 있음
- 향후 이런 정책 동향을 충분히 파악하면서 접근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 **민관협치형 정책 추진체계로의 사전 정비 강조**
 - 농촌협약은 국토부 도시재생뉴딜사업의 공모지침, 농특위 의결안건([표 1-1] 참고)과 동일하게 사전에 지자체의 ‘민관협치형 정책 추진체계 구축’을 계속 강조하고 있음. 농특위 의결 안건(2019.12.)의 취지도 반영하여 공모 신청 이전에 미리 정비해야 유리한 상황임
 - 농촌협약은 민관협치형 정책 시스템을 사전에 구축한 지자체가 선정에도 유리하고, 선정 이후의 추진과정도 원활할 것으로 기대됨
-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협약의 사후관리가 더 중요**
 - 농촌협약은 20년에 걸친 농촌공간 전략계획에 기초하여 추진되는 방식으로 지역계획의 중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하기를 요구함
 - 생활권계획도 5년 계획에 해당하고 농발계획 등의 중장기계획과 연계하여 세부 사업계획까지 수립하고 추진해야 하는 상황임
 - 이런 관점에서 지자체 내부의 질 높은 정책(계획)관리 역량이 요구되고 있음. 농촌협약 제도가 요구하는 ‘농촌협약지원센터’는 협약 체결 이후의 추진과정까지 염두에 둘 때 필수불가결한 방향으로 인정하고 있음. 사전준비와 추진과정, 그리고 사후관리까지 포함하여 지자체의 정책(계획)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중간지원조직을 선제적으로 설치하는 등 정책 추진체계 정비는 시급하고도 중요함

2) 당진시의 접근 방향 : 전략적이고 종합적인 접근

□ 높은 경쟁률, 모호한 사업지침에 유의하며 전략적으로 판단

• 높은 경쟁률 : 충남에서만 10개 시군이 준비 중

- 농촌협약은 전국의 123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군이 신청 대상이고, 연구용역 추진상황을 보면 매우 과열되는 상황이라고 평가됨. 용역을 추진할 수 있는 컨설팅기관은 한정되어 있고, 계획 수립 역량이 의심되는 곳도 많으며, 역량있는 컨설턴트도 매우 부족한 상황임
- 사업지침에는 “전제조건을 충족하는 시군 중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은 곳”이 신청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시도는 농식품부 평가요소·기준을 고려하여 시군을 추천하는 방식임. 2020년 11월 현재, 충남도에서 2021년 5월에 신청 가능한 시군 수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임
- 2020년 12월 현재, 충남도에서 사업 신청을 준비 중인 시군은 당진시를 포함하여 최소 10개 시군이나 되므로 매우 경쟁률이 높음. 이미 신청하여 탈락한 경험이 있는 예산군이나 농촌마을정책의 민관협치형 시스템을 사전에 구축한 다른 시군 등은 당진시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음

• 현재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전략적으로 접근

- 2020년 1월에 1차로 선정된 홍성군에서도 아직 생활권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에 있고, 세부 사업내용도 계속 협의 중에 있는 상황임. 농촌협약 중앙계획지원단의 위원들 사이에서도 생활권계획의 개념과 구분 방식 등에 있어서 의견 차이가 많은 상황임. 이러한 정책적 모호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당진시도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 당진시는 2022년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것을 목표로 함과 동시에 ‘민관협치의 농촌정책 시스템 강화’와 ‘민간의 조직적 역량 강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함. 이를 통해 중장기 관점에서 당진시의 민관협치 역량이 강화되고, 공모사업에 탈락했을 경우에 또다시 도전할 수 있는 명분과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음

□ 민관협치의 농촌정책 시스템 강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접근

• 행정 전담부서에 중장기 종합계획 관리를 위한 임기제 공무원 채용

- 당진시 내부의 종합적인 정책(계획)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전에 농촌협약이 요구하는 전제조건을 정비해나감. 행정의 농촌협약 전담부서에 이런 권한을 부여하고 기능을 보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특히 공동체새마을과 마을공동체팀에 도시/농촌계획 전공자를 임기제 공무원(임기제 ‘가’ 급)으로 채용하여 행정의 정책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을 적극 검토해야 함. 이런 사전조치를 통해 선제적으로 농촌협약을 준비해야 후발주자로서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음(홍성군 농정기획단과 예산군 농촌활력팀 임기제 공무원 사례 참고)
- **중장기적으로 지자체 연구소 기능 강화 : 협약관리팀(가칭) 신설 구상**
 - 현재 제도에서는 기초 지자체에 연구소 설치가 가능하지 않지만 농촌협약 선정시에는 공동체새마을과 산하에 협약관리팀(가칭)을 신설하는 구상을 제안해야 함. 신설 팀에서 지자체의 농촌협약을 포함하여 중장기 종합계획을 총괄·조정하고 각종 통계자료를 수집·분석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농촌협약 예비계획서에도 반영하는 것이 유리함
 - 현재 각종 연구용역의 외부 발주가 매우 빈번하고, 연구용역 단가가 계속 상승하며, 연구보고서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투자 대비 효과는 매우 높다고 판단함
 - 지자체 공무원수의 제약(총액인건비) 요건으로 인해 신규 채용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단기적으로는 중간지원조직에 기능을 부여하여 계획 관리 역량을 축적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음
- **농촌협약 위원회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의 선제적 준비**
 - 당진시는 공동체새마을과 신설과 행정직영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설치로 부분적으로 농촌협약의 3대 전제조건을 일부 갖춘 상황임. 하지만 민관협치 위원회를 개최하고 운영한 경험이 없는 등 농촌협약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에는 여전히 제도적으로 부족한 상황임
 - 앞으로 농촌협약으로 확장될 수 있는 민관협치형 통합형 위원회와 통합형 중간지원조직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2021년 상반기 내에 제도적 정비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2021년 5월의 신규 공모 신청 일정에 맞추는 것이 가능할 것임

□ 민간의 조직화와 역량 강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접근

• 신활력플러스와 연계하여 농촌협약 민간 당사자의 체계적 육성

- 현재의 농촌협약은 협약 당사자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핵심으로 되어 있지만 향후 중간지원조직, 민간주체, 공공기관 등으로 확장될 것으로 예상함. 특히 행안부 주민자치회를 둘러싼 정책 동향을 고려할 때(읍면동 발전계획 수립, 주민총회 개최, 주민참여예산제 연계 등) 행정과 읍면동 주민자치회 사이의 정책협약으로 발전될 것으로 판단됨. 이런 점에서 당진시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음
- 하드웨어 사업 자체는 행정이 직접 수행하거나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집행할 수 있지만 인적역량 강화, 프로그램 사업 집행, 사후관리 등 정책의 효과성을 고려할 때 지역사회 내부의 민간 당사자(특히 사회적경제조직)가 매우 중요함. 향후 당진시 내부에서도 행정과 파트너십을 형성하며 실질적으로 사업주체 역할을 할 수 있는 민간 당사자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음
- 당진시는 그동안 축적된 읍면동 주민자치회 역량을 기반으로 신활력플러스 사업의 선정을 통해 민간주체의 발굴과 체계적인 성장과정을 지원해야 함. 이를 통해 농촌협약에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선정된 이후에도 효과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임

• 농촌정책의 당사자협의체 및 네트워크 법인 설립은 시급한 과제에 해당

- 농촌협약의 대상이 되는 세부 사업을 고려할 때 민간주체로는 행정리 단위의 마을들이 모인 마을만들기협의회, 읍면 단위 중심지활성화(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의 추진위원회가 핵심적인 민간 당사자에 해당함
- 여기에 읍면 단위 주민자치회와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청년단체, 6차산업인증자 모임, 농촌관광 협의체, 귀농귀촌 협의체 등이 결합되는 형태가 될 것임. 또 이들 조직의 임원진이 농촌협약 위원회나 협의체의 구성원으로 참여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 그러므로 당진시도 농촌협약을 염두에 두고 2021년 2월 이내에 마을만들기 협의회를 설립하고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집중하여 그 성과를 농촌협약 예비계획서에 포함하는 것이 유리함. 이후에 농촌정책 관련 당사자 협의체들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법인화도 적극 시도함

- 2021년 5월 공모 신청 이전에 이러한 방향성을 공유하고 토론하며 일정 정도의 합의를 도출하는 공론장을 의도적으로 확보하고, 행정에서 적극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 이유에 해당함

□ 각종 통계자료(특히 행정리)의 수집과 정리, 분석, 그리고 활용

• 행정리 통계의 추가 수집과 분석 : 생활권 단위 2차 마을자원조사 실시

- 농촌협약의 전략계획과 생활권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읍면동뿐만 아니라 마을(행정리) 단위의 통계자료가 많이 필요함. 하지만 전국 9개 시군의 추진상황을 보면 이런 데이터 구축이 쉽지 않다는 것이 공통적인 과제로 부각됨. 통계청 통계자료는 대부분 읍면동 중심으로 제공되고, 인구 데이터 이외에 행정리 단위 데이터를 구축한 사례는 적기 때문임. 농촌협약에서 1차 생활권계획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는 읍면을 사전에 선정하고, 부족한 통계자료를 적극 수집하고 분석해야 함
- 당진시는 2020년에 225개 행정리 마을자원 전수조사를 완료함. 이를 통해 마을자원조사는 1차적으로 마친 상태이지만 농촌협약에서 요구하는 통계자료로는 여전히 부족함. 농촌협약 과업지시서에 이에 대한 보완내용을 반영하여 동일한 조사원이 1월부터 신속하게 추가조사를 하도록 해야 함

[2020년 마을자원 전수조사 사업개요]

- 조사목적 : 당진시 11개 읍면 225개 행정리 전수조사
- 조사기간 : 2020년 8월부터 12월(실질 조사 : 2020.9~11월)
- 조사원 : 6명(2인 1조로 구성하여 총 3개조로 운영. 각 조별 75개 마을 담당)
- 총예산 : 110백만원
- 주요 조사항목
 - 마을현황 및 보유자원 실태 : 토지현황, 인구특성, 경제기반, 마을리더, 공동체 기반(정주여건(공가 및 폐가, 유흥시설 등), 접근성, 공동체 활동 등
 - 마을 보유자원 현황 : 자연자원, 역사·문화자원, 특산물·특용작물, 농촌관광자원, 인적자원, 마을공동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 현황
 - 마을 보유자원 역량 수준 평가 : 정주생활기반, 교통여건, 환경·경관, 안전, 공동사업/커뮤니티, 정보화·문화수준
 - 마을발전 사업 추진역량 등
- 평가 : 양적 조사에 집중하였고, 통계DB는 구축중이며, 질적 조사는 향후과제로 남겨 둠

- 농촌협약 신청이 아니더라도 마을만들기 사업의 지방이양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당진형의 독자적인 농촌마을정책 수립을 위해서라도 행정리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는 등 DB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2020년과 2021년에는 ‘양적 조사’에서 집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농촌협약에 선정된 이후에는 약 5년간에 걸쳐 225개 농촌 행정리 전체에 걸친 ‘질적 조사’로 확장하는 사업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를 통해 당진시 농촌 마을(행정리) 전체에 걸친 유무형 콘텐츠를 발굴하여 ‘에코뮤지엄(지붕 없는 열린 박물관)’ 구상으로 발전시키는 전략도 적극 검토함. 당진시의 도농통합시 특성을 살려 도농교류, 마을교육공동체, 푸드플랜 등의 정책과도 연계하여 통계 DB를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함

• **농촌협약 연구용역(260백만원)과 결합하여 보완 방안 모색**

- 당진시는 농촌협약 관련하여 2021년 본예산으로 연구용역비 260백만원을 상정한 상태이고, ‘협상에 의한 경쟁입찰’ 방식으로 용역기관을 선정할 예정임
- 연구용역의 세부 내용 설계(과업지시서)에도 이런 점을 고려하여 (1) 2020년 마을자원조사 결과의 체계적 분석과 보완사항 추진, (2) 2020년 마을조사단 조사원의 활용과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연계 추진, (3) 수집된 통계를 활용하여 농촌협약에 225개 행정리 단위 ‘질적 조사’ 내용 추가방안 등을 검토하도록 요청함
- 이를 통해 농촌협약 연구용역이 전문 연구자 중심의 연구보고서에 그치지 않고, 연구과정의 노하우가 중간지원조직 상근자와 마을조사단, 행정 등에 체계적으로 전달되고 지역사회에 축적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함

3) 당진시의 2021년 당면과제

□ **현재의 성과와 과제에 대한 점검, 추진전략 수립**

• **농촌협약 총괄조정 부서의 적절성 검토와 재확인**

- 당진시의 공동체새마을과는 ‘공동체’를 키워드로 신설된 총괄조정부서로 주민자치, 마을공동체(농촌개발), 사회적경제, 새마을 업무로 구성됨. 공동체 새마을과(마을공동체팀)가 농촌협약 신청의 담당부서가 된다는 것은 다양한

농촌정책 영역의 총괄조정 기능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충분히 확보하면서 추진해야 함

- 공동체새마을과는 특히 농업농촌식품산업발전기본계획(농발계획) 수립 부서인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농업정책팀)와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농촌협약은 농발계획과 삶의질계획 등 중장기 종합계획과도 정합성을 확보해야 농촌협약 공모사업 선정에 유리하고 추진과정이나 사후 관리도 원활할 것이기 때문임

•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의 통합적 설치 방향과 연계 검토

- 당진시의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도 공동체 중심의 통합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계속 논의되어 왔고, 농촌협약의 정책동향까지 염두에 두고 통합형 조직 설계를 계속하여 제안해 온 것임
- 하지만 농촌협약에 포함되는 농촌정책의 각종 세부 사업과의 관계성을 고려하고, 또 향후 농촌협약지원센터를 어떻게 지정하고 운영할 것인지, 그 방향에 따라 중간지원조직의 통합적 설치 경로는 달라질 수 있음
- 다시 말해 중간지원조직은 마을공동체를 중심으로 사회적경제, 주민자치, 공익활동(청년) 등과도 연계해야 하지만, 이외에도 농촌관광, 귀농귀촌, 푸드플랜 등을 포함하거나 연계하는 제2의 경로도 있을 수 있음. 농촌협약을 염두에 두면 이러한 제2의 경로에 대해서도 앞으로 열어놓고 계속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공모 지침에서는 “중심지활성화, 마을만들기, 귀농·귀촌 등 관련 다수의 중간지원조직을 통합 운영 시 가점”으로 표현되어 있고, 농촌정책 이외 영역까지 가점을 인정하는지는 불명확한 상태임. 따라서 마을공동체팀이 담당하는 마을만들기에 덧붙여 중심지활성화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산하에 읍면계획팀(가칭)을 신설하는 방향도 적극 검토해야 함

• 홍성군의 시행착오 과정에 대한 철저한 벤치마킹

- 현재 농촌협약에 선정되어 추진 중인 홍성군의 상황에 대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이며 분석적인 벤치마킹이 필요함. 타산지석(他山之石) 관점에서 시행착오를 예방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한 검토가 필요함
- 홍성군은 농촌협약 예비계획서가 우수하여 선정되었다기보다 그 동안의 민

관협치 활동실적과 용역기관으로 참여한 충남연구원에 대한 신뢰감으로 선정되었다는 평가가 다수임

- 홍성군의 홍성통과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사)지역협력네트워크 등 ‘민관협치 정책 시스템 구축’의 경로와 현재 상황, 과제 등에 대해 단기간에 집중적인 분석을 통해 성과를 조기에 흡수토록 함. 특히 농촌협약 연구용역과 연계하여 홍성군 방식의 전면적인 분석과 선행 경험의 조기 전수에 집중함

□ 연구용역 기관 선정과 추진방향 결정

• 보고서 작성 기관(용역사) 선정방식 결정 : 협상에 의한 경쟁입찰

- 타 연구용역과 달리 농촌협약은 읍면동 단위뿐만 아니라 마을(행정리) 단위의 세세한 통계조사와 분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현황 분석에서 세부계획 수립까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요구됨. 기존의 자료를 단기간에 최대한 수집하고 분석해야 하고, 행정과 민간의 협력관계 및 역할분담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때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음
- 따라서 용역 수행이 가능한 공기관이나 민간 컨설팅기관의 목록을 작성하고 선정방식을 조기에 확정할 필요가 있음. 일반적인 가격경쟁입찰 방식으로는 좋은 용역사를 선정하기 어려움. ‘협상에 의한 경쟁입찰’ 방식을 통해 좋은 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1월중에 최대한 빨리 시행해야 5월 공모 신청 기한에 맞출 수 있을 것임

• 과업지시서의 주요 내용과 방법론 검토

- 일정 단계별 구분 검토 : 2021년 5월 신청을 염두에 두고 역순으로 일정 단계별 과업내용을 명확하게 정리하여 제안해야 함. 특히 공모사업 선정과 탈락의 두 경우의 수까지 고려하여 과업지시서에 반영해야 함. 선정 이후까지 고려하여 2021년 12월까지로 과업기간을 정하고, 선정결과에 따라 과업내용을 구분하여 제안해야 할 것임
- 현장연구원 제도 도입 검토 : 2021년 상반기에 집중적인 조사와 분석이 필요하기에 현장과 용역기관 사이의 소통을 전담할 수 있는 현장 상주연구원(6개월) 제도를 제안하고 원가산출에도 반영하기를 제안함. 현장 연구원은 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 상주하면서 기존 자료의 수집과 정리, 연구진과의 일상적인 소통 창구, 내외부 협력체계 구축 등의 역할을 담당함. 연구용역 완

료 이후에는 축적된 경험을 활용하여 당진시 관내에서 적절한 역할을 담당할 수도 있을 것임

- **1차적인 생활권 구분(안) 검토** : 빠른 시일내에 예비로 생활권을 구분하고 1차로 정해진 읍면 중심으로 각종 데이터를 조기에 수집하고 정리, 분석하도록 요청함. 행정에서는 관련된 통계자료나 사업 목록을 제시하고 역할분담 혹은 연계 추진방안을 제시하도록 요청함. 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각종 사업도 상반기에는 1차 생활권 읍면에 집중하여 추진할 필요도 있음
- **농촌협약의 주요 사업목록(안) 작성** : 사전에 예상할 수 있는 사업목록(농식품부 설명회 자료 26쪽 참고)을 정리하여 담당 부서와 상의하고, 관련 사업 추진상황을 정리하여 용역기관에 제공하는 것도 필요함. 연구진 이외에도 행정과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마을조사원 등이 숙지하고 주민 의견수렴 과정에서 적절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도 담당해야 함
- **코로나19 상황에 맞는 현장조사 방법론 제시 요구** : 농촌협약은 현장조사 비중이 아주 높다는 것이 특징이고, 그래서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함. ‘비대면’ 과 ‘대면’ 조사를 적절하게 구분하면서 현장조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도록 과업지시서에 반영함
- **전문 자문단의 구성과 체계적 운영 : 당진시 농촌정책 전문가풀 형성**
 - 한국 지방에서는 농촌개발의 전문가풀이 매우 제약되어 있다는 현실을 고려하여 충남권 중심으로 전문 자문단을 조기에 확보할 필요가 있음. 특히 농촌협약이 과열 경쟁 상태임을 고려하면 신속하게 움직여야 할 것임. 농촌협약 신청단계에서는 소인수라도 무방하겠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전문가를 발굴하고 섭외하여 자문단을 구성해나가야 함
 - 전문 자문단을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무국 기능의 보완도 필요함. 이 기능은 초기에는 행정에서 담당할 수도 있지만 길게 보면 농촌협약지원센터 지정과 연계하여 마을만들기지원센터(민간위탁)의 기능으로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또 충남도에 제안하여 광역의 총괄 지원 기능을 강화하도록 요청하는 것도 지역의 부족한 전문가풀 확보 차원에서 필요할 수 있음. (1) 농촌협약과 신활력플러스, 중심지활성화(기초생활거점) 등의 정책과 사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광역계획지원단(광계단) 설치, (2)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

지원 권한 부여(추가 인력배치 포함)와 농촌활성화지원센터 통합, (3) 농업 농촌정책 영역의 재단법인 조기 설립 등

- 당진시의 농촌개발 전문가풀은 개별 사업별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농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침에 따라 마을만들기와 중심지활성화(기초생활거점), 신활력플러스, 농촌협약 전체를 염두에 두고 ‘기초계획지원단 혹은 PM단’ 형식으로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권장함

* “기초계획지원단은 농촌계획, 문화, 복지, 환경, 건축, 경제 등 전문가 5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PM단은 전문가 3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공공건축 건축기획 및 디자인 품질 개선 등을 위해 건축분야 전문가 1인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농림축산식품부, “2020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서”, 36쪽)

참고 문헌

1. 충남연구원(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 수행 타 시군 유사 연구용역 보고서

- 공주시, 2018.12., 『2018년 공주시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1차년도 최종보고서, 충남연구원)
- 공주시, 2019.12., 『공주시 마을만들기 지원 시스템 구축 모니터링 및 운영방향 연구용역』 (2차년도 최종보고서, 충남연구원)
- 금산군, 2017.12., 『2017년 중간지원조직 설립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금산군)』 (1차년도 최종보고서, 충남연구원)
- 금산군, 2018.10., 『금산군 마을만들기 지원 시스템 구축과 중간지원조직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2차년도 최종보고서, 충남연구원)
- 논산시, 2015.12., 『논산시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설립 연구용역』 (1차년도 최종보고서, 충남연구원)
- 논산시, 2016.12., 『논산시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설립 연구용역』 (2차년도 최종보고서, 충남연구원)
- 당진시, 2019.8., 『2019 당진시 마을 공동체 만들기 컨설팅』 (1차년도 최종보고서, 충남연구원)
- 보령시, 2016.8., 『보령시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설립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1차년도 최종보고서, 충남연구원)
- 보령시, 2017.9., 『보령시 마을만들기 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용역』 (2차년도 최종보고서, 충남연구원)
- 부여군, 2018.12., 『2018년 부여군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설립 방안 연구용역』 (1차년도 최종보고서, 충남연구원)
- 서산시, 2019.11., 『2019 서산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1차년도 최종보고서, 충남연구원)
- 서산시, 2020.11., 『2020 서산시 마을만들기 지원시스템 구축 모니터링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2차년도 최종보고서, 충남연구원)
- 서천군, 2016.11., 『서천군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설립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1차년도 최종보고서, 충남연구원)

역』(1차년도 최종보고서, 충남연구원)

- 서천군, 2017.9., 『서천군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설립 및 운영방안』(2차년도 최종보고서, 충남연구원)
- 아산시, 2015.12., 『아산시 마을만들기 민간네트워크 구축 및 중간지원조직 운영방안 (1차)』(1차년도 최종보고서, 충남연구원)
- 아산시, 2016.7., 『아산시 마을만들기 민간네트워크 구축 및 중간지원조직 운영방안 (2차)』(2차년도 최종보고서, 충남연구원)
- 예산군, 2015.12., 『예산군 마을만들기 네트워크 구축 및 중간지원조직설립』(1차년도 최종보고서, 충남연구원)
- 예산군, 2017.3., 『예산군 마을만들기 지원시스템 구축방안(2차년도) 연구용역』(2차년도 최종보고서, 충남연구원)
- 천안시, 2015.12., 『천안시 마을만들기 지원협력시스템 구축 및 중간지원조직 설립 연구』(1차년도 최종보고서, 충남연구원)
- 천안시, 2016.12., 『천안시 마을만들기 지원시스템 구축 및 중간지원조직 운영방안(2차년도)』(2차년도 최종보고서, 충남연구원)
- 청양군, 2016.9., 『청양군 마을만들기 지원시스템 구축과 중간지원조직 설립 및 운영방안(1차년도)』(1차년도 최종보고서, 충남연구원)
- 청양군, 2017.12., 『청양군 마을만들기 지원시스템 구축과 중간지원조직 설립 및 운영방안(2차년도)』(2차년도 최종보고서, 충남연구원)
- 태안군, 2016.12., 『태안군 마을만들기 지원시스템 구축과 중간지원조직설립 및 운영방안(1차년도) 연구용역』(1차년도 최종보고서, 충남연구원)
- 태안군, 2017.12., 『태안군 마을만들기 지원 시스템 구축과 중간지원조직 설립 및 운영방안(2차년도)』(2차년도 최종보고서, 충남연구원)
- 홍성군, 2015.12., 『홍성군 마을만들기 네트워크 구축 및 중간지원조직 설립』(1차년도 최종보고서, 충남연구원)
- 홍성군, 2016.9., 『홍성군 마을만들기 지원시스템 정비 학술용역』(2차년도 최종보고서, 충남연구원)

2. 각종 행정문서, 보고서 자료 등

- 구자인, 2017.01.24., “농촌 마을만들기의 중간지원조직: 충남도 접근방식과 사례를 중심으로”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 보고, 비공개 자료)
- 구자인, 2018.11.18.,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체계의 개선 과제와 해결방향: 농촌정책의 중간지원조직 설치 및 운영 방안을 중심으로” (농촌경제연구원 송미령 박사 제공, 비공개 자료)
- 구자인, 2019.9.3., “지방자치단체 농어촌정책 추진체계 정비방안” (대통령직속 농어촌·농어업 특별위원회 제1차 농촌정책혁신 소분과 발표 자료)
- 구자인, 2019.11.12., “농촌마을, 르네상스는 올까?”, 농업농촌의길 2019 조직위원회, 『농업 농촌의 New Wave, 르네상스는 올까?』, 81-106쪽
- 구자인, 2020.9., “중간지원조직의 제도적 이해”,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 『충남농촌지역정책 융복합과 중간지원조직(4회 연속세미나의 기록)』
- 농림축산식품부, 2020., “2020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서”
- 농림축산식품부, 2020.7., “2020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및 농촌협약 시범도입” 관계자 워크숍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020.10.26., 『2021년도 농촌협약 설명회』 (설명회 배포 자료집)
- 농림축산식품부, 2020.12., 『역량강화사업 전담기관 지정·운영 가이드라인(안)』
-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8.,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성과 분석 및 발전모델 개발
- 당진시, 2014.03., 『당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 (시의회 보고 최종 ppt 자료)
- 당진시, 2016.12., 『당진시 3농혁신 및 농업·농촌·식품산업 발전계획』
- 당진시, 2018.8., 『준공지구 역량강화(제1기 마을대학) - 거버넌스 구성 운영』
- 당진시, 2018.9., “2018년 도시재생 역량강화사업 위수탁 협약 변경 및 인력채용계획(방침)”
- 당진시, 2020.5., “당진시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예비계획서”
-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농어촌정책의 민관협치형 정책시스템 구축” (본위원회 2019.12.03. 의견안건)

- 서정민, 2019.03., “농촌 읍면 주민자치와 지역만들기” (충남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상근자 직무연수 자료집)
- 재단법인 전북연구원, 2019.1., 『농촌지역 사회적경제 성공요인 분석연구』, 농림축산식품부
- 정란아, 2020.11.13., “협치형 민간위탁 가이드라인 제정의 의미와 한계”, 충남공익활동지원센터 주관, ‘협치형 민간위탁 가이드라인 학습회’ 발표 자료
- 지역재단 지역순환경제센터, 2018.11., 『농촌형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 연구』, 행정안전부
- 청양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2019.11., “청양군 함께이음 정책” (내부 자료)
- 청양군, 2019.10., 『청양군 지역활성화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충남연구원 수행)
- 청양군, 2019.5., 『청양군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수립 연구』 (지역재단 수행)
- 충남연구원 마을만들기지원센터, 2017.12., 『지도로 보는 충남 마을만들기 행정사업』
- 충남연구원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 2017.12., 『충남 희망마을 만들기 제3기 기본계획(안) 2018~2022』 (내부과제)
- 충남연구원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 2019.12., 『충남 마을만들기 행정사업 DB 구축(2차)』
- 충남연구원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 2020.2., 『농산어촌 유토피아 구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시범계획 수립』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의뢰)
- 충남연구원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 2020.11., “중간지원조직 상근자 맞춤형교육 4차 자료집”
- 충청남도, 2018.2., 『(충청남도 마을만들기 행정사업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마을사업 한번에 파악하기 길라잡이 2019』
- 행정안전부, 2016.12.28., “2017년 지자체 기준인건비 최종 산정결과 통보” (자치제도과-4908)
- 행정안전부, 2018.5.10.,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33호)”
- 행정안전부, 2020.3.,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

- 행정안전부, 2020.9., “협치형 민간위탁 활성화 가이드라인”
- 행정안전부, 2020.11., “반갑다, 협업(협업도움서)”, 인터넷 게시용 작업 자료 초안
- 홍성군, 2020.12., “홍성통 12월 정기회의 계획(안)”

3. 기타 관련 홈페이지 사이트 자료

- 공주시 공동체종합지원센터(<http://www.gongju.go.kr/gctc/index.do>)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당진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블로그(<https://blog.naver.com/dangjincity4430>)
- 당진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밴드(<https://band.us/band/79262837>)
- 당진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블로그(<https://blog.naver.com/dangjinmaeul>)
- 당진시청 홈페이지(<http://www.buyeo.go.kr>) 및 각종 회의록, 자료집, 내부자료
- 서산시청 홈페이지(<https://www.seosan.go.kr>)
-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http://sscf2016.or.kr/>)
- 완주소셜굿즈센터(http://www.wanjucoop.co.kr/#partner_f_item8)
-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
- 청양군 블로그(<https://blog.naver.com/cheongyange>)
- 화성시마을자치센터(<http://hsmaeul.or.kr/>)

부 록

부록1 당진시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부록2 당진시 마을만들기협의회 정관(안)

부록3 충청도 시군 마을만들기 지원시
스템 구축 현황

부록 1

당진시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 2019.07.15 조례 제70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자치 실현과 마을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 나. 시에 소재한 사업장·학교 등에 근무하거나 소속된 사람
3.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주민자치를 실천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4. “마을만들기”란 주민 스스로 마을을 살기 좋은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공동으로 추진하는 모든 활동으로써 지역사회가 당면한 각종 문제를 해결하거나 마을 발전을 위하여 마을공동체가 추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마을만들기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한 마을공동체의 회복 지향
2.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할 것
3.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할 것
4.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추진할 것

제4조(시장의 책무)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마을만들기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마을만들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마을공동체 활동 및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마을만들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2. 마을만들기의 행정 추진체계 정비, 민관협력체계 및 마을 네트워크 구축
3. 마을만들기의 특색있는 사업 발굴 및 추진방향

4. 주민주도로 수립한 마을발전계획에 대한 지원계획
 5. 당진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계획
 6. 그 밖에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
-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마을만들기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1. 마을만들기 정책의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내용
 2.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3. 마을만들기 사업 범위 및 사업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마을만들기 관련 교육(주민 및 공무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마을만들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 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당진시의 주요정책과 연계하여 작성한다.

제8조(마을만들기 사업 지원) 시장은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제9조(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의 구성) ①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마을은 자체적으로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하여야 한다. 추진위원회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 ② 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 등 세부사항은 마을 자체적으로 정한다.

제10조(사업신청 등) ①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추진위원회는 주민합의를 거쳐 마을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각 사업별 지침에 따라 사업계획서, 마을 주민의 동의서 등을 첨부한 사업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사업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마을만들기 사업을 공모하거나 시범사업 또는 시범사업을 선정 지원·육성할 수 있다.

제11조(평가와 포상) ① 시장은 매년 사업을 분석·평가하여야 하며 평가의 전문성과 향후 발전적 대안을 찾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마을만들기 사업에 기여한 주민 또는 추진위원회,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당진시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사업비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 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 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아 쓸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
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제13조(마을만들기 행정지원협의회 설치·운영) ① 시장은 마을만들기의 각종 행정 사업을 담당하는 관련 부서들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마을만들기 행정지원협의회(이하 “행정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지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지원센터의 설치) 시장은 마을만들기 사업의 체계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당진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지원센터의 업무) ①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주민 교육 및 마을 컨설팅
2. 마을만들기 사업 완료 후 사후관리
3. 마을만들기 사업 조사 및 통계정보 수집과 정리·배포
4. 마을만들기의 홍보와 소통을 위한 미디어 제작과 배포
5. 국내외 마을만들기 방문객 대상의 견학 안내 및 연수 지원
6. 마을만들기 사업 관련 민간단체 및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7. 마을만들기 조사 및 연구·분석사업
8. 그 밖에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6조(민간 위탁 및 운영) ①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연장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지도·감독 등 필요한 사항은 「당진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제정 2019.7.15 조례 제7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록 2

당진시 마을 만들기 협의회 정관(안)

- 이 정관안은 당진시 마을만들기협의회 준비위원회가 타 시군 마을만들기협의회 정관을 참고하면서 2020년 11월부터 3차에 걸친 토론을 통해 작성한 초안에 해당함
- 굵은 볼드체 글씨는 토론 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부분임을 표시한 것임
- 향후 2021년 1~2월 2회 마을대학에서 충분한 토론을 통해 합의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고, 공동학습의 자료로 삼기 위해 부록에 실은 것임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당진시 마을만들기 협의회’ (이하 ‘본 협의회’라 칭함)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협의회는 당진시 회원 마을의 상호협력체계 구축과 마을별 공동 사업 활성화를 통해 주민들이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하여 당진시를 마을 만들기의 선진지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 협의회는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각 회원 마을의 지속적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사업
2. 각 회원 마을의 농촌관광과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제반 지원사업
3. 각 회원 마을의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유통사업
4. 각 회원 마을의 주민 교육 및 선진지 견학 등 교육사업
5. 마을사무장의 활동 지원과 귀농귀촌인의 성공적 마을 정착을 위한 자문사업
6. 각 회원 마을 및 위원장의 상호 교류 및 협력사업
7. 마을만들기 관련 행정 위탁 사업
8. 마을만들기 관련하여 행정에 대한 의견 개진 사업
9. 기타 본 협의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제4조(소재지) 협의회 사무소는 충청남도 당진시 ‘당진시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 둔다.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자격) 본 협의회는 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마을 공동활동을 위한 추진위원회 설립과 마을규약 제정, 주민 공동활동 추진 등 **국가정책사업**을 진행한 최소한의 활동 여건을 갖춘 마을로서, 마을 추진위원장이 마을회의를 거쳐 위임을 받아 대표로 신청하며, 마을주민으로부터 소정의 가입서를 받아 제출하고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회원 자격이 주어진다.**

제6조(회원의 권리) 본 협의회는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2. 제반 회의에 참여할 권리
3. 운영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권리
4. 본 협의회 업무 집행에 대한 감사 및 감독의 권리
5. 본 협의회 행정 보조사업의 공동집행권한을 가지며, 각종 마을만기 사업에 대한 우대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제7조(회원의 의무) 본 협의회는 회원은 마을을 대표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책임성 있게 행동하며, 행정과 대등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갖는다.

1. 본 정관을 준수할 의무
2. 총회 및 회의의 출석할 의무와 의결 사항을 준수할 의무
3. 회비 및 분담금 등을 납부할 의무
4. 마을 농특산물의 공동유통에 참가할 의무
5. 기타 본 협의회 발전에 위하여 노력할 의무

제8조(가입 및 탈퇴) 본 협의회 회원의 가입 및 탈퇴는 다음과 같다.

1. 마을회의를 거쳐 결정된 추진위원장은 위촉과 동시에 본 협의회 회원이 될 자격이 주어지며 가입할 수 있다.
2.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여 마을회의에서 본 협의회 탈퇴를 의결한 마을은 자동으로 탈퇴한 것으로 본다.
3. 각 회원의 마을회의나 규약 또는 정관의 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교체되는 경우에는 차기 위원장이 권한과 의무를 자동적으로 승계한 것으로 본다.
4. **본 협의회 탈퇴 후 재가입 신청시 신규회원에 준하며,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총회에서 의결한다.**

제9조(제명) 본 협의회는 회원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할 시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1. 제7조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본 협의회에 손해를 끼치거나 명예를 실추 시킨 자
3. 본 협의회를 빙자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한 자
4. 제21조의 마을위원장 정기회의를 무단으로 3회 연속 불참한 자

제3장 임원 및 운영위원회, 사무국

제10조(임원 구성) 본 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회 장 1명
2. 부회장 2명
3. 감 사 1명
4. 사무국장 1인

5. 기타 각 읍면을 대표하는 운영위원 9명. 단, 제5조의 회원 자격과는 별개로 당진시마
을만들기지원센터장(사무국장)이 총회의 의결을 거쳐 당연직 운영위원이 될 수 있다.

제11조(임원의 임기) 본 협의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회장은 1
회에 한하여 연임한다.

제12조(임원의 선출) 임원은 정기총회 시 선출한다.

제12조의1(임원선거) 임원선거의 투표권자는 마을대표인 추진위원장1인1표로 한다

제13조(임원의 직무) 임원들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1. 회 장 : 본 협의체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하고 각종 회의 시 의장이 된다.
2.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부회장 2인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3. 감 사 : 회계 및 재무를 감사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4. 사무국장 : 회계 및 재무, 협의회 운영을 위한 업무 전반을 맡는다.
5. 기타 운영위원 :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각 운영위원의 재능과 희망을 존중하여 직
무를 정한다.

제14조(임원의 보수) 본 협의회는 임원은 무보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 협의회와 관
련하여 출장할 경우 실비 범위 안에서 여비를 지급(본 협의회 내규에 따라)할 수 있다.

제15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중대한 과실이나 태만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고 판단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위원회) 본 협의회는 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두고 일상적인 활동의
의사결정을 한다.

1. 운영위원회는 정기총회의 위임된 권한내에서 일상적인 사업의 방향과 내용을 결정하고,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본 협의회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긴급을 요하는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

2. 운영위원회는 회장 1인, 부회장 2인, 감사 1인, 사무국장 1인, 당진시마을만들기지원센터 센터장(사무국장) 1인, 총회에서 선출된 각 읍면대표 운영위원 9인 등 총 15인으로 구성한다.

3. 협의회 회장은 투표권이 없으나 운영위원회의 안건에 대한 의결시 찬반 동수일 경우 협의회 회장이 결정한다.

4. 본 운영위원회는 매월 1회 개최한다.

제17조(사무국) 본 협의회는 협의회의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이를 총괄하는 상근 사무국장을 채용할 수 있다.

제4장 회 의

제18조(회의 구분) 본 협의회의원 회의는 다음과 같다.

1. 정기총회
2. 임시총회
3. 운영위원회 정기회의 : 매월 첫째주 금요일 오전 10시(매월 1회)
4. 마을위원장 정기회의 : 매월 셋째주 금요일 오전 10시(매월 1회)

제19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회계연도 마감 후 2개월 이내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2. 전년도 회계 등 사업 추진상황 감사 보고
3. 익년도 사업계획 보고
4. 정관의 개정
5. 기타 발의된 안건

제20조(임시총회) 임시총회는 긴급한 안건이 있을 시 회장의 요구 혹은 회원의 과반수 이상 발의에 의해 개최할 수 있다.

제21조(운영위원회 정기회의) 운영위원회 정기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한다.

제22조(마을위원장 정기회의) 마을위원장 정기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한다.

제23조(회의 의결)

1. 본 협의회체는 정관의 개정, 회원의 가입 및 제명, 임원의 선출 및 해임은 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2/3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2. 그 외 기타 안건은 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총회 의결시 안건에 대한 찬반 동수일 경우 재투표 한다.

제5장 재 정

제24조(회비) 본 협회회의 재정은 회원의 입회비와 정기회비, 수익사업 수익금, 후원금, 보조금,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1. 입회비는 가입시 10만원 1회로 하며 탈퇴 및 제명 시에는 반환하지 않으며, 또한 해당 시점까지 이루어진 적립금 등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가지지 못한다.

2. 정기회비는 연간 24만원으로 한다.

3. 입회비와 정기회비는 마을회의나 법인의 결정을 거쳐 마을사업 통장에서 본 협회회의 지정된 통장 계좌로 입금한다.

제25조(기본 재산의 처분 등) 본 협회체에서 발생한 수익금, 후원금, 보조금, 그리고 기본 자산 등은 회원들에게 분배하지 않고 공익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다.

제26조(회비사용) 본 협회회는 다음 각 항의 사유가 발생할 시 회비를 사용할 수 있다.

1. 회의 시 사용되는 제반 경비

2. 각 지구의 사업 관련 행사가 있을 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후원금 또는 후원물품은, 년 1회 10만원 이내로 지원하고, 예외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3. 기타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정기회의에서 그 집행을 의결했을 시

제27조(회계년도) 본 협회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까지로 한다.

제28조(기타) 본 협회회의 활동에 사용하는 재정은 사무국에서 관리하며 재정에 관한 전반적 사항은 회장과 사전 협의하며 집행한다.

부 칙

제1조(민관협력) 본 협회체는 당진시 마을만들기 담당팀을 협의 창구로 하여 대등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당진시 마을 만들기 사업의 발전에 기여한다.

제2조(시행일) 본 정관은 0000년 00월 00일에 아래 임원들의 서명에 의하여 확인하고 공포일로부터 그 효력을 가진다.

부록 3

충남도 시군 마을만들기 지원 시스템 구축 현황

(2020년 12월 현재)

사군	총괄·조정부서	중간지원조직	행정과 민간의 추진상황
천안	농업정책과 농촌활력팀 (푸드플랜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16. 8월 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근 센터장 + 상근 인력 5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경제과 마을만들기TF팀 설치(2016.1월) 마을공동체활성화지원조례 제정(2016.5월) 마을만들기팀 승격(2016.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2인(팀장1, 팀원1), 팀원1(임기제 채용검토) 업무 병합 노사공동체팀 신설(2017.4월) 일자리경제과 사회적공동체팀으로 담당부서 전환(2018.7월) 농업정책과 농촌활력팀 신설, 업무이관(2020.7월) 민간 네트워크(사단법인) 설립(2016.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천안공동체네트워크 함께아름(연구소 상근1명) 천안시 마을만들기협의회 발족(2018.4월) 제6회 마을만들기 충남대회 개최 1년 연기후 취소(2020.10월)
아산	사회적경제과 마을만들기팀 (사회적경제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체지원센터 (행정직영) 2015. 7월 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근 인력 4명 (팀장(임기제) 2명, 팀원(공무직) 2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경제과 마을만들기팀 신설(2015.1월) 주민참여 마을만들기 조례 개정(2016.9월) 제3회 마을만들기 충남대회 개최(2016.11월) 공동체경제네트워크 창립총회(2016.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로 관련 계속 토론중 제1회 마을만들기 아산대회 개최(2018.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간네트워크 법인 설립 필요성 토론 신활력플러스사업단 구성(상근4명, 2019.6월) 아산시 마을만들기협의회 발족(2019.12월)
논산	마을자치분권과 자치새마을팀 (주민자치, 공익활동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희망마을지원센터 추진단 (행정직영) 2015. 10월 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근 인력 2명 (팀원(공무직) 2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획감사실 공동체경제추진단 신설(2016.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6월 2명(기간제), 8월 2명(임기제) 채용 사회적경제과 지역공동체팀으로 전환(2017.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역량강화 등 희망마을건설과 마을공동체팀으로 복귀(2018.1월) 마을자치분권과 마을자치팀 이관, 명칭 변경(2019.1월) 동고동락 마을자치회 설치및운영 조례 제정(2018.3월) 마을공동체 활성화지원등에 관한 조례 제정(2019.7월) 공익활동지원센터 설치(2020.1월) 마을자치분권과 자치새마을팀으로 업무이관(2020.6월) 2015년, 논산희망마을포럼 조직개편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촌 마을만들기협의회로 전환(2017.1월) 사회적경제, 청년창업 등 교육 및 조직화 마을교육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 '벌개' 창립(2017.2월)

사군	총괄·조정부서	중간지원조직	행정과 민간의 추진상황
홍성	건설교통과 마을공동체팀 (일반농산어촌사업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민간위탁) 2016. 12월 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상근 센터장 + 상근 인력 6명 (+법인 5명, 도시 재생 3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정기획단, 농정과에서 기획감사실로 이관 ▶ 건설교통과 마을공동체팀 신설(2017.7월) ▶ 민관협력 거버넌스 '홍성통' 운영중 ▶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개정(2018.3월) ▶ 희망마을협의회 창립(2013.3월) 및 조직 재정비(2017.2월) ▶ (사)홍성지역협력네트워크 설립(2016.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재생지원센터(3명) 별도 수탁(2019.3월) ▶ 청년마을조사단 운영중 ▶ 사회적경제 청년활동가 운영중
예산	건설교통과 농촌활력팀 (일반농산어촌사업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복마을지원센터 (민간위탁) 2015. 11월 개소 (민간보조) 2018. 1월 민간위탁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상근 센터장 + 상근 인력 5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기제공무원 1명 채용(2015.11월) ▶ 행복 마을만들기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2016.7월) ▶ 건설교통과 농촌활력팀 신설(2020.7월) ▶ 마을위원장 협의회 구성(2016.6월) ▶ 행복마을만들기협의회 설립(2017.9월) ▶ (사)예산군행복마을네트워크 법인 등록(2017.11월) ▶ 공주대 산학협력단에서 민간위탁으로 전환(2018.1월) ▶ 제5회 마을만들기 충남대회 개최(2018.11월) ▶ 신활력플러스사업단 구성(상근2명, 2019.6월)
보령	도시재생과 마을공동체팀 (일반농산어촌사업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민간위탁) 2016. 3월 개소(행정직영) 2017. 3월 민간위탁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상근 센터장 + 상근 인력 5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과 마을만들기팀 신설(2016.7월, 3명) ▶ 별도로 도시재생지원센터(직영) 개소(2016.12월) ▶ 도시재생과로 업무이관 및 명칭 변경(2018.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체업무 담당 1명 추가 ▶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개정(2019.3월) ▶ 2021년 농촌신활력플러스 신규사업 선정 ▶ 희망마을협의회 창립(2014.7월) ▶ 마을만들기협의회로 전환(2015.4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 (사)만세보령공동체네트워크 창립(2016.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체험관광 유통네트워크 사업단 별도 설치(상근 3명) ▶ 제4회 마을만들기 충남대회 개최(2017.11월) ▶ 재단법인 설립 타당성 분석 연구용역(2019.3월) 시행
서천	건설과 희망마을팀 (일반농산어촌사업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재단법인) 2017. 1월 개소(행정직영) 2020. 1월 민간위탁 전환 2020. 12월 재단법인 출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상근 센터장 + 상근 인력 4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제정(2018.7월) ▶ 성장촉진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업무 이관(2018.1월) ▶ 건설과 희망마을팀으로 명칭 변경(2019.1월) ▶ 마을만들기협의회 창립(2017.4월) ▶ 공동체 네트워크 추진(2017.8월) ▶ (사)서천마을누리네트워크 창립(2019.4월) ▶ 2020. 1월 민간위탁 전환 ▶ 2020. 12월 재단법인(서천지속가능지역재단)으로 전환

사군	총괄·조정부서	중간지원조직	행정과 민간의 추진상황
청양	농촌공동체과 공동체기획팀 (주민자치, 일반농산어촌사업, 푸드플랜, 공공급식, 농촌관광, 6차산업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재단법인) 2017. 4월 개소(행정직영) 2020. 7월 재단법인 출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근 센터장 + 상근 인력 4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제정(2017.7월), 개정(2018.9월) 농촌공동체과 신설(5개팀, 19명)로 업무 전체 이관(2019.1월) 센터장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2019.5월) 2019년 농촌신활력플러스 신규사업 선정 통합형 재단법인 설립 연구용역 진행(2019.12월) 혁신플랫폼 공간 설계중(행안부 지역활성화기반조성사업)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양군마을만들기협의회 설립(2018.7월)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사무장 1명,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현장활동가 1명, 센터 사무실 공유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수립(1차완료 2019.4월, 2회 연속수행) 재단법인 타당성 연구용역(2019.7.), 창립총회(2020.7.)
태안	해양산업과 지역공동체마을팀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사업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어촌마을지원센터 (행정직영) 2017. 11월 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근 인력 3명 (사무국장임기제) 1명, 팀장1명, 팀원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해수부 이관(2016.9월) 조직 개편, 지역공동체마을팀 신설(2018.1월) “해양산업과” 신설 및 업무이관(2019.1월) 마을만들기 통합부서 및 통합중간지원조직 TF팀 운영(2020.05.) 태안군 마을만들기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2020.05.23.) 2021.1 조직개편을 통해 공동체 전담 ‘과’ 신설 예정 2021년 통합센터 설치 예정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만들기 통합 협의회 설립 논의(2016~201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태안반도희망포럼, 체험휴양마을협의회 등
금산	건설교통과 마을가꾸기팀 (일반농산어촌사업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민간위탁) 2018. 8월 개소(행정직영) 2020.10월 민간위탁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근 센터장 + 상근 인력 9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직 개편, 행복마을팀 신설(2017.7월) 센터 : 금산다락원 청소년의집 2층 개소(2018.8월)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제정(2020.2월) 마을가꾸기팀으로 명칭 변경(2019.7월)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간협약체 간담회 2회 개최 완료(2017.11월, 12월) 민간 네트워크 준비모임 진행(2019. 상반기~) 1기 마을대학 개최완료(2019.6월) (사) 금산&사람들 창립(2020.1월) 신활력플러스사업단 구성(상근3명, 2019.6월) 2020. 10월 민간위탁 전환
서산	시민공동체과 마을공동체팀 (주민자치, 사회적경제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만들기지원센터 (행정직영) 2019. 6월 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근 인력 2명 (팀원 2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제정(2018.4월) 시민공동체과 신설 및 업무 이관(2019.1월)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1기 마을대학 개최(2019. 8-9월) 공익활동지원센터 설치(2020.5월) 사무실 이전-도시재생, 공익활동과 같은 건물(2020.5월) 2기 마을대학 개최(2020. 7-8월)

사군	총괄·조정부서	중간지원조직	행정과 민간의 추진상황
공주	주민공동체과 사회적공동체팀 (주민자치, 사회적경제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체종합지원센터 (행정직영) 2019. 7월 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근 인력 4명 (사무국장(임기제) 1명, 연구원(임기제) 1명, 사무원 2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2018.12월) 조직 개편, 농촌혁신공동체팀 신설(2018.2월) 주민공동체과 신설 및 업무이관(2019.1월) (농촌혁신공동체팀→마을만들기팀, 사회적공동체팀으로 분리) 2021년 농촌신활력플러스 신규사업 선정 1기(2018. 8-9월), 2기(2018.11월) 마을대학 개최 완료 3기(2019. 8월) 마을대학 개최 4기(2019.11.) 마을대학 개최 공주시 마을만들기협의회 창립총회(2020.1월)
부여	공동체협력과 마을공동체팀 (주민자치, 도시재생, 상권활성화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재단법인) 2019. 10. 개소(행정 직영) 2020. 10월말 재단 법인 출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근 인력 3명 (팀장1명, 팀원2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제정(2018.2월) 건설과 마을공동체팀으로 명칭 변경(2019.1월) 공동체업무 1명 증원(2019.3월) 공동체협력과 신설 및 업무이관(2020.2월) 1기 마을대학 개최 완료(2018. 8-9월) 재단법인 타당성 연구용역 수립(2019.8월~) 시행 재단법인 발기인 총회(2020.6월) 재단법인 창립총회(2020.10월 30일) 마을만들기협의회 창립총회 예정(2020.11월)
당진	공동체새마을과 마을공동체팀 (주민자치, 사회적경제, 새마을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만들기지원센터 (행정직영) 2020. 6월 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근 인력 3명 (사무국장(임기제) 1명, 팀원(임기제) 2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2019.6월) 공동체새마을과 신설 및 업무이관(2020.1월) 센터 임기제 1명(사무국장) 채용(2020.4월) 센터 임기제 2명(팀원) 채용(2020.7월) 1기 마을대학 개최(2020. 9-10월) 2020.6.30. 센터 개소식(도시재생지원센터 건물 입주) 마을만들기협의회 준비위원회 발족(2020.10월초)
계룡	건설교통과 건설행정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2019.11월) 2019년 중간지원조직 설치 공모사업 예산 반납

참여연구진

■ 연구기관

충남연구원

■ 연구책임

구 자 인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 센터장

■ 내부연구진

이 윤 정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 연구원
황 유 리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 연구원
이 혜 란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 행정원

■ 행정 협조

박 병 선 당진시청 공동체새마을과 과장
심 장 보 공동체새마을과 마을공동체팀 팀장
유 혜 정 공동체새마을과 마을공동체팀 주무관
최 윤 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사무국장
박 미 란 마을만들기지원센터 팀원
강 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팀원
박 훈 지속가능발전담당관